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차례

발간에 즈음하여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6

기사심의를 마치면서	이창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8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13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15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19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31
1. 경 고	31
2. 주 의	37
제2장 매체별 분석	40
1. 중앙일간신문	42
2. 지방일간신문	43
3. 주간신문, 주간지, 통신	46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유형별 분석	47
1. 여론조사	47
2. 선거기사	49
3. 제 목	52
4. 사 진	53

제4장 위반유형별 분석	54
1. 공정성·형평성	54
2. 여론조사	58
가. 보도요건미비	58
나. 결과보도금지	59
3. 상업광고제한	60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63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71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83
1. 경 고	83
2. 주 의	245
제2장 시정요구(정정및사과문보도청구)	343
제3장 반론보도청구	355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361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64
• 선거기사심의기준	367
 제6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문건	369

발간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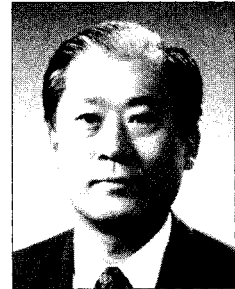
무릇 여러 경쟁자가 한데 어우러져 한치 앞을 다투는 상황에선 공정성의 확립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표 차이가 근소한 곳이 많았던 살얼음판 선거에서는 선거기사 하나 하나가 금싸라기에 비유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한표 한표를 줍다시피 해야 하는 경쟁 속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가 제시하는 판단 근거야말로 공정한 선거를 이끄는 지름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호루라기를 불 수 밖에 없었던 선거기사 가운데 공정·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허다했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현실여건을 감지하기가 어렵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전국에서 발간되는 일간·주간신문, 주간지·월간지의 선거 기사를 일일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93건을 걸러내 주의·경고 조치했습니다.

더러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이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태생부터가 의시(疑視)에 둘러싸인 존재였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편견 없이 거르려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심의했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대전제는 언론발전에 걸림돌 노릇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음을 밝혀둡니다.

조치 받은 언론사 쪽 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맡았던 우리 쪽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치된 기사 가운데는 선거철이라는 특성 때문에 굴레를 씌워야 했던 것들도 있어 아쉽습니다. 또한 지면에 나타난 「기사의 동서현상」을 두 눈으로 확인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조치한 93건을 수량만 따지면 비록 적을지도 모르나 이 속에는 종래 선거기사에서 보아왔던 온갖 유형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불공정 기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서는 지면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의·경고 조치된 기사의 전문을 거의 실어 자료 가치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사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이 백서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도 보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배경과 기사심의위원들의 종합평가 또한 같은 의도에서 시도해본 대목입니다.

모쪼록 이 백서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나라 언론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0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기사심의를 마치면서

2000년 벽두에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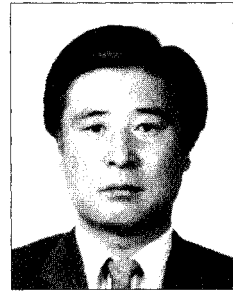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건처리의 신속성 결정에 대한 강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것으로 정기간행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것인데,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을 뒤늦게 알게된 언론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의 제도가 없는 점, 시정내용중 사과문 게재명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거센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출발하였으나 심의위원님들의 상식적이고 원만한 인격, 언론 또는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으로 인하여 회의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져 갔고, 그 결정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아니한 중립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잘 조화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신설되고 운영되어진 탓에 제도상의 모순점도 발견되고 개선의 여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창 구



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운영이 되어지는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기준이 되었고, 선거기사의 보도가 점차적으로 공정하여져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존치와 활발한 운영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좋은 결정을 내려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간행물들을 살피며 상정안건을 만드신 실무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유지에 뒷받침을 해주신 박영식 언론중재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6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창 구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제 2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제 3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1. 설치배경 및 입법과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요인들을 근절시키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1999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개정 의견에서 새로운 세기의 국정을 담당할 의원을 뽑는 제16대 총선이 선거문화 개혁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고 새롭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관리경험, 그리고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써 후보추천절차의 민주성, 선거범죄재판의 신속성, 여론조사 공표제한기간 단축, 선관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선거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법 개정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기사심의 관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벌칙조항 신설이었다.

개정안은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의 선거보도 불공정기사에 대한 자체심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반론보도의 결정기능을 갖고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사의 편집·취재·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책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집·취재·집필의 업무 종사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반론보도청구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1월 7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의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공정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규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자 12월 22일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기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검토기로 결정한데 이어 12월 23일 불공정기사에 대한 조치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로 한정하는 징계요구권의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 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2000년 2월 8일 가결, 2월 15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처벌규정 신설에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이 주장하는 논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제형을 포함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제정의 취지가 사이버언론의 횡포를 막고 언론파해구제절차를 단축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봉쇄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로 모아졌다.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사법적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단심제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론의 선거감시와 보도기능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과문 게재명령은 199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사회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들어 위헌성을 제기했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제정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해 2000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은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 21조로 제정된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장 심의 및 시정,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 규칙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각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언론인단체와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해 가능한 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은 또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심의를 기본 업무로 규정하고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해 이를 해당 언론사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2. 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위촉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한국언론학회는 윤석홍 단국대 언론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안영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국신문협회는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특위위원장, 새천년 민주당은 유선영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 한나라당은 송효빈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자유민주

연합은 이진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 보유 유무 확인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들 7명과 함께 이창구 변호사, 이시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회의 겸 발족식을 갖고 호선에 의해 이창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홍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 중 이진우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3월 20일 자유민주연합이 추천한 고혜련 한국여성언론인협회 이사를 심의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위촉됐다. <표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표1>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 천
이 창 구 (위원장)	1939. 4. 4.	• 서울대 법학과 졸 • 제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 변호사(현)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현)	언론중재위원회
윤 석 홍 (부위원장)	1947. 1. 15.	• 고려대 철학과 졸 • 미주리대 언론학 박사 • 단국대 언론학 교수(현)	한국언론학회
송 호 빈	1933. 11. 20.	• 연세대 사학과 졸 • 전 한국일보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현)	한나라당
남 시 욱	1938. 4. 22.	• 서울대 정치학과 졸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 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 전 문화일보 사장	한국신문협회
이 시 현	1938. 12. 27.	• 고려대 법학과 졸 • 전 동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김 영 호	1944. 6. 3.	• 경희대 법학과 졸 •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 위원장(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안 영 도	1946. 7. 8.	• 서울대 법학과 졸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고 혜 련	1953. 4. 9.	• 이화여대 국문과 졸 • New Jersey 주립대 국제정치학 석사 • 전 중앙일보 차장 • 한국여성언론인연합 이사(현)	자유민주연합
유 선 영	1962. 1. 22.	• 서울대 법학과 졸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자하연 운영(현)	새천년 민주당

3.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심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제정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기사·표제 및 사진·광고보도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권리구제에 대한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전문 5장 19조로 구성됐다. 심의기준은 제1장 「총칙」에서 공정성·형평성·객관성·공익성·정치적 중립 등 5가지의 가치추구를 규정하고 제2장 「기사」에서는 사실보도·사실과 의견의 구별·여론조사 보도·인용보도·인터뷰 기사·독자투고·특집 기획기사·대답 및 토론기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기준은 사실보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비방 및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히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보도기간과 보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차범위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 금지, 그래프, 그림 등을 이용해 보도할 경우 경쟁자간 차이가 과장 및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또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명기하고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할 경우 전체 논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될 수식어의 사용을 금했다.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하도록 했으며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을 이뤄 보도하도록 명시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에도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의 게재를 금지했으며 대답·토론기사도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였다.

기사제목은 축소·과장·왜곡되지 않도록 규제했으며 사진게재는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보도하도록 했다. 또 사진게재는 변형이나 재구성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했으며 유세장의 참가인원이나 내용도 왜곡하지 못하게 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이 밖에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시켰다.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기타 물품광고와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규제했으며 후보자의 성명·경력선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조항을 마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4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월 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운영방침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의 논의는 주의·경고·정정보도·사과문 게재로 구분된 제재의 수위를 조정하는데 맞추어졌다.

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명령과 관련 위원회가 결정으로 언론사에 이를 강제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사과문 게재 요구 관련 민법조항에 대해 「사과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서 관련조항을 신중하게 적용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후보자가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때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해당 언론인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이 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심의는 선거 후 언론이 선거기사심의대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선거종료와 함께 마무리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까지 신청을 접수 심의하기로 했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1. 기사 심의기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기사심의에 들어가 4월 17일까지 모두 1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표2>

2. 기사 심의결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월 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경고 2건, 주의 2건 등 4건의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제16차 회의까지 경고 58건, 주의 35건, 기각 1건 등 모두 94건을 심의결정했다. 경고는 전체 결정 건수의 61.7%, 주의는 37.2%를 각각 차지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경고 2건 주의 2건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제5차 회의는 경고 1건 주의 8건, 제6차 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일지

<표2>

차 수	날 짜	내 용
제1차 회의	2월 25일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 이창구 위원장·윤석홍 부위원장 선출
제2차 회의	2월 28일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정
제3차 회의	3월 3일	• 선거기사심의 운영방침 토론
제4차 회의	3월 7일	• 자체심의
제5차 회의	3월 10일	• 자체심의
제6차 회의	3월 14일	• 자체심의
제7차 회의	3월 17일	• 자체심의
제8차 회의	3월 21일	• 자체심의
제9차 회의	3월 24일	• 자체심의
제10차 회의	3월 28일	• 자체심의 • 반론보도청구 심의
제11차 회의	3월 31일	• 자체심의
제12차 회의	4월 4일	• 자체심의
제13차 회의	4월 7일	• 자체심의
제14차 회의	4월 11일	• 자체심의 • 시정요구 심의
제15차 회의	4월 14일	• 자체심의 • 시정요구 심의
제16차 회의	4월 17일	• 시정요구 심의

의는 경고 1건 주의 6건, 제7차 회의는 주의 4건, 제8차 회의는 경고 6건 주의 1건, 제9차 회의는 경고 2건 주의 5건, 제10차 회의는 반론보도청구 기각 1건 경고 6건 주의 1건, 제11차 회의는 경고 7건 주의 2건, 제12차 회의는 경고 7건, 제13차 회의는 경고 10건 주의 1건, 제14차 회의는 경고 12건 주의 4건, 제15차 회의에서는 경고 4건 주의 1건이 각각 결정됐다. <표3>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된 93건의 자체심의 결정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1건(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14건(15.1%),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7건(7.5%), 상업광고 제한 1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간 신문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9건, 중앙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6건, 통신 및 주간지 각 1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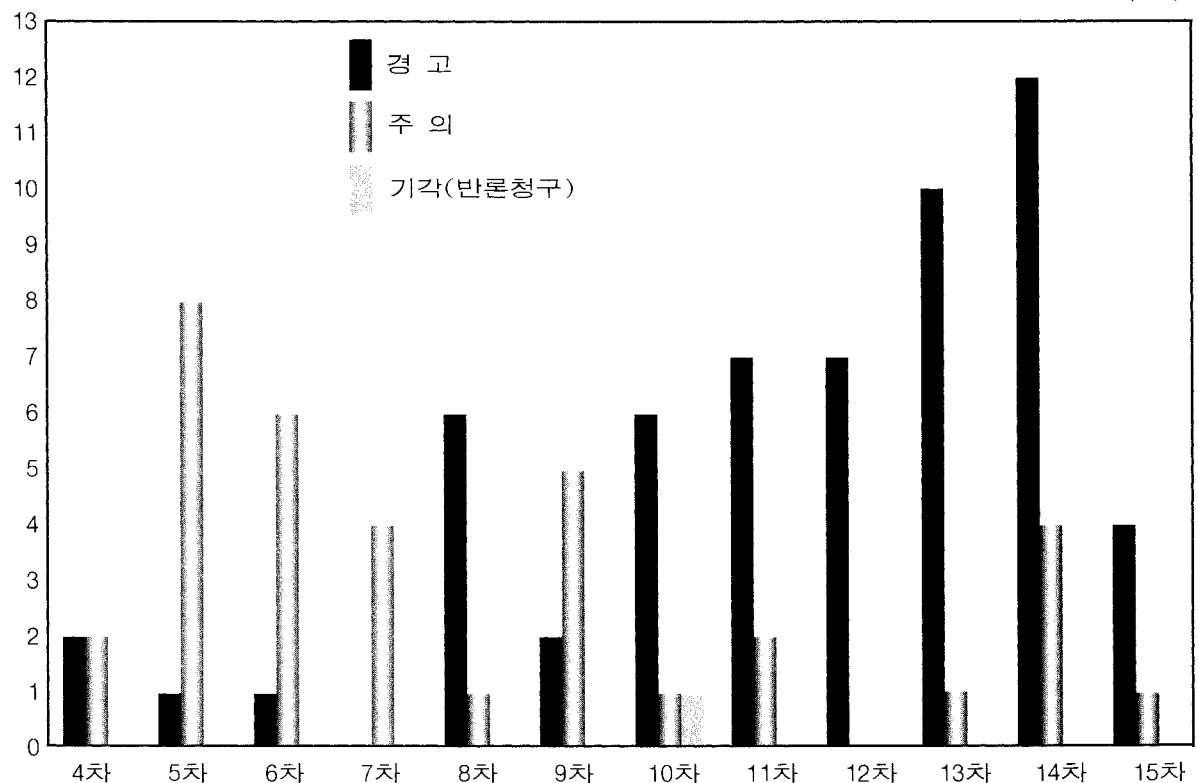
일간신문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64건(84.2%)으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12건, 15.8%)을 압도했다.

피해구제는 위원회의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사항과 반론보도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체 심의는 위원회가 수집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경고 및 주의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심의결과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체 신청건수 4건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및 사과문의

심의위원회 차수별 결정 추이

<표3>



보도를 약속하거나 반론보도를 약속함으로써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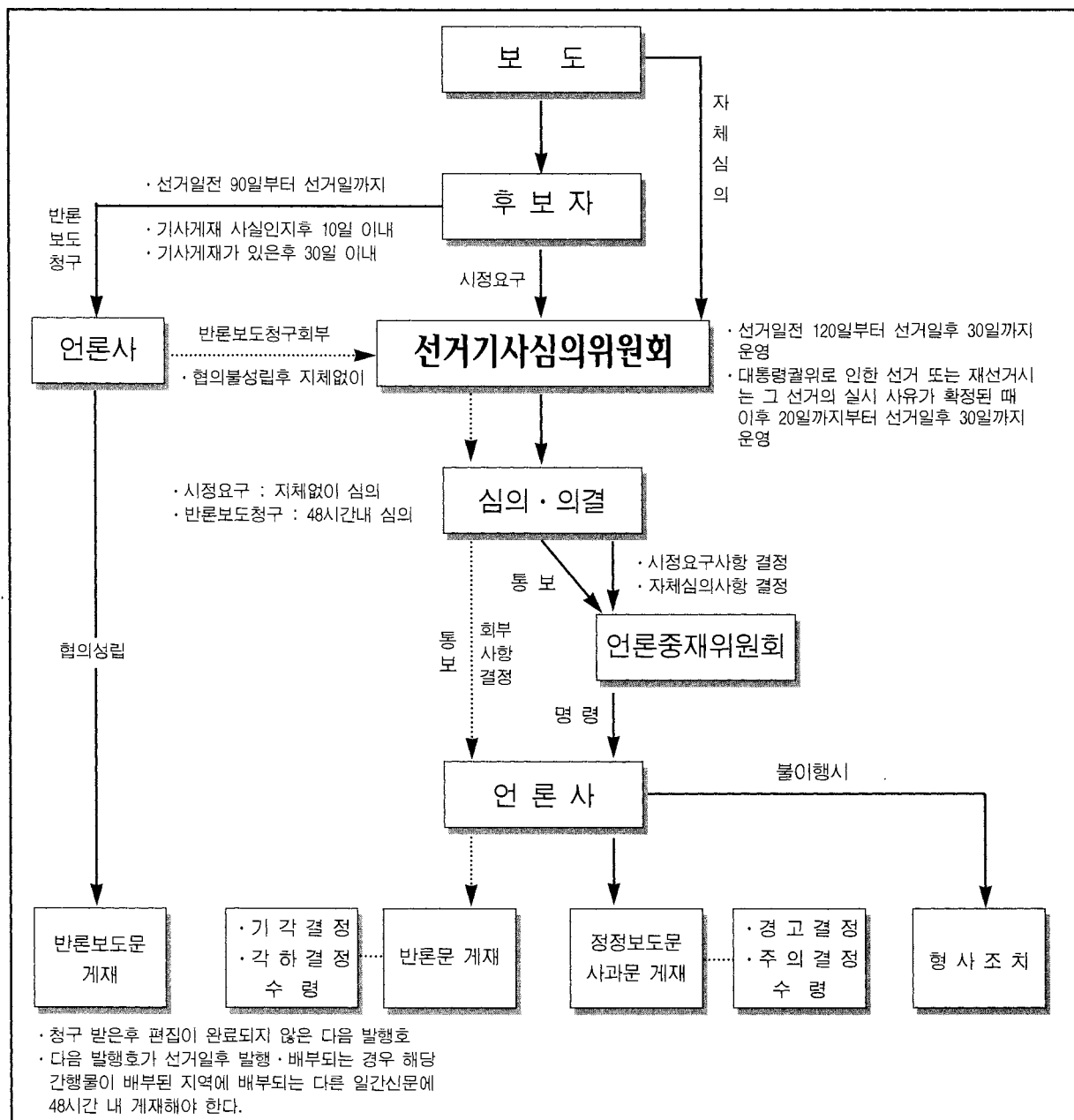
위원회 활동기간 중 반론보도청구는 단 1건이 접수됐는데, 기각처리됐다.

3. 심의·의결 절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심의에 따른 심의안건, 후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세 갈래의 심의를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표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절차

<표4>



자체심의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된 행정지원팀이 전국에서 수집한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매일 찾아내 이를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개별 심의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결정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통보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시정요구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이 결정되면 자체심의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반론보도 신청의 경우 후보자가 1차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양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해당 후보자나 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건을 심의, 의결한 뒤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기각 및 각하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선거법은 또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시한은 후보자의 게재청구를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호에 게재토록 했으며 다음 호가 선거일 후 발행·배부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48시간 이내에 게재토록 했다.

시정요구 신청은 지체 없이 심의, 의결하고 반론보도청구는 접수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심의, 의결토록 했다.

4. 심의대상매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000여종의 정기간행물 중에 구독 가능한 서울지역 발행 일간신문, 지방에서 발간하는 지방일간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지방에서 발간하는 주간지·주간신문 등 284종의 인쇄매체와 통신 등 총 285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16대 총선 보도기사를 자체심의했다. <표5>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5종, 경기 41종, 경남 31종, 경북 27종, 전북 25종, 충북 22종, 충남 21종, 전남 18종, 광주·강원 각 11종, 울산 8종, 대구·대전·제주 각 6종, 부산 4종, 인천 3종이었다.(주 배포 지역 구분)

전체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76종,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가 208종, 통신 1종이었다.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는 모두 21종으로 그 가운데 종합지 10종, 경제지 4종, 스포츠지 4종, 영자지 2종, 전문지는 1종이었으며 통신은 1종이었다.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은 모두 55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8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종, 대구·대전·전북이 각 5종, 충북·경남 각 4종, 인천·울산·경북·제주 각 3종, 부산·강원 각 2종, 전남 1종이었다.

심의대상 매체현황

〈표5〉

지 역	일 간 신 문		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서울(45)	21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세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노동일보	24	뉴스메이커, 뉴스피플, 주간조선, 한겨레21, 뉴스위크, 주간동아, 시사저널, 주간한국, 한경비즈니스, 일요신문, 일요시사, 일요서울, 주간현대, 민주신문, 주간내일신문, 주간강동송파내일신문, 주간구로금천내일신문, 주간동부권내일신문,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말, 한국논단, 연합뉴스
부산(4)	2	부산일보, 국제신문	2	부산내일신문, 주간사하수요신문
대구(6)	5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광역일보, 영남투데이	1	주간대구내일신문
인천(3)	3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도일보		
광주(11)	7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무등일보	4	주간광주전남내일신문, 광산신문, 광주북구신문, 광주남서신문
대전(6)	5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국도일보	1	주간대전내일신문
울산(8)	3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아침일보	5	주간울산내일신문, 울산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월요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41)	8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경기도민일보, 중부일보, 현대일보, 전국매일	33	주간이천내일신문, 주간안산내일신문, 주간수원내일신문, 주간안양내일신문, 주간성남내일신문, 주간의정부내일신문, 주간김포내일신문, 주간광명내일신문, 주간분당내일신문, 주간가평내일신문, 주간군포내일신문, 주간부천시민내일신문, 주간일신내일신문, 대안신문, 주간고양신문, 주간안산신문, 주간수원신문, 주간김포신문, 주간부국신문, 용인신문, 주간세종신문, 이천신문, 평택시민신문, 주간파주신문, 주간민안신문, 과천시대신문, 경기자유신문, 주간동두천신문, 분당뉴스, 주간의정부신문, 가평타임즈, 주간부천자치신문, 양평백운신문
강원(11)	2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9	주간원주내일신문, 주간춘천내일신문, 영월저널, 주간강릉신문, 주간강원북부신문, 주간삼척신문, 주간설악신문, 주간영서신문, 주간태백신문
충북(22)	4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한빛일보	18	주간청주내일신문, 충청리뷰, 충주신문, 주간예성신문, 주간제천신문, 주간보은신문, 주간옥천신문, 주간진천신문, 주간증평괴산신문, 음성신문, 충주타임즈, 제천21, 영동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삼군신문, 진천군민신문, 주간괴산신문, 증평신문

지 역	일 간 신 문		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충남(21)			21	주간천안내일신문, 공주신문, 논산신문, 당진시대, 보령신문, 천안신문, 금산신문, 부여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홍성신문, 서령신문, 대산신문, 온양신문, 온주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무한정보신문, 뉴스청양
전북(25)	5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20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주간군산내일신문, 주간익산내일신문,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주간정읍내일신문, 고창코리아, 김제시민의신문, 새익산신문, 주간남원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주간남원민보, 주간정읍신문, 전북일요시사, 주간고창신문, 서남신문, 전북타임즈, 주간김제신문, 주간서림신문, 주간진포신문
전남(18)	1	전광일보	17	주간목포내일신문, 여수신문, 여향진도신문,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전남동부신문, 주간해진신문, 주간화순신문, 주간고흥신문, 주간영광신문, 진남신문, 곡성신문, 광양신문, 주간목포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진도군민신문
경북(27)	3	경북매일, 신경북일보, 일간경북	24	주간구미내일신문, 주간안동내일신문, 주간경산향토신문, 주간김천신문, 주간고령성주신문, 주간경북북부신문, 주간경주신문, 새재신문, 양백신문, 우리군민신문, 주간울진신문, 주간경북중부신문, 대한영남신문, 주간의성신문, 주간영천신문, 주간청도신문, 주간경산자치신문, 주간경북자치신문, 주간영천조양신문, 주간안동신문, 주간영덕신문, 주간군위신문, 울진자치신문, 주간고향신문
경남(31)	4	경남신문, 경남일보, 가야일보, 경남도민일보	27	주간마산창원내일신문, 거제신문, 김해가야신문, 주간하동신문, 주간거제시민신문, 주간거창신문, 주간고성신문, 주간남해신문, 주간진주신문, 밀양신문, 밀양연대신문, 주간밀양시민신문, 새한려신문, 서경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천령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주간합천신문, 통영시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와룡신문, 비사벌신문, 새거제, 황강신문, 창원신문
제주(6)	3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3	제주타임스, 서귀포신문, 제주정경
계(285)	76		209	

서울을 주배포처로 하여 발간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는 모두 23종으로 이 가운데 주간지는 9종, 월간지는 5종이었다.

지방을 주배포처로 하여 발간되는 주간신문은 모두 185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가 33종으로 가장 많

서울 사무처 심의대상 매체

〈표6〉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 간 지	주 간 신 문	월 간 지	통 신
경 향 신 문 국 민 일 보 대 한 매 일 노 동 일 보 동 아 일 보 문 화 일 보 세 계 일 보 조 선 일 보 중 앙 일 보 한 겨 레 한 국 일 보 내 외 경 제 매 일 경 제 서 울 경 제 한 국 경 제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스	가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 경남신문, 경도일보 경북매일, 경상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광역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광주타임스 국도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수도권일보 신경남일보 신경북일보 영남일보 영남투데이 울산매일, 울산아침일보 인천일보 일간경북, 전광일보 전국매일,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 전북일보 전북제일신문 전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남일보, 충청일보 한라일보, 한빛일보 현대일보, 호남신문	뉴스메이커 뉴스워크 뉴스플러스 뉴스피플 시사저널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가평내일신문 강동송파내일신문 광명내일신문 광주전남내일신문 구로금천내일신문 구미내일신문 군산내일신문 군포내일신문 김포내일신문 대구내일신문 대전내일신문 동부권내일신문 마산창원내일신문 목포내일신문 민주신문 부산내일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분당내일신문 성남내일신문 수원내일신문 안동내일신문 안산내일신문 안양내일신문 울산내일신문 원주내일신문 의정부내일신 이천내일신문 익산내일신문 일산내일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전북남서부내일신문 전주전북내일신문 정읍내일신문 주간내일신문 주간현대 천안내일신문 청주내일신문 춘천내일신문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한국논단	연합뉴스
21종	55종	9종	40종	5종	1종

※ 총 131종

지역사무소 심의대상 매체

〈표7〉

지 역		매 체
부 산 (5)	부 산	주간사하수요신문(1)
	울 산	울산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월요신문, 울산종합신문(4)
대 구 (22)	대 구	
	경 북	주간경산향토신문, 주간김천신문, 주간고령성주신문, 주간경북북부신문, 주간경주신문, 새재신문, 양백신문, 우리군민신문, 주간울진신문, 주간경북중부신문, 대한영남신문, 주간의성신문, 주간영천신문, 주간청도신문, 주간경산자치신문, 주간경북자치신문, 주간영천조양신문, 주간안동신문, 주간영덕신문, 주간군위신문, 울진자치신문, 주간고향신문(22)
광 주 (19)	광 주	광산신문, 광주북구신문, 광주남서신문(3)
	전 남	여수신문, 여향진도신문,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전남동부신문, 주간해진신문, 주간화순신문, 주간고흥신문, 주간영광신문, 진남신문, 곡성신문, 광양신문, 주간목포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진도군민신문(16)
대 전 (20)	대 전	
	충 남	공주신문, 논산신문, 당진시대, 보령신문, 천안신문, 금산신문, 부여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홍성신문, 서령신문, 대산신문, 온양신문, 온주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무한정보신문, 뉴스청양(20)
경 기 (20)		대안신문, 주간고양신문, 주간안산신문, 주간수원신문, 주간김포신문, 주간부곡신문, 용인신문, 주간세종신문, 이천신문, 평택시민신문, 주간파주신문, 주간민안신문, 과천시대신문, 경기자유신문, 주간동두천신문, 분당뉴스, 주간의정부신문, 가평타임즈, 주간부천자치신문, 양평백운신문
강 원 (7)		영월저널, 주간강릉신문, 주간강원북부신문, 주간삼척신문, 주간설악신문, 주간영서신문, 주간태백신문
충 북 (17)		충청리뷰, 충주신문, 주간예성신문, 주간제천신문, 주간보은신문, 주간옥천신문, 주간진천신문, 주간증평괴산신문, 음성신문, 충주타임즈, 제천21, 영동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삼군신문, 진천군민신문, 주간괴산신문, 증평신문
전 북 (15)		고창코리아, 김제시민의신문, 새익산신문, 주간남원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주간남원민보, 주간정읍신문, 전북일요시사, 주간고창신문, 서남신문, 전북타임즈, 주간김제신문, 주간서림신문, 주간진포신문,
경 남 (26)		거제신문, 김해가야신문, 주간하동신문, 주간거제시민신문, 주간거창신문, 주간고성신문, 주간남해신문, 주간진주신문, 밀양신문, 밀양연대신문, 주간밀양시민신문, 새한려신문, 서경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천령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주간합천신문, 통영시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외통신문, 비사벌신문, 새거제, 황강신문, 창원신문
제 주 (3)		제주타임즈, 서귀포신문, 제주정경

※ 총 154종

았으며 경남 27종, 경북 24종, 충남 21종, 전북 20종, 충북 18종, 전남 17종, 강원 9종, 울산 5종, 광주 4종, 제주 3종, 부산 2종, 대구·대전 각 1종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서울 사무처에서 심의한 매체는 모두 131종으로 중앙일간지 21종, 지방일간지 54종, 주간지 9종, 주간신문 40종, 월간지 5종, 통신 1종이었다. <표6>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선거기사를 심의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26종, 대구 22종, 대전·경기 각 20종, 광주 19종, 충북 17종, 전북 15종, 부산 5종, 제주 3종이었다. <표7>

이외의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16대 총선 보도 기사심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5. 실무 지원행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에 모두 35명의 정규 직원 및 임시 직원을 심의 및 행정지원 요원으로 투입했다.

투입된 인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위원 3명, 중재심의실 심의2팀장 및 직원 4명, 임시직 7명, 지역사무소 파견직원 20명이다.

심의활동은 행정편의상 심의2팀을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의 및 행정처리
는 이병훈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임병국 중재심의실장이 총괄하고 오광건 심의2팀장이 주관하는 조직체
계를 갖추었다.

심의2팀은 심의를 전담하는 3개조(A조·B조·C조)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었
다.

A조는 김굴근 전문위원, B조는 강대형 전문위원, C조는 주길치 전문위원이 맡아 각 조에 임시직 각 2
명을 배치하고 각 3명의 정규 행정요원을 추가해 배치했다.

전문위원은 각 조의 선거기사심을 전담하여 할당 매체에 대한 심의와 심의안전작성 및 임시직 심의
안건을 감수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정규직원은 류석창, 김주용, 김문성, 이재범 등이며 임시직은 종합일간신문사 기자 경력이 있는 6명과
컴퓨터요원 1명이 종사했다.

10개 지역사무소의 심의는 사무소장이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은 소장이 주관하고
사무소장이 없는 강원·청주·창원·제주 지역은 사 무 처 직원을 지역별로 1명씩 출장형식으로 파견
해 심의를 실시했다.

제1차 출장에는 선거기사심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팀장급을 투입했으며 피해구제요청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사 무 처 내에 각 팀에서 선임급 직원을 차출했다.

출장 직원 중 팀장 및 선임급 직원은 장원상 심의1팀장, 권우동 조사연구팀장, 임득상 기획부차장, 이
미경 심의1팀차장, 조남태 조사연구팀차장이며 일반 직원은 여종국, 손정배, 안백수, 최영훈, 조준원, 임
종우, 이수종, 여운규, 박혜진 등이다. □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 고
2. 주 의

제2장 매체별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방일간신문
3. 주간신문, 주간지, 통신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유형별 분석

1. 여론조사
2. 선거기사
3. 제 목
4. 사 진

제4장 위반유형별 분석

1. 공정성·형평성
2. 여론조사
 - 가. 보도요건미비
 - 나. 결과보도금지
3. 상업광고제한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회는 자체심의회와 피해자들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심의로 나누어 진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4건에 대해 주의, 경고 및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위반 94건중 경고는 58건, 주의는 35건으로 경고가 61.7%를 차지했다.

경고 및 주의결정을 받은 93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 ① 공정성 및 형평성위반이 76.3%인 71건
- ②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가 15.1%인 14건
- ③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7.5%인 7건
- ④ 상업광고제한위반이 1.1%인 1건이다.

중앙일간신문들은 1건을 제외한 11건이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및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을 위반한 반면 주간신문들은 15건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조항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지방일간신문들도 공정성 및 형평성위반이 전체 64건의 85.9%인 55건을 차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 및 특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으며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기사 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보도하지 않은 기사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다.

1. 경 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회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93건의 기사중 62.4%인 58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4건(6.9%), 지방일간신문 42건(72.4%), 중앙주간신문 5건(8.6%), 지방주간신문 7건(12.1%)이었다. 중앙일간신문은 12건의 주의·경고결정중 경고가 25%로 주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비해 지방일간신문은 총 64건의 결정중 경고가 65.6%로 주의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간신문도 15건 중 80%인 12건이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방일간신문에 대한 경고결정 비율이 높았던 것은 지역 정서에 크게 좌우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양상을 짐작케 해준다.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신문들은 지역 정서에 부합

되는 후보들이나 특정당들을 편파적으로 집중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를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체심의에서 경고를 많이 받은 매체들은 모두 지방신문이었다. 경인매일과 전북제일신문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일보 충청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가 각 3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경남신문 경상일보 광주타임스 일간경북 전주일보 한빛일보 주간현대가 각 2건을 차지했다.

경고 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①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51건으로 경고의 대부분(87.9%)을 차지했으며 ②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기사가 6건(13.4%) ③ 상업광고금지를 위반 기사는 1건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 : 51건 <표1>

- (1) 주의대상 기사 중 편파성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기사를 한면 전체에 걸쳐 게재한 경우
- (3)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기사를 여러면에 걸쳐 보도한 경우
- (4)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기사를 수차례 보도한 경우
- (5) 편파적인 기사와 함께 특정후보의 개인사진이나 특정당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만을 게재한 경우
- (6)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경우
- (7) 특정후보를 치켜세우면서 그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 (8) 후보자를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의도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난 경우
- (9)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를 오히려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두둔하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도와 준 경우

<경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표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5	충 청 일 보	2000. 2. 28	9면 전면	고비용정치구조 이제는 바꾸자
2000 자심 17	한 빛 일 보	2000. 3. 6	3면 전면	충북 도약 위해 3선의 힘찬 도전
2000 자심 20	충 청 일 보	2000. 3. 8	14면 전면	부패정치 청산 선봉에 서겠다
2000 자심 41	충 청 일 보	2000. 3. 29	12면 전면	고향 키우는 '힘있는' 일꾼 되겠다
2000 자심 49	대 전 일 보	2000. 3. 18	1면 2면 4면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 대전 서울 남재두씨 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역설
2000 자심 50	전북도민일보	2000. 3. 15	3면	개혁 이미지 살리는 역할 큰 몫
2000 자심 51	전북도민일보	2000. 3. 20	4면	"더 이상 소지역주의는 없다"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52	전 북 일 보	2000. 3. 17	2면 3면 4면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 여영입 강현욱의원에 각계 3명 도전 “지역발전·정권 재창출에 헌신”
2000 자심 53	전 북 일 보	2000. 3. 18	4면 5면	합류 시너지효과 ‘기대’ 상승세 탄 조의원 희색 “정책 중심으로 선거운동 펼칠터”
2000 자심 54	남 원 민 보	2000. 3. 8	3면	탈당하면서 입당 운운… 원칙없는 정치인
2000 자심 58	제 주 일 보	2000. 3. 19	1·2면 3면 5면 15~18면	“정부 견제로 국가 발전” D-25 한나라당 정기 대회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의 장” 한나라당 대선거대책위 현판식과 인터뷰
2000 자심 63	전북일보시사	2000. 3. 19	12면 13면	논·발두령… 소박한 시민정치인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해소”
		2000. 3. 26	8, 10, 11, 13면	논·발두령… 소박한 시민정치인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해소”
2000 자심 64	전 남 일 보	2000. 3. 16	1면 4면	바뀌·바뀌속 ‘무소속 돌풍’거세 예상 넘는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
		2000. 3. 18	1면 3면	후보이미지 심기 ‘기발’ ‘유권자 심판 운동’ 광주·전남 확산
		2000. 3. 20	1면 5면	유권자 선거혁명시동 시민 연대의 낙선투어
		2000. 3. 21	1면 3면	정치개혁 ‘버스투어’ 시도민 큰 호응 ‘선거 연대의 낙선투어’
		2000. 3. 23	3면	‘낙선 운동’ 성패 걸린 최대 격전지
		2000. 3. 24	1면 5면	무소속이 민주당 앞서 광주·전남 관심 선거구 6곳 여론조사
2000 자심 68	중 부 매 일	2000. 3. 25	12면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
2000 자심 69	한 빛 일 보	2000. 3. 25	7면	“뚝심·배짱으로 서민 삶 향상 약속”
2000 자심 70	일 요 시 사	2000. 3. 26	10면 20면 62·63면	‘밀실 공천희생양’, ‘관악일꾼’으로 명성 무선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 성공신화’ 주역 IMF 완전 극복 위해 디지털화
2000 자심 71	주 간 현 대	2000. 3. 26	8면 9면	무소속 강운태 강세 … 호남 이번 조짐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
2000 자심 77	경 인 매 일	2000. 3. 30	6·12면	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
2000 자심 79	신경북일보	2000. 3. 29	6면	이종용 위원장 후보등록 후 급거 상경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81	한 라 일 보	2000. 3. 25	2면	법에 의한 통치로 수권정당 달성
		2000. 3. 27	5면	원희룡 변호사 출판기념회, "국민 바라는 정치할터"
		2000. 3. 28	5면	원희룡 위원장 후원회 성황
2000 자심 95	광주타임스	2000. 4. 1	3면	'태평양' 건너 선거 지원
2000 자심 96	경기도민일보	2000. 3. 31	1면	한나라, 인천지역 총공세
2000 자심 97	경 인 매 일	2000. 4. 1	3면	"송탄을 되찾자" 독립선언!
2000 자심 98	대 전 일 보	2000. 4. 3	5면	"내가 맹주" 이총재 - JP 충청권 불꽃 격돌
2000 자심 99	주간내일신문	2000. 3. 29	15면	"한화갑만 만나겠다", '차세대 유망 정치인'과 친분위해
2000 자심 100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2000. 3. 29	7면	"한우와 쌀은 지켜야 한다"
2000 자심 101	일 요 서 울	2000. 4. 6	11면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 의혹 자료
2000 자심 103	경 남 신 문	2000. 4. 3	2면	"총선 후 당권에 도전"
2000 자심 105	광주타임스	2000. 4. 5	2면 3면	민주당, 무소속 잠재우기 총력 '무소속 입당 절대 불허' 강조
2000 자심 106	일 간 경 북	2000. 4. 4	2·3면 4면	한나라당 이회창 관련 사진 한나라당 선거 대책 회의 사진
2000 자심 107	전 북 일 보	2000. 4. 5	6면	"도내 전지역 석권 제 1당 확보 총력"
2000 자심 108	전북제일신문	2000. 4. 5	5면	"누가 여당? 야당" 아리송
2000 자심 109	전 주 일 보	2000. 4. 5	2면	"지역발전·현안 해결에 최선"
2000 자심 111	주간고향신문	2000. 3. 29	3면	4·13 총선 등록 실시
2000 자심 112	새 거 제	2000. 4. 6	5면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 지지"
2000 자심 113	리빙타임즈	2000. 4. 4	1면	오성수 전 시장 '가석방'
2000 자심 117	경 상 일 보	2000. 4. 8	1면 3면	'김태호 죽이기' 논란 "한치 잘못 있다면 정계 은퇴"
2000 자심 118	경 상 일 보	2000 자심 118	1면 5면	'김태호 죽이기' 중단 촉구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 "김태호 살리자" 1천여 지지자 연호
2000 자심 123	경 인 매 일	2000. 4. 7	3면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
2000 자심 125	광 주 매 일	2000. 4. 10	2·3·4면	3개면에 민주당 선거운동 관련 사진 중점 게재
2000 자심 126	대 전 일 보	2000. 4. 7	5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사진
2000 자심 127	일 간 경 북	2000. 4. 6	1면	이회창 총재 구미·안동·경산 공략, 한나라 여권 위기 조장론 제기, 박근혜후보 달성경찰서 항의방문, 민주당 김종권후보 즉각 수사 촉구
2000 자심 129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2000. 4. 5	7면	"개혁적인 젊은이가 책임져야"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130	전북제일신문	2000. 4. 8	3면	'제1당' 도민손에... '반짝 구매 작전'
2000 자심 131	전북제일신문	2000. 4. 10	4면	구제역방역 활동 참여 김원기 후보 농민 아픔 함께
2000 자심 132	전 주 일 보	2000. 4. 8	3면	미래 향한 일면 협력·일면 경쟁
2000 자심 133	주 간 현 대	2000. 4. 9	8·9면	이영일의 정치 실험
2000 자심 134	경 남 신 문	2000. 4. 11	5면	권해옥 위원장 지지 호소
2000 자심 135	경 인 매 일	2000. 4. 12	3면	하루 10만원 선거비용 전부 점심은 도시락... 당선장담
2000 자심 136	전북도민일보	2000. 4. 13	4면	"경제도약이나, 좌절이나 판가름"
2000 자심 138	전북제일신문	2000. 4. 13	6면	"도민들이 밀어 줘야 개혁 완수"

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 : 6건 <표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제①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①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제 16대 총선보도를 할 때 이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킨 편이었으나 중앙일간신문 4개사와 지방일간신문 2개사가 이 규정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에 대해서는 7건의 위반 기사를 1건을 제외하고는 주의보다 무거운 경고결정을 내렸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 기사중 유일하게 주의 결정을 받은 '영남투데이'의 '총선 부동산표를 잡아라' 제목의 기사는 어떤 특정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경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2>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72	국 민 일 보	2000. 3. 29	2면	'뒷심' 부족한 386 후보
2000 자심 73	매 일 경 제	2000. 3. 28	45면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민주아성에 무소속 돌풍
2000 자심 75	중 도 일 보	2000. 3. 28 2000. 3. 30	1면 3면 4면	자민 8·민주 2 확실히 "a의석 잡아라"전세역전관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
2000 자심 76	제 민 일 보	2000. 3. 28	4면	제주 출신 배우자 둔 총선 후보들 '선전'
2000 자심 102	중 앙 일 보	2000. 4. 6	5면	현역들 뒷심 만만찮아
2000 자심 115	한 겨 레	2000. 4. 10	1·3면	4·13 총선 D -3 유권자여론조사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각당의 관세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경고보다 가벼운 제재에 그쳤다. 반면에 다른 위반기사 6건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를 후보자들을 거명해가며 보도하거나 각당간의 우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쳐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번 총선거사 보도에서 중앙일간신문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건수가 지방일간신문보다 많은게 특색이다. 한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여론조사요건을 보도하지 않은 기사들은 모두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 결정을 받았다.

다. 상업광고 제한조항을 위반한 사례 : 1건 <표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탈법방지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②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①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투표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선거 보도에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경도일보만 유일하게 위반, 경고결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도일보는 2000년 3월 25일자 5면에 '용마루에 뜨는 달'이라는 민주당 경남 밀양·창녕지역구 후보의 자전적에세이집 광고를 게재했다.

<경고> 상업광고 제한 위반

<표3>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65	경 도 일 보	2000. 3. 25	5면	'용마루에 뜨는 달' 서적 광고

2. 주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93건의 기사중 37.6%인 35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22.9%인 8건, 지방일간신문이 62.9%인 22건, 통신이 1건, 중앙과 지방의 주간신문 3건, 주간지 1건 등이다.

주의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전북도민일보로 4건이었다. 경향신문은 중앙일간지중 가장 많은 3건의 주의를 받았고 지방일간신문중 국도일보 영남투데이도 각 3건의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결정을 받은 35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가. 공정성 및 형평성조항을 위반한 기사가 20건(57.1%)으로 가장 많고 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요건 미비 기사가 14건(40%)을 차지했으며 다.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가 1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 20건 <표4>

경고결정을 받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기사보다 위반 정도가 약한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후보 및 특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였으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나.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미비 기사 : 14건 <표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 제③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8조 제②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때 중앙지로는 중앙일보, 지방지로는 중부일보가 요건을 충실히 공개해 보도했다. 두 신문은 특히 질문내용등을 아주 상세히 공개해 여론조사결과와 신뢰성을 높였다.

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 : 1건 <표6>

여론조사결과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에 대체적인 관세분석을 했으나 그 분석이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표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개 재 면	제 목
2000 자심 4	충 청 일 보	2000. 3. 24	1·3면	역량 있는 지역 중진 지키자, 정치인의 저버린 행태 공분
2000 자심 8	국 도 일 보	2000. 3. 3	3면	자민련 김학원 의원 부여 총선 승리다짐- JP 아성 업고 승승장구
2000 자심 36	일 요 시 사	2000. 3. 27 2000. 3. 7	11면 4면	박주선 '텃밭'에 무소속 깃발(?)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2000 자심 39	전북도민일보	2000. 3. 10	3면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 확보 전력
2000 자심 40	전북도민일보	2000. 3. 10	1면	민주 장성원 의원 의정 보고회
2000 자심 44	매 일 경 제	2000. 3. 14	6면	간판 인물 부재... "뚜껑 열어 봐야"
2000 자심 47	중 부 매 일	2000. 3. 16	2면	4·13 총선 이모저모
2000 자심 56	한 라 일 보	2000. 3. 16 2000. 3. 22 2000. 3. 29	2면 2면 9면	원희룡변호사 위원장 '닭은꼴 이력' 화제 제주출신원희룡변호사사무실 열고 본격채비
2000 자심 59	경 남 신 문	2000. 3. 20	4면	민주당, 한나라당, 민국당 지구당대회 관련 기사
2000 자심 60	국 도 일 보	{2000. 3. 20	1면	JP 충청권 수성 전력
2000 자심 61	주간 울산내일신문	2000. 3. 21	13면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 진다
2000 자심 62	정 읍 신 문	2000. 3. 1	2면	4·13 총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2000 자심 67	영남투데이	2000. 3. 25	3면	4·13 향해 뛴다
2000 자심 80	전북도민일보	2000. 3. 29	2면	고산중 강당 완공
2000 자심 110	호 남 신 문	2000. 4. 4	3면	'낙선 명단' 곳곳서 기습 쏘고... 최고...
2000 자심 119	영남투데이	2000. 4. 11	14면	"야 후보 낙선 공작" 의혹
2000 자심 120	중 부 매 일	2000. 4. 10	1·2면	김태호후보 식발 투쟁
2000 자심 124	국 도 일 보	2000. 4. 8	3면	"DJ 정권 축산 정책 더는 못 믿어"
2000 자심 128	전북도민일보	2000. 4. 8	1면 5면	투표율 높이기 '사활' "한표 행사가 애국" 투표율 제고 안간힘
2000 자심 137	전 북 일 보	000. 4. 12	5면	"도내 최다 득표 대결 치열"

〈주의〉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 미비기사

〈표5〉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21	제 주 일 보	2000. 3. 5 2000. 3. 7	2면 2면	4·13총선 초반 판세
2000 자심 22	국 민 일 보	2000. 3. 7	2면	쉽지 않은 DJ 저격수 저격
2000 자심 24	경 도 일 보	2000. 3. 7	2면	여·야 이모저모
2000 자심 25	대 전 일 보	2000. 3. 8	3면	"싸쌔이·경합" 우위경쟁치열
2000 자심 26	인 천 일 보	2000. 3. 8	4면	386세대 대 종진 한판 대결
2000 자심 27	경 향 신 문	2000. 3. 8 2000. 3. 9	4면 4면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한나라 독주... 민국은 '아직은 미풍'
2000 자심 28	전 남 매 일	2000. 3. 9	4면	'6선고지' 무소속 거센 도전
2000 자심 29	뉴 스 피 풀	2000. 3. 16	18~20면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2000 자심 30	경 향 신 문	2000. 3. 10, 11, 13	각 4면	4·13 총선 초반 판세 시리즈
2000 자심 31	국 민 일 보	2000. 3. 11.	1면 3면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2위는 없다' 숨가쁜 '총선 경주'
2000 자심 32	연 합 뉴 스	2000. 3. 4~8 2000. 3. 10	여러 면	4·13 총선 초반 판세 점검
2000 자심 43	경 향 신 문	2000. 3. 14	4면	'남야 북여' 구도... 민주 '2배 우위'
2000 자심 45	문 화 일 보	2000. 3. 14	1면 2면 4면	3당 지역바람 여전...민국 저조 '텃밭대결'... 이번은 "아직 없다" "3당 지역 바람 여전"
2000 자심 48	문 화 일 보	2000. 3. 17	1·2면	서울 총선 판세 급변 요동치는 선거판 '수도권 혈투'

〈주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6〉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74	영남투데이	2000. 3. 29	1면	총선 "부동표를 잡아라"

제2장 매체별 분석

자체심의대상매체 총 285개(중앙일간신문 21, 지방일간신문 55, 주간신문 194, 주간지 9, 월간지 5, 통신 1)중 중앙일간신문 6개 매체와 지방일간신문 29개, 주간신문 13개(중앙주간신문 4, 지방주간신문 9) 주간지 1개, 통신 1개 등 모두 50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지적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됐다.

이는 17.5%의 비율로서 5.7개 매체 당 1개꼴로 지적된 셈이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1개 매체 중 6개가 지적돼 28.6%의 비율을 보였고 지방일간신문은 55개 매체 중 29개가 지적되어 52.7%의 비율로 위반, 절반이 넘는 신문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조치된 셈이다.

주간지는 9개 매체 중 1개(11.1%), 중앙주간신문은 9개 매체 중 4개(44.4%), 지방주간신문은 185개 중 9개 매체(4.9%)가 지적되었다. <표1>

지적된 매체 수와 지적건수를 비교해보면 중앙일간신문은 매체 당 평균 2건씩 지적됐고 지방일간신문은 약 2.2건씩 지적 받았다.

중앙주간신문은 매체 당 1.5건씩 지적됐고 지방주간신문과 주간지는 매체 당 1건씩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심의대상매체수와 지적매체수 비율

<표1>

매체유형 \ 항 목	심의대상 매체수	지적 매체수	비 율	비 고
중앙일간신문	21	6	28.6%	
지방일간신문	55	29	52.7%	
중앙주간신문	9*	4	44.4%	
지방주간신문	185*	9	4.9%	
주 간 지	9	1	11.1%	
월 간 지	5	0	0%	
통 신	1	1	100%	
계	285	50	17.5%	

*주간신문의 중앙, 지방 구분은 주 배포지역을 기준으로 한것임.

위반유형별로 분류하면 전체 위반 93건 중 76.3%에 해당하는 71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가 14회(15.1%),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조항위반이 7건(7.5%)으로 나타나 여론조사관련보도에서 모두 21건 22.6%로 지적되어 그뒤를 이었다. 상업광고 제한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1건이었다. 이를 매체유형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지적매체수 대비 지적건수

<표2>

간행별 항 목	지 적 매 체 수	지 적 건 수	대 비	비 고
중앙일간신문	6	12	1 : 2	
지방일간신문	29	64	약 1 : 2.2	
중앙주간신문	4	6	1 : 1.5	
지방주간신문	9	9	1 : 1	
주 간 지	1	1	1 : 1	
월 간 지	1	1	1 : 1	
계	50	93	약 1 : 1.9	

매체유형별 위반내용

<표3>

구 분 간행별 계		공정성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중앙일간신문	12	1	7	4	
지방일간신문	64	55	5	3	1
중앙주간신문	6	6			
지방주간신문	9	9			
주 간 지	1		1		
통 신	1		1		
계	93	71	14	7	1
비 율	100%	76.3%	15.1%	7.5%	1.1%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경제지 1개 포함 6개 매체)은 여론조사 결과보도와 관련해서 11건(보도요건미비 7건, 공표금지조항 4건)을 위반해서 거의 대부분(91.7%)이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건(8.3%)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에 미흡해서 지적됐다. <표4>

중앙일간신문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4>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경 향 신 문	3		3				3
국 민 일 보	3		2	1		1	2
문 화 일 보	2		2				2
중 앙 일 보	1			1		1	
한 겨 레	1			1		1	
매 일 경 제	2	1		1		1	1
계	12	1	7	4		4	8
비 율	100%	8.3%	91.7%			33.3%	66.7%

개별신문이 지적 받은 상황을 보면 경향신문과 국민일보가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해서 각각 3건의 지적을 받았고 문화일보 역시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로 2차례 지적됐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선거기간중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아 각각 한차례씩 지적됐는데 실질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거에 임박해 마지막 판세를 분석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경우 4월 6일자 5면 「현역들 뒷심 만만찮아」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한편 “지지도 5%이내의 치열한 접전”, “오차 범위가 긴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특정후보들간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

한겨레신문은 4월 10일자 1면에 「4·13총선 D-3 유권자 여론조사」라는 표시아래 여론조사 결과임을 밝히고 있고 기사내용에서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8일 전국유권자 700명을 지역별로 나눠 뽑아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결과 일반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3%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라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도 밝혔다.

경제지 중 유일하게 지적된 매일경제는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위반으로 1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1

건 모두 2건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됐다.

매일경제신문의 지적된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4일자 6면「간판인물 부재 - 뚜껑 열어봐야」 제목의 기사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후보에 치우치는 대구경북지역의 관세를 보도한 것과 3월 28일자 45면 “대구 경북지역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호남·제주지역 「민주아성에 무소속 돌풍」”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두 지역의 총선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풀이한 것 등 2건이다.

2. 지방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29개 매체가 지적됨)은 모두 64건을 위반했는데 그 중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55건으로 85.9%를 차지하였고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한 경우가 5건으로 7.8%,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3건으로 4.7%, 상업광고제한조항은 1건(1.6%)으로 나타났다. <표5>

지방일간신문의 개별적인 지적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신문은 전북도민일보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에 위반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지적 됐는데 특정후보들의 선거관련 활동이나 민원해결 노력 등을 부각해서 보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3건의 경고에 4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울산지역신문들은 4월 8일과 4월 10일자에서 합동수사반이 특정후보의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서 그 후보를 소환 통보한데 대해 후보「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야당탄압」 「정치공작」 등 후보의 주장을 2개면에 걸쳐 중점 보도하거나 후보측에 편향되게 기사제목과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두 차례의 경고(경상일보)와 한번의 주의(울산매일) 조치를 받았다.

이 신문들은 이 사건을 둘러싼 보도 이외에는 지적되지 않았는데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발행되는 「영남투데이」역시 이와 관련되어 주의 조치됐다.

제주에서 발행되는 한라일보는 제주출신으로 타지역인 서울에서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관련활동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그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주의 1회와 경고 1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의 제민일보는 『제주출신 배우자둔 총선후보들 ‘선전’』제목의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제주출신 배우자를 둔 남녀 후보 5명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선거결과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당선함으로써 보도가 거의 적중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기사심의의결과는 선거기간중의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경고조치됐다.

대전의 대전일보와 광주의 전남일보는 신문사 경영과 관련 있는 인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보도를 통해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선거기사심의의를 통해 부각된 경우이다.

대전일보는 3월 18일자 신문에 모 후보의 관련 보도를 3면에 걸쳐 부각해서 보도하거나 4월 7일자 신문에도 그후보의 선거운동 사진만 크게 게재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지방일간신문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5〉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경기도민일보	1	1				1	
경 남 신 문	3	3				2	1
경 도 일 보	2		1		1	1	1
경 상 일 보	2	2				2	
경 인 매 일	4	4				4	
광 주 매 일	1	1				1	
광 주 타 임 스	2	2				2	
국 도 일 보	3	3					3
대 전 매 일	1		1				1
대 전 일 보	3	3				3	
신 경 북 일 보	1	1				1	
영 남 투 데 이	3	2		1			3
울 산 매 일	1	1					1
인 천 일 보	1		1				1
일 간 경 북	2	2				2	
전 남 매 일	1		1				1
전 남 일 보	1	1				1	
전북도민일보	7	7				3	4
전 북 일 보	4	4				3	1
전북제일신문	4	4				4	
전 주 일 보	2	2				2	
제 민 일 보	1			1		1	
제 주 일 보	2	1	1			1	1
중 도 일 보	1			1		1	
중 부 매 일	2	2				1	1
충 청 일 보	4	4				3	1
한 라 매 일	2	2				1	1
한 빛 일 보	2	2				2	
호 남 신 문	1	1					1
총 계	64 (100.0%)	55 (85.9%)	5 (7.8%)	3 (4.7%)	1 (1.6%)	42 (65.6%)	22 (34.4%)

전남일보 3월 16일자 등 6일에 걸쳐 모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후보들 중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조치 됐다. 이 신문은 이 지역에서 행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보도하면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해 지적되기도 했다.

눈에 띄게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지역구에 한정해서 후보를 부각해서 보도한 지방일간신문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에서 발간되는 「일간경북」은 4월 6일자 신문 1면에 특정정당이 경북지역에서 펼친 선거관련내용을 4건이나 사진과 함께 보도해 경고조치 됐는데 이 신문은 특정정당의 선거와 관련되는 사진을 3개 면에 3장이나 게재해 사진게재기준(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5조,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해야 한다)을 어겨 경고 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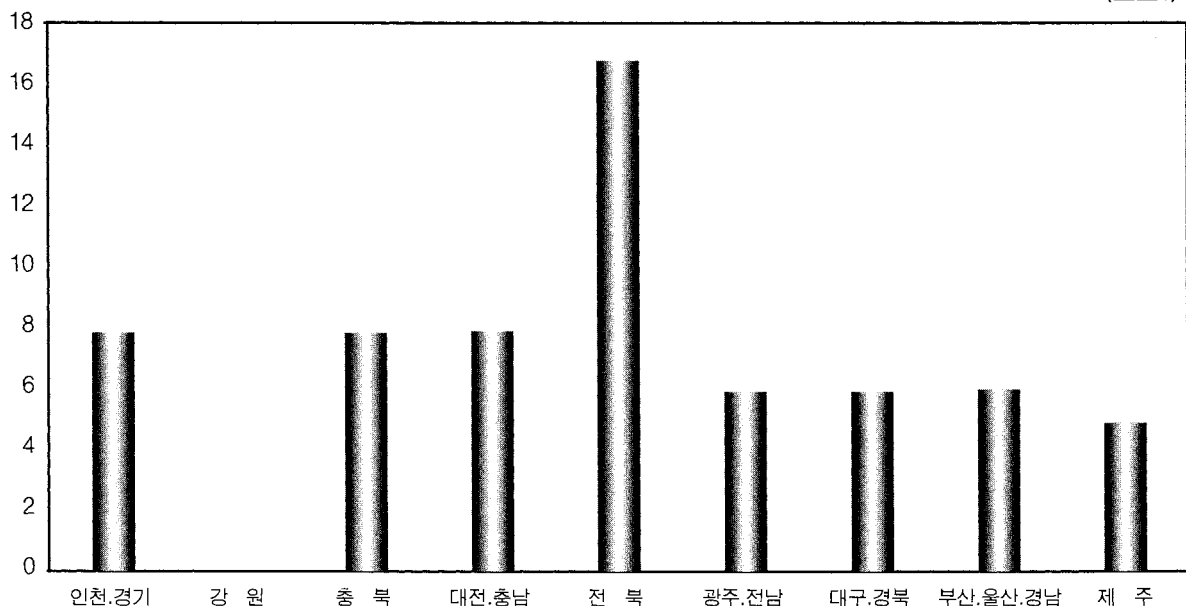
수원에서 발행되는 「경인매일」은 평택지역의 특정후보 4명을 나흘에 걸쳐 부각보도 함으로써 네 차례 경고 조치됐다.

한편 지방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지적율을 보면 전북지역의 신문 5개중 4개가 17건 지적됐고 제주지역은 3개 신문 모두가 1,2차례씩 모두 5건에 걸쳐 지적됐으며 강원지역의 2개 신문은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신문 등은 각기 지역별로 여섯 차례씩 지적됐고 인천·경기, 충북, 대전·충남지역 신문들은 각각 여덟 차례씩 지적됐다. <도표1>

지방일간신문의 지역별 지적현황

<도표1>



3. 주간신문, 주간지, 통신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주간신문의 경우 13개 매체 모두가 15회의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 위반기사로 지적되어 경고(12건 80%) 또는 주의(3건 20%)조치 됐다.

주간지 뉴스피플은 통신인 연합뉴스와 함께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로 각각 1회씩 지적됐다.

주간지를 포함한 주간신문은 모두 16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12건이 경고조치(75%), 4건이 주의조치(25%)됐다. <표6>

주간신문(주간지 포함)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6>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주간내일신문	1	1				1	
일 요 시 사	2	2				1	1
일 요 서 울	1	1				1	
주 간 현 대	2	2				2	
전북일요시사	1	1				1	
주간고향신문	1	1				1	
새 거 제	1	1				1	
리 빙 타 임 즈	1	1				1	
정 읍 신 문	1	1					1
주간남원일보	1	1				1	
울산내일신문	1	1					1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1	1				1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1	1				1	
뉴 스 피 플	1		1				1
계	16	15	1			12	4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결정한 대상은 선거관련 여론조사·기사·제목·사진·광고였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표밭의 민심을 재는 잣대로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경고」 조치된 여론조사는 모두 20건이었다.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을 유도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4·13총선 기사57건, 제목4건, 사진11건, 광고1건은 크게 나눠 「특정후보 손들어주기」「특정정당 편들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경고 조치한 이 기사들을 유형별로 묶어보면 <도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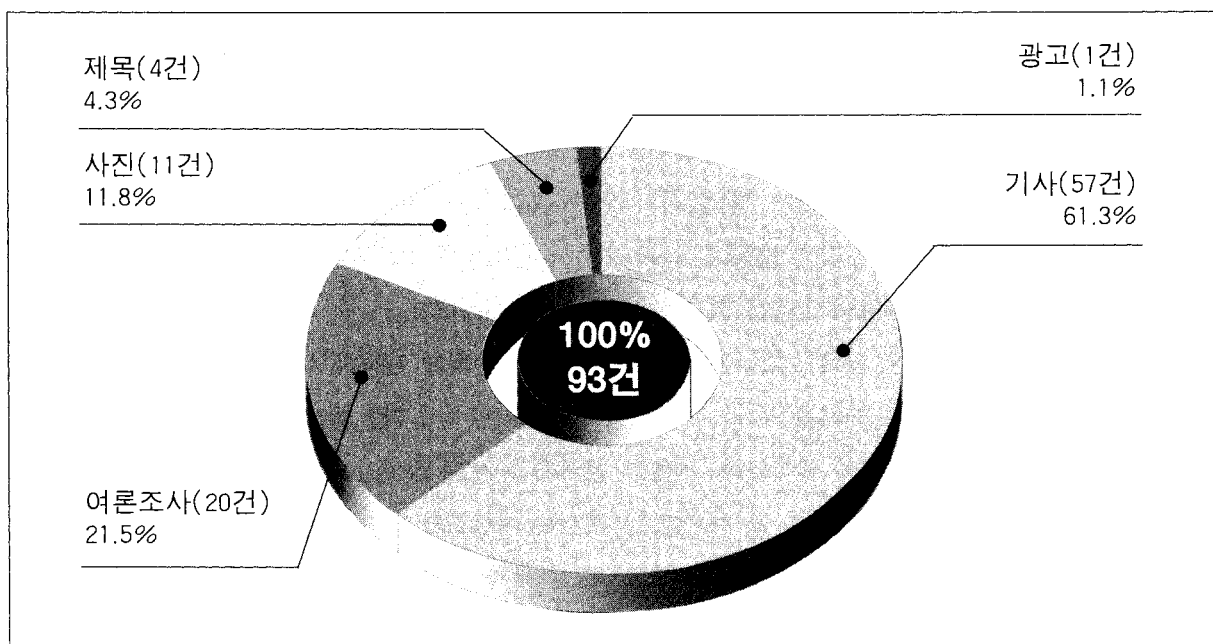
1. 여론조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특정기사를 제재조치한 사유를 밝히는 「결정」가운데 여론조사결과보도에 대한 논리는 한가지뿐이다. 언론사는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어야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론조사결과보도는 정보의 정확성, 유권자의 신뢰성이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가 갖는 절대요건을 압축해놓은 표현이기도하다.

조치 대상의 유형

<도표1>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인쇄매체의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이 같은 절대요건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론의 양상이다. 「실패작」이라고 단정짓는 시각도 있다. 정확도의 잣대인 「%」가 널을 뛰다시피 해 종잡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때문이다.

가. 조사수치의 널뛰기 현상

한나라당 공천 파동을 계기 삼아 실시했던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 널뛰기현상을 예증해준다. 이때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로…”라고 썼다. 똑같은 기사 안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얼추잡아 4~10%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한 조사’와 ‘또 다른 조사’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이런 현상은 줄곧 유권자들의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 자신의 판단까지 흐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어느 후보는 신문에 난 “각종여론조사”가 자신의 “우세”를 보도했다며 “승리를 낙관한다”고 느긋한 표정을 짓더라고 보도된 일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여론조사”가 “10% 전후로 앞서고 있다”고 전한 까닭이었다.

10% 안팎이란 숫자는 낙관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근소한 차이”란 기사 속의 표현에도 가슴을 찡는 후보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근거가 막연한 여론조사 보도에도 울고 웃는 선거관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서로 베끼는 여론 조사결과

인쇄매체가 단독으로, 아니면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거나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전제했다면 출처문제는 해결된다.

4·13총선의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견된 사례가 어정정한 여론조사주체였다.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 “각종여론조사” “최근 실시된 각종여론조사” “상당수 여론조사” “…”는 가장 흔하게 읽을 수 있었던 여론조사 주체의 「이름」이었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신문을 베꼈음을 실토해야만 하는 표현들이었다. “최근 공개된 한 일간지 여론조사”라는 표현이 그 일례다. “한 일간지 여론조사결과”는 독자적인 조사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 여론 조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인쇄매체들의 고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가장 딱한 대목은 케케묵은 자료, 그나마도 남의 자료를 버젓하게 인용한 사례였다. “지난달 중순께 한 여론조사기관이…”라고 쓴 기사를 보자. 이 신문을 발간한 날짜가 3월 8일이었으니 여론조사를 실시한지 20일이 넘은 결과를 인용한 셈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난달 중순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 “압축”을 보도한 이 기사는 여론조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합”을 보도하는 판세분석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눈길을 줄 것인지 여론조사보도의 현주소가 감지된다.

2. 선거기사

선거관련기사에서 '흠'을 찾아낼 때 한가지 기준에만 맞춰 칼로 무자르듯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가지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고리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복합현상이 시각에 따라 유형분류를 어렵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기사 가운데서 공통된 내용을 간추려 몇가지 유형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거물 양성론

선거철이 되면 어느 곳에서나 “내 고장의 인물을 키우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평소 소외감을 지녀 온 곳일수록 이런 주장이나 호소는 많고 때로는 설득력도 가져 표물리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정당이나 후보 쪽에서 나와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냉철한 눈길로 선거상황을 지켜 봐야하는 언론매체가 공정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음은 긴 말이 필요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서에 편승한 기사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월 자민련의 2차 공천자 명단에서 당내 두 중진급의 이름이 빠지자 한 신문은 이들을 “버팀목” “정치적 거물” “정치적 좌장”이라며 드러내놓고 지지했다.

무대접, 푸대접에 가슴앓이를 해오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치적 거목을 키워 중앙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논조였다.

이 신문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역량있는 정치인의 공천 탈락설에 허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정서를 전하면서 “토사구팽 시킴은 간교한 정치 공작”이라고 까지 썼다.

전라도 지역의 한 ‘친여 무소속’에게는 “당을 초월 인물 키우자”는 제목까지 붙여졌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감정의 해결사 역할을 맡게된다”는 논리까지 동원된 기사였다.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했다는 어느 무소속후보의 인터뷰 기사는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흡수력”이라고 그의 정치력을 떠받든 사례도 있다.

나. 특정후보에 全面할애

인터뷰나 특집형식으로 지면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한 기사는 모두 18건이었다. 이런 스타일의 기사를 한꺼번에 5건까지 다룬 매체도 있다보니 이곳 저곳에 「겹치기 출연」한 후보도 있다.

모두 경고 조치된 이 기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후보들을 침이 마르게 치켜 올린 점이다.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한 정치인”이라고 소개된 한 후보는 “국가지도자로서 정치력을 확실하게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미화됐다. “중부권의 맹주로 나서 새정치의 실현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자”도 나타났다. 어느 신문이 “의리파” “무공해 정치인”을 한 페이지를 통째로 내어 소개한 바로 그 날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다른 신문은 다른 정당의 후보를 “농촌수호의 선봉장”이며 “흔들림 없는 정치철학”이 “호평”받고있다고 치켜 올렸다. 후보의 인물검증이 목적인지 찬양홍보가 목적인지 아리송한 인터뷰들이었다.

이러한 인물표현을 하면서도 후보들에게 자기선전을 할수 있도록 유도한 질문까지도 눈에 띄었다.

질문① “지역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천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몇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질문② “소탈한 성품과 부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소개한다면”

다. 무소속 공방

제16대 국회의원선거만큼 무소속후보들에게 눈길이 많이 쏠린 선거도 드물었다. 전라도지역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곳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마다 「친여」를 앞세우고 나선 까닭이다.

이 때문에 ‘무소속 잠재우기’란 제목이 등장할 만큼 집권 민주당은 속앓이를 해야했다. 그 반증의 하나가 집권당의 사무총장 입에서 터져 나온 “무소속후보들은 더 이상 金心을 팔지 말라”는 경고였다. 무소속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다짐한데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무소속후보 추어올리기가 끈질기게 계속됐다. “본인의 거둬들인 고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어느 후보는 “호남이 키울 인물”로 떠받들어졌다. “승세가 갈수록 탄력을 받아 가는 분위기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표현된 어느 무소속후보는 “선거관도를 장악할 주요변수로 대두됐다”고 높이 평가됐다.

라. 지역사랑-지역개발

선거에서 지역개발 업적이 득표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평가된다. 때문에 선거철에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장미빛 공약이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는 일은 이미 눈에 익은 현상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후보들의 지역사랑호소와 지역개발공약은 선거때마다 늘 뜨겁다. 어느 후보는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될 때부터 삭발과 단식으로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논리에 따른 통합반대”를 외치며 “송탄독립” 한가지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특이한 공약이지만 후보들이 표몰이에 나설 때 즐겨 쓰는 미끼가 지역개발 업적이다.

행정요직에 앉아 있었거나 다선의원일수록 이에 따른 자랑거리는 늘어난다. 어느 다선의원이 특정구간 “국도의 안전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상자기사를 한 신문이 실었다. 이 신문은 19일 뒀엔 이의원 이 예산을 확보해 〇〇중학교 강당을 완공하게 된다고 또 보도했다.

중부권의 어느 의원은 “지역발전 사업유치에 전인차 역활”을 했으며 이웃한 타도를 위해서까지 일했다

고 확인 안된 업적까지 나열한 신문도 있다. 어느 신문은 특정후보가 자신의 공약인 경마장 조기 착공을 다짐받기 위해 득표운동은 제쳐둔 채 중앙당으로 달려갔다고 보도한 사례도 있다.

마. “큰 인물로” 홍보전략

선거에서 후보의 이름 알리기는 득표의 기본으로 꼽는다. 이 때문에 후보마다 지명도의 높낮이와 관계 없이 나름대로의 홍보비법개발에 머리를 싸매게 마련이다. 무명후보는 이름 알리기에만도 바쁜 상황이지만 이름 깨나 알려진 후보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홍보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요즘 세상에서 인쇄매체는 훌륭한 무기일 수밖에 없다. 기사의 표현이나 크기는 당연히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지면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로 부각시켜 보도된 후보가운데는 집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하루 1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도 있어 기사속에는 ‘신선’이란 표현이 여러차례 되풀이 됐다. “3전4기”라는 어느 후보에게서는 “부동층 동정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표현이 발견됐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후보들이 크고 작은 상자기사 속에 갖가지 내용이 소개돼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과정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국민의 정부실세답게... ‘힘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리 건설을 해결했다는 어느 후보를 다룬 글의 한 대목이다. 구제역 예방 자원봉사에 나선 어느 중진의원 선거운동을 다루면서 “현지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시식회를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쓴 글도 있었다. 이 후보의 축산단지방문은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이 신문의 판단이었다.

후보 추어올리기는 「대권주자」론도 한 몫 했다. 전주의 민주당후보 2명은 장차 대권경쟁자로 이미 활자화됐다. “첫 승부처는 16대총선, 2차 승부처는 당권과 대권”이란 논리였다. 이 기사는 “누가 먼저 승리의 축배를 들것인지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됐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장날 개인연설회를 가진 어느 무소속 후보를 다룬 기사 속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바. 확인 안된 사실보도

선거철엔 어딜가나 소문이 판을 친다. 그 소문이란 것은 출처 자체가 분명치 않은데다 소문이 소문을 낳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믿음성까지 없지만 그럴싸하게 들리는 데다 흥미까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파괴력이 대단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성이 생명인 기사가 만일 이 같은 속성을 지닌 소문을 근거로 작성된다면 이로 말미암은 결과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경고'조치된 사례들이 있다. 복역중이던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가석방되자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그 파장을 어떻게 분석하든 중요한 것은 기사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분당구에 출마한 여권후보가 이러한 성남시민의 정서를 파악, 정부 고위층에 오시장의 석방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권 후보자들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 미니 해설기사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당 여당후보자가 가석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분분하면서 오전시장의 행보와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 주간신문은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자료’란 제목을 붙여 병역의혹대상자 17명의 명단을 도표로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실은 것이었다. 이 기사 역시 자료에 객관성이 없음을 실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 참고자료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3. 제 목

제목의 힘은 그 크기와 내용에 따라 읽는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강도를 좌우한다. 특히 2등이 필요없는 선거판에서 선거기사의 핵심을 짧은 글로 압축해 놓은 제목의 영향력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제목이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에 치우친 느낌을 줄 경우 이로 말미암아 경쟁 상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기사 심의에 있어 큰 관심거리였다. 이런 측면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기사의 제목 가운데 심의의 잣대를 댄 것은 모두 4건이다. 다음이 제재조치된 제목들이다

〈사례1〉 자민련 김학원의원 부여총선 승리다짐
JP 아성 업고 '승승장구'
정용환변호사·조일호 전 농림부차관 격전 준비

〈사례2〉 탈당하면서 입당을 운운한 것은 원칙 없는 정치인
조찬형의원 “당원단합대회” 총선앞으로

〈사례3〉 **JP 총청권 수성 전력**
이한동총재등 수뇌부 총동원...지연 민심잡기 박차
DJ·이인제위원장에 맹공펼쳐

〈사례4〉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지지”

제목 속에 특정후보의 이름과 함께 ‘승승장구’와 ‘승리’란 표현이 들어있는 기사는 읽지 않아도 총선 승리자를 쉽사리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자민련’ ‘부여’ ‘JP아성’이란 굵은 활자들의 행진이 독자들에게 던져줄 힘의 파장은 예상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사례4〉처럼 후보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고 뒤에 지지를 붙인 경우라도 다를 건 없다.

탈당한 특정후보의 이름이 제목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인”이라는 비난이 굵은 활자로 반영된 〈사례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민련과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함께 다룬 기사인데도 자민련의 텃밭지키기 활동만을 제목으로 부각시킨 〈사례3〉도 한 곳으로만 치우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렇듯 특정후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느낌을 한눈에 주는 제목과 엇비슷한 제목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다.

4. 사 진

사진의 불공정 사례는 특정정당·특정후보의 사진을 같은 날짜 여러 지면에 동시에 쓰는 방법,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의 사진만 쓰는 방법이 꼽혔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경쟁상대들의 사진은 모두 지면에 게재하면서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하는 방법 또한 눈에 띄었다.

신문사측의 인력이나 지면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때문도 있겠으나 지면에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진이 문제가 된 경우는 11건에 이른다. 후보 가운데는 같은 날짜 다른 지면에 자신의 사진이 2~3개씩 실린 사람도 있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얼굴이 발견되곤 했다.

큼직한 사진을 여러장 쓸 수 있는 대형 인터뷰는 선전효과가 더욱더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의 인물사진을 반드시 곁들여 구색을 갖추는 인터뷰 기사 가운데 전면을 차지한 18건은 사진을 보통 3~4개씩 실었다. 전면인터뷰 기사에 실린 인터뷰 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로 한 장을 골라 길이를 재본 결과 가로 11cm, 세로 17.5cm로 나타났다. 반드시 이 사진만이 아니고 전면 인터뷰에 실린 후보의 인물사진은 이처럼 어른 손바닥 넓이 만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가하면 증명사진보다 조금 크게 쓴 인물사진조차 야당후보는 숫자 빼버린 신문도 있고 촬영각도가 거의 똑같은 여당쪽 회견 사진을 양쪽 지면에 실은 신문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선거때 마다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해도 사진보도에도 「동서현상」이 나타난 것은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다. 경상도 쪽의 어느 신문은 한나라당 사진만, 전라도 쪽의 한 신문은 민주당 사진만 각각 3장씩 보도했기 때문이다.

제4장 위반 유형별 분석

선거관련기사의 관련법규 저촉은 공정성위반이 출발선이었다. 도마 위에 오른 93건 가운데 76.3%가 공정성·형평성위반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마디로 뭉뚱그렸을 때 공정성·형평성위반이지 이를 유형으로 나눠보면 선거기사가 저지르는 「반칙」은 「차별」이 그 밑바탕임이 드러난다. 소속정당과 그 후보에 따라 지면 배정을 차별하고, 기사분량을 차별했다. 제목의 내용과 크기를 차별했고 사진 게재를 차별했으며, 판세판단을 차별했다. 한쪽에 유리하게 쓰면서 다른 쪽에 불리하게 쓴 기사로 의도를 드러냈고 슷제 특정후보와 정당의 존재자체를 묵살해 버려 지면에서 추방해버린 사례도 자주 눈에 띄었다. 특정정당과 후보의 득표활동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보도하느라 지역색을 감추지 못한 사례도 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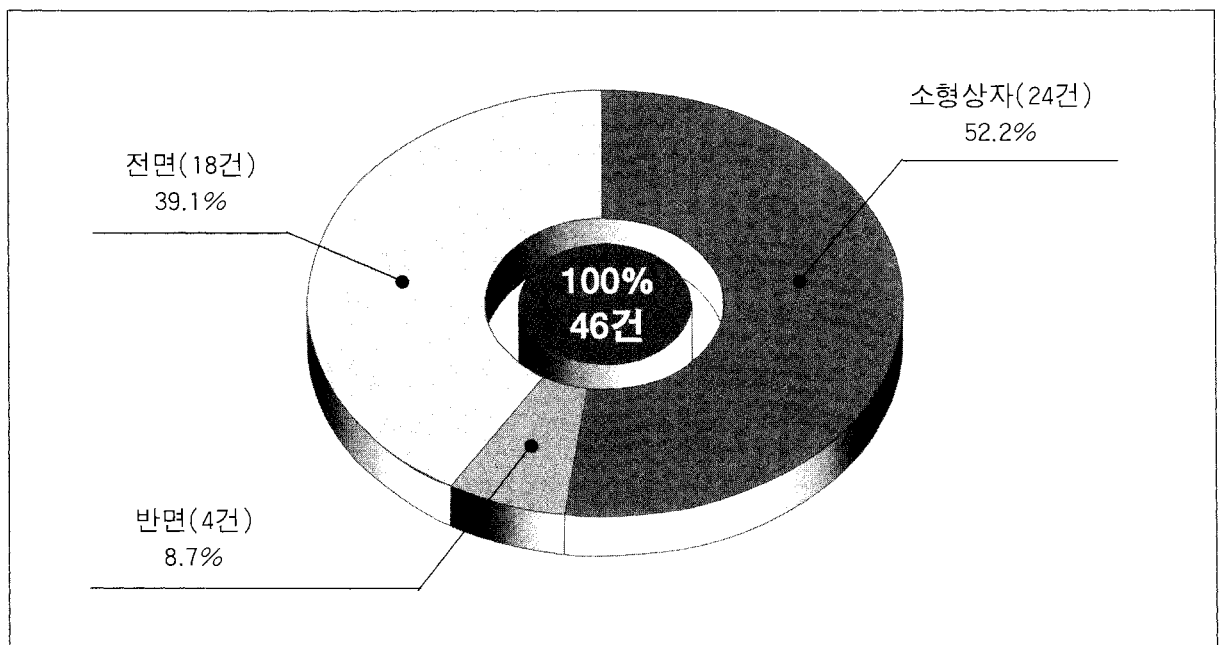
1. 공정성·형평성

가. 상자기사

공정성·형평성위반은 전면이나 반면을 할애한 인터뷰와 기획, 특정후보만을 주어로 삼은 상자기사에서 가장 끈질기게 드러났다.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기사였던 까닭이다. 전면 인터뷰 18건 가운데는 2개 지면을 특정후보가 독점한 사례도 있고, 특정후보가 2차례 등장하기도 했다.<도표1>

특정 후보 기획물 분포도

<도표1>



이 후보들을 소속별로 나눠보면 민주당 8건, 한나라 2건, 자민련 4건, 무소속 4건이었다. 지면의 절반을 차지한 4건은 자민련 1, 무소속 3건이었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소형급일 수밖에 없는 상자기사는 지구당대회때 가진 인터뷰를 제쳐놓고도 24건이 나 됐다. 대형물과 마찬가지로 특정후보만이 주어인 이 소형상자기사의 주인공을 소속별로 먼저 살펴보면 민주당 11건, 한나라당 6건, 자민련 2건, 무소속 5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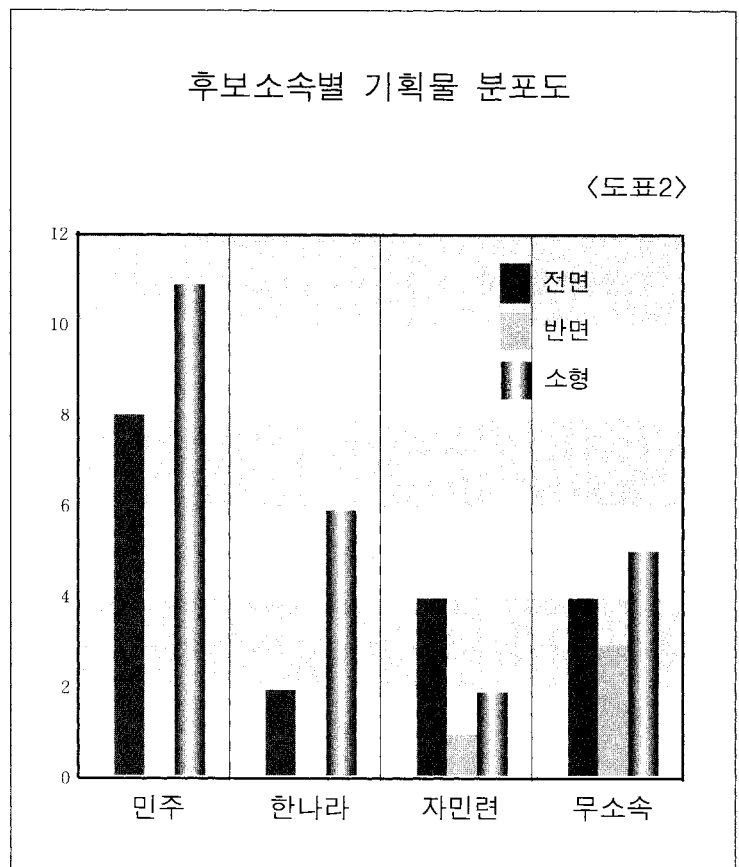
전면이건, 반면이건, 소형물이건 크기와 관계없이 이들 기사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찬양보도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특정후보의 지역개발 공약이나 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야망표명, 유별난 행동같은 것들이 소재가 되어 상자기사로 다루어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스케치 기사를 모아놓은 지면에서 특정후보만을 별도기사로 다뤄 눈에 띄게 차별화를 시도한 것만도 3건이나 발견됐다.

이 같은 기사들은 편집된 크기에 관계없이 경고나 주의 조치됐지만 평상시의 시각으로 는 문제삼을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화된 시기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철이었다는 점을 간과했거나 묵살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 지면 물량배정

지면에서 읽는 이의 눈길을 잡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같은 주제를 가진 관련기사를 여러 지면에 걸쳐 '응단 폭격'하듯 깔아 나가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거관련기사에 적용하면 읽는 이는 지면을 넘길 때마다 특정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읽고 보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지구당대회를 계기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다. 총선 종합스트레이트, 지구당대회 스트레이트, 지구당위원장 인터뷰, 선거구의 출마후보 소개, 스케치, 중앙당직자 인터뷰, 도 선거대책위 현판식 같은 기사들을 사진물을 곁들여 화려하게 편집해 놓으면 기억에 남게 마련이다. 이 방법으로 3개 지면을 차지한 민주당후보가 2명이나 있었다. 어느 신문은 한나라당의 3개 지구당 행사가 같은 날 열리게 되자 무려 5페이지를 이 행사로 도배하다시피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어느 신문은 가장 많은 지면을 특정후보를 위해 하루나 이틀씩 사이를 두고 여섯차례에 걸쳐 무려 11개 지면을 꾸민 일도 있다. 가장 많은 물량이었고 가장 많은 조항위반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무소속이었던 이 신문은 지구당대회 대신 여론조사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소재로 무소속에 유리하게 지면을 꾸며나갔다. 경쟁상대가 낙선운동대상이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경고 조치된 이 기사들에게 적용될 법조항은 선거법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사실보도조항으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지역의 후보가 아닌데도 그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타향에서 출마하는 후보를 집중 지원한 사례다. 이 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설에서부터, 출판기념회, 후원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6차례나 지면에 소개됐다.

다. 기사차별

공정하지 못한 기사의 표본 가운데 한가지가 기사분량을 차별하고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의 기사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지역의 중진급 인물 2명이 공천에서 계속 보류되자 어느 신문은 이들의 공천을 촉구하는 기사 8패러 그래프 가운데 4패러그래프와 1패러그래프를 이 두사람을 감싸는 내용으로 썼다. 다른 공천 신청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사이에서조차 균형을 잡아주지 않은 셈이다. 자민련 후보의 우세를 보도한 어느 기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분량이 3 : 1 : 1로 조율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런가하면 자민련 후보가 푸대접을 받은 사례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마친 두 후보의 출정식을 다룬 기사에서 드러났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각자의 선거사무소 옆 공터에서 가진 출정식이었던만 그 차별은 한눈에 드러났다. 무소속 후보는 6면에 4단 상자로 행사사진까지 곁들여 보도된 반면 자민련 후보는 12면에 1단 상자로 다뤄졌다. 사진의 크기와 숫자, 제목의 크기와 내용 또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다. 한마디로 자민련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4분의 1수준이었다.

경기·인천지역 정당 연설회에서 한나라당을 우대한 기사는 1면과 3면에서 발견됐다. 하루전 열린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의 정당연설회를 3면에 함께 모아 다룬 이 기사는 균형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1면에서 드러났다. 하루 뒤에 열린 한나라당의 인천지역 연설회만을 1면에 따로 행사사진까지 곁들여 큼직하게 보도한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특수」의 극치는 기사 4건과 사진 1장을 1면에 집중배치해 도배하다시피한 지면이었다. 이 신문은 이회창 총재의 경북 유세, 선대위 정책위원장의 회견, 달성경찰서 항의방문, 민주당 후보 수사촉구 기사와 함께 선거대책을 협의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민주당후보가 또한 1면에 부각보도된 사례의 하나는 의정보고회 기사였다. 예정된 의정보고회가 사진까지 곁들인 상자기사로 눈에 띄게 보도된 때문이었다. 그 컷이 '4·13하이라이트'였다. 민주당 후보기사가 자민련 후보의 10갑절이나 되는 사례는 사진과 제목도 공정치 못했다. 기사분량은 민주당 후보 40행, 한나라 후보 6행, 자민련 후보 4행으로 겨우 구색은 갖췄으나 사진과 제목에서 두야당 후보는 숫제 제쳐놓아버린 불균형의 극치였다. 연설회에서 특정후보만을 골라 별개의 상자기사로 다룸으로써 읽는 이의

눈길을 잡는 것 또한 이미 고전이 돼버린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라. 제목에 이름쓰기

이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 특정 후보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다. 후보들이 득표활동의 기본무기로 이름을 알리고 기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면에 굵은 활자로 나타나는 이름이야말로 큰 힘이 돼주는 원군과 다름없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후보자가 여럿일 때 특정인의 이름만 가장 크게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작은 제목으로 써서 차별을 시도한 기사들이 있었다. 이럴 경우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주는 인상의 차이가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로 꼽히던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고 특정인을 밀기로 세를 합칠때나 정당모임에서 자당 후보의 선출을 호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지”라는 제목이었다. 이럴 경우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은 자신은 마치 ○○○을 지지하는 듯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마련이다. 제목 글씨가 클수록 본인에겐 유리하겠고 자연히 경쟁상대들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후보를 면담하는 외국인의 입을 빌어 특정후보의 이름을 제목으로 쓰거나 후원회장 이름앞에 특정후보의 이름을 밝혀 기억케 하는 방법도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마. 특정당(후보) 차별

같은 날짜에 나온 신문의 같은 지면 기사에서 특정당이나 특정후보만 부각시키는 방법은 형평성을 잃은 편집의 으뜸이다. 이에 대조되는 방법이 특정당이나 특정후보 관련 기사를 숨겨 누락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특정당이나 특정후보 관련 기사는 유리하게 쓰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의 기사를 불리하게 쓰는 방법도 발견됐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경쟁상대들끼리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게 상례가 돼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쪽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 쓴 기사는 자연히 한쪽 편으로 기울어 형평을 잃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 관련 기사에서도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사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일례로 총선 스케치 기사로 넓은 지면을 채우면서 특정당(후보)에 유리하고 불리함이 느껴지는 기사들이 여러개 나타났다. 스케치 기사를 7건 실으면서 3건은 한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나머지 3건은 다른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쓴 유형이 그 하나였다. 한쪽에서 특정지역의 지명을 잘못 쓴 홈페이지를 띄우자 이를 사진으로 찍어 실은 것이 그 사례. 그러나 다른 쪽의 기사는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을 전달해 대조되는 느낌을 누구나 갖게 했다.

스트레이트 기사도 마찬가지였고 인터뷰 기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무소속 후보는 찬양일색으로 추어 올린 반면 경쟁상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약점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들춰지고

있다”고 표현한 내용이 그 한가지 사례로 꼽힌다.

그런가하면 특정당이 무소속에 포문을 열자 이 상황만 부각시켜 보도했을뿐 대항수단이 약한 무소속의 항변은 단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아 무소속은 꿈쩍 못한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선거날 아침 3당 도 선거대책위원장들의 마지막 지지호소를 다루고도 다른 지면에 특정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눈에 띄게 보도한 사례도 또 다른 예증거리로 꼽혔다.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로 곤경에 빠진 특정후보의 상황을 크게 다룸으로써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한 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로 남는다.

바. 특정인에 맞춘 판세

선거관련기사 가운데 정당이나 후보의 우열보도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갖춘 근거가 필요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만 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현지 취재형식으로 쓴 기사가 가끔 드러내는 맹점은 객관성을 띤 자료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근거삼아 특정당과 후보의 판세를 기사화 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취재한 내용을 자신의 판단에 맞춰 재단하기가 십상이다.

이런 유형의 기사가 제시하는 소스는 “선거전문가” “당관계자” “택시운전사” “시민”인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들의 판단이 모두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자칫하면 특정한 쪽에 기울었다는 오해를 받기 쉬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썩어도 준치”라며 거물급 정치인의 승리를 장담한다거나, 단지 지역정서만 믿고 「희망사항」을 예단한 기사들이 그 실례로 꼽힌다.

2. 여론조사

가. 보도요건미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가운데 보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사는 모두 14건이었다.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요건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이다. 이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믿을만한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신문제작의 현실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엔 신축성을 두고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3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모두 14건이 주의 조치 됐고 보면 얼추잡아 하루에 1건 꼴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체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보도한 곳

도 있고 지면 사정이 빠듯한데도 질문내용까지 빠짐없이 밝힌 신문도 극소수일지언정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않은 보도가 꼬리를 물었던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선거철에 자주 지면에 등장했던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같은 표현은 보도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의 다른 표현이었다. 기사 속에는 “뒤지고 있다”,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와 같은 표현을 썼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요건은 “각종여론조사결과”라는 한마디로 얼버무린 사례가 가장 흔한 표본이었다. 그러잖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여론조사인 판에 “각종”을 종합해 보도했으니 그 보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 표명을 예사롭게 들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신문들이 많이 사용하는 출처 제시방법 가운데 “각당의 자체 분석결과”가 있었다. “각종여론조사를 기초한 각당의 자체분석”이란 꼬리표를 달아 지역명, 후보별 판세를 분석한 이 보도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비롯한 각종여론조사결과”라며 판세를 풀이한 어느 신문은 특정후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라며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나. 결과보도금지

법규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을 어겨 선거기사심의위가 조치한 보도는 모두 6건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은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8일과 29일에 보도됐으나 1건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많은 신문들이 이 금지 규정을 의식한 듯 여론조사의 상징인 「%」는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막연하게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뿐만 아니라 고향출신 배우자를 둔 다른 선거구의 후보들 근황까지 소개해가며 애향심을 북돋아 눈길을 끌기는 했으나 그 근거는 역시 막연한 “최근 각종여론조사”였다.

여론조사결과보도가 금지된 기간중의 한가지 특징은 각 선거구의 판세분석에 「%」대신 ‘우세’ ‘경합’같은 표현이 큰 흐름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이런 보도형식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어느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합법성 여부를 질의한 일이 있다.

이 질의서는 “각 언론사의 판세 분석에서 나타나는 「우세·백중·백중우세·경합·추격」등의 후보자의 등급분류식발표가 출마자 본인은 물론 공직 후보자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출해야하는 유권자 선택권의 공정한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판세분석 발표는 선거법규정의 허용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 언론사의 총선 판세보도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분위기등을 취재하

여 보도하였다면 이를 위 법조항에 위반되는 보도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기자의 취재보도는 막을수 없다는 이 회답은 논란의 여지를 해결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3. 상업광고제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출판물을 내는 일은 원래부터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도 큰 흐름을 이루는 것이 이른바 '자전적 에세이'다. 이 자전적 에세이가 이번 심의기간 중 신문광고에 등장해 기사 심의에 오른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광고를 금지한 법규정을 어긴 까닭이었다.

"굴곡의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 정치인의 이정표"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5단 광고로 나온 서적은 '용마루에 뜨는 달'이었다. 후보자의 선거구는 경남 지역이었으나 광고를 실어 경고조치를 받은 신문사는 인천에 자리잡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

서적광고가 문제된 사례는 유일한 것 이어서 관계법규를 소개해 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영화·사진기타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30>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부 종합평가

제 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제 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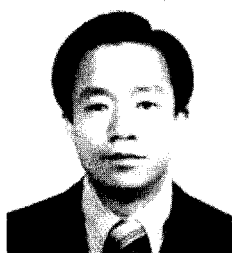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개선, 유지돼야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서는 신문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들다. 신문은 국민의 눈이요, 귀요, 입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면, 신문은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사초(史草)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선 기자는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나 언관(言官)과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사를 써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이란 끝없이 지배하려는 속성 때문에 언론을 조종하려 들기 마련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의 비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권력과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파사현정, 억강부약이란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의 확보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도 언론이 춘추필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다했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이비언론으로 타락했을 때, 규제를 불러들인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론은 과거의 언관이나 사관이 목숨을 걸고 사초를 기록하듯이 사실을 양심에 따라 기사화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송 효 빈

선거기사 심의위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전 한국일보 편집부국장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현 한일협력위 상임위원

저 서:

- 국회의 실상과 허상
- 이것이 일본이다.
- 체험적 신문론
- 경영품질의 혁명(번역)

후보자를 올리는 선거보도

6.10항쟁과 6.29선언 등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신문 발행이 허가제로부터 등록제로 바뀌게 되자, 지방지와 지역신문 등 정기간행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수가 5월말 현재 족히 6,000개는 된다는 얘기가. 과거 재정이 허약한 지역신문은 평소에는 광고 수주에 열을 올리다가 한해 걸러 있다시피한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와 결탁해서 거액의 돈을 받고 선전지를 만들어 주고 홍보지 같은 신문을 마구 뿌렸다. 그리

고 후보자의 저서나 경력을 소개하는 광고를 무단 게재하고 광고비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약점을 침소봉대해서 유포시키는 등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입후보자들은 엽불에는 맘에 없고 잣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이비 기자의 편파보도에 눈물을 쏟아야 했다.

지역 신문의 사주들 중에는 그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방 유지들도 있다. 지방 유지들이 자기 사업의 보호막으로 설립한 지역 신문들은 과반수 이상이 무보수 기자를 고용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기자라 해도 면세점 이하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영세한 신문사라 하더라도 그럭저럭 운영이 가능했다. 이런 사이비 기자와 사이비 언론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썩고 병든 부정부패한 관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비언론이 법으로 일소되지 못한 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그렇다고 사이비 언론의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이비언론의 문제가 자율 규제로써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로 남아 있을 때, 신문 망국론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급기야 자율 규제를 불려오게 된다.

I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배경

선거는 언제나 과열되기 마련이다. 후보자로 나서면 선거 브로커와 사이비기자에 포위되어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선거비용으로 탕진하게 된다. 후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론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사이비 언론의 횡포가 시작되는 것이다.

피를 말리는 선거판에서 언론이 어느 한쪽을 두둔한다는 것은 공정무사 해야할 심판관이 한쪽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다. 과거엔 이런 일종의 범죄행위가 언론자유라는 이름아래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지방지와 중앙지까지도 다반사로 저질러졌다. 이같은 불공정한 보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야 후보들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 사건으로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봤지만 화급을 다투는 선거전에서는 실제적 구제대책이 못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공정한 선거기사를 유도키 위해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이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와 정당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수개월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협상을 거쳐 지난 2월 8일 통합선거법이란 이름으로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심의기구 설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를 정부가 15일 공포했다.

이미 97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이에 앞서 국회는 제15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7년 11월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 공정보도에 관한 3개항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 등의 편집·취재·보도자는 후보자의 정견등에 관한 보도와 논평에 있어서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켜 대담과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둘째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방송을 심의하고 셋째는 방송보도와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해서 반론보도절차를 따로 마련했다.

반론보도청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실린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그 보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행인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언론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사의 대표가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케 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심의를 목

적으로 하는 통합선거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통합선거법 제8조의 3의 골자는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언론학계, 대한변협,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하며 이 기구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규정했다.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과문,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56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언론사의 발행인에 대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출입기자도 몰랐던 위헌조항 심의위가 지적

국회 출입기자들은 개정선거법에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끼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기자들이 국민의 관심사였던 선거구축소 문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다른 선거법개정 내용엔 소홀했다는 후문이다.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포된지 10여일 만에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사과문 게재명령의 위헌성과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과도한 입법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이 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됐다.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첫째 19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의 강요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내린 판례를 제시하고 선거기사의 불공정성만으로 사과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8조의 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개정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심의위가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했을 때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량에도 문제가 있고, 3심제의 정신에도 벗어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①위헌소지가 있는 사과문의 게재결정은 가능한 지양하기로 하고 ②불공정 보도의 시정은 가급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로 유도하는 등 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집행기구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개정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때까지도 400명이 넘는 국회출입기자들과 입법에 참여했던 울산 출신 국회의원까지도 사과문 게재명령이 위헌인 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보다 많은 국회 출입기자들이 언론의 독소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 생각한다.

국회에는 중앙지의 경우 한 개 신문사에서 1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나와 입법 활동을 취재 보도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든 안건은 기자실에 유인물로 정리되어 배포되며 출입 기자들은 이를 검토, 기사화한다. 개정선거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은 것은 그 많은 국회 출입기자 가운데 단 한사람도 이날 통과된 문제의 통합선거법을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데스크들도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언론조항이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은 셈이었다. 아무튼 정기간행물의 공정 선거보도를 확보기 위해 마련한 심의위원회의 설치문제는 이런 경위로 뒤늦게 알려져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Ⅲ.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언론의 시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보도에 대한 사과문게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반민주적 독소조항”

이라고 지적,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위헌소지가 있는 선거법의 재개정을 지시한 데 대해 주목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4·13총선 전에는 재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용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협회도 '우리의 주장'에서 사이비언론의 규제나 불공정보도의 시정은 당연한 일이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빈대 잡기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언론계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선거관련 보도에 설사 불공정한 부분과 편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에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곧 바로 형벌로 이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렇듯 언론계의 반대의 논거가 대체로 사과문 게재의 위헌성과 처벌조항의 문제에 집중돼 있고 이번에 신설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배경, 즉 선거기사의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의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체 외면 한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심의위의 탄력적 운영방침에 언론계가 신뢰

이렇듯 언론계가 위헌론을 제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개정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법개정의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확보에 있는 만큼 아무리 선거 때마다 저질러지는 언론의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 다음 회기에 개정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통합선거법의 재개정 지시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방침 선언은 언론계의 반발을 잠재웠고 오히려 언론계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Ⅳ. 암중모색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실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운영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도 애초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의기준 초안에서 대폭 수정, 완화됐다. 지금 생각하면 초안 그대로 채택, 공정성·형평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그 초안의 경우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예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초안은 "선거기사의 내용과 크기, 횟수, 배치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객관성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해야"하고 "선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 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가능한 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 초안을 상당 부분 수정·완화했다.

선거기사심의위가 삭제하고 다듬어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심의기준 몇 개를 예로 들어보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에서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는 선거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과 같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정리에 그쳤다.

실제로 신문과 주간지를 심사할 때, 오랫동안 신문기자생활을 해온 감각으로 기사 전체를 읽지 않아도 공정성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었던 것

은 사실이다. 지면구성과 제목만 봐도 한눈에 공정성을 잃었느냐, 아니냐를 즉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적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차원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사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란 지 난한 일이다. 단순한 사건기사도 취재기자의 시각에 따라 사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당리당락이 숨어있는 정치행위에 관한 보도와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보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공정보도의 확보는 편견을 배제하고 양심에 따라 불편부당, 사회 각층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때 가능하지만 이론과 실재는 전혀 다르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핵심은 보도와 논평의 자유에 있다. 신문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보도와 논평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서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여론을 오도한 그 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누릴 자격을 그 순간부터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을 때 비로소 주장할 명분을 갖는다.

일벌백계로 심의대상 엄선

한정된 인력이 6000여종에 이르는 정기간행물을 제한된 시간에 모두 모니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그 많은 간행물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의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준다고 해도 배달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 76종과 구독가능한 주간신문·주간지·월간지 209종 등 총 285종의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했으며, 모니터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다수의 선거기사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이 중 93건을 주의 및 경고 조치했다. 이는 심의대상 정기간행물의

수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로 엄선했기 때문에 과급 효과는 컸다고 판단된다.

93건의 제재결정 중에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이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위반으로 71건(76.3%)이다. 다음이 여론조사 보도위반 21건(22.6%)의 순이다.

이렇듯 선거보도에 있어서 빈도가 높은 공정성·형평성·객관적 보도의 위반에 대해서 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의 규칙의 상세한 제시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도 맞다고 본다.

여론조사결과보고 금지규정이나 여론조사의 보도요건 등은 선거법(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이나 선거기사심의기준(제8조 여론조사 보도)에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공표금지 기간 중 단순히 관세분석만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후보자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수는 5건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 그 이유로는 발행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엄격하여 불공정 보도가 미연에 방지된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언론을 상대로 공정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 문제는 좀 더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3가지 사례

〈사례 1〉 기명 칼럼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을 경우 불공정 보도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다. 사실과 논평 및 기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심의규정을 적용, 칼럼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도 있었다.

모 중앙일간지는 오피니언란에 “정치적으로 유착했다는 오해를 각오하고 이 글을 쓴다”는 한 시사평론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은 영남 지역에 출마한 여당의 한 의원을 지역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작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우호적으로 묘사했다.

이 기사는 모니터 과정에서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정치적 중립(선거기사심의기준 제5조)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심의기준 제1조) 및 형평성(심의기준 제2조)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이 안건이 제재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불문에 부치자는 의견은, 칼럼은 사실과 달라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을 본인의 책임하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의견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신문사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만일 칼럼니스트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독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신문사에 항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문사측은 그와 같은 글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므로 언론자유의 큰 틀 속에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은 개정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선거기사의 보도와 논평까지도 그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칼럼의 경우, 신문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정도의 편집자 주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이를 신문사의 편집방향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그 주된 논리로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재결정을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의 의견이 백중이므로 이 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추후 다시 이같은 칼럼이 실리면 그때 가서 주의나 경고결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사례Ⅱ〉 여론조사의 공표금지 이후 각 신문사의 판세분석보도가 여론조사 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됐다.

A일보와 B일보가 4월 1일자 신문에 “고흥길 강봉균 2강 접전”, “여기가 승부처 서울 동대문갑, 인천 연수”라는 제목을 달고 집중적으로 판세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어 C일보도 4월 3일자 신문에 “이종찬 고토회복, 정인봉 3전 4기”라는 표제 밑에 서울 종로지역의 판세를 분석했다.

또한 D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16대 총선에 여야당의 승패가 걸려있는 수도권지역의 판세분석을 도표를 곁들여 보도했다. 또한 E일보가 4월 6일자 신문에 격전지 42곳을 선정, 본격적인 판세분석을 보도했다.

이러한 형태의 판세분석기사를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선거기간 동안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개정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 선거기간 중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언론의 선거보도를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당 분석 및 신문사의 취재내용을 종합하여 단순히 판세분석한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되, 기사내용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제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법 조항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에서 나온 운영 지침이었다고 생각한다.

D신문과 E일보가 똑같이 수도권의 격전지들을 집중적으로 판세를 분석, 도표까지 곁들여 보도했지만 D신문은 여론조사결과 보도라고 불만한 증표가 없어 불문에 붙였다. 그러나 E일보는 ‘지지를 5%이내의 치열한 접전지역’이라는 표현이나 ‘격차가 오차범위이기는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고 기술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정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안정 47.6%, 견제 36.5%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은 여·야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결과 보도로서 개정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경고조치됐다.

한편, 아무리 판세 분석이라고는 하지만 ‘양자구도’, ‘3자대결’ 등과 같은 표현은 여기에 빠진 후보의 입장에서는 차별 내지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근거(여론조사)에 의한 차별은 편집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례Ⅲ〉 확인되지도 않은 폭로성 발언을 기사화했을 때 피해당사자의 정정 보도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지방의 A일보는 4월 9일자 1면 머리기사로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7년전 금품 수수 의혹을 상대 후보의 폭로를 근거로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해와 위원회는 양당사자를 출석시켜 회의를 가졌다. 회의석상에서 A일보측은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기사내용이 제보자의 주장임을 기사에서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한 후보자(시정요구인)의 ‘사실무근 주장’도 함께 게재하였으므로 불공정한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대후보측의 폭로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면 머리기사로 다루었다는 점, 그것도 3일 동안 속보로 보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기사가 공정성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금품수수’ 주장은 그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가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시정요구인측의 반박과 함께 A일보 스스로 만들어 공표한 ‘총선보도 준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위원회의 추궁도 더해졌다. A일보의 총선보도 준칙에는 “한쪽의 주장이나 추측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의도성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정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이에 A일보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정정보도는 계속 거부했고 결국 언론사가 반론 기사를 게재하기로 약속하고 시정요구인측이 청구를 취하였다.

이후 A일보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시정요구인의 반론을 게재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반론청구가 효과적

선거법상의 반론권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의 비판과 공격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당사자가 언론사측에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같은 반론권은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 공정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선거법 제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에 의해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요구할 때는 1차적으로 당해 언론사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사건해결의 시간을 지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도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문이 선거보도에 있어서 편파적인 보도와 논평으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줌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이나 칼럼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같은 논평이나 칼럼으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반론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반론권 행사의 통로도 다각도로 넓혀주는 것이 편파적인 논평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에 정정보도의 청구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됐을 경우에만 피해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정보도보다 반론보도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론조사 공표금지선 투표 1주전까지

여론조사에 무응답자가 많고 그 무응답자 속에 야당(또는 여당)표가 숨어있는 한 총선여론조사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투표율도 가려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거짓 응답자를 가려내는 것은 더 힘든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때, 일정부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유효하다 하겠다.

선거는 4월 13일인데 2월 중순부터 각 언론사들이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우세·열세 후보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신인들은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 한 장 돌릴 수 없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들은 후보등록 이전에도 의정보고라는 이름하에 편법 선거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현역의원이 앞설 수 밖에 없다. 현역의원이 유리한 개정선거법 속에서 겨우 신인들이 이름을 알리게 되어 여론의 지지를 받을만 하게 되면 선거법상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에 걸려 인기상승의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다. 결국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표일 전 1주일 까지만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든지, 전면 해제해서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겠다.

V. 맺 는 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보도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세가지다. 첫째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결정이고 둘째는 반론보도문의 게재결정, 셋째는 주의와 경고 결정이다. 개정선거법 제8조의 3에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사과문 게재결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불가능하고 정정보도결정은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정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반론권과 주의·경고 조치 뿐이다.

따라서 반론게재결정권을 포함, 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다양화하여 후보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주의와 경고조치도 경고를 받은 신문사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 파

급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를 받은 신문사는 물론이고 다른 매체들도 모두 보도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각 형사처벌로 들어가기 보다 적지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후보를 위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민간선거감시기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후보자를 대신하여 불공정보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겠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던 언론계도 집행기구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위헌조항을 지적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심의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추천단체의 색깔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파보도를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의에 힘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전처리는 자연히 만장일치로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었다.

4·13총선보도가 이렇듯 긍정적 방향으로 바뀐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의 발족과 함께 기자회견 등 각 언론단체들이 선거보도 준칙을 만들고 언론사들도 앞을 다투어 보도준칙과 함께 총선취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보도에 힘을 쓴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론이 전례없이 공정보도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른 언론없이 바른 정치 없다는 시민의식의 확산과 함께 편파보도를 하는 신문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고 본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한 뒤 현행대로 선거 때는 계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16대 총선보도의 실태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일 시 : 2000년 5월 10일 오후

장 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실

참석자(선거기사심의위원)

● 이 창 구 (李昌求, 심의위원장, 사회)	● 안 영 도 (安永燾, 변호사)
● 송 효 빈 (宋孝彬, 한일협력위 상임위원)	● 윤 석 홍 (尹錫弘, 단국대 신방과 교수)
● 남 시 욱 (南時旭, 전문화일보사장)	● 고 혜 련 (高惠蓮, 한국여성언론인연합회이사)
● 이 시 헌 (李時憲, 전동아일보 논설위원)	● 유 선 영 (柳宣榮, 변호사)
● 김 영 호 (金榮豪, 연개원신문개혁특위위원장)	

〈연령順〉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자로 16대 총선관련 기사심의활동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활동을 결산평가하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은 위원회 설립의의, 16대 총선보도실태, 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사심의위원회가 초반 언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자평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위원장 : 오늘은 그 동안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사법적 기능을 부여받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설립초기부터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켜 언론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 지금에 이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위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지속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으나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의가 금번에 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던 바, 그 의미가 자못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립의의를 정치·사회적 관점과 법률·제도적 관점 그리고 언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언론자유침해로 보였을 것입니다. 먼저 언론인의 입장에서 남시욱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시욱 위원 : 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정 선거법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들은 정상

적인 언론의 선거보도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설립을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과명령에서부터 불복절차의 불비, 그리고 형사처벌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하 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 저 역시 위원회의 설립이 선거보도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안전으로 상정된 지방지기사 중 일부의 경우 의도적인 불공정보도로 추정되는 것도 많았으며 심지어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율규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언론의 입장에서 위원회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 것인지 고혜련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고혜련 위원 :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

거를 앞두고 언론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회 관련조항에 대해 여야 간의 별 이견이 없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 대중매체시대의 대의정치에 있어서 선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관건이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위원회설립의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дах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회설립의 의의를 법률·제도적 관점에서 논의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혜련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후보자는 잘못된 선거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경우 처리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반론의 경우 48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상으로 위원회설립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의 설립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일부 언론에 대해 선거기사의 공정성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16대 총선보도의 실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과거에 비해 나아졌는지 악화되었는지, 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립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일부 언론에 대해 선거기사의 공정성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창 구



원인은 무엇인지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현 위원 :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한 일정 부분 중앙지나 지방지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지가 중앙지보다 더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선거보도를 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호빈 위원 : 잘 아시다시피 87년 6.29선언 이후 언론자유가 급속도로 신장돼 그 동안 엄청난 매체가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급성장에 비해 그 동안 언론인의 자질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마다 선거브로커만큼이나 사이비기자들이 후보들에게 횡포를 부려온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주의·경고조치된 12건 중 여론조사와 관련된 11건을 제외하면 공정성·형평성 관련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건에 불과, 공정보도의 개념이 어느정도 확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청구된 모지방일간지의 경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제보자의 폭로를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뒤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을 뿐 사실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대응, 여전히 60~70년대식 언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석홍 위원 : 일부 지방지의 경우 그 내용과 편



“일부 지방지의 극단적인 편향보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자해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석 홍 위원

집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팜플렛을 방불케 할 정도로 편향보도가 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사출신 후보를 띄우는 사례들도 몇 건 적발되었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색깔론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저질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중앙지의 경우 공정성이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 일부 지방지가 편파보도를 일삼는 것은 기자들의 자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독점자본이 신문을 운영하는 그 잘못된 소유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정치권력과 유착하고자 자신과 밀착된 인사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자 차원에서 불공정보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주의 힘이 막강한 소규모 신문사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지역분할적 정당정치상황하에서는 지방신문은 당해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기관지적 성격을 띌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보도가 많은 이유는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신문사주가 지면을 사유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 한 지방지의 불공정보도

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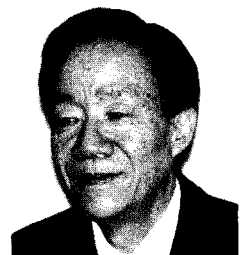
안영도 위원 : 지난 4·13총선 선거운동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 역시 이를 강화하고 고착화시킨 점에 대

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보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교체방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실제로 정권이 어느 쪽이나에 따라 특정지역이 상당한 수혜를 입는 악순환이 지양되지 않는 한 언론의 지역편향적 보도태도도 바뀌기 힘들 것입니다.

위원장 : 지난 4·13총선때는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불공정 보도사례가 많이 줄었으며 지방지의 경우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중앙지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이렇게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에는 위원회의 활동도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다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홍 위원 : 중앙일간지의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을 위반하여 주의·경고 조치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언론사들의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해 사과명

“위원회의 결정이 언론과 법조 그리고 학계와 정당을 각각 대변하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것도 공정성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효 빈 위원

령 및 형사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앙지에 대서특필되어 널리 알려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방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회가 선거법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해 어느정도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결정사례가 축적될수록 그 기준은 더욱 선명해지리라 봅니다. 또한 여론조사결과공표시 최소한의 공표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재결정을 해 언론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회의 출범자체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환기되었다는 점이 그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출범당시부터 있었던 위헌논란을 비롯, 그 운영결과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법률과 위원회 규칙상의 문제, 선거기사심의기준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법률과 위원회 규칙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유선영 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선영 위원 : 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의 문제점은 “...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와 같이 법률 위반요건이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은 특히 그것이 형사처벌조항을 담고 있을

때 더욱 법률 자체로서 집행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해 거의 백지규정이 가까운 정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만들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정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

“차후에 선거법은 언론자유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한 구체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시 옥 위원



다. 그러나 선거보도에 대한 다양한 survey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 이를 연구하여 공정성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위개념으로는 무엇을 둘 수 있는지를 정립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결정범위의 협소함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사과문 게재명령은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게재명령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공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결정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퇴장제도가 없는 주의·경고제도는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경고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주의·경고결정을 받은 당해 신문에 결정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론보도만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효성 있는 결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범위는 사실상 이렇게 협소합니

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조항은 과도하게 입법화된 것으로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호빈 위원 : 불공정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경고조치 받은 사례가 93건 중 71건으로 76.3%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공정성을 상실한 선거보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소양과 자질 탓으로 보입니다.”

이 시 현 위원

결정이 언론과 법조 그리고 학계의 시각을 각각 대변하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공정성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정당의 당보수준이라든지 특정 후보의 홍보전단같은 기사에 대해 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하고자 했을때 공정성의 개념이 모호해서 결정에 방해가 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도 위원 : 선거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서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형벌조항의 유무가 검열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한가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나 선거법의 이 조항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행정법에 대해 징역형을 과하도록 하고있는 법규가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조항들은 제재의 수위를 낮춰 과태료규정으로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고혜련 위원 : 지방의 모일간지의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무려 7차례나 주의·경고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관련조항을 끊임없이 위반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기간 중에만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고정지면을 할애, 이를 게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적어도 위와 같은 사례는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 선거법에 위원회의 주의·경고 결정사항을 해당 언론사가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시 언론사를 반드시 경유하게끔한 법 소정의 절차도 언론사나 위원회 중 어느쪽으로든 선택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거법 제256조 제2항의 형사처벌조항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로 완화시키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시정요구의 내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정당에 대한 홍보성기사가 게재되었으면 경쟁관계에 있는 타정당들도 동일한 정도의 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법률과 규칙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 다음으로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현 위원 : 지난 4·13 총선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역감정조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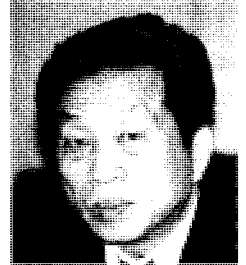
하는 과정에서 기준안에는 지역감정 관련조항이 있었으나 개념상의 모호성 문제등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점들도 고려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지역감정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은 굳이 지역감정이란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공정성 개념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때 영남과 호남의 지방지들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지역정서에 편승해 기사를 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그 정도가 심하고 노골적인 경우는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위원회가 주의나 경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감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따로 다루는 문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에 대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혜련 위원 : 위원회의 자체심의를 통해 주의조치결정을 받은 93건 중 약 78%는 지방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방지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지방지가 갖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취재상의 제한점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기사감을 갖고 있는 중앙지와 달리 지방지의 경우 news source 자체가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후보를 다룰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지면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 할애되어 위원회의 결정을 피할

“일부지방지 기사의 의도적인 불공정정보도에 대해서는 타율규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사주가 지면을 사유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유구조 개선과 편집권독립 없이는 불공정정보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영 호 위원



수 없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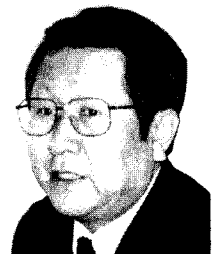
그리고 공천받은 정당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는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홍보성기사가 게재될 경우 정당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주의·경고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차후에는 실질적 형평성이란 관점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홍보성기사가 시리즈성 기사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며 모니터 대상매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선영 위원 : 지방지의 경우 news source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앞으로 심의할 때는 수량적 공정

“선거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으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안 영 도 위원



성여부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 여부를 판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전국의 일간신문은 모두 심의대상으로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데 선심위설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 해 련 위원

삼았으며 나머지 신문도 구독가능한 것이면 거의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0~30일까지 소급해
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조사과정에서 빠뜨린 것이 있
다 하더라도 이런 류의 기사는 대부분 지나치게
홍보일변도의 선거전단에 가까워 적절한 제재조
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로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 건수가 적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
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송호빈 위원 :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
는 지방지를 상대로 선거기간이라는 민감한 상황
에서 시정요구나 반론보도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
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위원 : 실제로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지
방지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후보에게 고발
할 것을 권해 보았지만 당해 후보가 이를 받아들
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신청을 포기하는 것도 신청건수가 적은 주요 원
인 중의 하나이겠지만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과
위원회의 존재자체를 적극
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에
도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심의·의결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당일 보도자

료를 만들어 결정을 받은 언론사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방송에
까지 배포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사실에 대해서는 신문과 라디
오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하
더라도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후보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선
거보도에 대해 특정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신청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
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 방안은 입법상의 문제로서 상당한 연구
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향후전망을 포함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남시욱 위원 : 선거일인 지난 4월 13일날 저녁에
초판으로 발행된 14일자 조간신문 중 상당수가
방송 3사가 집계한 잘못된 출구조사결과를 여과
없이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결과적 오
보임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 모든 판본을 구독할 수 없는 위원회로
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운영상의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경고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의·경고 결정을 받은 당해 신문에
결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유 선 영 위원

그 외에 위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남시욱 위원 : 이번 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법과 일치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법을 개정하여 양자를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개정도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거기간 중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근간으로
앞으로 더욱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
에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 심의

1. 경고
2. 주의

제2장 시정 요구 (정정및사과문보도청구)

제3장 반론 보도청구

제1장 자체심의

1. 경 고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
매 체 명	충 청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안 병 섭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2. 28. 9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기 사 제 목	고비용 정치구조 이제는 바꾸자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한창희씨의 약력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라는 선거운동을 상세히 소개.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한나라당 충주지구당 공천을 받은 한창희 후보의 약력이나 선거운동방법 및 PR기사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실어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우려가 있어 후보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이사 안 병 섭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충청일보사가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0년 2월 28일 9면 『“고비용 정치구조 이제는 바꾸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한나라당 충주지구당 공천을 받은 한창희 후보의 정치적 소신, 선거운동방법, 공약 등의 내용을 1개면에 전면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충청일보 2000년 2월 28일 9면

“고비용 정치구조 이제는 바꾸자”

한창희 한나라충주
시지구당위원장(46)이

한나라 충주지구당 한창희위원장에게 듣는다

돈이 없어도 능력을 갖춘
신인이면 정치를 할 수

「정치문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4·13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위원장은 당 공천을 받은 후 28일 열리는 지구당개편대회 및 필승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98년부터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정치일선에 뛰어들어 한 위원장으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에 대한 소신을 들어 본다./편집자주

돈안드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를 기치로 내건 한창희 한나라충주시지구당위원장은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정치문화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정치문화 개혁」의 핵심은 「돈안드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돈 없으면 정치판에 발 들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그 동안의 오랜 구태를 반드시 개선해

있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지역구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한 것이 「1만원 후원 운동」이다. 기존 정치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1만원 후원 운동」은 기성 정치인들이 대규모 후원행사를 통해 돈을 모금하고 기업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뜻을 함께하는 후원회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1만원씩 모금 하는 것이다. 개미군단식 모금 방법은 적은 부담으로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후원회 명의로 우편모금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모금운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았다. 한위원장은 「후원금 모금운동은 지역구활동은 물론 당선 후 정치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악순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지역구 활동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정치행사를 갖지 않고 발로 뛰며 주민들을 찾아 다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가능한 정치행사를 자주 열어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행사는 일절 갖지 않고 주민 행사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대화를 하다보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에 정치인들의 얼굴 내밀기가 종종 도마에 오르기도 하지만 남다른 고민과 속뜻이 있다』는 한 위원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충주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생활정치운동은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가능성을 가름 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 식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도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는 소신 때문이다. 국민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잘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98년 지구당을 창당해 이같은 신념으로 활동을 벌여 그동안 10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만났다』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발로뛰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키지 못할 대규모 사업공약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소외된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한 위원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원 창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업체 유치와 도로망 확충,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할 사업을 제시해 공통분모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에 힘을 기울여 충주의 뿔을 확실하게 찾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또 관광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같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정치적 소신을 고려대 정치학과 재학시 총학생회장을 지낸후 민정당 공채 2기로 정치에 입문해 청년국장, 대표위원 보좌역,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후 지역구 활동을 통해 정치현장을 체험한 결과물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한 위원장은 『그 동안 생활정치 실천에 온힘을 기울여 정치에 식상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깨끗한 정치와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7
매 체 명	한 빛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강 철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6. 3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64-1
기 사 제 목	충북 도약위해 3선의 힘찬 도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자민련 청주 상당구의 구천서 의원을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한 정치인’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의정 활동과 정치포부, 각종사업 유치실적 등을 특집기사로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 위반내용

특정 후보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를 충청남·북도에 각종 사업을 유치한 장본인으로 보도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PR성 특집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구 타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64-1

대표이사 이 강 칠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한빛일보사가 발행하는 한빛일보 2000. 3. 6.자 3면 『“충북 도약 위해 3선의 힘찬 도전”』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한빛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자민련 청주상당 구천서 의원의 과거 의정활동과 장래 정치포부 등의 내용을 1개면에 전면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구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6조(사실보도)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한빛일보 2000년 3월 6일 3면

“충북 도약 위해 3선의 힘찬 도전”

국가지도자로 정치력 검증

구 의원은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공동여당에서 자민련 수석부총무와 원내총무 등 사령탑을 맡아 총리 인준, 의장 당선 등 숱한 난제들을 풀어냈다. 구 의원은 이를 통해 여야를 막론해 폭넓은 교류와 신뢰를 구축해 국가지도자로서의 정치력을 확실하게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젊은 재선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원내총무 취임후 민생국회 위생정립과 경제위기 극복, 개혁추진, 그리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켰다. 또 수많은 국제지도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범국민적 감각과 시야를 넓혀 팔목할만한 정치적 성장은 물론, 중량감있는 국회의원으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

지역발전위해 견인차 역할

구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대규모 사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당초 충남으로 결정됐던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충남·북 공동유치로 바뀐 것은 구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마지막까지 관계부처와 김종필 당시 총리를 설득해 적극적이고 끈질긴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충남·북 공동유치를 이끌어낸 구 의원은 이로써 도내 건설업체에 3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냈고 2천 5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한편 공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당초 폐쇄키로했

던 연초제조창의 존치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또 금융과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에서 희생된 도내 기업의 구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히려 기획예산처와 금감위관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싸고 돈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한편 문장대 용화온천의 백지화와 먹는 샘물 공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등에 대한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충북 예산확보 심혈

도내의원중 유일하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에 자민련 예산팀장 자격으로 참여해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북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충북선 전철화 사업비 500억원을 비롯해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진입로 확장사업, 오창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치, 청주외곽순환도로 개설, 청주공예촌 조성, 고인쇄문화 연구복원사업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선

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 대책 및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및 대민서비스 기능제고 등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관광산업육성 방안과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안, 카지노 신규허가, 소년체전의 부활 문제 등을 제기해 소년체전의 경우 2000년 국비예산 지원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후략)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0
매 체 명	충 청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안 병 섭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8. 14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기 사 제 목	“부패정치청산 선봉에 서겠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군요직을 역임하고 국가비상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하던 김진선씨가 3일 새천년민주당 진천-음성-괴산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16대 총선 출마동기와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듣는다.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비록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특집기사 중 한 아이টে으로 다뤄진 것이지만 한 후보자에게 한 페이지를 모두 할애한 것은 너무 지나침. 충북의 진천-음성-괴산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하지 않을 경우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에 위반됨. 또 시리즈란 안내문을 붙이고 시리즈 번호를 매겨야 할 것으로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이사 안 병 섭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일자와 지역구를 달리하여 특정후보를 무작위로 선택보도한 관련기사 (2. 25 자 7면, 3. 6자 14면) 함께 첨부]

주 문 : 충청일보사가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0. 3. 8자 14면 『“부패정치 청산 선봉에 서겠다”』 제목의 기사 등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진천-음성-괴산 지구당 김진선 위원장의 출마 동기, 향후 정치포부, 정치소신 등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면 전체에 걸쳐 게재 것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충청일보 2000년 3월 8일 14면

“부패정치 청산 선봉에 서겠다”

-출마를 결심하게된 동기와 새천년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타락한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참전을 비롯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정치개혁에 목숨을 걸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35년간의 군복무와 국가비상기획위원장으로 37년간의 공직 생활동안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후회 없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괴산고를 졸업하고 육사에 들어가 임관한 후 월남전 참전을 비롯해 육본인사참모부장과 수방사령관 및 육군참모차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고 최고의 영예인 대장으로 진급해 2군사령관으로 예편하기까지 내가 입은 고향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길러주고 키워준 고향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을 선택하게된 것은 최근 사임한 국가비상기획위원장 등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절감했습니

다. 뜻이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실천할 힘과 바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여 여당의 영입을 수락했고 이에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현실적으로 집권여당의 후보가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신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까지 솔직히 고뇌와 번민이 많았지만 이 길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다면.

△현실 정치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입장에서 이상론에 치우친다고 할수 있겠지만 나부터 명예와 약속을 존중하는 정치인의 기본 덕목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를 혁파하고 깨끗한 정치를 이루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이나 국민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용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힘이 모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패한 정치에 굽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3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안보문제와 대북문제 및 북방문제를 명쾌히 풀어가는 전문 정치인으로 겨레의 여망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바칠 각오입니다. 또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12·12사태와 관련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나는 79년 12월 12일 수경사의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운을 좌우할 돌발적인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건박한 상황에서 나는 서울시내에서 아군끼리 교전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고 나아가 북의 침략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해 목숨을 걸고 아군끼리의 교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 교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생각해 아군끼리의 교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소위 특별법을 제정해 이날의 상황을 빌미삼아 나를 해임했으나 사법부가 정밀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내가 취한 조치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장차 이날에 대한 소상한 기록을 책으로 발행해 진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책 등에 대해.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촌문제 해결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향상 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토록 할 각오입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일신을 불사른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및 보훈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재향군인과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과제로 진천주민들의 숙원인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활동이 활발한 음성에 대학 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 달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은 반드시 실현시킬 각오이며 바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저지할 것입니다. 달천댐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이미 사실 무근임을 해명했으나 일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과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과 내가 한 약속은 목숨보다 고귀한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후략)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1
매 체 명	충 청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안 병 섭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3. 12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기 사 제 목	고향 키우는 '힘 있는' 일꾼 되겠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청원지구당 정종택 위원장을 인터뷰해 특집으로 기획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민주당 청원지구당 공천을 받은 정종택 위원장의 약력과 출마동기·선거운동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지역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천했다” “소탈한 성품과 부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운 운하며 PR기사를 집중 보도,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큼(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 충청일보의 시리즈라는 표시 없이 ‘00지구당 000위원장에게 듣는다’는 특집 기사를 한 페이지에 걸쳐 1주일에 2-3회 정도 보도하고 있는데, 자세한 편집자 주를 붙여 모든 출마자들을 공평하게 다루겠다고 밝히지 않을 경우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이사 안 병 섭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충청일보사가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0. 3. 13자 12면 『“고향 키우는 ‘힘 있는’ 일꾼 되겠다”』 제목의 기사 등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청원지구당 정종택 위원장의 약력과 출마동기, 선거운동 방법 등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1개면 전체에 걸쳐 게재한 것은 해당지역구에 출마한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고향키우는 ‘힘있는’ 일꾼 되겠다”

△정종택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학장을 존경하는 지지세력들조차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마하게 된 배경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고향에서 최장수 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5번의 장관을 역임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출마를 하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민 앞에 다시 선데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고향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병덕지사가 자민련으로 당선이 되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어렵게 되자 비난을 감수하고 집권 여당으로 당적을 옮겼을 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16대 국회의 임기 4년 중 3년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에 해당되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좋은 삶든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게 새천년민주당을 선택한 동기입니다. 둘째는 청원군에 대형 사회간접시설이 선정만 되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게 마음 아팠다.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단지, 부강화물터미널, 고속전철 오송기점역, 공항 활성화 등 할 일이 산적한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유로 인하여 인맥과 경륜을 갖춘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40년 공직생활의 인맥을 활용, 청원군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믿는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도민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우리의 몫을 챙길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키워야 합니다. 지난 88년 대통령 선거와 13, 14, 15대 국회의원 선거시 우리 도민들은 짝사랑하듯 네 번씩이나 압도적으로 몰표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고사하고 충북은행, LG반도

체, 옥천조폐창, 태양생명, 충북리스, 충북투자금융등 충북을 대표하는 국영기업

체나 금융기관, 향토기업이 퇴출되거나 이전되었습니다. 선거때마다 지역 감정을 선동한데 이용만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배신만 당했습니다.

충남은 윤보선 대통령, 이법석, 김종필, 이회창 총리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지만 충북은 충남에 가려 건국 50년 동안 단 한사람의 총리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충북도 충남으로부터 독립하여 충북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충북은 물론 대전 강원도민들까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오송에 기점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부여 공주에 고속철도역을 설치하기 위해 천안으로 변경했다는 소문입니다.

△정위원장은 지역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천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몇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지사 재임시 제일교포 정동필 씨가 준 용돈 5천만원을 청주 예술문화회관 건립비로 내놓았으며 노동청장으로 영전시 강제로 놓고간 전별금 5백만원을 충북개발회에 송금, 여천장학회를 결성토록했다. 또 지사 재직시 사업가들의 이권에 관련된 모든 청탁 사례금을 도발전기금으로 유도, 모두 30억원을 모아 충북개발회를 결성하는 산파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청주 국립박물관 건립유지를 회사받았고 남궁유도회관, 만북경로회관, 충북대장학금 1억원 기탁 등 청주 발전에 기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수범했다. 이밖에 공군 전투비행장 확장을 저지하고 국제공항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 공군사관학교, 항공연수원, 국립청주 박물관 및 인쇄박물관, 청주첨단산업단지(설계확정), 대청댐물 무심천 방류, 종합예술문화회관, 청주 광역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국립교원대학교, 중부고속도로 노선변경(당초 아산 공주)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

△재산 내역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면.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 세력에 몸 담아왔기에 재산을 많이 모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중상모략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충북 출신 여야의원중에 하위급으로 밝혀져 청빈함이 입증되었었고 타인 명의로 위장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오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보상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소탈한 성품과 부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소개한다면.

-지사 재직시 충주나 제천에서 조기청소를 한 후 도총 참모회의를 주재한 일화가 유명하고 자전거를 타고 새벽마다 골목을 누비면서 조기청소를 독려했다. 3년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심천 청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지사가 고급식당을 출입하지 않고 해장국 집이나 값싼 음식점과 대중 목욕탕을 이용해 소박하고 절제절약에 수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밖에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중앙에서 당당히 우리의 몫을 챙길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일본은 3선의원이 상임위원장, 4~5선이 차관, 6선이 장관을 하고 있고 나카소네는 81세로 19선이고 다케시타는 76세로 14선, 무라야마는 76세 8선의원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무총리를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도라는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충남은 대권주자가 3명이나 되는데 우리 충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지역 인물을 키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9
매 체 명	대 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윤 종 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8. 1,2,4면	소 재 지	대전시 중구 문화동 1번지
기 사 제 목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1면) 대전 서울 南在斗씨(2면), 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 역설(4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대전 서울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선출된 남재두 위원장의 선출기사와 사진·개편대회 현장 스케치를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남재두 민주당 대전 서울지구당 위원장 선출 기사를 보도하면서 3개면에 걸쳐 기사와 함께 동일한 행사사진 2건, 인물사진 1건을 게재함으로써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관

련조항을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지심49
지심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전시 중구 문화동 1번지
대표이사 윤 종 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0. 3. 18.자 1면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 2면 『대전 서울 南在斗씨』, 4면『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 역설』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대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대전 서울지구당 위원장 선출 기사를 보도 하면서 3개면에 걸쳐 기사와 함께 행사사진 2건, 인물사진 1건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대전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 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대전일보 2000년 3월 18일 1면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

16대총선 후보등록을 10일 앞둔 17일 여야는 당지도부가 전락지별로 총출동 각종 쟁점을 둘러 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여론잡기 세물이 를 계속했다.

특히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선대위원장과 한 국신당 김용환(金龍煥) 대표는 이날 대전과 충남

지역을 방문해 대전 발전론과 내각제 포기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민주당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을지구당 (위원장 남재두·南在斗) 개편대회에 참석 『대전 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중심이며 미래는 대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대전을

위해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인물을 보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역 비리수사와 관련 『지도층인사들이 바르지 못하게 자제들을 면제시킨 것은 가증스런 일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이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구당등 경기도와 서울지역 지구당 정기대회에 잇따라 참석 『현정권은 임기말에 헌법을 고쳐 내각제로 권력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민련도 가세, 총선후 「1야 3여」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경북



영주, 문경, 예천지구당 정기대회 등에 참석, 『한나라당 이 총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심으로 돌아 다니는 것은 좋으나 제일 먼저 할 일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대전일보 2000년 3월 18일 2면

대전 서울 南在斗씨

민주당은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만년동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李仁濟 중앙선대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서를 지구당 개편대회를 열고 南在斗 전의원(61·사진)을 신임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南위원장

은 인사말을 통해 『1인 보스정치, 줄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 등 한국정치의 맹점은 모두 지역감정으로 먹고사는 이른바 지역당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뒤 『한국정치에서 판치고 있는 저질, 부능, 부패정치를 몰아낼수 있는 방법은 수준높은 주민들의 천금같은 한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일보 2000년 3월 18일 4면

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 역설

3천여명 몰려 성황

○…17일 오후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서구을지구당(위원장 南在斗) 개편대회는 행사시작 이전부터 당원 및 당직자, 지역민 등 3천여 명이 몰려들어 행사장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 풍물패들이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행사가 시작되자 대회사 및 국민의례, 林德圭 前의원의 축사에 이어 李仁濟 중앙선대위원장이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자 장내 분위기는 열광의 도가니.

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민련은 두 번에 걸쳐

지역주의를 불모로 했고 이번에도 부활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이번선거에서 지역주의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고 역설. 그는 또 『IMF위기를 몰고온 장본인이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한나라당도 이번에 심판해 달라고 호소. 이날 행사장 정면에는 남위원장을 중심으로 金大中 대통령과 李선대위원장의 대형사진이 걸리고 곳곳에 [말잘하는 말꾼보다 일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능력, 경륜 남재두로 확 바꿉시다] 등 대형 플래카드가 눈길.

대전 둔산지역에 설치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 南위원장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대전엑스포지원특별위원장으로 대전엑스포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는 등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일할 때 뿌듯했다』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나 지금 엑스포공원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쉽기만하다』며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도 공약으로 제시.

“지역연고 전혀 없어”



지역발전 책임자 강조

○…민주당 대전서울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南在斗 전의원은 3선의 관록과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구상까지 제시해 눈길. 南위원장은 『한국정치사회에서 짧은 정치경력으로는 국회에서 소신껏 일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하고 『대전의 정치 1번지 서울에서 4선의원으로 밀어준다면 대전의 대표 인물답게 국회에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 南 위원장은 특히 『중기청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지방청이 없어져 지역기업의 애로가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 대전지방청을

○…17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당공주·연기지구당(위원장 金高盛) 개편대회는 金龍煥 대표를 비롯한 李相晩 의원, 田萬洙 청양·홍성지구당위원장 등 충청권 공천자가 대거 참석해 중앙당창당대회를 연상시킨 가운데 자민련 鄭石謨 의원의 아들로 지역구를 물려받은 鄭鎭碩 공천자의 「지역구 대물림」이 집중적으로 부각. 이날 金대표는 치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낯선 어휘인 「지역구 대물림」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며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대물림하면 어떻게 하나』고 참석자들에게 반문. 이어 金대표는 『아무리 공주중·고등학교 동창회 명부를 들여다봐도 이름이 나와있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고향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나라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고 맹포격.

일부당원 자민련 탈당

○…자민련 중앙당청년봉사단 金管哲 부위원장 등 일부 당원들은 17일 오전 대전시 중구 선화동 舊수협건물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 탈당을 선언. 이날 金부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대

전시지부에 수차례 건의사항을 밝혔으나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돼 탈당하게 됐다』고 공개. 이어 김부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천부적격자로 거명됐으나 공천을 받은 자민

련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이겠다』며 『아울러 총선시민연대가 벌이는 공천무효소송의 원고로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소개.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0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5. 3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기 사 제 목	정가포커스 (개혁이미지 살리는 역할 큰몫)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이 지구당 개편대회나 심야토론회 등에 참석, 민주당의 개혁적 이미지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구에 상주하지 못하는 대신 지역구의 주요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공직선거에 임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평을 기사화하면서 ‘개혁적 이미지를 살리는’,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드는 타고난’, ‘성숙한’ ‘지역구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운하며 찬양일색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3. 15.자 3면 『개혁이미지 살리는 역할 큰 뭇』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전북 덕진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을 ‘야당 공격을 방어하는 선봉장’이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원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의심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전북도민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3월 15일 3면

개혁이미지 살리는 역할 큰뭇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동영 대변인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의 간판으로 자민련, 한나라당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물론 방 송사의 심야토론회에서는 야당측의 공격을 방어하는 선봉장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5개 개편대회를 참석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정대변인은 이인제 선대본부장과 함께 민주당의 개혁적이미지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정대변인은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드는 타고난 연설 등으로 유권자들과 당원들로부터 호평을 얻어 야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공천자들이 감사로 초청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치권은 야당측의 지역감정조장에도 불구하고

정대변인이 맞대응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정치안정을 통한 경제도약을 위해 ‘안정론’을 주장하는 등 지난 15대 대선 때 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대변인은 민주당의 간판으로 몸이 중앙당에 묶이면서 지역에 상주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대신 예산확보와 한국전력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양사, 팜코송전선로 지중매설 문제를 매듭짓는 등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현안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5대총선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던

정대변인으로서 이번에도 최다득표와 득표율 ‘두마리 토끼’를 목표로 삼았다. “개혁완성을 위해 안정의석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대

변인은 지역구에 자주 못내려가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모든 시간을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1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0. 4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기 사 제 목	정가포커스 (정균환 민주당 총재특보단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부안·고창지역구 민주당후보이면서 민주당총재특보단장인 정균환 의원의 치적과 활동상 등을 부각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민주당 전북 무안·고창지역구 후보인 정균환 의원을 민주당총재특보단장 자격으로 소개, ‘국민의 정부 실세’, ‘힘있는 정치인’이라는 등으로, 그의 지역구 현안해결노력과 정치철학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3. 20자 4면 『“더이상 소지역주의는 없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 부안·고창지역구 후보인 정균환 의원을 민주당 총재특보단장으로 소개하면서, ‘국민의 정부 실세’, ‘힘있는 정치인’ 운운하며 지역구 현안해결 노력과 정치철학을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전북도민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3월 20일 4면

정균환 민주당 총재특보단장 “더이상 소지역주의는 없다”

부안·고창의 민주당 정균환총재특보단장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발전전략으로 4·13총선 세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단장은 ‘국민의정부’ 실세답게 그동안 부안과 고창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해결해 지역민들에게 ‘힘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길이 7km, 폭 7m 사업

비 5천억원의 대규모공사로 전북도와 지역민들이 관광지조성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천문학적인 예산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단장이 부안과 고창 지역구통합과 함께 첫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통합과 발전을 위해 부창대교건설사업을 성사시킨 것이다.

정단장은 부안과 고창의 지역화합을 위해 고창에 앞서 부안군 위도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소지역주의 폐해를 역설하고 있다.

정단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출신지에 관계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망국병인 지역감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2
매 체 명	전 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서 창 훈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7. 2~4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기 사 제 목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2면), “與 영입 강현욱 위원에 각계 3명 도전”(3면), “지역발전·정권재창출에 헌신”(4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군산지구당 개편대회와 강현욱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특별히 크게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민주당 군산시 지구당 개편대회를 계기로 강후보에 대한 기사를 2면 스트레이트, 3면 인물탐구 BOX, 낙수모음, 4면 인터뷰 등으로 3개면을 할애, 보도함으로써 같은 지역구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0. 3. 17자 2면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 3면 『與 영입 강현욱의원에 각계3명 도전』, 『대형현수막 10여개 분위기 고조 강의원 ‘당원 꺼안기’ 적극 노력』, 4면 『“지역발전·정권재창출에 헌신”』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군산지구당 개편대회를 보도하면서 특정정

당 후보 관련 기사를 3개면에 걸쳐 대회사진 1건, 인물사진 2건과 함께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전북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전북일보 2000년 3월 17일 2면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

“이번 개편대회의 참 뜻을 새겨 별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6일 새천년 민주당군산시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현욱 위원장(62)은 “지난 15대총선에서 저는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 끝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면서 이러한 시민의 여망을 높이 받들어 지역발전과 우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위원장은 “IMF체제를 극복한 것은 국민 여러분과 김대중대통령의 높은 경제철학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실업문제, 중산층 붕괴 등 산적한 경제현안을 해결토록 저와 우리당 후보들에게 열화같은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강위원장은 “정권교체 후 많은 갈등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 외로운 결단을 내린 끝에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선택된 만큼 오직 지역발전에 진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도록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방안 마련 및 낙후된 지역에 개발의 봄바람이 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군산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전-군산간 고속화도로 조기개통 등 중요정책사업의 차질없는 개발 추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중어협 조기타결과 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공약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지역의 화평을 위해 고소와 고발없는 지역사회, 서로를 감싸 안을 따듯한 고장 만드는데 시민여러분과 언제나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재무부 이재국장, 대통령경제비서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전북지사, 농림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행정 관료출신으로 지역발전전도사를 자임할만큼 애항심이 유별나다. 가족은 박선순 여사(59)와의 사이에 3녀가 있다.

전북일보 2000년 3월 17일 3면

與 영입 강현욱의원에 각계3명 도전

무소속 현역의원 공천문제로 한동안 여당내부의 심각한 조직균열양상을 빚었다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군산지역은 50·60대 3명, 386세대 등 모두 4명의 주자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때 호남에서 유일하게 황색돌풍을 잠재웠던 강현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말을 바꿔타고 출마한데 이어 한나라당 양재길 위원장, 자민련 김현태 위원장, 386세대의 대표주자인 무소속의 함운경 한국정치발전포럼대표 등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 총선은 군산지역의 여느 선거와 달리 동문간 또는 지역의 오랜 전통고교 출신후보간 대결이라는 등식이 깨진 것이 새로운 판도변화의 하나. 전혀 다른 고교출신들만의 대결로 이뤄지고 있는 출마자들의 학력은 강현욱 의원이 군산고와 서울대를 졸업, 전북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신예의 함운경 대표가 군산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김현태 위원장이 이리농림고와 전북대를 마쳤고 고(故)양일동 통일당당수의 조카인 양재길 위원장이 서경대를 졸업, 뒤늦게 주경야독으로 경기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후보들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인생역정을 나타내는 경력. 경력은 정통행정관료에서 출발,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한 강의원과 학생민주화운동으로 80년대를 풍미했던 함운경 대표, 중소기업인으로 수출 1백만불탑과 2백만불탑을 연거푸 수상한 양위원장, 지역에서 대부분을 농업분야에 종사해온 김위원장등 각각 4인4색으로 이채를 띠고 있다. 경력 못지않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병역관계는 강현욱 의원이 공군중위로 예편했고 양위원장이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김위원장은 제2국민보충역, 함대표는 당시 학생운동과 관련, 복역한 전과 때문에 면제받았다. 전과기록을 보면 함운경 대표가 85년 5월 서

울미문화원 점거농성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 3차례에 걸쳐 투옥, 모두 3년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재산은 농업인으로 오랜 활동을 해온 김현태 위원장이 30억원선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원이 7억원으로 2위, 기업인 출신인 양위원장 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금 2천7백만원이 재산의 전부인 함운경대표는 1위인 김위원장과 비교할 때 10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납세실적 역시 김위원장이 2백60만원으로 수위를 달렸고 중소기업인 출신인 양위원장과 강의원이 각각 1백40만원, 70만원을 냈다. 함대표는 예금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소득세 등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동기로는 15대 때와 마찬가지로 강의원은 군산발전의 가속페달을 밟는데 생을 받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양위원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시민서비스정신의 구현을, 김위원장과 함대표는 지역의 대형프로젝트 완성과 새로운 개혁정치 구현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선거구호로는 강의원이 일편단심 군산발전을 내세운 반면 함대표는 21세기 유망주로 바꿈시다로 개혁성과 참신성을 강조했고 양위원장과 자민련 김위원장은 새시대 새인물과 중산층 활성화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사회기여도 부문으로는 강의원이 단골메뉴인 지역발전과 용담댐 입안 등을 내세웠고 양위원장은 수출탑 수상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또 함대표는 정치 및 사회민주화 운동으로 현재 민주정부수립에 앞장섰다고 강조한 반면 김위원장은 화훼농장운영 등 선진농업을 앞당겼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함운경 대표의 대통령을 꿈꾸는 삼학동 소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은 별다른 저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현수막 10여개 분위기 고조 강의원 ‘당원 꺼안기’ 적극 노력

◇…이날 개편대회장인 군산학생회관에는 군산의 일꾼 강현욱, 조용한 힘 군산의 힘 21세기의 희망 강현욱, 지역을 뛰어넘어 희망의 큰정치로 등이 적힌 대형현수막 10개가 걸려 대회분위기를 한껏 고조.

◇…새천년 민주당군산시지구당원장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온 엄대우 전국립공원이사장은 이날 개편대회에 앞서 시내 모처에서 한화갑 호남선대위원장과 만난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탐문.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엄 전 이사장 지지자 수십명은 확성기를 통해 밀실공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장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기

도 했으나 당초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치 않아 당직자들을 안도시키기도.

“채영석 의원 등에 깊은 감사”

◇…특히 강위원장은 채영석 의원과 강철선 전 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존당원과 일체감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눈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회원 등 30여명이 이날 개편대회장 주변에서 밀실공천 철회하라는 가두선전과 함께 시민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우리 정치현실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군산경찰은 사전에 충돌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개편대회현장 주변에 1개중대 병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전북일보 2000년 3월 17일 4면

“지역발전·정권재창출에 헌신”

■ 민주당 군산시지구당 개편대회 상황리 마친 강현욱위원장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

새천년민주당 군산시지구당은 16일 오후 3시 군산학생회관에서 한화갑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 김원기 고문, 정균환, 이협, 장영달의원, 유종근 전북지사, 김길준 군산시장과 대의원 및 당원 등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편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경과보고, 당기입장, 내빈소개, 임시의장선출, 위원장 선출, 강현욱 위원장 인사말, 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 치사 등의 순으로 차분히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강현욱 조직책을 지구당위원장과 제16대 선거후보자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강위원장은 위원장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 앞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안정의석확보에 여러분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심각한 실업 및 농어촌부채문제해결에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한중어협문제가 조속히 매듭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한화갑 호남선대위원장은 “왜 강현욱 위원장을 우리가 영입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다른 당의 후보로서 당선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영입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강위원장을 압도적으로 밀어달라고 역설했다. 한 선대위원장은 “공천과정에서 많은 후보들과 당원여러분이 섭섭했을 줄 안다”면서 다만 인도의 간디와 네루가 서로 협력하면서 인도의 독립을 성취했던 것처럼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인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3
매 체 명	전 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서 창 훈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8. 4, 5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기 사 제 목	합류 시너지효과 '기대' 상승세 탄 趙 의원 '희색' (4면) "정책중심으로 선거운동 펼칠 터" (5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남원-순창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무소속 강동원씨가 민주당 조찬형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며 두 사람의 인물사진을 게재.(4면) 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과 총선후보자로 추대된 조찬형 의원의 인물사진을 게재.(5면)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각각 다른 기사라고는 하나 특정후보의 인물사진을 4면과 5면 양쪽에 실어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0. 3. 18.자 4면 『합류 시너지 효과 ‘기대’ 상승세 탄 趙의원 ‘희색’』, 5면『“정책중심으로 선거운동 펼칠 터”』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조찬형 후보에 대한 기사를 2개면에 걸쳐 동일한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탄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전북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전북일보 2000년 3월 18일 4면

합류시너지효과 '기대' 상승세 탄 趙의원 '희색'

■남원·순창지구 總選정국 급변

남원·순창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무소속 강동원 전국민회의사무총장이 17일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조찬형 의원 지지를 선언하면서 남원 총선거면에 격변이 몰아치고 있다.

강 전총장의 민주당행으로 조의원측은 희색이 완연한 반면, 무소속 이강래 전수석측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강 전총장이 민주당 복귀와 함께 조 의원 지지를 선언한 것은 남원 현지에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전총장의 경우 중도에 포기할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과연 그럴 경우 조의원과 이전수석중 어느쪽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 전수석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뜻밖으로 강 전총장이 조의원측으로 합류함에 따라 선거판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의원측은 강 전총장의 합류로 일단 그의 고정표 상당수가 함께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투표수중 적으면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여기에 강 전총장과 이 전수석이 개혁성과 참신성이라는 동일한 이미지로 보여지면서 두 사람이 합

칠 경우에는 만만찮은 시너지 효과가 우려됐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서 조 의원측에 보이지 않는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 이 전수석의 무소속출마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조 의원측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똑같이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당명에 복종하고, 한 사람은 당명에 불복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의 민주당 정서에 비춰볼 때 조의원측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이 전수석측은 강전총장의 민주당행이 자신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타의에 의한 후보단일화'지만 결국 조의원 지지세력과 조의원 반대세력이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런 단순구도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강 전총장의 행보를 보는 양측의 시각은 엇갈리지만 일단은 조의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일보 2000년 3월 18일 5면

민주당 남원 순창 지구당 위원장 추대 조찬형 의원 “정책중심으로 선거운동 펼칠 터”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정치신인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집권여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바로 국정의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17일 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과 총선후보자로 추대된 조찬형 의원(62·사진)은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 남원시민과 순창군민의 뜻을 모두 존중하는 지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잔여 임기동안 지리산 통합문화원과 그린투어리즘으로 대표되는 문화관광 종합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등 남원·순창의 균형적인 개발과 연계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중심, 힘있는 일꾼론을 제시하며 지역발전 전략을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조기선거과열과 관련해 “4·13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비방이 난무하고 흑색선전물이 곳곳에서 뿌려지는 등 구태한 선거행태가 또다시 연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선거, 철저히 법을 지키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4
매 체 명	주간남원민보	언 론 사 대 표	김 기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8. 3면	소 재 지	전북 남원시 형교동 1046-2
기 사 제 목	탈당하면서 입당을 운운한 것은 원칙 없는 정치인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남원·순창지역 민주당 조찬형 후보의 선거운동상황과 정치적 포부 등을 상세히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당원단합대회와 선대위발대식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정후보의 동정과 정치적 포부를 부각시켜 보도하였고, 그 후보가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무소속후보(이강래 후보로 추정)를 일방적으로 비난

하는 내용을 제목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해당 무소속의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 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남원민보사
전북 남원시 향교동 1046-2
대표(발행인) 김 기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남원민보 2000. 3. 8.자 3면 『탈당하면서 입당을 운운한 것은 원칙 없는 정치인』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남원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남원·순창 지구당 위원장 조찬형 후보의 선거운동상황과 정치적 포부 등을 소개하면서 조후보의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 내용을 제목과 함께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남원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남원민보 2000년 3월 8일 3면

탈당하면서 입당을 운운한것은 원칙 없는 정치인

지난 2월 23일 새천년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남원시 순창군지구당 조직책으로 조찬형 의원을 임명했다.

조의원은 조직책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남원시와 순창군을 오가며 지역을 다지는데 여념이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공천발표 직후 조의원은 새천년민주당 남원시·순창군지구당 읍, 면, 동 협의회장 회의와 상무위원회회의에서 “공천을 받는데 남원·순창지역민들의 큰 성원과 당원당직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힘껏 노력하여 지역 주민들과 당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룩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천소감을 피력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새천년민주당 남원시·순창군지구당의 읍, 면, 동별 “새천년 맞이 당원단합대회”가 1주일 동안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고 동별 당원단합대회가 거듭 될수록 행사장은 선거막바지를 방불케할 정도로 당원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조의원은 당원단합대회를 통해 “이번 4·13 총선은 김대통령의 남은 3년의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9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원동지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이번 총선에서 되살려 총선승리를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당원단합대회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3월 4일 새천년민주당 남원시·순창군 지구당은 지구당 사무실에서 제16대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조의원은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준 이정규 전 남원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정규 선대위원장을 통해 지역화합을 이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당원이 이정규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4·13 총선을 힘있게 치러내자”고 당부했고, 이 자리에 함께한 당원들은 이정규 선대위원장을 큰 박수로 환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과 당원의 손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의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새천년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제1당이 되어 정치개혁을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뿌리 없는 나무는 결실을 얻을 수 없으며, 결실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당선시킨 김대중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경

우에도 당의 결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당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당원의 도리”라고 역설했다.

조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입당시키는 〈원칙없는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하고 “탈당하면서 동시에 입당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심어주는 원칙 없는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태는 김대중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하는 크나큰 해당(害黨)행위”라고 비판했다.

13대, 15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조의원은 “무소속은 말 그대로 소속이 없기 때문에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무소속 출신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라면서 무소속 출신 정치인을 통해 “어떠한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남원, 순창에서 조찬형을 집권여당의 3선 중진위원을 만들어주면 남원, 순창에서 자랑스럽게 느낄 만큼 중앙정치는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선거구조정에 따라 통합된 순창군의 기존 당조직을 순로롭고 완전하게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이 기존 당조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순창군 도의원, 군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남원과 순창화합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순창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지역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했고, 순창군 주요 당직자들도 이번 4·13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순창군 발전의 견인차, 정치개혁의 주역으로서 조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순창군내의 상가와 재래시장을 순회하고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등 민심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조의원은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 등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민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8
매 체 명	제 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김 대 성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9. 1, 2, 3, 5, 15, 18면	소 재 지	제주시 연동 2324-6
기 사 제 목	“정부 견제로 국가 발전”(1~2면) D-25 한나라당 정기대회(3면) 외 다수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제주도내 3개 지구당 정기대회기사와 사진, 스케치, 선대위원장 및 부총재 인터뷰, 도 선거대책위 현판식, 3개 지구당 위원장 인터뷰를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한나라당 제주도내 3개 지구당 정기대회가 같은 날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특정당의 기사와 사진을 5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함으로써 특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시 연동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제주일보 2000. 3. 19.자 1, 2면 『“정부 견제로 국가 발전”』, 3면 『D-25 한나라당 정기대회』, 5면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의 장”』 『“지역발전 위할 인물 뽑아야”』, 15면 『한나라당 도 선거대책위 현판식』 제목의 기사와 15, 18면 『제주 인터뷰』 난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제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한나라당 제주도내 3개 지구당 대회 관련 기사를 5개 면에 걸쳐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제주일보 2000년 3월 19일 1,2면

“정부 견제로 국가 발전”

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며 “제주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야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4·13 총선을 필승으로 이끌기 위해 18일 도내 3개 지구당의 정기대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세몰이 확산에 돌입했다.

이날 제주시지구당(위원장 현경대)과 북제주군지구당(위원장 양정규),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위원장 변정일)의 정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온 홍사덕 한나라당 중앙당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나라 대기업체들이 하나둘씩 외국에 넘어가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우리 기업체 모두 외국에 넘어간다”며 “총선을 통해 여당 후보를 심판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할 일이 많은 제주지역 3명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현 정부는 이번 4·13 총선을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공익단체 회장단을 대거 입당시키는 등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속다르고 겉 다른 김대중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부총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 1인당 빛이 670만원에 달하는 등 살림

한편 이날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주시지구당 정기대회에서 현 위원장은 “중앙 정계에 진출해 4선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경륜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해 진정한 제주의 일꾼을 뽑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한림체육관에서 열린 북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양 위원장은 “국회는 연습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며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며 “관록과 경륜이 많은 힘있는 국회의원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여고체육관에서 열린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에서 변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감귤 생산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4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로 보내면 ‘일당천’ 역할 할 것”

제주시지구당

한나라당 제주시지구당은 18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정기대회를 열고 현경대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고 위임사항을 의결. 이날 오후 1시간 30분간 진행된 정기대회에 앞서 현위원장은 참석한 중앙인사와 지역인사의 양력 등을 일일이 소개해 눈길. 현위원장은 “지난해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서두를 밝히고 “그러나 중앙 정치와 지역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집안 문제만으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

현위원장은 또 “총선과 관련해 요즘 ‘바뀌’라는 노래가 시중에 유행하고 있지만, 386컴퓨터에서 586컴퓨터로 교체하듯 바뀌 자체가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바꿀 것이 아니냐”며 “다섯 번의 선거를 통해 검증받고 청렴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나의 경우엔 이 유행가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어 격려사를 통해 “당의 경선 원내총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현의원을 국회에서 볼 때마다 중국의 등소평을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작은 거인이란 느낌을 받아왔다”고 지원. 김 전의장은 “만약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현 정부의 거수기를 추가로 뽑는 결과만 남게 된다”며 “당과 국회의 보배인 현위원장을 5선으로 국회에 보내면 거수기 의원이 아닌 1당 1000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측면 지원.

다선 경력 강조·인물론 부각 집중

북제주군지구당

한나라당 북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가 열린 한림체육관엔 전·현직 자생단체장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몰려온 당원과 유권자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관중을 향해 수화를 통해 연설 내용을 소개하는 세심함을 발휘. 필승 결의를 겸한 이날 대회는 수차례 선거전을 치른 양정규 위원장의 전력을 보여주듯 중간중간 풍물패를 동원해 환호를 유도하는 등 시종일관 대회장을 열기가 가득한 분위기로 물고가는 노하우를 과시. 이날 연설에서 양위원장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않으며 지역주의를 배척하자”는 3개항을 다른 후보들에게 공개적으

로 제의. 이날 지원 연설에 나선 중앙당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양정규 위원장의 다선 경력을 강조하며 “제1야당을 하면 국회의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인물론을 부각시키는데 집중. 일정이 바빠 먼저 지원 연설에 나선 신영균 고문과 박근혜 부총재는 “양부총재는 마당발일 뿐 아니라 고향사랑이 각별한 후보”라며 “지역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당선시켜야 한다”고 지원사격. 또 홍사덕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탈린트인 이순재 전 의원도 “최소한 3~4선이 돼야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다선론을 강조. 김영선 의원은 “우리 당에 많은 여성의원 있지만 양부총재가 오히려 더 여성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 당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

“새로운 정치 위해 압승시켜 달라”

보상비 제도, 부적지과수원

서귀포시·남군 지구당

이날 오후 5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필승 결의를 위한 한나라당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가 열린 삼성여고 체육관에는 서귀포시를 비롯해 남제주군에서 온 당원 및 유권자 2000여 명이 참석, 2시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 이날 참석자가 너무 많은 탓인지 체육관 내부는 물론 복도마저 모자라 운동장에도 삼삼오오 유권자들이 서 있는 모습. 대의원 만장일치로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변정일 의원은 “감귤은 산남지역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16대 국회에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 감귤값 폭락사태를 막아내겠다”며 “이와 함께 감귤전용 비료에도 정부 보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감귤재해

보상지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주장.

이회창 총재는 이날 행사에 불참, 양정규 부총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오만과 무능으로 국정 혼란만을 가져온 정권의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변정일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압승시켜 달라”고 호소. 이어 홍사덕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중문 출신으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원희룡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것으로 운을 떼 뒤 “어느 사람을 찍을지는 우선 정당과 인물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농가 빚 탕감을 약속했다. 농가 부채가 탕감됐으면 민주당을 찍어야 하지만 빚이 탕감되지 않았다면 성질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변정일 위원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제주일보 2000년 3월 19일 5면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의 장”

“현 정권을 견제하고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18일 한나라당 제주지역 3개 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홍사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우선 “이번 4·13 총선은 지난 2년 여에 걸친 현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중간평가의 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4·13 총선의 의의를 정의하고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홍위원장은 우선 “김대중 정부는 지난해 어업 협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주의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했고 말끝마다 IMF를 극복했다며 크게 자찬하면서 대기업체들이 하나둘씩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집권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현 정권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국정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저항정신이 매우 강한 제주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개 선거구의 판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보 개개인의 인물이 훌륭하여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들은 4·3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등을 가장 주도로 앞장 서 처리해 왔고 국비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 3명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발전 위한 인물 뽑아야”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해야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현 정부를 철저히 견제해낼 수

있고 국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일 한나라당 제주지역 3개 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주에 기여했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부총재는 우선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은 제주를 훌륭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5·16도로를 건설하고 관광개발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는데 제주관광계획을 구상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지금 제주는 세계 어느 곳에 내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했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되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부총재는 “제주관광이 앞으로도 계속적

인 발전을 하려면 중앙정계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 개인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능력이 뛰어난 우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도민들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부총재는 “지난해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실패하면서 제주어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됐는데 제주출신 현역인 현경대·변정일·양정규 3명의 위원장은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지원대책을 확대하기 위해 발로 뛰며 어민 보호에 노력해 왔다”고 소개하고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 주는 것만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제주일보 2000년 3월 19일 15면

사람과 사람들

한나라당 도선거대책위 현판식

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변정일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위원장)는 18일 오후

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

1시 도지부당사 앞에서 변정일 위원장과 현경대 제주시지구당위원장, 양정규 북제주군지구당 위원장, 홍사덕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앙당직자와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한편 현판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도지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한나라당 제주도청년위원회(위원장 강완길) 발족식을 가졌다.

제주일보 2000년 3월 19일 15면

“의정관록 발휘해 국가 발전에 혼신”

“시민들이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4·13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제주시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위원장에 재선출된 현경대 의원(61)은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를 밟는다면 그동안의 의정관록을 발휘해 21세기 제주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위원장은 우선 “제주에서 민주당 후

보를 뽑는 것은 ‘DJ의 거수기’를 한 명 더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주시민

들은 애환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진정한 심부름꾼이 누구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지난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뇌했다”며 “그러나 중앙 정계에서 제 역할을 다해냈고 앞으로도 일을 더 많이 할 능력이 있는 나를 다시 필요로 하고 있어 가정문제를 뒤로하고 다시 한 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

기 위한 5선 도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위원장은 “지역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아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잘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자당 원내총무와 법제사법위원장, 한보비리조사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일보 2000년 3월 19일 18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치를 것”

한나라당 북제주군지구당 위원장 양 정 규 씨

“북제주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한림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북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정규 의원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위원장은 “첫째 과거와 같은 금권선거를 불식하기 위해서 돈 쓰는 선거 하지 않기, 둘째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모략하는 행위 자제하기, 셋째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지역주의 배척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다른 두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위원장은 우선 “IMF 이후 더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농어민 부채 경감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보험제를 도입해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귤정책에 대해 “감귤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급식 및 폐원보상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위원장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주변 여론에 대해서는 “같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심정적 지원을 할지 모르나 직·간접적인 관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5선 경력을 지닌 양위원장은 조전을 함덕리 출신이며 한양대 대학원 정치학과와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정치학과를 수료했다. 현재 한나라당 부총재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오정식씨와 3남 1녀.

“감귤산업 육성에 최선 다할 것”

한나라당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위원장 변 정 일 씨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16대 국회농림수산해양위원회에 들어가 제주감귤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18일 한나라당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정기대회를 개최한 변정일 서귀포시·남제주군지구당 위원장(57)은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량 조절, 불량감귤 억제, 신규과원 조성제한 등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감귤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감귤 생산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위원장은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4선 국회의원을 배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선될 경우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잘 못된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데 큰 힘을 발휘, 도민의 자존심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2002제주월드컵 유치등 감귤산업 육성과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위원장은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출신으로 한림중·오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제10·14·15대 3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제주도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 권영필씨와 2남.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3
매 체 명	전북일보시사	언 론 사 대 표	이 용 범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9. 12, 13면 2000. 3. 26. 8, 10, 11, 13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금암동 1587-76
기 사 제 목	논·발두렁·막걸리 한사발 ... 소박한 시민정치인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해소” “정읍의 미래 큰그릇에 담아 내겠습니다.” “전북발전 견인차 ... 서해안시대 주도” “지역민 부응 ... 30년 정치인생 고향 위해서”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만나봅시다』란을 통해 전북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활동상황을 집중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 정당(민주당4, 자민련1)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활약상만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전북일보시사

전북 전주시 금암동 1587-76

대표(발행인)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전북일보시사 2000. 3. 19.자 12면 『논·발두렁·막걸리 한사발 ... 소박한 시민정치인』,
13면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 해소”』, 3. 26.자 8면 『“정읍의 미래 큰 그릇에 담아내
겠습니다”』, 10면~11면 『“전북발전 견인차... 서해안시대 주도”』, 13면 『“지역민 부응... 30년 정치인

생 고향 위해서”』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일요시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정당 소속 후보자들만을 선정하여 그들의 정치포부, 주요치적, 공약사항 등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일요시사 2000년 3월 19일 12면

논 · 발두령 · 막걸리 한사발...소박한 시민정치인

이 협 의원

시골스런 순박한 미소, 그 미소의 힘이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힘이였다. 두 곳의 익산 선거구가 하나로 조정됨에 따라 단한명만이 살아남아야 하는 숨막히는 순간...그는 시민의 힘으로 그 기쁨을 손에 쥐었다. 수년간 '삶의 정치'를 강조해오며 스스로가 생활정치인이 되길 애써 노력해왔던 정치인, 삼선의원을 지냈음에도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별거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마음만은 풍요롭고, 정신만은 맑다. 익산 이협의원, 논두령 발두령 지나기를 마다하지 않는, 막걸리 한사발 '꺼이꺼이' 마실 줄 아는 소탈함...그래서인지 그의 결엔 늘 사람들이 함께 한다. 소박하며 인자한 성품이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서 만은 사나운 정치인 이협. 진실앞에선 언제나 당당한 그에게 4선의 고지가 멀지 않았다. 파릇파릇한 봄 기운이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전한다.

■ 80년 민주화 그 핏빛 현장에서

‘이제 우리앞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삶의 정치는 단순한 생활의 정치라는 차원을 넘어 생명의 정치, 부활의 정치를 뜻하는 것이다. 파괴와 소외의 대상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을 주관하는 주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인간실현의 정치인 것이다.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파괴를 계속해온 우리들 각자와 공동체의 삶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삶의 정치다. <이협수상록 삶의 정치中>’

이 의원이 갈망해온 정치... ‘삶의 정치’, 인간실현의 정치를 위한 그의 몸부림은 민주투사로서 한시대의 용솟음치는 파클음을 이끌어 오던 때부터다. 이제는 아련한 사

진으로만 기억되는 그때 그시절, 그 핏빛으로 물든 그 현장에 있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1979년 10·26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처음 정계에 발을 내딛는다. 김대중 내란사건으로 1년 9개월간 옥고를 치뤄야만 했다. 바른 소리 못내는 언론과 현실, 그 구역질 나는 현실앞에서 그는 펜을 들 수 없었다. 중앙일보 기자생활을 접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펜을 놓으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본격 참여했다. 민주협 초

대대변인을 맡으면서 민주화운동의 그 한복판에선 그였다.

■여야마론 잘못된 정책 날카롭게

제13대·14대·15대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일등 국회의원, 일등 상임위원장으로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해냈다. “위원장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이의원. 1999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구분없는 중립에선 날카로운 판단을 가진 의원으로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5년만에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며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는데 일익을 한 주역이다.

지난 99년, 문화관광위원장으로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8인 정치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 지역감정해결을 위한 정치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스크린쿼터제유지와 한국영화살리기 운동에 앞장, 금강산 관광추진과 문화산업을 집중육성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국제화시대, 감각의 정치펼칠 각오

이 의원은 책을 사랑한다. 국회도서관 이용횟수 2위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책과 인터넷 속에서 또다른 세상을 만나기를 갈망한다. 21세기의 선진정치인, 감각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연구에 또 연구, 고민에 또 고민에 빠지는 유별난 의원이다.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국제정치인으로서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영어, 독어, 일어, 불어 등의 외국어 공부를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때문.

말보단 실천, 화려함보단 평범함을, 혼자숫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을 목놓아 외쳐부르는 이협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정치인으로 시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그것은 이협 의원이 그토록 애앓게 강조해온 사람의 정치인 것이다. 시민의 친구이며, 시민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는 익산시외곽의 한 농촌마을을 찾아 논밭을 가른다. 허름한 잠바하나 걸치고, 막걸리 한잔 들이키며 농민과 함께 지난 겨울의 시름을 나눈다.

전북일요시사 2000년 3월 19일 13면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 해소”

민주당 군산지구당 **강현욱** 위원장

위민정치 이루도록 노력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정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현욱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발굴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인식하는 위민정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고 소신을 피력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정치가 이뤄지려면 우리자신부터 민주주의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우리당도 민주화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효율적으로 배합해 온 국민으로부터 폭넓고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확고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위해 한나라당 탈퇴

그는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서는 민생문제 해결이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면 오히려 부추기는 현실에 더 이상 대열에 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나라당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민생을 살피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화려한 의정활동 호평

15대 의정활동에 대해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평이나있는 그는 여·야간의 냉각기류가 팽배하던 시기에 3당 정책위 의장간의 주기적 상호 교류 활동을 제언해 각 당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냈으며 이로인해 야당으로서 정책대안 제시 위주의 활동을 했다고 언론의 호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소속 당원들로부터 매사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법제단'을 가동, 이들이 발굴한 정책자료 등을 소속의원들에게 배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기가 올 것임을 예고하고 금융실명제 유보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 지하금융을 양성화 시키자고 열변을 토했으나 당시 행정부가 안이한 상황대처로 IMF체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당시 강 의원은 30년간의 실물경제를 맡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경제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시간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추진해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다그쳤지만 행정부는 OECD 가입의 안이한 상황대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예산 심의사상 전무한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에 대해 군산시민의 지지와 중앙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강 의원은 97년 국고 지원예산 확보당시 1천1백73억원을 증액해 이 부문 기록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지역 현안사업 산적

강 의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며 15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군산시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의 완성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군산항의 황해 경제권 겨냥과 국제적인 생산교역기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균형적인 도시공간과 선진 도시기반 완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추진은 물론 역사 유적과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도 유지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국정후반 국민의 정부가 개혁과 안정을 추구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군산과 전북, 나아가 나라를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을 각오가 돼 있다며 우리 정치에 희망을 불어 넣을 새로운 기운을 전북도민 모두가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시사 2000년 3월 26일 8면

전북일보시사 2000년 3월 26일 8면

“정읍의 미래 큰 그릇에 담아 내겠습니다”

만나봅니다

민주당공천자
정읍시지구당 위원장

김 원 기

“21세기는 서해안시대입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은 전북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더 넓고 먼 안목으로 개발전략을 입안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정부와 여당의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정읍시지구당 김원기 위원장의 ‘일성’이다. 4선의 중진위원을 지낸 김원기 위원장. 16대 5선고지를 향해 정읍시를 누비고 있다. ‘시민의 힘’…시민과의 정을 나누는 정치를 일궈내고 싶다는 정감어린 각오를 피력한 김위원장은 초년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늘 처음같은’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분열된 정읍사회를 하나로 통합·화합시키고, 지역민에게 뿌리깊게 자리잡힌 정치불신을 ‘말끔히’ 불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터다.

“그간 지역민 곁에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읍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릇으로 성장했습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지역민의 생각과 바람을 큰 그릇에 담아내는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시대를 맞아 앞으로 4년 동안 정읍문제 해결에만 몰두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지들러’도 됩니다. 정읍을 확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21세기 정읍발전 비전

김위원장은 정읍발전을 위한 몇가지 전략을 내세운다. 첫째는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개발, 지식기반의 신산업복합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것. 이는 제2공단과 제3공단을 식품벤처단지로 조성하고, 기업활동상의 장애요인을 최소화,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지원을 확대시키고, 내장리조트 개발사업등 관광산업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것.

둘째는 농민을 위한 정책개선이다. 그 일환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거나, 농업인 연대보증해소를 실현해내는 것 등이다.

셋째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문화유적지를 복원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내장산을 4계절 관광지로 조성, 21세기 청정관광지역으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를 범국민적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는 21세기 정보통신의 선도지역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2005년까지 전 지역에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센터 유치에도 앞장선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복지사업, 서해안중심도시 대비한 도로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등을 몸소 앞장서 전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네박자 척척 맞는 정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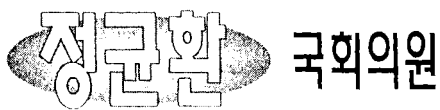
김위원장은 정읍 감곡출신으로 전주북중과 전주고를 거쳐 연세대 정외과를 나왔다. 동아일보 기자생활 18년. 10대에 국회에 첫 입문, 11대·13대·14대를 거친 중견정치인. 평민당 원내총무를 지냈고, 민주당 5·18광주특위위원장, 민주당 사무총장 수석최고위원을 맡은 바 있다.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와 제2기 노사정위원장 등을 도맡았으며, 현재는 새천년민주당 고문을 지내고 있다.

김위원장은 정읍발전에 대한 자신의 몇가지 의견을 강조한다. “정읍시민, 지방의회와 정읍시, 정읍출신인사, 그리고 국회의원...이 네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도 큰 정치를 이끌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막힌 곳을 결정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상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살기좋은 정읍시를 이룩해내는 큰 정치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일요시사 2000년 3월 26일 10, 11면

“전북발전 견인차… 서해안시대 주도”

새천년민주당 고창군·부안군지구당위원장



정균환 그는 누구?

정균환 의원은 잇단 재·보선과 타당 인사 영입과정에서 인정을 받은 정치인이다. 성격이 곧으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게 정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평. 그는 똑심있고 필요하면 손해를 감내하면서 직언도 서슴지 않게 한다.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바로 청와대 주례보고 멤버인 특보단장에 임명된 것은 김대통령이 그의 이런면을 높이 사서다. 국회내무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정치관계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참여해 정치개혁 문제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이다.

현재 국민회의 총재특보단장으로 있으면서 4·13 총선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주의 역사에 진일보한 전기를 마련했던 일문이기도 하다. 1988년 고창에서 당선된 이래 항상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제시로 의정활동을 전개,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는 정치인으로 인정받는다. 13대, 14대, 15대 때 국회개혁입법, 지방자치법, 정치관계법, 여야 실무협상 대표를 역임하면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시찰을 통한 각국의 정치개혁 입법사례 연구사례를 반영시켜, 입을 열고 돈을 묶는 통합선거법을 입법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특히 정의원은 김대통령과 건전한 민주주의 정

착을 위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 지방자치제 조기 실시의 기틀을 다졌고, 경찰개혁과 자치경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출판, 지방자치경찰제 실현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현재 정의원은 21세기 전북과 한국정치를 책임지기 전북과 한국정치를 책임지고 나설 정치지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머슴’ 잊은적 없어

“그동안 당과 정부의 일을 하다보니 저에 대한 지역민들의 섭섭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지역을 더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당의 사무총장직에 이어 총재 특보단장, 신당 창당 조직위 위원장 등의 요직을 맡다보니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소홀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첫마디 말에 도민들, 특히 고창·부안 지역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이만큼 성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큰 고마움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주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은 고향에 있다며 그동안 당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지역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가 지역민들의 뜻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창대교’ 서해안 중심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우선 최근 부안과 고창의 교통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뤄낼 '부창대교' 건설이 그 중 하나다. 폭 21m, 길이 7km에 이르는 이 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고창·부안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국도노선 조정 용역사업비 5억원의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함으로써 이 지역민들이 바라던 그의 숙제가 해결된 셈이다. 대형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부창대교가 건설될 경우 이 지역에 새로운 관광벨트가 형성돼 서해안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갖게 하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군산자유항에서 고군산 열도(선유도), 새만금 방조제, 변산해수욕장과 채석강을 비롯한 변산반도국립공원, 진서, 줄, 사포, 김원, 구시포해수욕장, 선운사, 고인돌 유적지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광주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남해안과 연계하면 더욱 광역관광벨트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위치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게 그의 말이다. 이와함께 그는 그동안 공약한 부분의 이행에도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고창 흥덕·선운사 입구간 12km 구간은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 6백70억원을 관계부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상습침수지역인 고창 상하면 일대 1백35ha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비도 농림부로부터 32억7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고창군 부안면 일대를 농림부의 하반기 농업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지구로 포함시켜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그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지역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지역일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을 이었다.

지역현안사업 앞장서 추진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에 대해 그동안 전북지역이 소외되어 왔다는 여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권을 꼭 포함시키라고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는 김대통령을 신당추진 실무자로서 만나지 않고 당시 국민회의 전북도지부장으로 청와대를 찾아갔을 때 도민의 민심을 전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김대통령은 국가균형개발에 전북이 소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역민들로서는 당시 건교부장관의 최종결정이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때 정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문가들이 확정된 전주권이 포함된 국토개발 연구원안과 과거 정권하에서의 전북 차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간곡히 진언했다고 답변했다.

전북 서해안 중심지로 만들터

이어 앞으로의 전북발전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군장광역권 개발사업에 전주를 추가해 이 지역을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동북아 교역의 교두보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1세기는 서해안시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큼 전북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지가 돼야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0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고창~장성 고속도로는 길이 17.3km, 사업비 3천9백94억원이 투입돼 2007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호남고속도로와 광주 우회도로에 연결되어 여객 및 화물수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밖에 고창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확보와 고창해안 5개면 11개사업과 농업기반공사 부안군 지역사무소 지부승격 추진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확정적 이어서 이 지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전북일요시사 2000년 3월 26일 13면

“지역민 부응 ... 30년 정치인생 고향위해서”

5선관록의 원로 중진급 의원, 문학적 조화가 깊은 감성어린 정치인·전북문학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좋을 정치인 김광수(전국구, 무진장). 척박한 민주당세 지역정서 속에서도 그 이름 석자가 지역민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전북 현안문제는 물론이요,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애써온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목정 김광수, 자신의 호를 빌어 만든 '목정문학상'을 통해 전북문학인 양성에 온 힘을 쏟아왔고, 62년 설립한 '목정장학회' 설립, 30여년간 후학양성에 애써왔다. 제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0대 12대 14대 15대까지 지역정치거목으로 자리매김한 김광수 의원, 이제 그가 제16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칠십을 훌쩍 넘은 고령의 정치인이지만 새천년 그는 다시 우리 앞에 설 준비를 다진다. 민주당 텃밭의 강한 지역정서를 뚫고 공동여당으로서 전북의 뒤통수에 본격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출판계, 문학계, 그리고 장학회 뿐 아니라 체육계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게 인정된다. 79년대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시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중흥기를 맞게 중추적인 인물이었으며, 86년 승마협회장으로서 전주승마장을 유치, 88올림픽 당시 승마대회 지역유치를 했던 장본인이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시절, 보이스코아웃연맹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무주 덕유산에 세계잰버리 대회 유치에 성공, 덕유산 관광지 개발에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5선신화 이뤄내기까지

국회의원 동료들로부터 영국신사로 불리는 김

광수 의원. 김구연 보좌관에게 웃으며 그 이유를 묻자 “국회의 베스트 드레서여서죠”라고 말한다. 또한 점잖은 자태와 여유있는 미소, 신사적인 국회활동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김의원의 정치이야기. 그 보따리의 첫 매듭을 풀어볼까.

9대 국회의원 당선신화부터 얘기의 시작은 올라간다. 당시 무진장에서 4선의원과의 한판격돌을 하게 된다. 무소속출마의 승리였다. 무소속 원내총무를 지내면서 70년대 남원이나 포천시보다 먼저 무진장에 전기전화를 도입한 바있다. 10대에는 무진장 공화당 후보 1위로 당선, 12대와 14대 국회의원 당선의 영광을 안게된다. 굴곡의 정치 30년사, 김의원 역시 신군부에 의한 정치탄압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무주 청천면 연평교에 가득 깃들었다. 직접 사비로 연평교 다리를 세워, 오가는 지역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공을 남겼다. 지금도 지역민들은 그 다리를 지날 때면 김광수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한다.

6선 향해 뛴다

자민련 도지부장으로 지역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쏟은 김의원은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당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지역정치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각 지역구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했을 뿐 아니라 도내 여론주도층 주요인사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당세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사회복지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김의원의 지역 활동 중하나.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또한 지역구 의원 못지 않은 지역사업, 즉 무풍청

년회 가로수 심기, 무풍 체육계발전 기금 및 대
상 수상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사랑을 일궜다.

1백여일이 채 얼마남지 않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김의원 역시 새로운 정치일꾼이 되고자 새 각
오를 다지고 있다. 16대 무진장 출마를 다짐한
김의원은 신화적 6선고지를 향해 힘찬 청신호를
켰다.

칠십을 훨씬 넘은 고령이지만 그에게는 40대
못지않은 정치열정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의 이
마에 깊이 파인 주름살이 대신 말해주듯 그는 우
리나라 반세기 정치역사를 함께해온 산증인이다.
6선 신화, 전북의 자민련 돌풍 변수..., 김광수 의
원의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겁지만 영광스런
과제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4
매 체 명	전 납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훈 동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16. 1,4면 2000. 3.18. 1,3면 2000. 3.20. 1,5면 2000. 3.21. 1,3면 2000. 3.23. 3면 2000. 3.24. 1,5면	소 재 지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0-5
기 사 제 목	바뀌·바뀌 속 '무소속 돌풍' 거세(1면) 예상님은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4면)외 다수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무소속 이정일 후보의 지지율이 32.1%로 민주당의 김봉호 후보(19.2%)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와 해남·진도 선거구에 관련된 선거상황을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금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 위반내용

민주당 해남·진도 김봉호 후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대상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 ‘무소속 돌풍’ 등의 기사제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특정 무소속후보(이정일)가 우세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여 민주당 후보나 다른 출마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 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남일보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이 훈 동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남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남일보 2000. 3. 16.자 1면 『바뀌·바뀌 속 ‘무소속 돌풍’ 거세』·4면『예상님은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 3. 18.자 1면 『후보 이미지 심기 ‘기발’』·3면 『‘유권자 심판운동’ 광주·전남 확산』, 3. 20.자 1면 『유권자 선거혁명 始動』·5면 『시민연대의 낙선투어』, 3. 21.자 1면 『정치개혁 ‘버스타어’ 시도민 큰 호응』·3면 『‘선거혁명 열풍’ 전국 확산 의지』, 3. 23.자 3면 『‘낙선운동’ 성패결린 최대 격전지』3. 24.자 1면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5면 『광주·전남 관심 선거구 6곳 여론조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 함.

이 유 : 전남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前 전남일보사 회장 이정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특정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3조(객관성), 동 기준 제6조(사실 보도) 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바뀌·바뀌 속 '무소속 돌풍' 거세

16대 총선을 향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5~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아성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6일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자체분석한 선거판세 결과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서 임복진 공천자가 무소속 강운태 전내무부장관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해남·진도의 김봉호, 화순·보성의 한영애 공천자가 무소속 이정일 전 전남일보회장과 박주선 전법무비서관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당이 접전지역으로 분류한 3곳의 친여 무소속후보들은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과 자체여론조사결과 자신들의 지지도가 민주당 공천자보다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밖에 나주, 영광·함평 등 광주·전남지역 5~6개 선거구의 무소속후보들도 민주당 공천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소속후보의 약진현상은 광주·전남지역 역대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으로 민주당 싹쓸이현상에 대한 지역민의 견제심리와

능력을 갖춘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희구하는 지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여당후보와 친여 무소속후보간에 지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권교체이후 당에 대한 지역민의 결속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지명도 높은 일부 무소속후보들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광주·전남지역의 이상기류를 조기에 진화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18일 권노갑 고문의 지역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후보들은 민주당의 호남지역 싹쓸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감정타파노력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정부 집권후반기 정국안정과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강 전장관은 “민주당이 이번총선에서마저 호남지역을 석권한다면 김대통령이 집권 이후 심혈을 쏟아온 지역감정해소 노력은 공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한 2~3석 정도는 무소속후보가 당선돼야 국가적 장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상넘은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

‘호남 텃밭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실시한 자체 판세분석결과 광주 남구(임복진)와 남원·순창(조찬형)이 열세, 해남·진도(김봉호), 화순·보성(한영애)이 접전지역으로 나타나자 다소 놀라는 표정이다.

호남 전지역 석권 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초반이기는 하지만 일부 무소속후보들의 약진이 당초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당 관계자들은 원인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싹쓸이 풍토에 대한 지역민심의 변

화 △거물 무소속후보의 등장 △공천과정에 대한 잡음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등이 이같은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김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안정적 정국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공천=당선’의 불문율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소속후보의 약진현상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당이 즉각적인 조처에 나설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감정 등 ‘역풍’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현단계에서부터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역풍이 일어나면서 16대총선의 최대승부처인 수도권과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영남권 선거전략에 차질이 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호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반 이상기류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수도권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호남지역의 이상기류를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 대로 둘 경우 ‘미풍’이 ‘돌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호남 전의석 석권이 목표인 이상 초반부터 대세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후보들은 민주당의 싹쓸이 풍토가 이번에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호남에서 2~3곳 정도는 ‘이변’이 연출되는 것이 김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을 견제하기 위해 또다시 대거 호남지원에 나설 경우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이는 김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 입당은 당연한 수순인 만큼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국가발전과 지역정치발전에 긍정적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16대 총선은 선거전이 본격화될수록 특정정당 싹쓸이 풍토를 둘러싼 민주당 공천자와 무소속후보간의 치열한 논리전개 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18일 1면

후보 이미지 심기 ‘기발’

16대 총선 후보등록을 일주일여 앞두고 각 예비 후보들마다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부 무소속후보들은 발 빠르게 역사인물이나 텔레비전 극중 주인공을 자신에게 이입시키는 이른바 ‘이미지 이입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95년 6·27지방선거당시 조순 서울시장 후보의 ‘포청천’ 이미지 인용기법과 같은 방식.

보성·화순지역 예비후보인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자신의 경력과 지역연고 등을 적절

하게 이용해 ‘조광조 이미지’를 심고 있다. 조광조는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의 부패와 비리를 공격하며 개혁정치를 펼치다 기득권세력의 반격으로 끝내 화순군 능주로 유배돼 사약을 받았던 조선시대 정치인. 박 전비서관(조광조)은 ‘국민의 정부’ 사정총수로 기득권 세력(훈구파)에 맞서다 ‘웃로비’ 사건(기묘사화)으로 낙마했던 속사정을 설파하며 조광조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 전비서관은 출마선언문에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려다 화순 땅에서 최후를 맞았던 조광조

선생처럼 장렬하게 몸을 던질 망정 비열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비서관에 맞서 수성 입장에 선 한영애 의원은 ‘맡며느리와 어머니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의원은 ‘화순·보성·별교의 맡며느리’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박씨를 “우리들의 정권교체 노력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총부리를 겨누어도 출세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사람을 안으려 한다”고 말했다.

해남·진도에서 무소속출마예정인 이정일 전 전남일보회장은 선거구인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지점인 울돌목이 명량대첩지인 점에 착안, 충무공정신을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집권 여당의 국회부의장이자 5선의 김봉호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며 ‘사즉생 생즉사(死即生生即死)’라는 충무공의 경구를 인용한 바 있는 그는 “충무공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불퇴전의 결연한 의

지와 각오로 총선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영일 의원은 자신의 공천탈락과 무소속출마(광주동구)를 “유의태 문하에서 쫓겨난 허준”으로 표현하며 ‘광주의 허준’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의원은 “허준(이영일)이 유의태(김대중 대통령) 주변인물(특정계파)의 음해와 비방으로 스승 곁을 떠났다”면서 “그러나 유의태의 허준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고, 결국 스승에게 돌아가 세상과 사람을 살려냈다”고 주장하며 탈당의 변과 당선 후 복당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수지역 예비후보인 이광진(35) 여수비전 21 대표는 영국수상인 토니블레어의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대 중반의 나이를 들어 “김대중, 김영삼, 이인제, 토니블레어, 케네디 등 많은 지도자들이 20, 30대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한국의 토니블레어를 꿈꾼다”고 피력했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18일 3면

‘유권자 심판운동’ 광주·전남 확산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바람이 광주·전남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이 낙천·낙선운동 지지를 선언, 정치개혁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 전망이다.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는 오는 20일부터 공천부적격자가 공천을 받은 지역을 버스로 순회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낙천·낙선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총선시민연대 버스투어팀과 합류, 무등경기장부터 롯데백화점까지 ‘정치개혁 및 유권자 심판을 위한 차량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민택노련 광주지부 회원들도 참가해 차량 캠페인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도민연대 버스투어는 광주에 이어 화순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낙천, 낙선운동 지지를 호소하고 화순읍 공터에서 기성 정치권규탄 및 정치개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총선시민연대와 시도민연대는 광주·전남지역 버스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해남·진도에 집결, 공천 부적격자의 낙선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총선시민연대와 시도민연대팀은 이날 오후 6시 해남 천주교회에 집결, 해남농민회, 전교조 등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과 유권자 선거혁명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또 진도로 이동, 진도 천주교회에서 이장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강연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기성정치권 심판운동을 적극 호보하고 나설 예정이다.

순천 총선시민연대는 18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시내 일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유권자심판운동을 위한 가두홍보전을 전개하고 여수 총선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순천 총선시민연대는 또 오는 4월 1일 이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 공갈 토론회를 갖고 각 후보들의 정견을 비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정치개혁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 해남지역

초·중고 교사 295명은 해남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해남 군민연대가 전개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지지 입장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교사들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한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다”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익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낙천·낙선운동의 지지대열에 가담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유권자혁명 운동은 사회 모든 분야로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0일 1면

유권자 선거혁명 始動

총선시민연대가 20일 낙선운동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부패·무능 정치인 퇴출을 위한 버스투어를 집권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시작했다.

총선시민연대와 광주·전남정치개혁 시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무등경기장 앞에서 집결, 무등경기장-광주역-롯데백화점을 경유하면서 '정치개혁과 낙선대상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을 위한 차량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민택노련 광주본부 소속 택시들도 참가해 낙선운동의 열기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총선시민연대 버스투어에 참가한 최열·박원순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버스투어에 앞서 “전국 버스투어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의 첫걸음”이라면서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반대자는 기필코 낙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시민연대와 시도민연대는 또 오후 3시30분부터 30여분 동안 화순읍 공터에서 거리집회를 가지는

데 이어 오후 6시 해남천주교회에 집결해 ‘유권자 선거혁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총선연대는 또 오후 8시 진도 천주교회에서 전교조, 농가회, 천주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부적격자 낙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선시민연대는 특히 화순, 해남·진도 등 낙선대상자 출마지역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투표한다 △지역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거부한다.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대상을 찍지 않는다. 등 4개항에 동의 서명을 받는 ‘유권자 약속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버스투어를 벌인 데 이어 21일에는 마산과 부산지역에서, 22일에는 울산과 대구, 23일은 청주와 대전, 24일은 전주와 강원지역에서, 25일은 구리시와 성남시에서 각각 버스투어를 벌일 예정이다.

시도민연대는 또 총선시민연대와 별도로 23일

화순, 26일 해남·진도, 28일 고흥지역에서 각각 버스투어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도민연대는 휴일인 19일 증심사 입구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색 플래카드 전시회를 갖고 등산길에 나선 유권자들에게 선거혁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관련기사 4

면>

한편, 공천반대자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은 화순, 해남·진도 등지에서는 낙선대상자측의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0일 5면

시민연대의 낙선투어

낙선운동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총선시민연대의 버스투어가 시작됐다. 전국민의 80%지지 속에 정치권을 상대로 1단계 낙선운동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2단계 정치개혁운동으로 전국을 돌며 유권자심판운동을 대대적으로 이끌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화순·보성과 해남·진도에서 낙선운동 바람을 일으킨데 이어 마산과 부산, 울산과 대구 등 영남권과 청주와 대전의 충청권을 거쳐 전주와 강원 원주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퍼포먼스와 거리집회를 열 계획이다. 유권자들의 참여 없이는 낙선운동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연대가 지역단위 시도민연대와 손잡고 운동의 중심을 지역으로 옮겨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적색경보등이 강하게 불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필 총재가 지역주의에 불을 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가세하고 나섰는가 하면 애시당초 시작부터 지역당으로 출발한 민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확대조장하는 지역주의를 이번 선거에서조차 근절하지 못할 경우 정치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낙천후보 선정기준으로 발표한 부패 정치인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을 표로 심판하지 않을 경우 유

권자혁명은 그림 속의 떡으로 전락하게 된다. 전국 227개 지역구에서 낙선대상자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유권자 다짐표'를 1만표 이상씩 확보하려는 시민연대 계획을 우리가 적극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 5명 가운데 4명의 적극지지 속에 전개된 낙선운동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무시하고만 각 정당의 비민주적인 운영체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낙선운동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오는 26일까지 7일동안 227만표 이상의 유권자 다짐표를 확보하려는 시민연대의 버스투어에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 유권자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 지역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또다시 지역터발을 만만히 보고 있는 부패 정치인들을 응징하는 것도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80%의 지지를 표로 연결할 때 비로소 4·13 총선을 '유권자축제 한마당'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다같이 명심해야 할 시기이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1일 1면

정치개혁 '버스타어' 시도민 큰 호응

무능·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차량 캠페인이 20일 전국 처음으로 80년대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됐던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관련기사 3면>

총선시민연대는 특히 해남·진도지역에서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유권자 약속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본격적인 낙선운동의 신호탄을 올렸다.

총선시민연대 버스타어단은 20일 광주에 도착해 발표한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80년 5월항쟁에 앞장서 분단독재의 어둠을 밝히는 환한 햇불이 됐던 광주시민들이 부패 정치인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부패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지역주민의 명예를 모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고 촉구했다.

총선시민연대는 또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와 민택노련 광주본부 소속 택시 100여대와 함께 광주시내에서 차량 캠페인을 벌이며 무능·부패정치인에 대해 유권자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어 화순에서 "80년대 이 지

역 주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정치개혁을 위해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한 뒤 해남에 집결, 총선시민연대에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정치인을 겨냥해 낙선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30여분 동안 해남읍내를 돌며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를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벌인 뒤 군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남도민의 명예를 걸고 낙천·낙선대상자를 총선에서 떨어뜨리자'고 호소했다.

특히 최열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해남 천주교회와 진도천주교회에서 잇따라 '정치개혁 유권자승리를 위한 강연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밀실공천을 주도한 다선장치인이자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지목한 인사는 당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와함께 강연회장 입구에서 4·13총선 투표 참여, 지역감정배제, 낙선후보 심판 등을 약속하는 '시민행동 규약 서명운동'을 벌이며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1일 3면

'선거혁명 열풍' 전국 확산 의지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버스타어를 광주와 해남·진도지역에서 한 것은 이곳이 민주화성지라는 점이 감안됐다.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로 지목한 정치인이 출마한 해남·진도지역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것은 낙천 대상자는 기필코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최열 공동대표는 20일 광주무등경기장 앞에서 개최된 버스투어 출정식 인사말을 통해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며,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광주·전남지역민의 피로써 한국의 민주화가 이룩된 것처럼 그 당시의 의지를 모아 정치개혁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해남천주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남도 땅에서 움트는 정치개혁 봄기운을 전국으로 북상시키자.”고 선언한 데에서도 총선시민연대의 의지를 찾을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특히 이 지역이 집권당이 텃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장 먼저 버스투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 집권당의 골간에는 지난 80년 당시 민주화주도 세력이 포진해 있는데다 한국 민주화의 토대였던 광주·전남지역민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할 수 있었던 만큼, 현 정권이 광주·전남 지역민의 정치개혁 열기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의 이같은 포석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권자들이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느끼고 있지만 수십년간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었던 관행을 떨쳐버리게 될

지 시민단체내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 민주당이 김대중대통령의 집권하반기 안정론을 들먹이며 몰표를 호소할 때 이 지역민들이 과거와 같은 투표형태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선시민연대와 광주·전남정치개혁 시도민연대는 유권자들의 몸과 마음이 달리 표현되는 선거행태극복을 위해 낙선운동을 보다 가속화할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전국 순회버스 투어가 마무리된 이후 오는 4월 3일 낙선자명단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정치개혁운동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자신들이 지목한 낙선대상자들에게 대해서는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선거기간동안 현지에 자원봉사단들을 파견하는 등 역량을 총집중해 낙선운동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힘이 모아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운동이 기존 정치권의 낡은 책략과 수십년동안 구축된 기득권을 극복하고 우리정치에 새로운 봄바람을 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3일 3면

‘낙선운동’ 성패걸린 최대 격전지

호남지역 최대격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해남·진도 선거구는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역량을 총집결해 공천반대자로 지목된 민주당 김봉호 국회의장을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버르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시민단체들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낙선운동의 성패’가 걸린 전략지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정일 전전남일보회장 등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김부의장을 강력하게 위협하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백중지세를 연출하고 있어 무소속 돌풍의 진앙지로 여겨지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와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 참여자치 해남군민연대, 진도사랑연대회의 등

중앙과 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해남 진도지역을 순방한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광주·전남시도민연대가 지역을 방문 ‘공천반대 4관왕’에 오른 김봉호 의원의 낙선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치 해남군민연대는 지난 7일 해남 지역신문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남지역에서) 어느 누가 낙천·낙선운동을 거스르는가를 명백히 감시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낙선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해남군민연대는 “독재정권이 만든 지역차별에 한 맺힌 호남 백성들은 그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일이라면’ 하고 모든 생각을 접어야만 했었다. 사람의 됬됨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무슨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주기 바빴었다. 오

죽었으면 ‘말뚝을 공천해도 당선’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라고 그간의 투표태도에 진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낙선자 지목에 대해 김봉호 의원측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는 개인 비리차원이 아닌 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식회의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의 이런 ‘반(反) 김봉호 의원 정서’에 힘입어 정치신인과 도의원 출신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성을 위협받고 있는 김봉호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 그래도 김봉호’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며 지난 1일부터 하루 25개 자연마을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김의원 진영은 현역의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지구당 개편대회, 의정보고회, 당원 단합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벌이면서 표발을 일구고 있다.

후보등록 전인 오는 27일까지 해남·진도지역 모든 마을을 한차례 순회한다는 복안이다. 김의원 진영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무시하며, 지역민의 반김봉호정서는 성실한 선거운동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무소속출마예정인 이정일 전 전남일보회장은 ‘김봉호의원=공천반대 4관왕=지역자존심 훼손’이라는 등식을 내세워 인물교체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 전회장측은 “무소속후보들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현역의원은 군수와 지방의원을 앞세워 표발을 누비고 있지만, 무소속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이제 해남·진도지역도 가능성이 무한한 차세대 인물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소멸하고, 전국 시민단체로부터 부적격후보로 낙인찍힌 사람을 뽑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농어촌 전기료 인하, 농수산물 유통 혁신 등을 공약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석재 전 도의원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국민회의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른바 ‘해남 이변’의 주인공. 이씨는 송지면 등 자신의 고향과 지역구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자평하면서 “언론에서 지역 실정을 모른채 김봉호-이정일 2파전으로 보도하지만 사실은 치열한 3파전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응국 위원장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역민심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당 공천을 받은 최위원장은 당 조직 확장에 주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식 투표’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야 말로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는 시발점”이라면서 반 김봉호 의원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 탄 광봉근 공천자는 유일한 진도출신으로 지난 6일 지구당 창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오랜 정당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을 통해 표발에 나서고 있다.

광씨 진영은 해남출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반해 진도출신은 한명에 불과해 해불만하다는 입장이다.

무소속출마예정인 박종백씨는 15대 총선 낙선 이후 해남에 농어촌발전연구소를 마련하고 꾸준히 선거구를 관리해왔다. 박씨는 “40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깨끗한 정치와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4일 1면

광주 남구, 보성·화순, 해남·진도 선거구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

4·13 총선을 20일 앞두고 광주·전남 관심지역 6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 남구, 보성·화순,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들

이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동구, 나주, 함평·영광지역은 민주당 위원장

들이 무소속 출마예정자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판세는 전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광주·전남 관심지역 6곳에서 유권자 3천6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무소속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강세를 보인 광주 남구에서는 강운태 전 장관이 41.0%의 지지도를 보여 15.0%를 기록한 임복진 의원을 3배 가까운 큰 격차로 따돌렸으며 해남·진도에서는 이정일 전 전남일보회장(32.1%)이 김봉호 의원(19.2%)을 12.9% 포인트 차로 앞섰다.

보성·화성에서는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37.9%로 한영애 의원의 31.4%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나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부적합자'를 묻는 질문에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가 공천부적격자로 지목한 임복진 35.4%, 한영애 31.1%, 김봉호의원 39.5%로 각각 응답, 한자릿수에 그친 경쟁후보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반면 민주당공천자가 시민단체의 낙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 동구에서는 김경천 위원장(33.3%)이 이영일 의원(17.5%)보다 앞섰으며 나주에서는 배기운 위원장(33.8%)이 무소속 출마예정자인 나창주 씨(17.0%)와 이재근 씨(10.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함평·영광에서도 이낙연 위원장이 38.9%를 기록,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19.3%)를 2배 이상 앞서 나갔다.

이번 여론조사결과 민주당공천자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인물 위주의 투표심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의 낙선·낙선운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5%가 지지를 보냈으며 공천 부적격인사에 대해서도 '안짱겠다'는 응답이 66.0%로 '짱겠다'는 13.7%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당과 인물 중 무엇을 보고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5.0%가 인물을 선호, 22.2%에 그친 정당선호를 앞질러,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별로 '시민단체가 지목한 공천반대자를 선택하라'는 질문과 관련, 김봉호의원의 인지도가 67.7%로 가장 높았으며 임복진(56.4%), 한영애(47.3%), 이영일(36.8%), 이재근(37.6%), 나창주(31.6%) 순이었다.

전남일보 2000년 3월 24일 5면

광주·전남 관심선거구 6곳 여론조사

이정일씨 지지32% 1위

해남·진도지역 20세 이상 유권자 843명(해남 590명 진도 253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군에 대한 지지도조사 결과 이정일 전 전남일보회장이 김봉호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의 열세요인은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파괴력과 40%에 달하고 있는 '반(反) 김봉호정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압도적 지지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는 $\pm 3.44\%$.

각 출마예정자별 지지도는 민주당 김봉호 위원장 19.2%, 이정일 전 회장 32.1%, 이석재 전 도의원 13.8%, 한나라당 최응국 위원장 1.5%, 정동

조 씨 0.9%를 보였으며, 무응답층은 32.4%였다.

후보별 지지도와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 부적합자’를 묻는 질문에는 김위원장을 지목한 응답자가 39.5%로 가장 높아 ‘반 김봉호 의원’ 정서가 엄존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김의원을 지목한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해남이 41.3%, 진도 35.6%로 해남지역민의 반감도가 더 강함을 보여줬다. 이 전의원은 9.3%, 이 전의원은 6.9%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4.3%.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지지의사를 표했으며, ‘반

대한다’는 의견은 11.4%에 달했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자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의 낙천과 상관없이 ‘찍겠다’는 사람이 14.1%에 불과한 반면, 안찍겠다는 응답자는 63.5%, 모르겠다 22.4%로 나타났다.

‘공천반대자를 골라달라’는 물음에 김봉호 의원을 지목한 응답자가 67.7%에 달해 선거구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김의원이 공천부적격자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을 지목한 사람은 7.2%, 이석재 3.8%였다. 선거기준으로는 64.5%가 인물을, 정당은 21.7%에 불과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5
매 체 명	경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신 순 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5. 5면	소 재 지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기 사 제 목	‘용마루에 뜨는 달’ 서적 광고		
기 사 내 용	별 첨		

• 광고내용요지

경남 밀양·창녕지역구에 출마하는 김태량 민주당 후보의 자전적 에세이 「용마루에 뜨는 달」을 5단 광고로 게재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저술을 인물사진·경력소개와 함께 광고함으로써 동일지역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연 론 사 : 주식회사 경도일보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대표이사 신 순 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도일보사 발행하는 경도일보 2000. 3. 25.자 5면『‘용마루에 뜨는 달’ 서적 광고』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경도일보사가 경남 밀양·창녕지역구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후보의 저술에 대한 광고를 인물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도일보 2000년 3월 25일 5면

굴곡의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 정치인의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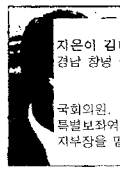


김태랑 자전적 에세이
2000년 / 328면 / 보 8,000원
지음 서둘러 주문하라

김태랑 자전적 에세이

용마루에 뜨는 달

굴곡의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 정치인의 이정표!
김태랑 자전적 에세이-용마루에 뜨는 달
글은 곧 사람이라고 한다.
김태랑 의원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평소의 인품과 더불어 한 자, 한 글이 진실인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화력, 고향의 눈독길에서 만난 사람 같은 순박한 정서, 아무런 가식도 없이 곧바로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논리, 자신이 알아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굳은 신념과 자세, 소년의 꿈을 이순이 나 되도록 고스란히 키워온 열정... 김 의원에게서 평소 느꼈던 인간적인 특성들이 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을 보고 '굴은 곧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음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수성(전 서울대 총장)



자은이 김태랑
경남 창녕 출생.

국회의원,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별보좌역,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남도
지부장 등을 맡고 있음.

서울시 중구 선릉2동 21 / 전화 2227-4181 / 팩스 2227-4075

한서출판사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8
매 체 명	중 부 매 일	언 론 사 대 표	박 성 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5. 12면	소 재 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기 사 제 목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제천·단양지구당 임태영 위원장의 인터뷰, 약력, 사진 4장을 전면에 걸쳐 집중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 정당의 후보대상자를 전면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부매일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대표이사 박 성 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중부매일사가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0. 3. 25.자 12면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중부매일이 특정정당 후보의 시의회 의정활동 등을 담은 사진과 함께 출마의 변·포부 등을 한 면 전체를 할애, 특집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중부매일 2000년 3월 25일 12면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

한나라당 제천·단양지구당

임태영위원장

「정치꾼과 차별화 된 무공해 청정 정치인!」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임태영 위원장은 기존 정치꾼들이
그동안 자기 입신만을 위한 정치로 일관해 온 국
민을 실망감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지역파벌과 자기만의
몸보신을 위해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
치인, 힘있는 여당을 배경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꾼과 정치인이 반드시 구
별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임위원장은 『시
작과 끝이 같으며 소신있고 색깔있는 정치인이
되어 제천·단양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자신있게 내세웠다.

『풀뿌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문제와 아픔을 배웠으며, 의원 활동을 통
해 알게된 지역의 현안문제는 중앙의회에서 해결
하는 정치풍토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델』이라
고 강조하는 임위원장.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늘 공부하는 자세로 행정
학을 배운, 실전을 통해 터득한 의회정치의 경험
을 바탕으로 「민의를 존중하는 정치, 투명한 정
치,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을 위해 봉사하
는 서비스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그의 지론

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
시 보수정객들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습니다』 정
치권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며 또한 시대적 요청이라
고 부르짖는 임위원장은 국회로 입성하면 새천년
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굳은 의지
를 보였다.

『4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대학시절과 군복무기
간을 제외한 나머지 35년 동안을 지역주민들과
선·후배와 함께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대학졸업 후 편안한 직장을 마다하고 프로 세
일즈맨으로 고향에 내려와 사회생활을 시작한 임
위원장.

어머님과 장모님을 한집안에 모시는 극진한 효
자.

그러면서 제천·단양의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
들을 대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비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일을 해야하
는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91년 초대 시의원으로 게다가 충
북에서 최연소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2대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무
투표로 재선돼 8년 동안 지역의 참일꾼으로 봉사
해 왔다.

지난 92년 기초의원 재직시절 제천지역 최대현
안 문제로 부각됐던 통합 공과금제도의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TV 난시청 해소에 적극 대처해 향교 뒷산에 중

계탐을 세우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장곡취수장을 통한 1급수 확보를 위해 강 원도와 중앙부처에 명확한 자료와 논리도 제시, 시민들의 청구역할을 하는 등 합리적이며 학구과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이나 공해산업유치는 머 지않아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돼야 하는 위기 를 초래함에 따라 벤처기업단지 조성이 제일 시 급합니다.』

제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왕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답하는 엄위원장은 국가산 업단지 또는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으로 전환, 임 대공단 형태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21세기 중부내륙권이 관광유통 중심도시 로 육성돼야 하며, 관광도시, 한방타운과 약초 특

산물을 이용한 실버도시, 보양도시로의 특성도 한껏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단양지역에 대학유치 방안과 관련, 고급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의 특성 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특성화대학 촉진법을 연 구, 발의할 의사도 피력.

한나라당에서 22명의 공천자를 낸 전국 청년정 치인 모임인 시민연대에서 상임고문을 맡아 온 엄태영 위원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향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정치를 꼭 실현하겠다』며 『누가 해 도 할 일이라면,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자청하고 나섰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9
매 체 명	한 빛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강 철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5. 7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4-1
기 사 제 목	“뚝심·배짱으로 서민 삶 향상 약속” 자민련 제천·단양 송광호 위원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자민련 제천·단양 위원장 송광호 씨에 대한 특집기획 기사를 7면 전체에 실고 있음. 출마의 변, 의정활동 내 역, 앞으로의 포부, 학력·경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 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금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홍보일변도’의 내용을 기사화 하는 대신 타 후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기사로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4-1
대표이사 이 강 철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한빛일보사가 발행하는 한빛일보 2000. 3. 25.자 7면 『“뚝심·배짱으로 서민 삶 향상 약속”』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한빛일보가 특정정당 후보의 의정활동 등을 담은 사진과 함께 출마의 변·의정활동·포부·학력·경력 등을 한 면 전체를 할애, 특집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한빛일보 2000년 3월 25일 7면

“뚝심·배짱으로 서민 삶 향상 약속”

자민련 제천·단양지구당 송광호 위원장

“도와 덕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민중심의 맑고 깨끗한 정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역정가로부터 “뚝심과 배짱, 소신있는 정치

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송광호 위원장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인으로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지난 14대에 당선되고 여의도에 입성해 송위원장이 얻은 성적표는 확고한 정치노선과 흔들

림 없는 정치철학으로 호평을 받았던 소신파.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고 끈질김과 능동적 탄력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온 보수적 진보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송위원장은 14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줄곧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약,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진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92년 UR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안 없는 수입농산물 개방은 농민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며 당의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176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농업은 국가 생존의 근원”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송위원장은 농촌수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지난 14대 국회의원 시절 농촌부흥세를 신설하고 15조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행 45%로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 국고 보조율의 60%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면단위 1정보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 자녀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보조의 읍단위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지원 방안과 200만원 한도에서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농기계 보조금 인상 안도 송위원장에 의해 발의됐다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송위원장은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개방압력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92년 농촌경제 회생지원금인 농특세와 농·어촌 학생 대학특례 입학제를 관철시켰다.

송위원장은 박달재 제2터널공사 예산 확정과 옥순대교 예산지원, 다릿재터널 예산확보, 남부우회도로 예산확보 등 수많은 지역 현안사업 지원했다.

그는 또 지역내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책의 일환으로 도내 최초로 송학중학교에 급식소를 지원했으며 모교인 재천중학교와 재천여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다. 노인 복지책으로 지역내에 모두 135동의 노인정을 건립, 농촌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송위원장은 단양지역 발전을 위해 영춘면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단양실내 체육관 건립, 매포도서관·단양 노인복지회관 건립, 상진초등학교와 단양중·매포중·단양고등학교체

육관 등을 건립한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송위원장은 ‘의병 창익의 고향, 충절과 지조의 고향’인 재천·단양지역의 숭고한 향맥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며 충·효·경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인간성 회복은 물론 고향의 맥을 전승하는데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송위원장이 16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제시한 지론은 농민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와 영세민, 저임금 말단 봉급자들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려야만 안정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위원장은 “TMF 이후 정치적 실패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 어느때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민들은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치인의 서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원외 활동의 대부분을 서민들과 같이 해 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며 “새로운 민심의 소리와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 서민들의 한을 꼭 풀고야 말겠다”는 송위원장은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재천·단양지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 송위원장은 “그동안 쌓아온 민생경험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죽는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일하고 지역민의 애환과 민의를 대변하는 상머슴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0
매 체 명	일 요 시 사	언 론 사 대 표	이 용 범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6. 10, 20, 62, 63면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1-2
기 사 제 목	'밀실공천희생양', '관악일꾼'으로 명성 무선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성공신화' 주역 IMF 완전극복 위해 디지털화된 지식기반 사업 구축 필요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서울 관악갑 무소속 출마자 김수복 씨와 성남분당을 이상철 민주당 후보, 성남 분당갑 강봉균 민주당 후보의 경력 및 업적소개와 정견을 사진과 함께 BOX기사 및 전면, 양면에 걸쳐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지구당 창당대회 또는 출마공식선언 등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출마후보의 경력 및 업적, 정견을 크게 게재한 것은 동일지역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 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일요시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1-2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일요시사가 발행하는 일요시사 2000. 3. 26.자 10면 『'밀실공천 희생양', '관악일꾼'으로 명성』·20면 『무선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성공신화' 주역』·62면, 63면 『IMF

완전극복 위해 디지털화 된 지식기반 사업 구축 필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일요시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후보들의 경력·정견·활동내용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요시사 2000년 3월 26일 10면

한국의정문제연구소

김수복

이사장(서울 관악갑, 무소속)

중산층과 서민이 혼재된 서울 관악갑 4·13 총선 판도가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면상으로 는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후보로 출마, 당시 한광옥(현 대통령비서실장) 야당후보를 4000여표 차로 누르고 지난해 6월 자민련으로 옮긴 이상현 의원과 민주당 이훈평의원(전국구),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 무소속 김수복 한국의정문제연구소 이사장 간의 4파전.

그러나 관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현 의원은 자민련으로 말을 갈아탄 것이 결정적 감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훈평 의원은 권노갑 고문과의 특별한 인연(목포상고 후배)으로 ‘낙하산식’ 공천이 됐다는 지역여론(특히 호남권)의 거부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성식 후보는 386세대의 기차가 지역계층의 특성상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무소속 김수복 후보는 ‘당연시되던’ 민주당 간판을 달지 못한 핸디캡이 있지만 네 후보 가운데 가장 선전하고 있는 편이다.

사실 관악갑 지역은 인구분포상 호남출신이 50% 가량을 차지(영남 10%, 충청 10%, 수도권 15% 등), 이들의 향배가 당락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간판은 그 자체만의

로도 상당한 득표요소인 셈.

그러나 이훈평 의원이 민주당 공천자로 내정된 이후 이 지역 호남층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수복 후보가 공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상당수 호남인들이 이의원의 공천사실에 반발하고 있는 것.

이 지역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호남출신의 한 중년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고 분개했다. 이의원측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목포상고 출신이란 것을 자주 들먹인다는 것. 생선가게를 하는 한 40대 여인은 10년간 시의원을 한 김수복 후보를 잘 안다며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관악갑 지역 주민 2만여 명은 김수복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추천서에 연명(連名), 이를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관악갑 지역 여론조사결과 문건에 의할 때도 김수복 후보의 지지율이 이훈평 의원에 비해 10%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천결과는 이훈평 의원으로 귀착됐다.

당시 정가에서는 ‘권노갑-한광옥 동맹설(빅딜설)’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즉 한광옥 비서실장이 권노갑 고문의 공천을 보장해주는 대신 권고문도 한비서실장의 일정 공천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권고문이 미는 후보 5명(천용택-강진·완도, 한영애-보성·화순, 이훈평-서울관악갑, 김효석-전남 곡성·담양·장성, 전갑길-광주광산)과 한비서실장이 지원하는 후보 5명(조찬형-남원·순창, 장성원-김제, 김태식-임실·완주, 설송웅-서울 용산, 윤호중-경기 구리)을 두고 ‘딜’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김수복 후보는 공천과 관련, 유권자여론을 중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위배된 밀실공천에 의해 피해를 본 셈. 김후보는 지난 13일 부득이 탈당계를 내면서 공천과 관련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무소속 출마로 인한 호남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후보는 “시의원으로서 10년 가까이 관악발전에 힘써오면서 지역민심을 잘 안다”며 “현명한 호남분들은 관악에 필요한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되찾겠다”며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 복당해

지역발전과 국정운영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후보는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관악갑지구당 부위원장, 91년 민주당 관악갑지구당 부위원장, 95년 국회의원 관악갑지구당 수석부위원장, 민주당 서울시지부 부지부장의 당직을 맡아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전력했다.

김후보는 서울시의 3선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북마전으로 얽힌 서울시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은 서울시의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한 570억 예산을 확보해 관악로를 확장하고, 관악경찰서 관내 이전 유치, 서울에서 유일한 인력정보센터(인력은행)를 관악구로 유치해 23만명의 취업을 앞선한 바 있다.

김후보는 지난 10년간 3선 시의원으로 관악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오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뜻이 사회속에서 실천될 때 완전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국민의 시대’인 21세기는 지방자치를 통해 검증되고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시의원으로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정운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일요시사 2000년 3월 26일 20면

무선 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 성공신화' 주역

016 신화 이룬 공학박사 CEO

한국통신프리텔은 1997년 10월 본격적인 PCS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였다. 사업개시 1년 만에 한국통신프리텔은 PCS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200만 가입자를 최단기간내에 돌파함으로써 파란을 일으켰으며, 1998년 11월초 마침내 신세기통신을 따돌리

고 업계 2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룩해 내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의 자리를 넘볼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통신프리텔의 저력은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계열사라는 이미지를 과감하게 털어 버린 공격적인 마케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한국통신 계열사로서의 신뢰감을 주었던 것도 한통프리텔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한국통신프리텔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상철 전 한국통신프리텔사장과 홍원표 상무 등 개발주역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철 전 사장은 바로 세계 이동통신 업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사상 최단기간에 4백만 고객을 확보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지금의 '016 신화'를 이끈 장본인이다.

이상철 전 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미국 듀크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통신위성설계와 미국 국방성에서 지휘통신자동화체계 설계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후 이 전 사장은 1982년 정부의 재외과학자 유치계획에 따라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부임하였으며, 책임연구원으로 재임시 CDMA방식을 이용한 야전용 무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1998년 강릉 잠수함 공비침투 사건시 아군의 작전통화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 작전 성공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한다.

지난 1991년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 전 사장은 기간통신연구본부장, 통신망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 통신발전 및 지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1994년 사업개발단장으로 재직시 국가적 대행사인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시켜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무선사업본부장 및 PCS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통신이 무선통신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지식사회 선도 위해 총선 출마

1996년 PCS 사업권 획득 후 PCS 사업추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작업을 총괄지휘하던 이상철 전 사장은 동년 12월 성공리에 한국통신프리텔(주)를 설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이 전 사장은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국내 재벌그룹사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세계 최초로 최단기간내에 4백만 고객 확보라는 경이적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IMF 한파의 총체적 국가경제불황 속에서 이같은 기록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무선 이동전화 대중화를 통해 관련산업을 활성화시켜 온 이상철 전 사장은 얼마 전 펀드매니저들이 실시한 최고경영자(CEO)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주역 가운데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은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직을 사임하고 현실개혁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16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현실 및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는 이상철 전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기존 산업사회가 급격히 정보지식사회로 재편되면서 당면한 정보지식사회로의 혁명은 21세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자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나라들이 수백년간 국제사회의 선진국으로 주도권을 행사해 온 전례를 볼 때, 현재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친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호탕한 성격의 만능 인재

‘선견, 선결, 선행’ 등 3선을 경영의 요체로 삼고 스피드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이상철 전 사장은 정보지식사회화의 핵심인 정보통신분야에 평생을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보지식사회화를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인 정보통신정책 입안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지식정보화의 선두를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선두를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깨끗한 통화 품질과 저렴한 요금, 다양한 정보서비스, 차세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통신하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개인통신시대를 이룩한 이상철 전 사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뛰어난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자 집안의 6남 1녀 중 막내인 이상철 전

사장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친동생이며, 서민적 품모처럼 한국통신프리텔 사장 재직시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당구와 바둑을 즐기고 술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곤 했던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소리가 보인다”는 광고 카피를 직접생각해 내는 등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상철 전사장은 바둑이 아마 6단으로 조훈현 9단과 neck짜리 지도대국에서 승리해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며, 골프

또한 싱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만능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통신프리텔은 제2도약의 계기를 맞아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선 인터넷 선도기업’이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한국통신프리텔의 노력의 밑거름이었던 이상철 전 사장. 그가 이룩했던 한통프리텔 성공신화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 2000년 3월 26일 62,63면

IMF 완전극복 위해 디지털화 된 지식기반 사업 구축필요



前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최근 근황은

▲지구당 개편대회를 마치고 지역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공약세분화 작업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인 분당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의 개발에 많은 초점을 두면서 움직이고 있으며, 분당을 초월한 국가적인 정보화추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분당이라는 공간에서 정보화를 선도해 나감으로서 국가차원의 정보화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의 추진 방향이다. 총선에 임하는 자세 또한 외부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나 여타 후보의 공세에 영향받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 차분히 일정을 추진중에 있다. (중략)

-경제위기 책임공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했던 전문가로서 경제위기 극복과정과 지금까지 현 정부의 경제성장을 평가해달라.

특히 경제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책임공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우리의 국가위기 상황은 책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외환보유고를 보더라도 38억 불에서 현재 800억불에 육박하고 있고, 평균 실업률 또한 8%에서 5%로 많이 하락하였다. 기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숫자통계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전세계가 우리의 경기회복을 경의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야당조차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을 표하고 있지 않은가. 향후 지속적인 개혁만 보장된다면 우리 경제는 틀림없이 일대 도약을 이룰 것이다. (중략)

앞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은 지난 2년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을 받은 계층을 어루만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서민층을 돌보고 중산층에게 활력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관료로서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남다른 각오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인으로서의 강봉균은 어떤 사람이 될 것

인지 말해달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정치만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치가 달라질 차례이다. 우리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로부터 국민의 갈등을 수렴하는 화합의 정치로 바꿀 것이다. 우리 국회를 전문성 없는 정치꾼들이 말싸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으로 바꿀 것이다. 정치개혁의 선두에서, 국가정보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과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IMF의 완전 극복과 함께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디지털화 된 지식기반 사업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한국 경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발목잡기와 훼방 놓기가 아닌 진정한 민의(民意)의 대표자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오랜 공직 생활 탓에 보수적이며 뻣뻣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아직까지 오랜 공직 생활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공직생활의 경험은 개인을 갈고 닦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국민에 봉사하고 국익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는 겸손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최우선시 한다. 설혹 그것이 개인의 품성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약간씩 전도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랜 공직생활의 결과물이란 논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략)

-최근 출간된 공직생활 31년간의 회고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에 앞서 과거의 일을 되새겨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며,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일이

기 때문이다. 또한 소중하게 간직해온 공직생활의 경험과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공직생활동안 미처 다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던 시절이다. 어린 학생들의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스스로 많이 같고 닦여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 학생들의 그 순수함과 열정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중년이 되었을 그 제자들의 얼굴이 무척 그리울 때가 많다.

-앞으로의 계획과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로 향후 정치활동의 정형을 만들어 갈 것이다. 중앙행정부서에서 바라봤던 분당의 모습,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당의 모습에서 탈피한 진정한 분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다. 이번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나 유권자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당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인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몫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연과 지연에 이끌린 그리고 막연한 지역주의에 내몰린 '선택'은 지역발전에 또 한번의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역발전의 해안과 중산층 육성을 통한 경제 안정의 비전을 갖춘 인물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환자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므로 아직 수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며, 재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바꾸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다시 뛰는 경제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1
매 체 명	주 간 현 대	언 론 사 대 표	문 일 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6. 8, 9면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기 사 제 목	무소속 강운태 강세 ... 호남이변 조짐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		
기 사 내 용	별 침		

• 기사내용요지

강운태(광주 남) 박주선 씨(전남 화순·보성) 등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호남지역에 이변을 일으킬 인물들로 부상하고 있다고 집중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정당한 근거 제시 없이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공천자인 임복진(광주 남) 한영애 의원(화순·보성)들이 공천경합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운태·박주선 씨들에게 뒤지고 있다면서 무소속 주자들을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부각,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큼(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예컨대, 강운태 씨의 경우 ▲“승세가 갈수록 탄력을 받아가는 분위기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 ▲“호적시비의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약진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의 우위가 확실해진 지난 3월 9일...” ▲“강 전 장관이 입후보일 이전에 초반강세를 굳혀 중후반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면 승기를 쥐게 된다”고 포지티브하게 보도. 반면 경합자인 임복진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관리에 소홀했다” ▲“바닥민심은 상상으로 간단치 않다” ▲“입후보에 대한 약점도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들춰지고 있다” 는 등 약점 들추기에 집중.

박주선 씨의 경우 ▲“전국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인지도와 보성화순지역에서의 지명도는 오히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남도가 만든 수재형 가운데 한 사람이자 52세의 왕성한 정치력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흡수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박 전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표몰이에 나서기 시작하면 의외로 단시일내 승부의 분수령이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 그러나 한영애 의원을 겨냥해서는 ▲“박찬주 의원의 공조직 95%를 박 전 비서관이 흡수한 것도 한의원의 포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의원은) 상대가 있는 선거에서 득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된다” ▲“흑색선전의 조짐도 발견된다. 한의원쪽에서는 ‘박주선 후보가 선거 입후보일 직전 사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종 네거티브하게 보도.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펜 그리고 자유(주간 현대)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펜 그리고 자유가 발행하는 주간 현대 2000. 3. 26.자 8면 『무소속 강운태 강세… 호남이변 조짐』, 9면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주간 현대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 남구와 전남 화순·보성 선거구에 출마하는 특정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호남지역 이변’을 일으킬 인물로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현대 2000년 3월 26일 8면

무소속 강운태 강세... 호남이변 조짐

더욱이 임복진 현의원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낙천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갈 입장을 밝혀, 선거판세를 뒤흔드는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세칭 호남에선 이변지역이 없을 것 이란 일반적인 관측을 무색케 하고 있다.

광주시장, 장관 행정경력

강운태 전 장관은 호적시비의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약진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음모에 당해, 공천을 놓쳤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재언 조직 2국장은 “공천경쟁자측에 의해 이용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내 일신문은 본적지와 행자부, 그리고 민주당 고위

당료 등 관계자들을 추적 취재한 결과 “강운태 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착오였음”을 밝히고 나아가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상대경쟁자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용됐다”는 음모론에 입각한 “강운태 누명을 벗다”라는 제하의 특징 기사를 1면 머리톱으로 보도했다.

강 전 장관 쪽이 내세우는 특징은 인물론의 우위와 행정경험에 있다. 화순출신의 강 전 장관은 40대에 광주시장, 농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거쳤다. 97년 대선때 공을 앞세워 6·4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공천에 탈락하자, 깨끗이 승복했다.

임복진 현의원은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과 함께 그동안 흩어졌던 당원들을 불러모으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야당시절부터 군사전략가로서 김대통령을 보필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한나라당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이다. 송 전 의장은 386세대의 대표주자임을 자임하며 호남의 뉴리더론을 펼치고 있다. 송 전 의장은 2, 30대 학생 사무직종사자 주부층들을 파고들고 있다. 송 전 의장은 임의원과 함께 공천탈락대상자 4명 가운데 포함된 김봉호(해남완도) 의원의 조카사위여서, 그 정체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소속 '이유있는 강세'

강 전 장관이 초반 놀라운 강세를 보이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남구의회의원 18명 가운데 문성훈 부의장을 비롯한 10명이 강 전 장관지지를 선언해 자칫 선거 판도를 장악할 주요변수로 대두됐다.

더욱이 임의원측이 '임복진 의원 공천반대 건의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배포한 구의원 7명을 고소하자, 나머지 풀뿌리 의원들마저 동조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남구의 바닥 민심은 상상외로 간단치 않다. “도청이 목포 무안지역으로 결정, 30여 만명의 인구와 유관시설들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 광주출신 현역의원 6명은 무엇을 했느냐. 도심통과 철도를 경전철로 한다는데 차라리 버스를 운행하는 것 만도 못하다(일종의 넘비현상인) 쓰레기 매립장 유치문제도 왜 하필 우리지역이

냐”며 싸잡아서 비난해 현역의원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광주남구 진흙탕발 싸움

지금 광주 남구는 마치 선거막바지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치열하다. 현재는 인물론에 대한 싸움부터 돈봉투사건까지 나돌아 진흙탕싸움 그 자체다.

강 전 장관의 우위가 확실해진 지난 3월 9일 남구 전지역에는 상대후보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기시작했다. “다음 당선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라는 멘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샘플링이 제시된다.

전화 여론조사는 “1번은 386세대 000 후보, 2번은 새천년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000, 3번은 YS 정권하에서 장관을 두 번 했던 000”라는 흑색선전용 리서치다.

임복진 후보에 대한 약점도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들춰지고 있다. 94년 국회에서의 ‘주사파 발언’, 95년에 일어나 보도됐던 ‘성추행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기된 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등이 되살아나고 있다. 6·4지방선거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구청장이 구속되고 재선거를 치러기도 했다.

지난 7일 시민 모씨(41, 광주시 남구 선동)가 정치개혁 광주-전남 시도민연대를 찾아 “임복진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음식값 11만원을 받았다”고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임의원측은 즉각 김 보좌관이 기자회견에 나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특정세력의 사주에 따른 의도적인 접근”이라며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의원측은 모씨가 개인택시 운전사라고 했으나 개인택시면허를 이미 양도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브로커라고 몰아 붙였다.

강운태 전 장관을 지지하는 남구의원 9명도 ▲금품 및 향응제공의 사전선거운동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규명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옹감한 시민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시도시민연대 또한 이 사건을 검찰과 선관위가 수사해야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자 교체를 요구했었다.

강운태 당선향해 약진

현재 판세는 강운태 전 장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복진 현의원이 뒤 쫓고 있으며, 송갑석 후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여론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공천=당선'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선거 초반부터 강 전 장관이 치고 나가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광주남구의 경우 두 번의 변화가 예측된다. 일단 입후보일인 27, 8일을 기점으로 민주당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 전 장관이 입후보일 이전에 초반강세를 굳혀 중후반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면 승

기를 쥐게 된다.

승패의 분수령은 김대중 대통령 등 여권 핵심 실세 등이 막바지에 호남선거에 나서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에 불을 붙인다는 엄청난 화약을 안고, 호남선거에 참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막강하게 치고나가는 강 전 장관, 임의원으로선 여차하면 자력으로는 선거주도권을 단 한번도 쥐지 못한채 투표일을 맞이 할 수도 있다. 총 유권자수는 16만여표, 투표율을 65%로 예상할 때 4만7천에서 5만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현대 2000년 3월 26일 9면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운 인물로 부상"

박주선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은 전국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인지도와 보성화순지역에서의 지명도는 오히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남도가 만든 수재형 가운데 한 사람이자 52세의 왕성한 정치력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흡수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군의회의장 박주선이 흡수

한영애 의원으로선 '공천=당선'이란 무지개 언덕을 넘자마자, 졸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험악산중에 봉착한 것.

박주선의 기자회견과 함께 설상가상격으로 군의회 김경남 의장 박병옥 부위원장 화순군의회

김성인 총무위원장 등 풀뿌리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주선 지지를 선언하며 물러가 버렸다.

박찬주 의원의 공조직 95%를 박 전 비서관이 흡수한 것도 한 의원의 포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애 의원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 제13대, 제14대 평민당과 민주당의 황색바람이 불 때 연거푸 서울 용산에서 서정화에게 패배했다. 상대가 있는 선거에서 득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된다.

"바닥민심이 흔들린다"

박찬주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임아무개가 한 의원의 핵심브레인으로서 선거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임아무개는 박의원과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결별한 점이 걸린다.

한영애 의원쪽에서는 김대중 집권후반기 안정 과반수 확보를 위해 "당에서 공천한 한의원을 뽑아달라"는 "민주당후보 대의명분론"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한의원 쪽의 한 핵심참모는 인물론에서는 밀리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흑색선전의 조짐도 발견된다. 한의원쪽에서는

“박주선 후보가 선거 입후보일 직전 사퇴할 것”이란 소문을 흘리며 “박주선 후보는 52세의 젊은 나이에 격인 자신의 야망에 대한 한풀이 차원에서 출마했다” “한영애가 민주화에 헌신하는 동안 박주선은 개인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공격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박주선 전 비서관쪽은 한 의원의 초반공격에 일체 반응이 없다. 인물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전 비서관쪽은 “정치적 대세와 지역 민심이 박주선에 있는 만큼, 조용하고 차분하며 깔끔하게 인물적 우위를 집중 조명해 갈 전략”이라고 한다.

박 전 비서관쪽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머리로써 보필할 인물” “화순 보성의 미래를 위해 키워내야할 미래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면 당선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표정이다.

DJ 저격수 제압 적임자

박주선은 광주고 수석졸업, 서울법대, 사법고시 수석합격,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한보비리 조사를 지휘했다. 한마디로 남도가 만들어낸 엘리트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힌다.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김대중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만찬자리에서 “나와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할 사람”이라고 밝힐 정도로 박 전 비서관은 반개혁세력의 방탄복 역할을 수행해 왔다.

10년 선배인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일로 옷을 벗자 집권당 내부에서는 “박주선의 의리심이 언젠가는 사고를 칠 줄 알았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도 16대총선 뒤 집권후반기 정형근 등 세칭 DJ 저격수들을 제압할 적임의 카드로 꼽히고 있다. 한의원쪽은 “민주화 여정에 한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공격하고 있다.

광덕아파트 단지 집중공략

3월 16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게 한영애 박빙우세, 박주선 맹추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비서관이

앞서기도 해 권력핵심부나 당 중심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느 한편을 응원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박 전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표몰이에 나서기 시작하면 의외로 단시일내 승부의 분수령이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다.

역대 호남지역 선거에서 수치상의 전망은 의미가 없었다. 총투표자수는 11만6천5백여 명 가운데 화순 유권자수가 5만8천2백90여 명, 4만8천3백여 명의 보성보다 1만2백여 표 많다. 양쪽 모두 75%의 투표율에 3만5천표 이상이면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

승패의 분수령은 광덕아파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지역 유권자는 대략 1만2천여 명이며 광주 출퇴근자가 다수인 전형적인 지역 베드타운이다. 양쪽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전비서관쪽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선거막바지까지 화순 보성 사람들은 일체 입을 다물고 있을 전망이다. 이들의 침묵은 자칫 자신들이 지역싸움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취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같은 DJ 사람 인물전

선거전문가들은 승패를 가늠할 변수로는 지역싸움과 친구세력의 교체여부를 꼽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보성 대 화순이란 지역싸움으로 전개되면 진흙탕처럼 혼탁하게 얽히면서도 피아를 분간할 수도, 승패를 점칠 수 없는 박빙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누가 당선되든 보성과 화순은 민심이 둘로 갈라지는 최악의 선거후유증을 안게된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과연 민주당 공천론이 먹힐까라는 의문이다.

이미 “김대통령의 개혁작업을 위해 (김태정)선배마저도 구속시키려고 각오했었다”는 박주선 전 비서관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남도의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호남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로 화순보성민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당선되면 김대중사람”으로 인식하고 있

다면, 박주선이 단연 유리하다.

어차피 같은 김대중계라면 김대중의 집권후반
기를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젊고 장기적인 인물을 내세우자는 인물론의 공감
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2
매 체 명	국 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종 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2면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2
기 사 제 목	'뒷심' 부족한 386후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여야가 정치권의 세대교체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거 공천했던 386세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결과 뒷심 부족으로 주저앉고 있어 당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인용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공천된 386세대의 실명을 들어가며 각종 여론조사결과 우세를 보이던 지역은 경합으로, 경합으로 분류되던 지역은 오차범위내 열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관련규정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이 종 대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국민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0. 3. 29.자 2면 『‘뒷심’ 부족한 386후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국민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수도권에 공천된 386세대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국민일보 2000년 3월 29일 2면

‘뒷심’ 부족한 386후보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 되는데 뒷심이 부족하단 말이야...’

여야가 정치권의 세대교체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거 386세대를 공천했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 초반 기세 좋게 우세를 보이던 지역은 차츰 경합으로 주저앉고 경합으로 분류되던 지역은 오차범위내 열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나 당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을 잡기위해 민주당이 고민하다 저격수로 선택한 김성호(金成鎬) 후보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의 국정농단을 특종취재한 기자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 단숨에 지지도를 끌어 올렸다. 하지만 최근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여장(女裝)까지 하며 유유히 사라지곤 했던 전대협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임종석(林鍾哲) 후보도 초반 선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 의원의 반격을 받아 지지도 상승이 주춤해진 상태다.

민주당 박범진(朴範珍) 의원을 위협하며 맹추격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는 접근했지만 확실한 우세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을 침몰시키기 위해 등장한 한나라당 오경훈(吳慶勳) 후보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젊은 후보들이 초반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던 분위기에서 지지도 상승이 주춤거리자 각 당은 원인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원인으로는 386세대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유권자들이 단순한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정치인에게 식상한 유권자에게 젊고 깨끗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해 초반에는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지지를 유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기성세대로부터 젊은 후보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투표율이 높은 기성세대가 비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특히 40대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지율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는 아직 예측불허다. 김한길 총선거획단장은 “젊은 후보들의 지지도가 정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상대가 현역중진의원이라 위축돼서 그렇다”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참신한 이미지로 단번에 역전도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들의 지지도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해 고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3
매 체 명	매 일 경 제	언 론 사 대 표	장 대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8. 45면	소 재 지	서울 중구 필동 1가 5
기 사 제 목	총선판도-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지역별 판세분석을 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한 선거결과 등을 전망.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 ‘여론조사결과 현경대 의원만이 우세를 확실히 보여줄 뿐’ 이라는 등 여론조사를 근거로 총선판세를 분석보도함으로써 관련규정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51

대표이사 장 대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매일경제 2000. 3. 28.자 45면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民主 아성에 무소속 돌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매일경제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대구·경북과 호남·제주 지역의 총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 보도금지』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매일경제 2000년 3월 28일 45면

한나라당의 철
옹성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은 민
주국민당의 출현

으로 한때 한나라당세가 주춤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급속히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국당의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의 김종권 후보를 제외하면 비한나라당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중진급 의원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자민련 박철언 의원과 이정무 의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 11석이 달려 있는 대구는 현재 전의석을 한나라당에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자민련 박철언 의원과 한나라당 김만제 후보가 붙은 수정갑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10% 이상차이로 김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박의원이 간격 좁히기에 진력하고 있다.

달성에서는 '대통령의 딸' 박근혜 의원(한나라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당)이 민주당 엄
삼탁 전 병무청
장과 재대결을
벌이고 있으나

박 의원이 중앙정치에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엄 전 청장과 거리를 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읍은 현역인 자민련 박구일 의원보다 전직 의원 출신인 한나라당 윤영탁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대구남에서는 국민대 총장을 지낸 한나라당 현승일 후보가 장관과 원내총무를 역임한 자민련 이정무 의원을 크게 앞서는 양상이어서 대구 지역의 한나라당 바람을 실감케 한다.

북울의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을 한 경력이 도움이 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모두 16석이 걸려 있는 경북 지역은 구미와 봉화울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강세가 뚜렷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

보와 다른 후보의 격차가 20~40%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국당이 부산경남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점차 한나라당 일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 동진정책의 선봉장인 김종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화울진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을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 TK 교두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구미에서는 민국당 창당 주역인 김윤환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김성조 전 경북도의원에게 큰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국당에서는 민주당 장영철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철곡에서 이수성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지만 대권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나라당 이인

기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 중앙당 차원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포항북은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나 민국당의 허화평 후보가 무섭게 치받아 올라오고 있어 선거 막판에 뒤집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권오을 의원과 민주당의 권정달 의원 등 현역 의원끼리 붙은 안동은 권정달 의원이 여당의 지원을 배경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98년 보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이 자민련 신국환 후보를 다시 만난 문경예천은 종반에 들어갈수록 점차 한나라당 신 의원의 우세로 기울고 있다.

호남은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전남 고흥)와 정동영 대변인(전주 덕진), 강현욱 의원(군산)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무려 90%를 훨씬 넘기도 한다.

그러나 호남 민심도 이제는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무소속 열풍이 어느 총선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호남 전체 29곳 가운데 5곳 정도, 2곳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광주 남구의 강운태(姜雲太) 전 내부부장관과 화순·보성의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임복진(林福鎭) 의원을 오차범위를 벗어난 표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화순·보성은 박 전 비서관이 민주당 한영애

民主 아성에 무소속 돌풍

(韓英愛)
의원과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공천에서 탈락해 광주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일(李榮一) 의원도 만만찮은 후보다. 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여) 전 광주YWCA 사무총장에게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최근들어 김후보의 가정문제가 쟁점화하면서 이후보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후보는 “이번 싸움은 친 DJ 대 반 DJ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인물론을 내세우며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해남·진도도 관심지역이다.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3관왕에 올라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고전했던 김봉호(金琤鎬) 국회부의장이 전 전남일보 이정일(李正一·무소속) 후보의 도전으로 긴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소속 강현욱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 돌풍 지역은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정무수석이 출마하는 남원·순창 한 곳 뿐이다.

민주당 조찬형 의원은 동정론을 내세워 ‘인물 교체’를 주장하는 이 전 수석의 도전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무소속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3개 의석을 모두 차지한 반면 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41.2%의 지지를 얻었고 98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여권 단일후보인 우근민 지사가 승리하는 등 민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언제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결과 제주의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만

이 우세를 확실히 보여줄 뿐 북제주와 서귀포, 남제주 지역은 경합지역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3개 지역 모두 3선을 넘은 현역 중진의 원들에 대한 교체분위기가 작용해 그 덕택에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북제주의 장정언 후보는 민주당의 자체여론조사에서 양정규 의원을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귀포의 민주당 고진부 후보도 변정일 의원과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5
매 체 명	중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기 창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8. 1, 3면 2000. 3. 30. 4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기 사 제 목	자민8·민주2 확실 “α의석 잡아라” 전세역전 관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대전·충남지역 17개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현행 선거법상 공식선거기간 중에는 총선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인용보도가 일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위 관련규정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전시 서구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이 기 창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중도일보사가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0. 3. 28.자 1면 『자민8·민주2 확실히』, 3면 『“α 의석 잡아라” 전세역전 관건』, 3. 30.자 4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중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대전·충남 17개 선거구 등의 정당별 판세와 후보자들의 당선 유곽을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 보도금지』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중도일보 2000년 3월 28일 1면

자민8·민주2 확실히

4·13총선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충남 17개 선거구의 후보자 초반 판세가 드러나며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자민련의 텃밭인 충청권은 당초예상과 달리 상당수 선거구에서 자민련 후보가 고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집계와 각당의 판세분석에 따르면 자민련은 17개 선거구 가운데 대전

2곳, 충남 6곳을 당선확실지역으로 꼽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전 1곳 충남 1곳을, 한나라당은 대전 1곳을 당선확실지역으로 꼽았다.

자민련은 6개 선거구 가운데 중구(강창희)와 서구을(이재선) 등 2개 선거구가 당선확실지역으로, 동구(이양희)와 서구갑(이원범) 등 2개 선거구는 당선유력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은 또 11개 선거구 가운데 천안을(함석재), 아산(원철희), 예산(오장섭), 청양·홍성(이완구), 부여

(김학원) 등 5개 지역을 당선확실지역으로, 유력 지역은 천안갑(정일영), 당진(김현욱) 2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나라당은 대전의 경우 대덕(김원웅) 1개 선거구를 당선확실, 서갑(이재환) 1개 선거구를 당선유력지역으로 꼽고 있으며 충남은 당선유력지역으로 공주·연기(이상재)를 뽑았으며 천안갑(함석재)은 막판추격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주당은 대전에서 유성(송석찬) 1개 선거구를 당선 확실지역으로 꼽고 있으며 충남은 논산·금산 선거구(이인제)와 서산·태안 선거구(문석호)를 당선 확실과 유력지역으로 꼽고 있

다.

이밖에 희망의 한국신당은 보령·서천에서 자민련 후보를 앞서 가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무소속 후보로는 대덕 이인구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를 바짝 추격,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선거초반의 양상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판세에서 다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선거공보물 투입과 함께 합동유세가 개최되면 부동층이 줄어들며 양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충도일보 2000년 3월 28일 3면

“α의식 잡아라” 전세역전 관전

민주당은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론을 강조하는 한편 전략지인 강원도를 집중공략하며 뒤집기를 시도했다. 강봉균 전 재경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등 총선에 출마하는 경제전문가 후보들은 이날 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부채가 400조원이 넘는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나라빚 부풀리기’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매진하려는 이때 일부 야당이 당리당락 차원에서 국가채무와 외자유치에 대해 왜곡 선전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잘못된 주장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자칫 제2의 환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전세 역전을 위해서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과 함께 강원, 충북, 제주 등 전략지구에서 ‘α의식’을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보고 우세로 분류되는 철원·화천·양구 지구당을 제

외한 강원도 8개 지구당에서 이인제 선대위원장을 앞세운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이위원장은 속초지구당을 시작으로 강릉, 동해·삼척, 태백·정선, 영월·평창, 원주, 홍천·횡성, 춘천 지구당으로 이어지는 유세에서 정국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론을 강조하는 한편 한나라당을 ‘경제 위기당’으로 맹비난했다.

이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가경제를 위기 속에 다시 몰아넣으려는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정말 국가장래가 어두워질 것이고,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 민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경합지역에서의 여당승리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번 선거의 싸움대상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의 어두운 고통을 없애고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전에 총력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하야론’에 대해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정국은 상상하기 싫은 혼란과 사회·국가 불안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위기론’을 들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도일보 2000년 3월 28일 4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

○...한나라당 서구을의 김홍만 후보는 최근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재선 후보를 추격하고 있

다는 한 중앙일간지의 여론조사결과에 크게 고무돼 있는 모습. 28일 저녁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성당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출정식'에서도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분위기가 고조.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6
매 체 명	제 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김 효 황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8. 4면	소 재 지	제주시 연동 290-64
기 사 제 목	제주출신 배우자 둔 총선후보들 '선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제주출신 배우자를 둔 총선후보자들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모두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선거기간개시일 이후부터 여론조사결과를 일체 보도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원희룡 씨가 박범진 의원에 다소 우세하다', '제주 대정출신 남편과 지난 70년 사별한 장영신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용호 후보는 이경재 의원과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등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민일보사

제주시 연동 290-64

대표이사 김 호 황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제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제민일보 2000. 3. 28.자 4면 『제주출신 배우자 둔 총선 후보들 ‘선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제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제주출신 배우자를 둔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모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 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제민일보 2000년 3월 28일 4면

4·13총선에 출
마하는 주자들 가
운데 제주출신 배
우자를 둔 후보들
이 전국적으로 모
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우선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서귀포출신 원회
룡 변호사(36)의 파이팅에는 제주시 태생의 동갑
내기 부인 강윤희 씨의 ‘뜨거운 내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씨는 뒤늦게
후보자 대열에 뛰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3선을 노리는 새천년민주당 박범진 의
원에 다소 우세한 가운데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출신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부인 강
씨가 원후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파고
들어 ‘부드러운 설득’으로 ‘적잖은 효험’을 내고
있다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제주출신 배우자 둔 총선 후보들 ‘선전’

또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구
로구에 출마하는
장영신 후보(64)
는, 애경그룹을 창
업한 제주도 대정

출신 남편 채몽인 씨와 지난 70년 사별하고 그룹
을 떠맡아 성공한 여성경제인으로 꼽힌다.

이만섭 전 국회의의 총재권한대행과 함께 새천
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장후보는 여
성 최초의 전경련 부회장과 여성경제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장부’로서의 면모를 과시
해 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
다.

장후보의 남편 채씨는 생전에 고향에 대한 사
랑이 깊어 ‘자신이 죽으면 조의금 전체를 서울재
주도민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해 달라’는 유지를
남긴 것이 그대로 이행 돼 재경 도민들의 가슴을
뭉클케 하기도 했다.

또 인천서-강화을구에 출마하는 새천년민주당

박용호 후보(53)의 부인 김혜경 씨(48)는 제주시에서 태어나 신성여고(16회)를 졸업했는데 강보성 전 장관이 이모부다. 김씨는 대학졸업 후 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KBS아나운서로 있던 강화도출신 박씨를 만나 결혼했다. 김씨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남편을 여의도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박후보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희룡 후보의 바로 이웃 선거구인 양천을에서 뛰고 있는 한나라당 오경훈 후보(35)의 부인 장정인씨(35)도 제주시 태생으로 원후보의 부인 강씨의 신성여고 1년 후배(28회)다.

중앙대 약대출신의 약사인 장씨는 상가 등을

돌며 남편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오후보는 386세대다운 패기로 국민의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5선의 김영배 의원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맹추격하고 있다.

또 경기도 하남의 한나라당 유성근 후보(50)의 부인 송미영 씨(46)도 제주시 태생으로 신성여고(17회)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하고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철학 박사인 유후보는 3선개헌반대등 민주화운동에도 투신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정영훈 의원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성심여대 음악과 출신으로 한때 도내 귀일중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부인 송씨는 시장 등을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7
매 체 명	경 인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장 병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30. 6면, 12면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산구 세류2동 990-25
기 사 제 목	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 총선 승리 향한 출정식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평택 갑선거구 무소속 출마자 우제항 후보와(6면) 자민련 조성진 후보의(12면) 출정식 및 출마의 변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동일선거구에서 특정후보 2인의 출정식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한 것은 동일 지역의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인매일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990-25
대표이사 장 병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인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0. 3. 30.자 6면, 12면『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후보 2인의
‘출정식’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
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인매일 2000년 3월 30일 6면

무소속 우제항 후보 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

평택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제항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28일 오후 3시 평택시 지산동 소재선거사무실 옆 공터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우제항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 자원봉사자와 지지자 및 유권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상당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다가오는 4·13총선에서의 승리를 향한 표밭다지기에 들어갔다.

우후보는 출정식을 통해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정치,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겸허한 정치,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우후보는 “정치, 경제, 교육, 지역발전 등에 대한 공약제시와 함께 공직생활을 통해 검증 받은 도덕성과 행정경험, 교수로서의 전문성, 강한 추진력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승리의 자신감을 피력 했다. 한편 우후보 선거캠프

는 깨끗하고 참신한 일꾼, 학력과 경력을 갖춘
시대에 걸맞은 인물, 전문성을 갖춘 교수의 이미

지를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의 민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인매일 2000년 3월 30일 12면

자민련 평택갑 조성진 후보 총선승리 향한 출정식

자민련 평택갑지구당 조성진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오후 3시 후보등록을 마치고 서정동
소재 선거사무소 옆 공터에서 당원, 지지자, 유권
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을 다짐하
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조성진 후보는 “정직한 삶, 깨끗한 힘”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송탄지역에 모든 정성과
힘, 능력을 발휘해 “푸른 송탄 만들기 21의 정책

공약으로 시민을 배신하지 않는 도덕정치를 실
현, 아름답고 풍족한 송탄의 발전을 위해 약속을
기필코 지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간 조후보는 “주검의 시신을 염습까지 하면
서 송탄시민의 일이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라
는 신념으로 제16대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하고
승리를 쟁취하자”며 소중한 한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9
매 체 명	신 경 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규 삼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6면	소 재 지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618-3
기 사 제 목	이종웅 위원장 후보등록 후 급거 상경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경주시 지구당 이종웅 위원장이 후보등록 후 경주 경마장 조기 착공 약속을 받겠다고 급거 상
경했다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공약 및 인터뷰 보도를 게재함으로써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 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신경북일보사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618-3

대표이사 이 규 삼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신경북일보사가 발행하는 신경북일보 2000. 3. 29.자 6면 『이종용 위원장 후보등록 후 급거 상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신경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후보의 출마동기, 지역숙원사업 해결노력 등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신경북일보 2000년 3월 29일 6면

민주당 경주시지구당
이종용위원장이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거리
유세 보다는 지역발전

공약 현실화를 위해 급히 상경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30만명 경주

이종용 위원장 후보등록후 급거상경

시민은 물론 300만명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주경마장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경주발전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
받고 공천을 수락한 만큼 현재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한표를 위한 선거운동 보다는 중앙당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출마의 변에서 「현실 정치가 언제까지나 우리 시민을 불신에 의한 정서에만 매달리게해 지역발전을 외면하게 했으므로 새로운 정책정당

으로 변신하는데 일조하기위해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차기정권의 재창출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부패한 정치꾼처럼 당선만이 목적이 아닌 새로운 경주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81
매 체 명	한 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강 영 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5. 2면 3. 27. 5면 2000. 3. 28. 3면	소 재 지	제주시 삼도1동 568-1
기 사 제 목	『법에 의한 통치로 수권정당 달성』 『원희룡 변호사 출판기념회 열려』, 『“국민 바라는 정치할 터”』 『원희룡 위원장 후원회 성황』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제주출신으로 서울 양천갑구에 출마할 예정인 한나라당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원희룡 씨의 방송연설, 출판기념회, 인터뷰 후원회 등에 대해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한나라당 서울 양천갑 선거구 원희룡 후보의 방송연설내용,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 관련소식, 인터뷰 등을 일자를 달리하며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것은 한라일보의 주 배포지역이 제주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8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제주시 삼도 1동 568-1
대표이사 강 영 석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한라일보사가 발행하는 한라일보 2000. 3. 25.자 2면 『법에 의한 통치로 수권정당 달성』, 3. 27.자 5면 『원희룡 변호사 출판 기념회 열려』, 『“국민 바라는 정치할 터”』, 3. 28.자 3면 『원희룡 위원장 후원회 성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한라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서울 양천갑선거구 원희룡 후보 관련 소식을 3일에 걸쳐 4건의 기사를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한라일보 2000년 3월 25일 2면

법에 의한 통치로 수권정당 달성

386세대의 주자로서 제주출신으로 양천갑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양천갑지구당위원장 원희룡 변호사(36)는 24일 밤 10시 50분 MBC에 출연, 한나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법에 의한 통치를 이뤄나가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원위원장은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 입법·사법·행정부간 3권분립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

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함으로써 권력기관의 정권도구화를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원위원장은 또 “세무조사의 남용은 방지되어야 하며 조사대상 선정도 확률적 표본추출방식을 도입, 표적조사를 막는 등 세무조사대상 선정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중앙인사위원회에 지역 편중인사를 억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모든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야 한다고 밝힌 원위원장은 “국회의 국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원법을 개정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 고위공직자의 주식, 부동산투

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2000년 3월 27일 5면

원희룡변호사 출판기념회 열려

원희룡 변호사(한나라당 서울 양천갑 지구당위원장)는 25일 오후 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에서 ‘우리들의 세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출판기념회는 한나라당 현경대·변정일 국회의원, 양치종 전 제주도교육감,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고영섭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영훈 제주도의회의원을 비롯, 고교동문·

은사·총선출마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변호사는 이 책에서 학력고사와 사법시험 전국수석 합격의 영광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좌절·방황 등에 대한 심정을 소상히 써내려가고 있다.

원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의 세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정치할 터”

“이번 출판기념회에 범도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4·13총선에서 서울 양천갑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후보(36·한나라당)는 이번 출판기념회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다른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동기를 밝혔다.

원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

고 자신감을 보인 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재경 제주도민들이 자기 집안일처럼 나서주고 있어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후보는 현 정치권의 문제점에 대해 “각종 권력기관들에 의해 인사청문회와 국회법 등이 악용되고 있다”며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정치권을 개혁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변호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학력고사와 사법시험에서 전국수석합격 등을 차지했으며, 대표적인 386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라일보 2000년 3월 28일 3면

원희룡위원장 후원회 성황

한나라당 양천구 갑지구당 원희룡 위원장(36·서귀포출신)을 위한 후원회가 27일 서울 한국방

송회관 3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후원회에는 이회창 총재, 강창성 부총재, 박세환·김영선 의원, 임명진 후원회장, 홍성문 지구당고문, 심규진 선거대책위원장, 이훈구 양천구의회의장 등 당직자와 당원

및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흔히 정치를 욕하고 진흙탕이라고 폄하하지만, 정치권 안에 숨겨진 구슬도 많다”며 “새정치는 이런 구슬들을 꿰어 빛을 발하게 하고 나라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원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임후원회장은 “원위원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수석을 몇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간 됬됨이를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계산없이 자신을 희생

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원위원장이 대입과 사시에서 수석합격 했듯이 정치에서도 수석을 차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대는 개인 자체에 대한 믿음과 기대라기 보다 넓은 정치 타파하고 새희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13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한나라당을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95
매 체 명	광 주 타 임 스	언 론 사 대 표	박 성 호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 3면	소 재 지	광주시 남구 사동 84-6
기 사 제 목	'태평양 건너 선거지원' 천용택 후보 미주후원장 귀국.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천용택 후보(전남 강진·완도)의 미주후원회 회장이 천후보의 선거지원을 위해 귀국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미주후원회장이 선거지원을 위해 귀국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같은 지역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9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타임스신문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광주타임스신문사가 발행하는 광주타임스 2000. 4. 1.자 3면 『‘태평양’ 건너 선거지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광주타임스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강진·완도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천용택 후보의 ‘압승을 돕기 위해’ 귀국했다는 미주후원회장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천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주장과 천후보의 후원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 등을 소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광주타임스 2000년 4월 1일 3면

‘태평양’ 건너 선거지원

민주당 강진·완도 천용택 후보의 미주후원회 차종환 회장(65·UCLA연구교수) 등 후원회 임원들이 천후보의 압승을 돕기 위해 귀국,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진·완도선거구는 민주당 천후보와 무소속 이영호 후보 등 완도출신 2명이 출마하고 있으며, 천후보측은 당선이 확실하다는 판단아래 전

국 최다득표율을 목표로 투표율 높이기엔 고심하고 있다.

차회장은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서 천후보는 호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굳이 천후보 지원에 나선 것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한명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도록 한표라도

더 얻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고 말했다.

차회장은 천후보의 미주후원회장을 맡게된 동기에 대해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라면서 “천장관 개인보다는 천장관이 대북 포용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해 후

원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회장은 “한국의 선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지원하려고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향인 목리(강진읍)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시국 얘기를 하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96
매 체 명	경기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홍 성 훈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31. 1면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3-13
기 사 제 목	한나라, 인천지역총공세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이 3월 30일 인천지역 전역에서 정당연설회를 갖고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는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3월 29일 있었던 여야 3당의 경기·인천 지역 정당연설회 관련 내용(3면)을 소개하면서 1면에는 3월 30일 있었던 한나라당 인천지역 연설회 내용만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특정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9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기도민일보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3-13
대표이사 홍 성 훈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기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경기도민일보 2000. 3. 31.자 1면 『한나라, 인천지역 총공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기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인천지역 정당연설회 관련소식만을 별도로 사진과 함께 1면에 부각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기도민일보 2000년 3월 31일 1면

한나라, 인천지역 총공세

한나라당이 인천지역 공세에 나섰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0일 오후 인천 서·강화갑선거구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전역에서 정당연설회를 갖고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이총재는 석남동 체육공원과 계산시장, 롯데백화점 부평점 광장, 부평시장, 만수시장, 모래내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신포시장, 옥련시장 등을 돌며 주부 및 상인들에게 『새천년의 주역도시인 인천에서 한나라당을 압승시켜달라』며 지지

를 호소했다.

조진형 부평갑 후보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광장에서 열린 부평갑·을 정당연설회에서 『이번 선거는 김대중 정권의 중간평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부평주민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후보는 이회창 총재와 박세환·김홍신·안상수·이윤성 의원과 당원과 주민 등 1천5백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가진 연설회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찰을 일으키고 청와대 내에서 마찰이

가중되는 등 국정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똑같이 우습게 알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특히 대우가 해외에 매각되면 부평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진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3선의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한표를 부탁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97
매 체 명	경 인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장 병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 3면	소 재 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990-25
기 사 제 목	“송탄을 되찾자” 독립선언!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평택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한수 후보의 출마변과 개인 프로필을 보도하고 송탄지역 유권자 결집 필요성을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정견과 프로필을 보도하고 특정지역 유권자의 표결집을 유도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9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인매일신문사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990-25
대표이사 장 병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인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0. 4. 1.자 3면 『“송탄을 되찾자” 독립선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출마
의변, 공약 등을 부각·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
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
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인매일 2000년 4월 1일 3면

“송탄을 되찾자” 독립 선언!

윤한수 후보 “잘못된 통합정치에 의한 통합된 송탄 되찾겠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잘못 된 통합정치 논리에 의해 통합된 송탄을 되찾기 위해 이번 4·13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다”라는 평택갑선거구 무소속 윤한수 후보의 출마의 변이다.

특히 윤한수 후보는 선거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을 선임하지 않고 송탄독립을 원하는 송탄시민 전체를 선대본부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후보는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는 잘못된 통합을 바로잡기위해 선거공약 자체를 되찾아야 한다는 신념하나로 송탄의 독립군, 해방군으로 입성할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윤후보는 5년 전인 지난 95년 5월 10일 평택시

와 송탄시, 평택군의 3개시·군이 통합될 당시 통합반대추진위원회 상임고문으로서 통합반대를 외치며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인 인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도 통합은 잘못된 것이며 송탄시민을 무시한 정치논리에 의한 통합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후보 선거캠프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현재의 지지율을 20%로 보고있으며 통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선거 이슈가 아닌 송탄을 왜 되찾아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지지율을 35%까지 끌어 올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송탄의 독립군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송탄을 되찾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윤후보는 진위면과 서탄면을 단일시로 하고 세교동과 통복동을 평택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송탄을 부활시키겠다는 일관된 공약을 호

소하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어 유권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작용할지에 따라 당락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98
매 체 명	대 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윤 종 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3. 5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
기 사 제 목	“내가 盟主”李총재 - JP 충청권 불꽃 격돌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대전지역 합동 정당 연설회에 당 단일행사로는 최대규모인 5천여 명이 몰렸다고 보도하고 사진도 민주당 연설회 사진 한 장만을 게재.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표발현장 스케치기사 14건 중 4건을 민주당 기사로 채우면서 민주당 이외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 사진은 실지 않아 형평성을 잃음(위 관련 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9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

대표이사 윤 종 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0. 4. 3.자 5면 『“내가盟主”李총재 - JP 충청권 불꽃격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대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유세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의 정당연설회 사진만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타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대전일보 2000년 4월 3일 5면

“내가盟主”李총재 - JP 충청권 불꽃 격돌

선거운동 百人百色

충청권서 유세대결

○...공주·연기선거구에 10명에 달하는 출마자가 나서면서 지구당 위치나 지구당 운영방식도 가지가지.

도심차량 통행이 많은데다 눈에 잘 띄는 공주 지역 舊터미널 부근 3거리에는 한국신당 金高盛 후보와 무소속 吳哲洙 후보의 선거캠프가 겹어서 다섯 발자국 거리에 있을 정도로 붙어있으며 무소속 尹完重 후보도 바로 인근에 있어 사무실 위치에 따른 홍보효과를 기대한 후보자의 전력을 실감.

반면 선거법 개정으로 공주시에 편입된 연기군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연기출신 후보들이 떠나없이 공주로 지구당을 옮겼으나 민국당 朴熙富 후보는 유독 연기지구당 사수를 내세우며 조치원에 사무실을 존치하고 공주에는 연락사무소만 가동.

○...충청도 고향론을 내세우며 4·13총선에서 공약과 수성전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와 자민련 金鍾泌 명예총재가 3일 충청지역에서 공식 선거운동 돌입후 첫 맞대결.

한나라당 李총재는 3일 오전 10시 조치원역에서 열리는 공주·연기지구당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천안, 온양, 예산, 홍성, 서산, 당진 등 충청권 8개 지역 마라톤 유세에 나설 예정.

金鍾泌 명예총재도 지난 1일 아산, 예산, 공주를 방문한데 이어 3일에는 보령과 논산, 대전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지만 양당 스케줄이 없어 안타깝게도 양자간의 진검승부는 못볼 듯.

공약 성실실천 다짐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데 1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 지역 정당연설회에서 연설자들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 연설에 나선 韓和甲 지도위원은 『충청권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 대전지역 각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당부하며 대전지역 공약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

동구 宋天永 후보는 『대전지역은 동구발전이 낙후된데다 중구의 도심공동화, 무리한 지하철 건설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7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서 관통도로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과력.

이어 서갑의 朴炳錫 후보는 각 당을 주석에 빗대 『한나라당은 IMF로 인해 빚만 남긴 실권주고 자민련은 계좌만 있고 돈이 없는 강통계좌』라고 몰아붙이고 『대전이 낙후된 원인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힘과 책임을 잃어지고 있는 여당후보들을 밀어줄 것을 강조.

서울의 南在斗 후보는 『정치불신과 지역감정 등 정치판의 구태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선거혁명을 이뤄내자』고 역설하고 『특히 대전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청을 둔산에 유치하겠다』고 정책대안을 제시.

유성의 宋錫贊 후보는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준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기존의 낡고 썩은 정치를 뿌리뽑고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

5천여 청중 운집

0...이날 민주당 대전지역 합동정당연설회는 5천여 명이 몰려 민주당 단일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

행사장에서 6개 지구당 후보들은 유세차량 10

여대와 수백개의 피켓을 준비해 충청권에서의 단합된 힘을 과시했으며 연단에 오른 후보들이 연설할 때마다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필승을 다짐.

행사장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대전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후보들이 여의도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으며 金鍾泌 명예총재나 자민련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자민련과 한나라당 지구당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후보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으며 문제점을 개선해 3일과 10일 개최될 예정인 자당 정당연설회에서 적용하겠다고 귀뜸.

‘대덕당’ 소속 勢과시

0...대전 대덕의 무소속 李麟求 후보는 1일 오후 중리초등학교에서 대규모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

이날 연설회엔 오덕균 前 충남대총장 및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서윤관 前 국회의원의 지구당위원장, 이원욱 시의원, 여운상 시의원, 신현배 대덕구의회의장과 당원 및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

연설에 나선 李후보는 무소속 출마 배경 및 내각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 지역정서를 무시한 공천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덕발전 공약 및 4개항의 공명선거 의지를 선언.

이날 李후보는 『대덕구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자민련을 탈당하고 우리 진영에 합류하는 등 관내 웬만한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는 만큼 나는 무소속이 아니라 「대덕당」소속』이라며 세를 과시.

지역발전공약 제시

0...2일 금산읍 제원사거리에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의 첫 정당연설회를 가진 李仁濟후보는 찬조연설회와는 달리 한방대학설립과 인삼축제 국제적 활성화, 대전-추부 및 대전-대둔산 구간 도로확장 등 지역공약을 집중제시.

李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8억원 규모

의 꽃박람회를 일약 80억 규모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금산의 인삼축제도 국가차원의 지원을 끌어내 주한외교사절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혀 큰 호응.

李후보는 또한 「젊은 대통령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李仁濟가 속고 있다고 하는데 남을 속이거나 속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항간의 차기 대권주자 「烹」설을 일축하며 지지와 박수를 유도.

이에 앞서李위원장은 31일 충북 보은, 청원, 청주흥덕, 대전, 공주, 연기지역을 순회한데 이어 논산 상월, 연산, 벌곡, 양초에서의 거리유세 등 10차례 이상의 연설을 강행, 충청권 대장정의 의욕을 과시.

“부자 세습” 맹공

○…한국신당 金龍煥 후보는 1일 충남 공주시 산성동구터미널 앞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이 지역 총선 출마자인 자민련 모 후보를 겨냥해 『아버지에게 아들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공산주의에서는 몰라도 세상 어느 곳을 찾아 봐도 없다』며 부자 세습을 맹공.

金후보는 이 지역이 자민련 텃밭임을 의식, 『JP는 DJ와 2년간 짝짝이가 돼 권력과 영화를 누려 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각제 운운하며 자민련 후보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질타.

金후보는 『충청인과의 약속을 저버린 JP시대를 우리 충청인이 나서 마감해야한다』며 『충청도 한바지 시대를 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벤처신당인 한국신당을 적극 밀어 줘야 한다』고 역설. 한편 이날 정당연설회에는 청중이 2백여명에 불과, 쓸렁한 분위기를 연출.

약점 방어 진땀흘려

○…1일 오후 충남 당진 총선시민연대에서 주최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여야후보들은 패널들로부터 과거 경력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

자민련 金顯煜 후보는 한보철강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관련 『처음엔 안받으려고 거절했으나 사무실에 놓고 가는 바람에 지역업체와의 관계개선 등을 고려해 좋은 일에 쓰려고 선친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해명.

민주당 宋榮珍 후보는 14대 총선 당시 투표종사원과의 폭행사건에 대해 질의받고 『당시 그 사람이 특정후보에 유리한 행동을 하려고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생긴 일이며 결코 폭행하지 않았다』고 설명.

또 한나라당 鄭石來 후보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이 도로에 인접돼 차량 및 인원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근 주민 및 군청과 잘 협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한편 이날 한국신당 崔茂雄 후보는 『출마를 늦게 하는 바람에 미처 토론회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해명사를 보내고 불참.

공천문제 일제공격

○…한나라당 李珍求·민주당 李元昌·자민련 元喆熹·한국신당 李相晩 후보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방영된 대전문화방송 주최 아산 지역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는 자민련 元후보의 공천을 싸고 3당 후보가 맹공.

자민련 공천탈락후 한국신당으로 말을 갈아탄 李相晩 후보는 『공천심사전에 나는 지역구출마를, 元씨는 전국구행을 각각 사전조율했다』고 주장한 뒤 『지구당 당원간 경선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당과 元씨가 뒤집었다』며 자민련과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공격.

한나라당 李珍求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상향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농협비리에 연루된 元후보는 국민 앞에 비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민주당 李元昌 후보는 『1심에서 2년6개월에 3년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공당에서 공천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

이에대해 元후보는 『李相晩 후보의 「지역구 전국구 사전조율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며 지구당 소수의 당원에 의한 경선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농협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반박.

票心잡기 본격화

0...1일 오후 충북 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제 천·단양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여야 후보들은 「지역 발전론」과 「공동정권 심판론」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주력.

민주당 李根圭 후보는 「국가를 부도낸 한나라당과 언제 없어질 지도 모를 야당인 자민련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단양 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호소.

자민련 宋光浩 후보는 「지난 15대 총선 낙선 이후 4년 동안 오늘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다」며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관광 단양 발전을 위해 국정 경험이있는 나를 다시 한번 뽑아 달라」고 강조.

한나라당 嚴泰永 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난 2년간 거짓말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공동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도덕성을 갖춘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

민국당 元熙常 후보는 「오늘날의 국가 위기 상황은 구태에 빠진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새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 무소속 權熙京 후보는 「단양을 꽃도시, 전원도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

“내가 국회의원 적임”

0...1일 오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보은·옥천·영동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

무소속 魚浚善 후보는 「나는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검증된 경제 전문가이므로 나를 뽑아야 나라가 부패하지 않는다」며 지지를 유도. 자민련 朴俊炳 후보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정치 경륜이 있는 후보인 나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

한나라당 沈揆喆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는 신선한 후보는 오직 나 한 사람」이라며 「신선한 정치를 펼 수 있는 자신에게 지지를 몰아 달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민주당 李龍熙 후보는 세계 태권도 공원을 보은에 유치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 뒤 「기필코 세계 태권도 공원을 보은에 유치, 보은주민들의 숙원을 풀어 주겠다」고 강조.

“市長 내편” 서로 주장

0...1일 오후 충주시 교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충주시 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은 각각 추시종 충주시장의 지지세력을 의식, 당선이 되면 이시장과 힘을 합쳐 일하겠다고 약속.

자민련 金善吉 후보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임시 「쌍굴이 문제」와 관련, 「현 정권과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관자리를 내놓고 속죄양이 됐다」면서 「이것이 선비의 길이요 충청도 양반이 할 일이요 군자의 길」이라고 주장.

민주당 李源性 후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면서 「힘과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정치를 버리겠다」고 지지를 호소.

한나라당 韓昌熙 후보는 「나는 중풍 밖에 모르는데 현 정권이 총풍이니, 세풍이니 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축제의 장인 만큼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비록 낙선하더라도 한창 희를 도와 달라」고 해 청중들의 웃음을 사기도.

선관위에 강력항의

0...민주당 대전시선거대책본부는 2일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난 30일 발생한 선거부정감시단 金모씨 폭행사건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 鄭모씨를 사실확인도 없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선관위에 강력 항의.

선대본부는 이날 폭행사건을 일으킨 鄭씨는 지난 2월 12일 朴炳錫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서 물리적 방해로 기자회견을 중단케한 뒤 탈당해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구나 선거운동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선대본부는 또 피해자를 자처하는 金모씨가 타당에서 추천한 감시단원으로 사건당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朴후보의 먹살을 잡는 등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해임을 강력 촉구.

후보들 깊은 관심

0...2일 오후 충남 홍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포성질병 현지대책회의」에는 4·13 총선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포성 가축질병(의사 구제역) 파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자민련 李完九 후보는 『오늘 대책회의에 당초 농림부 차관보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가 金成勳 장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 金장관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자신을 은근히 과시한 뒤 『이번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한다』고 金장관에게 주문.

李후보의 발언이 길어지자 민주당 朴鎭淳 후보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역의원이라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되느냐』며 공격. 두 후보가 이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자 한나라당 洪文杓 후보는 『대책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나서 두 후보의 격한 마음을 진정.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99
매 체 명	주간 내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최 영 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15면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4-9
기 사 제 목	“한화갑만 만나겠다”, ‘차세대 유망 정치인’ 과 친분 위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중국 행정관료와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비공식 면담일정, 주한 영국부대사의 박주선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방문사실 등을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 위반내용

특정 후보들이 외국 행정관료, 외교관을 만난 사실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9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내일신문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대표이사 최 영 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주간내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내일신문 2000. 3. 29.자 15면『“한화갑만 만나겠다”』
『“차세대 유망 정치인”과 친분 위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주간내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후보의 유력 외국인사 접촉 사실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 내일신문 2000년 3월 29일 15면

“한화갑만 만나겠다”

증경홍(曾慶紅) 중국 중앙조직부 부장 일행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 온다. 증부장은 강택민 중국주석의 오른팔로서 89년 상해에서 북경으로 진출한 이래 중국 당정 내부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인물. 그가 맡고 있는 중국중앙조

직부는 당과 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실력기관의 하나이다.

증부장은 또 조만간 당 정치국 정위원을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국가수뇌급으로 예우받으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증부장은 방한기간 동안 공식일정을 제외하고 민주당 한화갑 지도위원과만 비공식일정을 갖기로 했다. 한지도위원의 초청형식으로 4월 2일 이뤄질 이 만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최고 실력자이자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증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그와 교분을 맺기를 희망하는 여야의 숱한 인사들이 비공식 일정으로 그를 초청하였으나, 증부장은 이를 모두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한화갑 지

도위원만이 증부장과 비공식 일정을 갖게된 배경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지도위원을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꼽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지도위원측은 “그런 해석에 부담을 느낀다”며 “2월 중순에 중국 요녕대학의 명예교수로 위촉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중국외교에 노력하면서 맺어진 친분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부장과 함께 방한할 예정인 중국측 일행은 이성인·장백립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 유홍재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국장 등 13명이다.

‘차세대 유망 정치인’과 친분 위해

3월 21일 주한영국대사관의 데릭마시 부대사는 박주신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면담하기 위해 전남 보성을 방문했다.

크리스거스 정치담당 서기관과 함께 4·13총선 최대접전지역을 순회한 데릭마시 부대사는 박주신 전비서관에게 영국정부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질문하고 돌아갔다.

데릭마시 부대사는 이날 면담 중에 특히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지역주의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위력을 발휘한다면 이는 한국정치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데릭마시 부대사는 ‘무소속 출마자가 특정당의 텃밭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자금이 문제 아니겠느냐’는 등 한국의 선거풍토를 깊숙이 분석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50년만에 정권교체

를 이룬 이후 이 지역 유권자들도 이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 등의 탈당과 젊은 유권자들의 개혁바람이 불고 있어 지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87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법학부에 유학하고 법무비서관 시절에도 영국정부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해왔다.

영국대사관의 일행이 박 비서관을 면담한 배경에 이같은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국대사관측은 “단순한 친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차기 유망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릭마시 부대사도 면담결과 “박 전 비서관은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화려하고 용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0
매 체 명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최 영 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7면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4-9
기 사 제 목	“한우와 쌀은 지켜야 한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자민련 길재 지구당 오민수 위원장의 출마변과 정책대안을 사진과 함께 인터뷰기사로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를 전면 기사로 부각시킴으로써 동일지역의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내일신문사(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대표이사 최 영 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주간내일신문사(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가 발행하는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2000. 3. 29.자 7면 『“한우와 쌀은 지켜야 한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주간내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후보의 정견, 출마동기 등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

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2000년 3월 29일 7면

“한우와 쌀은 지켜야 한다”

자민련 오민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지구당개편 대회를 시작으로 총선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편 대회에서는 오민수 한우협회 김제시지부장을 새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편대회는 김종필 명예총재를 비롯, 황산성 부총재, 변웅전 선대위 대변인, 이규석 전국 한우협회장, 김광수 도지부장 등 중앙당직자 및 시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오위원장은 “농촌경제를 바로 세우고 국가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위원장은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농공단지 활성화·교육문제 등 김제시 현안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위원장은 지난 70년대 민주한국당 유지송 총재 보좌관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87년에는 평민당 전북 선거대책위원, 김대중 후보 유세부장 등을 역임했다.

88년도는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중앙당 농촌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자민련 김제지구당 위원장 및 신공항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마 배경을 말해달라.

개인적 출세를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전형적인 농촌도시 김제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

■당적을 많이 바꾸었는데

13대 이후 정치의식이 깨졌다. 초야에 묻혀 생활하던 중 농촌 현실에 대해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 지금 우리 농촌은 황폐화되었다.

당적을 많이 바꾼 것은 농촌에 이득이 있는 당에 옮겨 그렇게 되었다.

■소고기 수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다. 소고기 수입이 2001년도에 개방되고 쌀이 2004년도에 개방되면 우리 농촌이 무너진다. 한우가 무너지면 축산이 무너지고 쌀이 개방되면 농촌이 무너진다. 소고기 수입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촌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붕괴된다.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먹고살아야 한다.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면 나중에 가격을 올려도 할말이 없어진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우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한우는 우리 민족 역사와 함께 했다. 한우번은 지금도 가장 큰 비료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도 한우는 농촌 재산목록 1호다. 예전에는 한우 3마리만 있으면 딸 시집보냈다. 한우와 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농촌기반이 설 수 있다.

■김제 축산농가는 얼마나 되는가.

축산농가는 6만7천8백27명이다. 한우는 3,216농가에서 기르고 있다.

■농가부채 탕감과 그 비전에 대해 말해달라.

전체 농가중 90%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로 인한 농가파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농정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농정공약의 조기에 행과 WTO 이행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해 우리 농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강행했던 점 ▲신공항 부지의 선정문제 ▲대학주변 ▲자연생태계 파괴 ▲이농현상 등이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은 또하나의 지역 희생이다.

■김종필 명예총재와 관계는.

꿋속말을 하는 관계이다. 87년 11월 24일 김종필 명예총재와 만났다. 현재까지도 자민련 농정특보를 맡아 근거리에서 총재를 보좌하고 있다.

■선거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지역세가 확연해 어렵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어 승산이 있다. 농촌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실천하는 일꾼, 농토를 살릴 일꾼'이라는 신념으로 뛰겠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1
매 체 명	일 요 서 울	언 론 사 대 표	이 건 영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6. 11면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5-1
기 사 제 목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자료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이 민주당관련 병역의혹자료라며 3월21일 공개한 명단자료를 현역국회의원의 성명과 총선출마지역, 병역처분사유 등을 명시하여 도표로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한나라당이 공개한,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 자료'를 도표와 함께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해당 정당과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5-1

대표이사 이 건 영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일요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일요서울 2000. 4. 6.자 11면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자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일요서울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정후보들의 병역의혹 자료를 보도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거명된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3조(객관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요서울 2000년 4월 6일 11면

**한나라당, 민주의원 관련
의혹대상자 17명 전격공개**

지난 21일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병역의혹 자료의 공개는 일파만파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 참

고자료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병역의혹 자료가 발표되자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발표 자료에는 반부패연대자료를 근거로 민주당 의원 및 아들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병역의혹 자료에서 반부패연대 자료라고 밝힌 9명의 의원 및 아들 가

운데 반부패연대의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라고 밝혔다. 국창근 의원 관련 부분이 반부패연대 자료에 나와 있을 뿐 나머지 8명은 반부패연대 자료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공개한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 의혹 자료’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고발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2
매 체 명	중 앙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금 창 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6. 5면	소 재 지	서울 중구 순화동 7
기 사 제 목	現役들 뒷심 만만찮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일 실시한 여·야간 선거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당별 지지율과 격전지 42곳의 판세 분석을 도표로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

• 위반내용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기 규정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 창 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0. 4. 6.자 5면 『現役들 뒷심 만만찮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중앙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한편, “지지율 5%이내의 치열한 접전”, “오차범위긴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특정후보들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 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중앙일보 2000년 4월 6일 5면

現役들 뒷심 만만찮아

법정 선거운동(3월 28일~4월 12일)이 시작된 이후 격전지의 선거판세가 후보들이 처한 조건과 선거운동 방식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현재 지지율 5% 이내의 치열한 접전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약 40여 곳. 4일 실시한 여야간 선거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론’ 47.6%에 ‘견제론’은 36.5%로 이 기준으로만 보면 여당이 더 유리한 것 같다.

정당지지율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만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다소 높다는 것이 각당 판세

전문가들과 본지 취재를 종합한 분석이다(인천·경기는 엇비슷). 때문에 외견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당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합된 격전지 40여 곳의 판세변화를 보면 ‘민주당후보=약진, 야당후보=상대적 정체’라는 도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무리다.

정당지지율과 별개로 후보 개개인이 각개약진하는 판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

개인의 조직력·자금력·전과기록·시민단체의 낙천대상 여부 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정선거운동 직전까지 열세경합 또는 경합으로 분류되던 각당의 현역의원들과 지구당 관리를 오래한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운동이 본격화하자 조직·자금 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지지세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율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게 각당의 분석이다. 민주당후보들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에서 민주당·한나라당의 양자대결구도로 인해 가리워져 있던 허남훈(평택을)·박신원(오산·화성)·이건개(구리) 후보 등 자민련 현역의원들이 조직가동 이후 팽팽한 3자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한나라당 정서가 더 강한 강원도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민국당의 한승수(춘천)·자민련의 조일현(홍천·횡성)·김기수(영월·평창)·민주당의 김택기(태백·정선)후보 등이 조직가동 이후 당 지지율의 열세를 서서히 극복해가는 중이다.

충청권에서는 JP바람을 조직력으로 힘겹게 막아 내고 있는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신경식(청원)·성무용(천안갑) 후보 등이 눈에 띈다.

울산에서는 무소속의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텃밭에서의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세를 얻어가고 있고, 경북에서는 민국당의 이수성(칠곡) 후보의 추격세가 빠르며, 구미에서도 김운환 후보가 기세를 회복 중이다.

종합하면 경합지에서는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판단이다.

그외 총선연대의 집중 낙선후보로 지목된 민주당의 이종찬(종로)·한나라당의 김종위(강동을) 후보 등이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고, 경기 원미울의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낙천대상에 포함된 후 민주당 배기선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또한 서산·태안은 자민련 한영수 후보에 맞서 민주당 문석호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남은 기간 중 제기될 후보검증은 지금의 판세를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적전지 42곳 판세 분석표									
서울					경기				
지역구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기타	지역구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기타
종로	정인봉 ↑	이종찬 ●	김경환	(여의구국) 양현수(노)	부천 원미울	이사철 ▲	배기선 ▲	김선관	
성동	박성범 ▲	정대철 ▲	최말환		광명	손학규 ●	조세형 ↑	김지주	
성동	이세기 ▲	임종석 ↑	안승근	이문웅(국) 김형관(무)	평택 을	이지현 ▲	정장선 ▲	허남훈 ▲	
종로 갑	김영춘 ▲	김상우 ▲	박영진		고양 일산 갑	오양순 ▲	정범구 ▲	이택석 ↑	설진성(국)
동대문 을	김영구 ●	허인화 ↑	권승욱		오산·화성	정창현 ▲	김성구 ▲	박신원 ▲	
성북 을	강성재 ↑	신계환 ●	김지운		시흥	정경우 ▲	박영운 ▲	김의자	
서대문 갑	이성현 ●	우성호 ↑	이의달	이동우(국)	광주	박희규 ▲	문학진 ▲	김장수	죽인석(국)
마포 갑	박명환 ●	김문대 ↑	이종순	전영현(국)	이천	황규선 ●	이희규 ↑	유종렬	이한정(국)
마포 을	박주천 ●	함수관 ↑	장덕현	김세관(국)	가평·양평	정병국 ▲	김길환 ▲	홍성표	
양천 갑	권현통 ●	박영진 ↑	김도영	강동우(국)	강원				
금천	이우재 ●	장성민 ↑	유지준	최규영(노)	춘천	유종수 ▲	이상룡 ↑	한승수(국) ▲	이용범, 최동철(무)
부산					태백·정선	박우영 ↑	김택기 ▲	최승진	
북강서 을	허태열 ↑	노무현 ●	김문자	윤정수(국)	홍천·횡성	황영철 ▲	유지규 ▲	조일현 ▲	
인천					영월·평창	김용희 ▲	엄동렬 ▲	김기수 ▲	
연수	함우애 ▲	서한성 ▲	정한용		충북				
남 갑	민봉기 ▲	유필우 ▲	정의성	박우섭(무)	청주 흥덕	윤경식 ▲	노영민 ▲	조성훈 ↑	
부평 갑	조진형 ▲	박성규 ▲	이용기	조창용(국)	청원	신경식 ▲	정종택 ▲	오종진 ▲	홍성래(선) 김기영(무)
서강화 을	이경자 ↑	박영호 ●			보은·옥천·영동	심규철 ▲	이용희 ▲	백경영 ●	여준선(무) ↑
울산					충남				
중	김태호 ▲	문병영		유송근(국) 송철호(무) ▲	천안 갑	성우용 ▲	전종화 ↑	정일영 ▲	최덕천(국)
경기					공주·연기	이성재 ▲	임재길 ↑	정진석 ▲	박형배(국) 김고성(선)
수원 장안	박종현 ▲	김홍동 ●	이대성 ↑	이대외(국)	서산·태안	정기욱	문서호 ●	한영수 ↑	
성남 분당 갑	고홍길 ▲	강봉균 ▲	강대기	양재현(국)	제주				
성남 분당 을	임태희 ▲	이상철 ▲	오세웅		북제주	양정규 ●	정정연 ▲	강동찬	김호민(국)
안양 만안	박종근 ▲	이종길 ▲	김일주	강대선(국)	서귀포·남제주	변정일 ▲	고진부 ▲	조한필(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이세기(성동)·김영구(동대문을)·이성현(서대문갑)·박명환(마포갑)·박주천(마포을)·이우재(금천) 후보 등이 여전히 오차범위권이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서울에서의 낮은 한나라당 지지율을 조직력 등으로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이들과 경합하는 386후보들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경기도를 보면 분당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두배 가량이나 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갑(한나라당 고홍길-민주당 강봉균)·을(임태희-이상철)에서 한나라당·민주당후보간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3
매 체 명	경 남 신 문	언 론 사 대 표	이 문 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3. 2면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기 사 제 목	“총선후 당권에 도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마산회원)이 2일 합동연설회에서 총선 후에 당권에 도전한다는 연설 내용을 별도의 상자기사로 사진과 함께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연설내용과 정견, 경력 및 전망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동일지역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이 문 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0. 4. 3.자 2면 『“총선후 당권에 도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남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마산회원 지역구에 출마한 강삼재 의원의 정견, 경력 등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남신문 2000년 4월 3일 2면

“총선후 당권에 도전”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마산회원·사진)은 2일 합동연설회에서 『20년전 야당총재가 되어 한국 정치의 주역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번 총선이 끝나면 지킬것』이라고 밝혀 총선이후 5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2시 석전초등학교에서 강 의원은 『야당총재도 정상을 향한 도전의 시작일 뿐, 더 큰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날이 다가왔다』며 『그 험한 대장정의 출발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해 차세대 뉴리드로 당권에 이른 대권 도전까지 시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신을 키워준 시민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강조한 뒤, 『강삼재의 정치가 어떻게 불타는지, 마산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불

타오르는지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하며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발언은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총선용 득표차원에서 「대권도전」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선당권 후대권」이란 포부를 밝히고 있어 총선이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총선과 맞물려 대권이란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적 역정을 볼 때 이같은 언급은 중요한 시기에 총장직을 2번이나 지내며, 「전국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놓았다는 점과 40대에 5선도전은 향후 정치적 목표가 어디까지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영국, 러시아 등 세계 정치의 흐름이 이미 40대 젊은 지도자쪽으로 기울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3김이후 세대교체를 이룰 젊은 정치적 주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강 의원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5
매 체 명	광 주 타 임 스	언 론 사 대 표	박 성 호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5. 2, 3면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84-6
기 사 제 목	‘민주당, 무소속 잠재우기’ 총력 ‘무소속 입당 절대 불허’ 강조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무소속 후보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정당의 유사한 정당연설회 내용을 2면, 3면에 거듭 소개하면서 해당 정당의 당직자들이 무소속 후보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여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타임스신문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별 첨

주 문 : (주)광주타임스신문사가 발행하는 광주타임스 2000. 4. 5.자 2면 『민주당, 무소속 잠재우기 총력』, 3면 『‘무소속 입당 절대 불허’ 강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광주타임스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민주당, 무소속 잠재우기 총력

민주당은 4일 곡성, 나주, 화순, 광주 정당 연설회를 통해 일부 친여 표방 무소속 후보들에게 더 이상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옥두 중앙당 사무총장은 이날 화순·나주 정당연설회와 광주 합동 유세를 통해 “당 총재인 김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정식으로 공천을 받은 당소속 후보들 뿐”이라며 “무소속 후보들은 더 이상 金心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총장은 특히 무소속의 강운태(광주 남구), 박주선(화순·보성), 이재근(나주) 후보 등을 겨냥,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설혹 이들이 당선후 입당한다고 해도 당 사무총장으로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화갑 전 사무총장도 이들 무소속 약진지역 정당 연설회에서 “당 총재인 김대통령이 여러모

로 판단해서 안심해도 될 만한 후보들을 골라 내보낸 것”이라고 공천배경을 설명하고 “이들 무소속 후보들이 진정으로 김대통령을 위한다면 낙선했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표를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공식선거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것이다. 이는 호남 지역의 무소속 표결집을 철저히 차단,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당연설회에는 김옥두, 한화갑, 전·현직 중앙당 사무총장 외에도 이만섭 상임고문, 이재정 당 정책위의장, 김동신 전육참총장, 최영희 전 여성단체연합회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고문 등은 이에 앞서 3일에도 여수·순천·보성·해남·목포 등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무소속 입당 절대 불허’ 강조

민주당 광주시지부는 4일 오후 2시 남구 광주공원 광장에서 6개 지구당 정당연설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정당연설회에는 이만섭 상임고문, 한화갑 호남선거대책본부장, 김옥두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직자와 광주지역 6명의 후보들을 비롯 2천여명의 유권자들이 참석했다.

이만섭 상임고문은 “김대통령 임기후반의 안정을 위해 뿔뿔 뿔쳐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 6명 모두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화갑 호남선거대책본부장도 “김대통령이 정계은퇴하고 탄압받을 당시 현재 이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은 호의호식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표를 줘서

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육두 사무총장은 “김대통령은 남구에 출마한 무소속 강모 후보보다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북풍을 막고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도운 임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임후보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6
매 체 명	일 간 경 복	언 론 사 대 표	윤 귀 병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4. 2, 3, 4면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7-2
기 사 제 목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선거대책회의 사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택시출근과 이총재가 김동근 농림부차관을 만나 ‘구제역’ 현황을 보고받는 사진 및 한나라당이 전과기록 대책을 협의하는 선거대책회의 사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특정 정당의 사진만을 게재하고 캡션 처리한 것은 특정정당에 편향된 편집 태도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남(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사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7-2
대표이사 윤 귀 병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일간경북신문사 발행하는 일간경북 2000. 4. 4.자 2면, 3면에 게재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관련사진』, 4면 『한나라당 선거대책회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일간경북신문사가 위 일자 신문에 특정정당 관련 사진을 3개 면에 걸쳐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5조(사진게재)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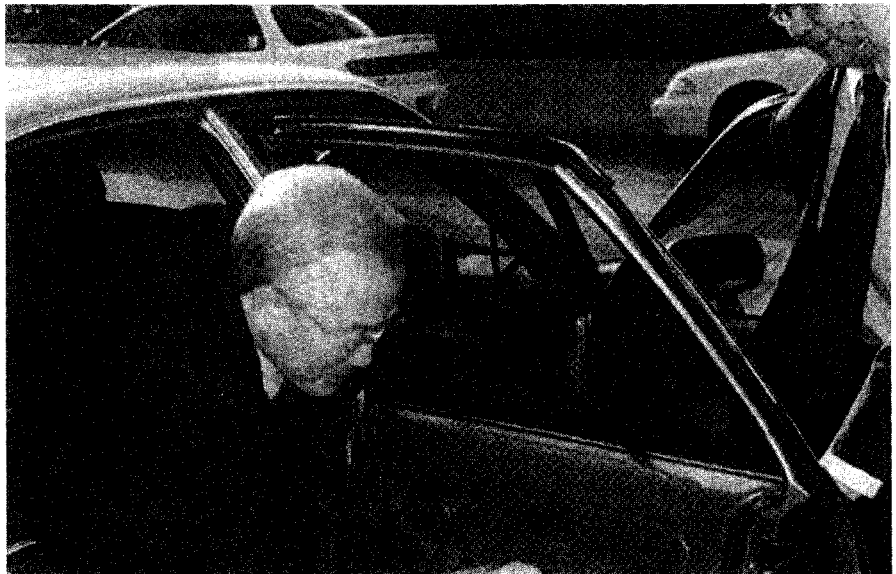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간경북 2000년 4월 4일 2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3일 오전 승용차 고장으로 택시를 이용,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평소 출근이 늦지 않는 이총재의 이날 택시출근으로 총재단회의가 10여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경북 2000년 4월 4일 3면

농림부 김동근 차관이 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방문, 확산되고있는 구제역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철저한 원인과 대응대응을 촉구하고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다.



일간경북 2000년 4월 4일 4면

한나라당 전과기록대책논의 - 한나라당은 3일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전과기록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이를 공개했을때 가짜울 파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 늦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7
매 체 명	전 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서 창 훈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5. 6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기 사 제 목	“도내 전지역 석권 제1당 확보 총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전북선대위가 ‘원-원전략’을 수립하고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균환 도지부장의 코멘트와 인물사진 게재.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특정 정당의 선대위 지부장의 인물 사진과 선거 전략만을 게재,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 등은 실지 않아 형평성을 잃어 위 관련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0. 4. 5.자 6면 『“도내 전지역 석권 제1당 확보 총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선대위의 총선 전략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일보 2000년 4월 5일 6면

“도내 전지역 석권 제1黨 확보 총력”

민주당 전북선대위(위원장 정균환 도지부장)가 16대 총선을 8일 앞두고 선거중반 비장의 카드를 빼들고 도내 전지역 석권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선대위는 4일 총선 필승을 위한 이른바 ‘원원전략’을 수립, 전력 투구에 나선 것.

민주당이 제시한 원원전략은 도내 10개 지역구를 전방위체제로 가동, 지역구에서 압승을 바탕으로 전국구와 수도권승리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바람물이 전술의 일환이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를위해 자체 판세분석 결과, 전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일부 경합지역에 대해선 집중지원을 통해 압승을 노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우려했던 친여성향 무소속과의 차별화전략 마련에 힘쓰면서 당선되더라도 입당불가 방침을 전명하고 무소속 바람을 잠재우

는데 진력중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후보들의 경륜과 중량감을 내세워 큰 인물론을 제시하는 한편 전북발전을 위한 여당 역할론을 적극 부각시켜 대대적인 세 물이에 나섰다.

또한 집권여당이 아직도 기호 2번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 제1당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득표율이 전국구의석 확보 및 충청, 수도권 세확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 한표라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균환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성패가 걸린 선거인 만큼 전북지역 득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고 “전북 압승바람을 이어 전국구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제1당 만들기에 혼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8
매 체 명	전북제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오 석 근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5. 5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기 사 제 목	“누가 여당? 야당” 아리송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구 후보인 정세균 의원이 자금과 조직면에서 야당의 이미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부각시킴.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여당후보인 정세균 의원이 자금과 조직의 열세분위기 속에서 ‘참신성’으로 오히려 야당후보처럼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의원을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전문가’,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팔목할만한 활동’, ‘깨끗한 이미지와 성실성이 최대의 장점’ 운운하며 찬양일변도로 부각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관련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제일신문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오 석 근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제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전북제일신문 2000. 4. 5.자 5면 『“누가 여당? 야당” 아리송』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전북제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의 의정 활동, 장점 등을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제일신문 2000년 4월 5일 5면

“누가여당? 야당”아리송

도내에서 여당이 야당처럼 선거를 치르는 곳이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공천을 일찌감치 마무리 지을 만큼 탄탄한 당내 기반과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활동을 평가 받고 있는 정세균 후보가 나선 무주·진안·장수 선거구가 그곳이다.

민주당의 아성에 이번은 없다는 자신감에 지역공약 이행률이 도내 최고라는 언론기관들의 평가를 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여유 있는 선거가 될것으로 확신 하지만 자민련 후보의 도전을 가볍게만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국가경제위기때 노사정위 간사를 맡아 성공적인 일처

리로 신임을 받는데 이어 시민단체의 15대 국회의원 평가에선 재경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중앙정치무대에서의 괄목할 만한 활동은 일찌감치 재공천 대열에 합류, 전북의 3정은 순풍에 돛을 다는 듯했다. 그러나 막강한 자금력과 숨은 조직력을 무기로 자민련의 김광수 후보가 전국구 대신 지역구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결코 방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 깨끗한 이미지와 성실성이 최대의 장점인 정후보에게 있어 김후보의 자금력과 조직력은 과거 집권 여당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흔히 여당하면 돈과 조직을 떠올리게 하는 반면 야당후보에게는 참신성과 함께 강력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만큼 정후보에게는 오히려 야당의 이미지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09
매 체 명	전 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문 수 기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5. 2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노송동 568-132
기 사 제 목	“지역발전·현안 해결에 최선”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김제지구의 무소속 최락도 후보가 개인연설회를 갖고 세몰이 확산에 나섰다라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개인연설회 관련 내용을 해당후보의 성명과 구호가 명시된 사진과 함께 상자기사로 부각해서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0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송동 568-132

대표이사 문 수 기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주일보 2000. 4. 5.자 2면 『“지역발전·현안 해결에 최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전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김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락도 후보의 개인 연설회를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주일보 2000년 4월 5일 2면

“지역발전·현안 해결에 최선”

최락도 후보(김제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금산면 원평천 둔치에서 개인연설회를 갖고 세뭉이 확산에 나섰다.

개그맨 엄용수 씨와 오금순 씨(김제농협 부녀회 회장), 오석균 씨 등이 찬조연사로 나선 이날 개인연설회에는 인근 주민등 5백여 명이 몰렸다.

엄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흉내내는 목소리로 가

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최후보의 지지를 호소 유권자들로부터 박수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최락도 후보는 개인연설회를 통해 “우리 김제 시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위대한 시민들이다”고 “과거 김영삼 정권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이를 결코 후회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는 위대한 김제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다.

특히 최후보는 “전주권 신공항문제와 백구생태
계공원조성문제의 해결없이 는 김제발전이 있을
수 없다”면서 “당선된 후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금산면 원평 장날인 탓인지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최후보의 인기를 실감
케 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1
매 체 명	주간 고향신문	언 론 사 대 표	한 형 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3면	소 재 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58-11
기 사 제 목	4·13총선 등록 실시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13총선 후보등록과 관련, 영덕지역에서 무소속 조원봉 후보가 맨 먼저 후보등록을 하였으며 발빠르게 유세전에 돌입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가 먼저 후보등록을 마쳤다는 내용과 해당 후보의 가두유세 내용을 각각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은 동일 지역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간고향신문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58-11
대표(발행인) 한 형 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간고향신문 2000. 3. 29.자 3면 『4·13총선 등록실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주간고향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청송·영덕·영양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원봉 후보의 후보등록사실과 유세 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 고향신문 2000년 3월 29일 3면

4·13총선 등록실시

4·13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등록일이 지난 28일 개시됨에 따라 영덕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았다. 맨 먼저 무소속의 조원봉 후보측과 한나라당 김찬우 후보측이 업무개시전에 도착해 추첨결과 조후보측이 먼저 등록을

실시했다. 2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게되는 영덕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8일 5명이 접수함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접수된 후보자는 이들 외에 민주당 윤영호 후보, 자민련 김원욱 후보, 민국당 이상도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조원봉 후보는 등록을 마치자 바로 강구장날을 이용해 유세전에 돌입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2
매 체 명	새 거 제	언 론 사 대 표	유 진 오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6. 5면	소 재 지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178
기 사 제 목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후보 지지”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4조(기사제목)

• 위반내용

민주당 거제시 위원장의 탈당배경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기사제목으로 보도하여 동일 선거구의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새거제신문사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178
대표(발행인) 유 진 오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새거제 2000. 4. 6.자 5면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지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새거제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의 탈당 배경, 행보 등을 소개하면서 서씨의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제목으로 달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14조(기사제목)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후보 지지”

서영철 전민주당 거제시지구당 위원장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이 한나라당 김기춘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공식선언했다.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61·전통영·고성군수)은 지난 28일 오후 거제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탈당 배경과 앞으로의 행보를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서 전 위원장은 민주당 탈당배경에 대해 『16대 총선은 거제시민에게 있어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선택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제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당과의 관계 악화가 아니라 자신은 애초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뜻이 없어 후보공천을 사양했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6일 지구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한 만큼, 나는 부담없는 입장에서 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 전위원장은 또 『이번 총선은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거제를 열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자신은 『경험과 역량을 고루 갖춘 지역의 참일꾼인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김기춘씨 지지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또 『이 결정에는 뜻을 같이했던 많은 동지들의 의견도 함께 담겨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서 전 위원장의 탈당에 앞서 이상영 전 민주당 사무국장(국회의원 보좌역)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대부분과 23명의 협의회장 가운데 22명이 이미 지난 24일 김기춘 후보진영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을 공식탈당한 서 전 위원장은 김기춘 후보진영에서 선거대책위 고문을 맡게 될 것으로 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3
매 체 명	리 빙 타임즈	언 론 사 대 표	장 기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4. 1면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9-3
기 사 제 목	오성수 전시장 ‘가석방’, 가석방 관심 초점 상당한 변수 될 듯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가석방되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분당지역의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석방은 성남시민의 정서를 반영, 분당지역에 출마한 여권 후보의 권유로 이루어졌다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리빙타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9-3
대표이사 장 기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리빙타임즈사가 발행하는 리빙타임즈 2000. 4. 4.자 1면 『오성수 전시장 ‘가석방’』, 『가석방 관심 초점 상당한 변수 될 듯』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리빙타임즈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오성수 전 성남시장의 ‘가석방’에 여권후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3조(객관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오성수 전시장 '가석방'

오성수 전 시장이 지난 1일 가석방되어 성남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민선시장 선거이후 뇌물수수의 죄명으로 구속돼 5년형이 확정, 복역중인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4·13기간중 이례적으로 가석방돼 향후 선거판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6대 총선에 영향력을 미칠정도로 성남시민에게 특별한 정서를 갖고 있는 오성수 전 성남시장의 가석방은 구시가지는 물론 분당 갑·을 두 지역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이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분당구에 출마한 여권후보가 이러한 성남시민의 정서를 파악, 정부 고위층에 오시장의 석방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권 후보자들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15대 총선 등 매년 선거때마다 한나라당

이 강세를 보여왔던 분당지역에 오 전 시장의 이례적인 가석방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현재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 투표율에서 분당갑의 경우 신한국당 13.29%, 국민회의 25%, 자민련 19.7%, 민주당 18.8%, 무소속 3.2%이었으며, 분당을은 신한국당 32.7%, 국민회의 26.4%, 자민련 19.1%, 민주당 19.1%, 무소속 2.5%를 차지, 한나라당이 두지역 모두 강세를 보였다.

특히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출마했던 98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15.3%, 국민회의 48%, 무소속의 오 전 시장이 36.8%를 획득한 바 있어 분당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오성수 전 시장은 현재 삼성의료원에 요양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면이 되지 않아 선거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5
매 체 명	한 겨 레	언 론 사 대 표	최 학 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0. 1, 3면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기 사 제 목	4·13총선 D-3 유권자 여론조사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국유권자 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로서 여당의 안정론 공감 47.4%, 야당의 견제론 등의 40.7% 등으로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

• 위반내용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어겨 특정정당이나 다른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 2000. 4. 10.자 1면, 3면 『4·13 총선 D-3 유권자여론조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한겨레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동 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반전과자 안찍겠다” 93%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의 병역과 납세실적, 전과기록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과 기록 중 ‘민주 전과’를 가진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8일 전국 유권자 700명을 지역별로 나눠 뽑아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3%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납세와 병역의혹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91.9%, 81.8%가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민주전과자’에 대해서는 ‘지지해서는 안된다’(28.3%)보다 ‘지지정당의 후보라면 가능한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훨씬 높게 나왔다. 또 유권자들의 54.6%는 민주전과 경력이 후보 지지율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민주 전과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 의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투표율은 대략 6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36.9%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해 부동층의 향배가 막판 선거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당의 안정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는 47.4%, 야당의 견제론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40.7%로, 안정론 지지가 견제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4%는 ‘매우 잘하거나 잘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43.8%는 ‘그저 그렇다’, 10.8%는 ‘매우 못하거나 못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 (후략)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7
매 체 명	경 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홍 남 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8. 1,3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기 사 제 목	‘김태호 죽이기’ 논란, “한치 잘못 있다면 정계은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검찰이 울산중구에 출마중인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아들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시킨 혐의를 잡고 소환을 통보하자 '김태호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로부터 송환통보 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를 '야당탄압',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해당후보의 입장을 2개 면에 걸쳐 집중보도함으로써 특정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홍 남 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하는 경상일보 2000. 4. 8자 1면 『'김태호 죽이기' 논란』, 3면 『"한 치 잘못 있다면 정계은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검·군 합동수사반이 아들 병역부정면제혐의로 한 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소환통보한데 대해 '김태호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야당탄압', '정치적 공작' 등의 김후보 반박내용을 2개 면에 걸쳐 중점게재한 것은 김태호 후보에 대한 편향적 보도라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김태호 죽이기’ 논란

4·13총선을 6일 앞둔 7일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 한나라당 중진 김태호 의원(울산중)의 소환을 전격 발표해 정부여당의 ‘김태호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이날 김태호 의원이 지난 96년초 셋째 아들의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시킨 혐의를 잡고 김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반은 또 김의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김의원 아들에게 신검시기를 조정해준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신용욱 씨(62·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같은 합수반 발표에 대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김대중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야당탄압과 김태호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대응했다.

김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지구당사 기자회견

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김태호를 낙선시켜 김대중 정권의 눈엣가시를 제거하고 친여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막바지에 행해지고 있는 음모에 속지 말자”면서 “선거 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만약 한치의 하자가 있다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14대 총선 때 낙선해 96년초에는 15대총선 준비에 전념했고, 총선이후에야 3남의 신검사실과 신검판정결과를 알게 됐다”며 “신용욱과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김의원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남이 8일 귀국, 출두할 것임을 검찰과 이미 약속한 상태”라며 “합수반이 서둘러 날조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나를 낙선시키고 친여 무소속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거듭주장했다.

“한치 잘못 있다면 정계은퇴”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4·13총선을 목전에 둔 7일 현역의원으로서 울산 중구에서 출마한 김태호 후보가 3남의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며 소환통보 사실을 전격발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태호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수반의 발표를 ‘김대중 정권의 검찰을 동원

한 야당탄압과 김태호 죽이기’로 규정하고 “한치의 하자라도 있을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후보는 정부 여당이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지난 2년여 동안 끌어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을 들어 이는 명백히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꾸민 것이라고 ‘선거막바지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후보는 또 검찰이 자신의 3남의 신체검사시기를 조정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신용욱씨(62)에 대해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 96년초에는 14대 총선에서 낙선해 지구당위원장 등 모든 직책을 떠나 15대 총선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96년 2월 신검판정기준이 강화되기전 청탁으로 9.50디옴터의 기록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합수반 발표내용에 대해 “날조된 허위사실이고, 나를 낙선시키고 친여무소속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신검전 병원시력 검사결과 양쪽 모두 10.00디옴터로 판정을 받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령은 고도근시의 경우 9.00디옴터 이상이면 병역면제 판정토록 돼있었으나 김의원 아들이 재신검을 받은 이틀후인 96년 2월 11일부

터는 면제기준이 10.00디옴터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의원은 또 합수반이 지난 4일 서울지검이나 선거구가 있는 울산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출마자가 사실여부를 떠나 검찰출두가 상대에게 악용될 우려가 높아 불응했을 뿐 선거 뒤 출두할 것을 약속했다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욱이 통보 2일만에 미국에 체류중인 아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직장생활로 어려운 만큼 8일 귀국해 소환에 응할 것을 밝혔으나 검찰이 오히려 10일 출두해 주도록 해놓고 아들의 귀국 전 마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또 3남이 귀국 뒤 뿔뿔하게 재신검을 받아 병역비리와 관계돼 있다는 모든 의혹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8
매 체 명	경 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홍 남 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0 1, 5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기 사 제 목	‘김태호 죽이기’ 중단 촉구.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울산 중구지구당이 8일 ‘김태호 죽이기 규탄대회’를 연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 등이 삭발을 하며 날조된 병역비리 공작을 중단토록 촉구했다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식발투쟁’을 동정적인 논조로 1면과 5면에 걸쳐 대서특필, 지역정서를 부추겨 오히려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주는 보도를 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연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홍 남 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하는 경상일보 2000. 4. 10.자 1면 『‘김태호 죽이기’ 중단 촉구』, 5면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 『“김태호 살리자” 1천여 지지자 연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김태호 후보에 대한 검·군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혐의 소환발표에 대해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로 보도하면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날조된 정치공작”, “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 등 김후보측 주장을 중점 게재한 것은 김태호 후보에 대한 편향적 보도라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상일보 2000년 4월 10일 1면

**‘김태호 죽이기’
중단 촉구**

한나라 울산중구지구당 식발 규탄대회 가져

한나라당 울산 중구지구당이 지난 8일 오후 3시 중구 성남동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호 죽이기 규탄대회’란 이름의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호 후보와 당소속 중구지역 시·구의원 등 19명이 삭발을 했으며, 김후보는 대회사에서 “지난 대선당시 당 사무총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현정권이 표적사정

1호로 지목, 지난 2년동안 김태호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며 “3남의 병역비리관련 발표는 허위 사실로 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김대중정권은 총선용·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등 3개항을 촉구한 뒤 시가지 일원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다.

경상일보 2000년 4월 10일 5면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

김태호 후보(한나라당·울산 중)와 3남에 대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비리혐의 소환발표에 대해 김후보측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며 김후보는 물론 김후보를 지지하는 중구내 시의원과 구의원 대부분이 집단 삭발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소환발표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총선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7일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점에 야당의원 에 대한 소환사실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과 기소절차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부 중앙일간지와 사설등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 속에 김후보측이 지난 8일 ‘김태호 죽이기 규탄대회’란 이름으로 정당연설회를 열고 울산지역 선거사상 처음으로 후보자가 삭발을 하면서 “야당과괴공작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지방의원 외 이채관 선거대책위원장과 정갑윤 수석부위원장 등 모두 19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김후보측은 지역유권자들에게 “현정권 출범 뒤 지난 2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왔으나 수차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선거일을 앞두고 사실무근의 혐의를 발표한 것은 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의 탄압사실을 알리는 데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후보측은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가 도전후보와 박빙의 양상에서 부동표의 향방에 따라 당락이 가려질 선거 종반시점에 발표된 만큼 일단 호재가 될 리 없는 악재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악재를 결코 가만히 앉아서는 당할 수 없다면서 ‘야당후보 탄압론’과 ‘정치공작론’ 등의 여론몰이를 통해 악재를 호재로 바꿔 필승을 이룬다는 각오이다.

김후보측은 3남의 시력이 나빠(고도근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오래전에 공개됐는데도 이번 합동수사반의 비리혐의 발표를 전후해 일부 유권자들이 혹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김태호죽이기’ 차원의 조작된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부동표를 흡수할 수 있는 호재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후보와 맞서는 다른 후보측은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이번 합동수사반의 발표로 증명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유권자들이 쉽게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더욱이 김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송철호 후보측은 “야당탄압 또는 정치공작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김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일간지들은 보도를 통해 지적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통상적인 수

사·기소절차와 비교해 납득이 가지않는 무리수'라는 견해가 오히려 분분해 '꼭 선거직전에 발표해야 했나'라는 문제에 대해 지역정서 등이 어떻게 작용할 지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김후보와 3남의 병역면제과정을 둘러싼 쟁점이 울산 최초로 4선고지 점령을 피하는 김후보의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후보 등 19명 삭발시위

0...김태호 후보에 대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발표에 대응해 한나라당 울

산 중구지구당이 지난 8일 오후 3시 현대백화점 성남점 옆에서 개최한 정당연설회에서는 '김태호 죽이기 규탄대회'란 이름아래 김후보를 포함, 19명의 집단적 삭발시위(?)가 이목을 집중.

이날 삭발에 동참한 인사는 김후보측의 이채관 선대위원장과 정갑윤 수석부위원장, 심활식 홍보국장, 김철욱·조용수 시의원, 유태일 중구의장을 비롯한 중구의원 14명 전원인데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 친지, 당직자 등의 울음까지 겹쳐 숙연함이 만연.

특히 김후보가 삭발을 위해 연단에 오르자 친지, 지지자 등이 눈시울이 붉히며 "삭발은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끝내 삭발을 단행했으며 머리카락이 연단으로 떨어지자 다수의 여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1천여명의 참가자들이 '김태호를 살리자' 등을 연호.

김후보에 이어 부인 이연숙 여사가 여성 지지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도 함께 머리를 깎겠다고 자리를 잡자 주변 여기저기서 강력하게 제지.

한편 삭발과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지지자들은 물론 여기저기서 모여든 청중들로 골목길이 완전히 막힐 정도로 큰 혼잡을 빚었으며, 인근 2층 다방 등의 창가와 복도 등에도 구경꾼들로 만원.

일부 시민 지지대열 가세

0...삭발식과 연설을 마친 김후보를 비롯한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당원과 지지자 등 500여명은 김후보와 함께 '김태호를 살리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대백화점을 출발해 거리유세에 나서 시민들에게 정부의 '김태호죽이기'를 적극 홍보하며 김후보에 대한 적폭적인 지지를 호소.

이들 거리유세단들은 교동~우정동~성남동~옥교동~복산동~학성동~반구동 등을 거쳐 지구당 사무실까지 시내 일원을 돌며 연신 구호를 외치자 거리의 일부 운전자와 시민들이 팔을 치켜들며 지지를 표시.

김후보의 부인 이연숙 여사도 짧은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

를 돌며 거리유세전에 동참해 노익장을 과시.

상대후보 경찰 대거 몰려

0...정당연설회를 활용해 '김태호죽이기 규탄대회'가 열린 중구 성남동 현대백화점 앞에는 상대후보측과 선관위, 경찰 등이 정보수집을 위해 집중.

선관위측은 정당연설회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행사이지만 위반사항 등의 발생을 우려해 본행사와 거리유세 등 전체 과정을 비디오 촬영하는데 열중.

경찰측도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보고하는 한편 거리유세 앞에 의경을 배치해 상대후보와의 충돌방지에도 고심.

또 이날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는 중구지역 다른 후보자 캠프측에서도 대거 참석했는데 이는 정당연설회의 진행과 시민들의 분위기 등을 파악해 종반 선거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김후보 살리자” 1천여 지지자 연호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3
매 체 명	경 인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장 병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7. 3면	소 재 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990-25
기 사 제 목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조성진 후보가 3전 4기의 끈질긴 도전으로 부동산 동정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진 2매와 함께 상자기사로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정견과 프로필만을 보도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인매일신문사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990-25
대표이사 장 병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인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0. 4. 7.자 3면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조성진 후보의 활동과 그에 대한 동정론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인매일 2000년 4월 7일 3면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

4·13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평택갑선거구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며 후보들간 추격과 반격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 조성진 후보 진영은 3전4기의 끈질긴 도전으로 인한 부동산 동정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 여의도 입성을 장담하고 있다.

특히 조후보는 지난 5일 첫 합동연설회를 통해 “어린시절부터 꿈꾸어 왔던 정치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해 고배의 쓴잔을 마신 것을 비롯 14대와 15대 선거에서도 출마했으나 3번 모두 떨어지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며 “이번 만큼은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호소 하기도 했다.

조성진 후보는 지역 종교계의 후광과 15대 총선에서 얻은 20.1%의 지지표와 25%에 달하는 충

청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 3번에 걸친 총선의 쓴잔을 마신 경험을 전화회복의 기회로 삼고 16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간 서민층을 상대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표밭을 꾸준히 다져온 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조후보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시신을 거두지 못하는 상가를 찾아다니며 시신의 염을 직접 해주는 등 지금까지 50여구에 달하는 시신의 염을 해주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조후보 선거캠프는 정직성과 깨끗한, 3전4기의 끈질긴 집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후보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는 등 동정론 확산으로 인한 상승기류에 힘입어 부동산 흡수에 주력,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5
매 체 명	광 주 매 일	언 론 사 대 표	고 제 철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0. 2,3,4면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
기 사 제 목	각면의 선거관련 사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광주 남구지구당사에서 가진 권노갑 고문의 기자회견 사진
민주당 광주 남구 정당연설회 사진
광주 북갑 합동연설회의 특정후보 기호 사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관련사진의 성격이 다르다하나 특정정당 지구당의 사진을 2, 3, 4면에 걸쳐 3건이나 실으면서 타 정당의 사진은 1건도 게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보도 자세로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매일신문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
대표이사 고 제 철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광주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광주매일 2000. 4. 10.자 2, 3, 4면에 게재한 선거관련 사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광주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유세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선거운동 관련 사진을 중점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15조(사진게재)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무소속 당선돼도 입당 불허”

민주당 권고문 상임고문은 9일 “이번 4·13총선에서 일부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된다 해도 입당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이날 민주당 광주남구지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일부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권고문은 이어 이번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일부 지역 여론과 관련, “이번 공천은 심사위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올바르게 한 것으로 확신

한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 임복진 후보가 지역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임후보에 대한 낙선자 선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후보는 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8년 동안 국방위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 중의 한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권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재 민주당 열세 및 경합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광주남구 지구당과 보성·화순지역 정당연설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상호비방 가열속 부동표 확보 총력

“무소속 안돼” “새인물 선택을”

○…9일 오후 백운초교에서 열린 광주 남구 합동연설회에서는 6명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

민주당 임복진 후보는 “이번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국운이 달린 선거다”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김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임후보가 낙천·낙선인사로 지목된 것만 봐도 민주당의 공천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이 지역 국회의원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열정과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무소속 송갑석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의 밑거름이 되도록 386세대인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으며, 민국당 김균진 후보는 “임후보는 남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러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

또 한나라당 진선수 후보는 “임후보와 강후보가 서로 고소·고발하는 구태를 되풀이해 다시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며 두 후보를 공격했고,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7전8기의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후략)

광주매일 2000년 4월 10일 4면

권고문 “제1당돼야 정권 안정” 강조

○…광주·전남지역 2~3개 선거구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권노갑 고문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오후 광주 남구와 화순 등에서 릴레이식 정당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중략)

권고문은 “오늘 광주에 임복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고 포문을 연 뒤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돼야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완수와 정권하반기의 안정적 집권, 정권재창출, 경제회복을 할 수 있다”고 역설.

한화갑 호남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못해 정권의 발목이 잡혀있다”며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임복진 후보에게 남구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

○…이어 화순읍 광덕택지지구에서 열린 민주당 보성·화순지구당 정당연설회엔 빗방울이 날리는 날씨 속에서도 1천여명의 유권자가 자리를 지키며 연설을 경청해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

이 자리에서 권고문은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 만 들기를 위해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보냈지만 단 한번도 대통령을 원망해 본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박주선 씨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켜줬더니 명예회복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은 호남인 모두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난. (후략)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6
매 체 명	대 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윤 종 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7. 5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
기 사 제 목	美女 운동원(사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대전 서구를 남재두 후보가 미스코리아들과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4·13총선관련 기사를 다룬 4월 7일자 신문 6개면 가운데 유일하게 후보얼굴을 찍어 5면에 게재한 ‘미녀운동원’ 사진은 민주당 남재두 후보의 득표활동만을 보여 주고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들과 형평을 맞추지 못한 편집자세를 드러내고 있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

대표이사 윤 종 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0. 4. 7.자 5면에 게재한 선거관련 사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대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각 정당 후보들의 유세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사진만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5조(사진게재)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대전일보 2000년 4월 7일 5면

구제역 여파 “축산농 돕겠다” 경쟁적 다짐

연예인 대거 동원

0...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 마다 유세분위기와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기 연예인이나 미스코리아 등 유명

연예인을 대거 동원해 눈길.

대전 유성의 자민련 李昌燮 후보는 최근 유성 호텔에서 열린 후원회에서 인기 아나운서인 김동건 씨와 가수 노사연 씨를 출연시켜 참석자들 사이 인기를 끌었으며 방송국 근무 당시 인연을 맺

은 각종 연예인을 행사때마다 출연시켜 지지를 호소.

대전서울의 민주당 南在斗 후보는 6일 낮 98년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진 이재원 양과 99미스코리아 미 최순영 양 등 2명과 함께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 무궁화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를 돌며 20~30대 여성 유권자 끌어들이기에 총

력전.

대전동구 민주당 宋千永후보 역시 지난 4일 오후 구 대전백화점 부근에서 중앙연예인단 소속 개그맨 이하원씨 및 김용 씨, 탤런트 장순천 씨 등을 초청, 개인 연설회를 갖는 등 대전지역 상당수 후보들이 유명인을 동원한 표심잡기에 안감힘.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7
매 체 명	일 간 경 북	언 론 사 대 표	윤 귀 병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6. 1면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7-2
기 사 제 목	이회창 총재 구미·안동·경산공락 한나라 여권 위기조장론 제기 박근혜 후보 달성 경찰서 향의방문 민주당 김종권 후보 즉각 수사 촉구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의 선거유세내용, 주장, 향의 방문, 수사촉구 등을 1면에 5개 기사로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정당에 관련된 동정과 주장, 성명 등을 사진과 함께 1면에 집중 보도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 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사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7-2
대표이사 윤 귀 병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일간경북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경북 2000. 4. 6.자 1면에 게재된 『이회창 총재 구미·안동·경산 공략』, 『한나라 여권 위기조장론 제기』, 『박근혜 후보 달성 경찰서 향의 방문』, 『민주당 김종권 후보 즉각 수사촉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일간경북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정당과 관련된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에 집중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및 무소속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간 경북 2000년 4월 6일 1면

이회창 총재 구미·안동·경산 공략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정권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영남권 표발 지키기에 나섰다.

이총재는 식목일인 5일 오전 경북 경산 청도지역 경산청과물 시장을 방문,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오후에는 대구 수성읍, 남구, 중구를 잇따라 방문,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총재는 이날 오후 4시경에는 구미를 방문, 역광장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한시간 뒤인 오후 5시경에는 안동을 방문,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총재는 대구 경북지역 정당연설회 지원유세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특수발언과 선거개입, 빈부격차심화, 국부유출 등 현정권의 실정

을 요목조목 끌어내며 여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한나라 여권 위기조장론 제기

한나라당이 5일 여권의 의도적 위기조장론을 제기했다. “여권이 안정론의 효과적 전파를 위해 일부러 국가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하며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부채와 국부유출 실상의 왜곡·호도주식시장 교란시급한 개혁과제 방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우리당은 국가부채를 직접부채·우발부채·잠재적부채로 구분, 사실상 부채를 408조~428조로 규정했다”고 전제,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이 직접부채가 428조라고 말한 것 처럼 덮어 씌우며 ‘나라빚을 부풀려 국가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국민 불안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 달성경찰서 항의방문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 박근혜 후보가 달서경찰서를 항의방문, 여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후보는 5일 오전 지구당 당직자 10여명과 함께 달서경찰서 이대원 서장을 만나 민주당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후보의 수사요구에 대해 달서경찰서 이서장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나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어 진상을 밝히는 데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달성군 지구당 관계자는 “금품살포 현장을 포착한 사진물을 유세현장에 공개,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확인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경찰의 수사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달성군지구당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조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단순히 거액을 소지하고 여성협

의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금품살포 주장을 펴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금품살포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달성군지구당 조직원 등 4명을 4일밤 현장 연행 후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종권 후보 즉각 수사 촉구

야, 기업대상 불법선거 자금 모금 주장

한나라당은 4·13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금권·관권·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 울진·봉화에 출마한 김종권 후보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창 대변인은 선대위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경북 울진·봉화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권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경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선거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파악해 현지로 보내 지원토록 하고 회사경비로 직원들을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등 여당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주)삼립산업(대표이사 이충권) 직원이 밝힌 내용을 녹취한 물증을 갖고 있다”며 “녹취 확인결과 동회사가 전무를 시켜 김종권 후보 선거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장이 김후보 합동연설회를 포함한 선거일정과 회사 직원의 선거지원활동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회사직원 50여명을 주말인 토·일요일 양일간 지역에 파견해 김 후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있으며 직원 파견활동시 필요한 경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대변인은 “김후보는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근로자들을 불법동원하는 잘못 뿐만 아니라 기업체 대표로 하여금 규정을 위반,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김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9
매 체 명	주간 전주전북내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최 영 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5. 7면	소 재 지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기 사 제 목	“개혁적인 젊은이가 책임져야”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김제지역 무소속출마자 오남성 후보에 대한 특별인터뷰를 반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보도.

• 관련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정견, 이력, 출마의 변 등을 인터뷰해서 게재하는 것은 동일지역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내일신문사(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대표이사 최 영 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주간내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2000. 4. 5.자 7면 『“개혁적인 젊은이가 책임져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주간내일신문사(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김제 선거구에 출마

한 무소속 오남성후보의 정견, 이력, 공약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2000년 4월 5일 7면

“개혁적인 젊은이가 책임져야”

■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김제시민 70% 이상이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안세력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15대 때 자민련으로 출마했는데.

15대 자민련 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보람이 있다. 김제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본다.

■ 후보자중 제일 젊다.

장점이다. 시대가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 16대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김제시민의 의사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하여 국민의 정부가 국정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이 아닌 진정 국민과 김제시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대 어긋나지 않는 정치 활동을 하겠다.

■ 동학혁명 묘역을 성역화 한다고 했는데.

금산면에 동학혁명 무명 순국열사의 묘역을 성역화 하겠다. 이종휘 장군 생가를 복원해 동학혁명 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토록 하겠다. 또 김홍섭 대법관의 기념관 건립(금산사 입구 우체국)을 통해 우리고장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배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 한·일 농업문제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주)시넵스라는 농업 유통 컨설팅 회사를 일본과 합작했다. 일본측 대표인 야마모토 아키노부 씨와 함께 김제농업 유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김제 쌀과 농축산물의 제값 받는 노력을 하겠다.

■ 쌀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세계에서 쌀값이 가장 비싼 일본 니가타현의 무이카마치와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최고 쌀인 '고시히카라' 재배기술, 건조, 보관,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교류를 통합 품질을 향상하면 가능하다. 김제쌀을 전국 제일의 값을 받도록 하겠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존 정치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지

만 그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할 부분이라면 이제 좀더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자기 혁신적인 젊은 이들이 김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김제 발전과 젊은 농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쌀의 가치를 무한하게 높이겠다.

소외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김제발전에 한 몸 희생하겠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0
매 체 명	전북제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오 석 근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8. 3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기 사 제 목	'제1당' 도민손에... '반짝 구매작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제1당 만들기'를 위한 새천년민주당 전북선대위 긴급기자회견 내용을 1면과 3면에 스트레이트와 박스기사로 부각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민주당 전북선대위 기자회견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차원에서 타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제일신문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오 석 근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제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전북제일신문 2000. 4. 8.자 3면 『‘제1당’ 도민 손에… ‘반짝 구매작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제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전북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민주당 전북선대위 기자회견 내용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제일신문 2000년 4월 8일 3면

‘제1당’ 도민손에… ‘반짝 구매작전’

○…기자회견의 타이틀은 ‘전북도민의 힘으로 총선승리’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제1당만들기’를 위해 도민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것.

민주당이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로 ‘도민의 선거 참여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견의 주된 배경.

종합하면 민주당 제1당을 위해 도민의 선거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특히 도민의 참여는 물론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의 참여까지 독려했다.

○…정규환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안정속에 개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혼란속에 위기를 맞느냐를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야만 개혁을 지속시키고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완수될 것”이라고 강조.

정동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목표는 독자 과반수지만 최악으로 독자 제1당이 되는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호남정권은 중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호남정권안정론을 제시.

장영달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제1당의 수립은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힘을 갖는 일”이라며 도민의 동참을 호소.

장성원 선대본부장은 “IMF위기를 넘긴 국민의 정부가 재벌개혁 등을 완수해 위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

특히 이들은 공히 “도민의 한표는 후보선출과 비례대표 선출 등 두표의 효과가 있다”며 도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1당론을 주창한 것은 도민의 관심이 도내 선거보다는 ‘민

주당의 성공 여부'에 쏠려 있다는 판단 아래 표의 응집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민한 대처로 해석.

특히 도민이 도내 선거에 대해 무관심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의 성공 여부 즉 DJ(김대중)의 성공 여부에는 관심이 높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어 눈길.

0...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이 밝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제1당 경쟁은 적게는 1~2석, 많게는 3~4표에서 결판난다는 것.

따라서 전체 2백73석을 비교할 때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우세지역인 영남지역의 의석수가 65석으로 호남 29석에 비하면 36석이 많아 이를 수도권 경쟁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

수도권은 총 97석. 민주당은 이곳에서 적어도 70석을 얻어야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호남

29석과 수도권 70석, 비례 18석 정도를 얻어 적어도 1백17석을 넘어야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것.

비상의 원인은 호남유권자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정대변인의 설명.

호남유권자들이 'DJ대통령만들기'가 성공한 이후 정치 냉소주의에 빠졌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 대거 선거 불참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 보였던 수도권 70% 이상과 전북권 80% 이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

0...민주당은 이를 위해 전북 유권자들의 참여는 물론 수도권 친척, 아들, 며느리, 사촌, 친지에게 전화하기 운동까지 계획.

따라서 민주당 제1당만들기가 '신황색바람'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1
매 체 명	전북제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오 석 근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0. 4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기 사 제 목	구제역방역활동 참여 김원기 후보 농민아픔 함께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정읍지역구 새천년민주당 김원기 후보가 지역구 축산단지를 방문, 구제역 예방방역 자원봉사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구제역 예방방역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특정후보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제일신문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오 석 근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제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전북제일신문 2000. 4. 10.자 4면 『구제역 방역활동 참여 김원기 후보 농민아픔 함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제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정읍 김원기 후보의 구제역방역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제일신문 2000년 4월 10일 4면

구제역 방역활동참여
김원기후보 농민아픔 함께

새천년민주당 정읍시지구당 김원기 후보는 9일
낮 12시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대규모 축산단

지를 방문 구제역 예방방역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대동한 운동원을 비롯
지역 주민들과 현지에서 돼지고기와 소
고기 시식회를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후보의 축산단지 방문은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에다 설상가상으로 축산 구

제역 위험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이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보는 덕천지역 축산인들과 함께 도로에 보온덮개를 깔고 소독약과 생석회를 뿌리는 등 축산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후보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시식회를 통해 구제역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 정읍시의 축산규모는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김후보의 축산단지 방문은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후보는 9일 오후 2시 정읍농공고운동장 합동유세를 통해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고 수출에 지장받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비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2
매 체 명	전 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문 수 기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8자 3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
기 사 제 목	미래 향한 일면 협력·일면 경쟁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장영달(전주 완산지구), 정동영(전주 덕진구) 후보에 대해 '미래를 향한 양자의 각축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상자기사로 처리.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전북 전주의 서로 다른 지역구에 입후보한 민주당의 장영달, 정동영 두 후보가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내세워 해당지역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
대표이사 문 수 기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주일보 2000. 4. 8.자 3면 『미래 향한 일면 협력·일면 경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장영달, 정동영 후보를 당권·대권에 뜻을 두고 있는 전북출신의 ‘차기주자’로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주일보 2000년 4월 8일 3면

미래향한 일면 협력·일면 경쟁

“전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민주당 장영달, 정동영 후보의 미래를 향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일면 협력, 일면 경쟁 관계속에서 각자의 정치영역을 넓히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의 첫 승부처는 D-5의 16대 총선.

화려한 민주화투쟁 경력을 지닌 장후보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정후보는 모두 압도적 승

리를 장담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이라는 1차 판문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2차 승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차 승부처는 원내 총무 경선.

장후보는 이미 원내총무 경선에 나서 스스로의 정치역량을 검증받겠다고 전주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정후보 역시 최근 유세를 통해 큰 정치를 하겠다는 내심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먼저 원내총무에 당선될지가 관심사다.

마지막 3차 승부처는 당권과 대권. 장후보와

정후보는 DJ의 뒤를 잇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껏 도내 후보중 어느 누구도 대권의 뜻을 '감히'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없었다.

두 후보의 경쟁과 관련해 전주시민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두 후보의 캐릭터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

장후보가 꾸준한 지역활동과 성실성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뿌리를 내려가는 반면 정후보는 중앙 정치권에서 가장 빠른 기간내에 무시못할 정도의 입지를 굳혀낸 것이다.

누가 먼저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인지,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됐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3
매 체 명	주 간 현 대	언 론 사 대 표	문 일 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9. 8, 9면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기 사 제 목	이영일의 정치실험 성공할 것인가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의 호남 싸늘이에 대항하는 무소속 이영일 후보를 집중 조명.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6조(사실보도)

• 위반내용

'광주에서 이영일이 뜨면 부산에서 노무현 뜬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 싸늘이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무소속 이영일 후보(광주 동구)를 조명하면서, 이후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순발력을 가진 명대변인 출신'으로 부각시키거나 '이영일 당선=지역주의 타파'라는 식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지역감정의 해결사로까지 추켜세우는 등 객관성을 상실한 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해 보도(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펜 그리고 자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펜 그리고 자유가 발행하는 주간현대 2000. 4. 9.자 8면, 9면 『이영일의 정치실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이 유 : 펜 그리고 자유사(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특정후보의 정견, 이력, 능력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 현대 2000년 4월 9일 8,9면

이영일의 정치실험 성공할 것인가

4·13총선이 공식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한나라당, 충청도에서 자민련 싸움으로 선거가 끝날 것인가에 있다. 한국의 장래를 좌우할 4·13총선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는 것.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일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DJ)의 정치적 적자

(嫡子)인가 서자(庶子)인가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영일 의원은 “내가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에 입당.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광주 동구 유권자들은 물론 광주시민들은 ‘과연 이영일다운 발상’이라는 여론.

이영일은 민주당 공천자가 발표됐을 때 “이게

사실인가, 발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공천자 명단에서 누락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이 확인되자 가족과 함께 2~3일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한다. 그가 몇날을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 무소속 출마.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깊은 충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던 그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은 DJ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국민회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어려웠던 시절의 여야 대립구도에서 명대변인으로 활약했던 그였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언론문건 등 잇단 폭로전으로 국민회의가 궁지에 몰렸다. 특히 옷로비 사건과 감청사건 폭로는 아무리 능변가라 해도 수세에 몰린 당의 입장을 옹호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순발력으로 당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기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의 논리정연함과 진실성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당시 국민회의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영일 아니면 못하는 일이다”라며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다. 민주당 창당 때만 해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창당 발기인으로 발표됐을 때 야당이 비판하자 그는 세계적 작곡가 베르디의 선례를 인용 궁지를 모면했다.

그가 이토록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데에는 DJ와의 관계때문이다. 대변인 발령을 받았을때 김대통령은 “관록으로 봐 대변인을 맡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자리인 줄 알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 의원밖에 맡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총재께서 저를 장기의 포로 쓰시든 졸로 쓰시든 명에 따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일과 김대중 대통령의 관계는 성균관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교로 있을 때 시작됐다. 당시 6대 국회의원이었다던 DJ에게 정책조언을 했던 것. 20년 후 그가 민자당을 탈당한 후 1년 만에 아태재단에 가입하면서 DJ와의 관계가 복원됐다. 이때부터 통일분야에 대한 조언과 언론홍보 분야를 맡으면서 확실한 DJ사람이 됐다.

DJ는 이의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에 매료됐고, KAL기의 광 추락사건으로 국민회의 신기하 원내총무가 사망한 뒤 치러진 97년 12월 광주 동구 보궐선거에 그를 국민회의 후보로 낙점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중도 사퇴해 무투표당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만큼 DJ의 사랑을 받은 이영일로서는 도저히 DJ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측근의 설명이다.

이영일 의원에 대한 일부 광주 시민단체의 오히려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이 의원 주변 애기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전두환 대통령시절 총재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에 대해 미안마 아웅산 사건으로 심상우 총재비서실장이 순직하는 바람에 자리바꿈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광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15대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교사 보상문제를 해결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만찬을 극복하고 그는 해냈다. 이로 인해 5·18해직교사가 20년 만에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들 5·18해직교사들은 이의원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듯 이 의원은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소방차 역할을 다했는데 반 5·18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영일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광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 김대통령을 도와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번 4·13총선이 이영일 의원에게는 광주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적자확인을 받는 기회가 된다. 더욱이 이번 4·13총선 공천자들에 대한 밀실공천이 호남오적가가 나돌 정도로 일부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이라 그의 출마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가 되겠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관계

자들의 분석이다.

4·13총선의 경우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도 관심의 초점이다. 김대통령은 누차 “어떤일이 있어도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되살아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남권은 민주당, 영남권은 한나라당, 충청권은 자민련이 각각 압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주의의 재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이영일이 뜨면 울진에서 김중권, 부산에서 노무현이 뜬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싸늘이 선거에 대한 유일한 희망인 것. 호남 유권자의 이번 선거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비단 호남만이 아니라 영남·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이 지

역주의 극복의 마지막 기회인 것.

때문에 이영일 의원의 당선 여부가 4·13총선의 큰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에서 이영일 후보가 뜨면 울진에서 김중권 후보,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도 뜨는 판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자연스럽게 지역 감정의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 것.

지금까지 김대통령은 동서화합을 위해 영남인의 요직기용, 영남권 개발정책 배려 등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역망령이 되살아난다면 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판이다.

이번 4·13총선에서 지역주의가 다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 한편 광주 동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홍명 교수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이영일 의원의 입지가 훨씬 강화됐다는 게 현지 여론이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4
매 체 명	경 남 신 문	언 론 사 대 표	이 문 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1. 5면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기 사 제 목	권해옥 위원장 지지호소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자민련이 산청·합천지구당 정당연설회를 갖고 막판 표몰이를 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정당의 정당연설회만을 별개 상자기사로 다룬 데다 특정후보의 이름을 큰 활자로 다루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제목을 달아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이 문 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0. 4. 11.자 5면 『권해옥 위원장 지지 호소』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남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후보의 경력, 공약사항 그리고 지지호소 등을 담은 특정정당의 연설회만을 별개의 상자기사로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남신문 2000년 4월 11일 5면

자민련 산청·합천지구당 정당연설회
권해옥위원장 지지호소

자민련 산청·합천지구당(위원장 권해옥)은 10일 오전 합천군 가야시장과 초계시장에서 잇따라 정당연설회를 개최, 막판 표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7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이날 연설회에는 황

산성 부총재와 이미영 부대변인 등이 참석, 찬조연설을 통해 『권해옥 위원장은 13, 14대 국회의원 재임시 뛰어난 원내활동을 펼쳤으며, 15대 때는 원외에서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권위원장은 이날 『당선되면 13, 14대 때 집권

여당의 제1사무부총장, 원내수석부총무 등 핵심 당직을 맡은 경륜을 바탕으로 정치권 신뢰회복, 낙후된 산청 합천군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따라서 초선보다는 3선의 중견의원을 배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위원장은 이날 공약사업으로 △해인사와 합천호 연결 59호선 우회도로 조기개통, 상림~합천~진주 4차선 확포장 조기완공 △승산리 온천 개발 합천상권 활성화 △대학 분교 유치 인재양성 등을 제시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5
매 체 명	경 인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장 병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2. 3면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990-25
기 사 제 목	하루 10만원 선거비용 전부, 점심은 도시락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평택을 선거구의 무소속 조성용 후보가 돈 안드는 선거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상자기사로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정견과 프로필, 총선 전략 등을 보도한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인매일신문사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990-25
대표이사 장 병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인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0. 4. 12자 3면 『하루 10만원 선거비용 전부, 점심은 도시락 선거혁명의 민심 잡았다며 당선 장담』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후보의 정견과 총선전략 등을 사진과 함께 상자기사로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 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 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인매일 2000년 4월 12일 3면

하루 10만원 선거비용 전부, 점심은 도시락 선거혁명이 민심 잡았다며 당선 장담

4·13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그간 다져놓은 표발 관리와 점검 등 부동표 흡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성용 후보는 선두와 오차범위 없이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당선을 장담하고 있다.

조성용 후보는 선거사무실 자체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선거를 치루면서 돈 안 드는 청렴결백한 선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혁명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야만 국민이 바라는 21세기의 정치혁명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의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등 현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조후보는 평안한 가정생활이 국가기반의 근간이다라며 선거홍보물에 가족사진을 담고 있어 신선함을 주고 있는 등 가정이 평안한 정치, 깨끗한 정치, 봉사하는 정치, 주거가 일치하는 정치, 21세기의 평택 신설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표발을 일구워 가며 민심을 끌어내고 있다.

조후보는 4·13총선에 출마하면서 2천만원의 등록비를 포함 총 4천2백만원을 준비한 다음 이 금액 한도내에서 선거를 치루기 위해 후보 자신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는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하루 선거비용은 유류대를 포함해 모두 10만원을 넘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다음 선거비용 전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후보측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상을 초월

할 만큼의 순수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20~40대의 유권자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 50대 이상의 유권자들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2만5천여표

는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기존정치에 식상해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등 부동산의 민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며 당선을 장담하고 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6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3, 4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기 사 제 목	“경제도약이나, 좌절이나 관가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전북선대위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지지호소를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내용을 부각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 (형평성)

• 위반내용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정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전략상 마련한 기자회견내용을 사진과 함께 4면에 박스기사로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다른 정당 및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적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4. 13자 4면 『“경제도약이나, 좌절
이나 판가름”』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선대위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
해 마련한 기자회견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
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4월 13일 4면

“도민들이 밀어줘야 개혁완수”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제1당 확보를 통해 정국안
정과 남북협력체제를 구축, 경제도약, 개혁완수,
전북발전 등 1석5조의 효과를 거두자고 밝혔다.

정균환 선대위원장은 이날 4·13총선은 경제가
도약하느냐, 좌절하여 제2의 위기를 맞느냐를 판
가름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얼마나 앞당길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며 전북도민은 지난 대통령선
거에서 기적같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래서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고 말하고 다시한번 이번 선거에서 여의도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정선대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
선시켜주어야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특히 원내 제1당을 만들어야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뿌리칠수 있으며 대통령 하야소리
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선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도민들이 바라는 시원시원한 정치가 펼쳐질 것이
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친지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반드시 민주
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대위원장은 또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 나타
난 금권선거 등은 구시대적 범죄행위라며 민주당
은 지역감정유발행위와 흑색선전 등 선거과정에
드러난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사항 / 경 고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8
매 체 명	전북제일신문	언 론 사 대 표	오 석 근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3. 6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기 사 제 목	"도민들이 밀어줘야 개혁완수"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전북선대위 위원장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지호소를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 내용을 부각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선거를 하루 앞두고 위 언론사는 3면에 한나라·민주·자민련 3당 전북선대위 위원장들의 마지막 지지호소 성명을 게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주당 전북선대위위원장의 대도민 지지호소 기자회견내용만을 6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 선거승리를 위한 민주당측의 논리를 부각보도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 타정당 및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각각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제일신문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오 석 근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제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전북제일신문 2000. 4. 13자 6면 『“도민들이 밀어줘야 개혁완수”』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북제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선대위 위원장의 대도민 지지호소 기자회견 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 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제일신문 2000년 4월 13일 6면

“도민들이 밀어줘야 개혁완수”

정균환 민주당 전북선대위원장은 12일 16대총선을 하루 앞둔 대도민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10일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 구여당의 승리가 되는 것으로 국가 위기가 다시 현실화 되고 개혁과 경제발전의 후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도내 일부선거구에서 발생한 금권선거는 반시대적 범죄행위와 금권선거 당사자의 선거구민 및 도민에 대한 사과와 후보

사퇴 및 정계 은퇴가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의 한표는 후보의 당선과 비례대표 다수 확보, 그리고 통일정책 지지라는 효과가 있다는 것. 정 위원장은 도내 10석확보를 자신한다며 도민의 선택이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1장 자체심의

2.주의

결정사항 / 주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
매 체 명	충 청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안 병 섭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2. 24. 1면.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기 사 제 목	역량있는 지역 중진 지키자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충북 출신 자민련 의원인 김종호, 박준병 씨의 공천탈락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된다면 충북을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 후보들의 공천탈락 가능성을 지역 푸대접으로 보도하면서 지역정가, 주민들의 반발과 당사자들에 대한 지지를 부각한 내용은 이 후보들과 공천 경쟁 관계에 있는 자민련의 타 후보들과 타 정당 출마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공정성은 잃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일보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이사 안 병 섭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충청일보사가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0년 2월 24일 1면, 『역량있는 지역 중진 지키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충북 출신 자민련 의원인 김종호, 박준병 씨에 대한 당 내 공천배제 움직임에 대해 지역정서를 무시했다며 지역정가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1면 머릿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보도한 것은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당소속 공천경합 자들이나,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충청일보 2000년 2월 24일 1면

역량있는 지역 중진 지키자

중앙무대에서 충북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될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나 정당의 역할이 다선위주로 계보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상황하에서 지역 출신의 정치적 좌장역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민련의 텃밭으로 자처하는 충청권의 공천이 매듭돼 가고 있으나 일부 충북지역의 경우 공천이 보류, 중진인사들의 탈락 가능성이 전해지면 서 지역정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사들의 빈곤으로 항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무대 접, 푸대접에 가슴앓이를 해오던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거목으로 성장,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될 역량있는 정치인의 공천 탈락설에 허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최다선인 김종호 부총재(진천-음성-괴산)의 경우 당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고 기여한 것을 감안하면 자민련의 공천배제 움직임은 지도층의 향후 당권장악에 걸림돌이 돼 고의적으로 물갈이 하려는 음모라고 흥분하며 충북과 결별하려는 모양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더욱이 김부총재는 5선으로 이번 도전에 성공하면 지역을 위해 크게 헌신하고 기여할 지역의 정치적 좌장임에도 자의적 여론조사를 내세워 탈락시키려 하는데 대해 이는 본인은 물론이고 충북인의 자존심 문제라며 분개해 했다.

박준병 부총재(보은-옥천-영동)도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공천탈락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대부분 도민들은 『자민련이 위급할 때 영입을 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정치적인

배신이다』면서 『이제는 충북을 자민련의 텃밭으로 여기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괴산군 지구당은 23일 확대 당직자 회의를 개최하고 『16대 총선에서 괴산의 희망이요, 충북

의 지도자인 김종호 위원장을 낙천할 경우 탈당계를 제출하고 이한동 총재의 표적공천 등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8
매 체 명	국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재 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3. 3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5
기 사 제 목	JP 아성업고 '승승장구'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자민련 공천자 김학원 의원이 JP 아성업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민주당 공천자 정용환 변호사와 한나라당 공천자 조일호 전 농림부차관의 선거운동도 소개.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4조(기사제목)

• 위반내용

부여 출마자들 중 자민련 공천자 김학원 의원만 형평에 어긋나게 크게 보도하였으며 제목 활자도 크게 배치하여 형평성을 잃었고 정당한 근거없이 막연히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자민련 공천자가 김종필 명예총재의 아성임을 입증하듯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연 론 사 : 주식회사 국도일보사
대구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5
대표이사 이 재 준

심의대상기사 : 별첨

주 문 : (주)국도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도일보 2000년 3월 3일자 3면 『JP아성업고 ‘승승장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국도일보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부여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자민련 소속 김학원 후보가 타당 후보들에 비해 “김명예총재의 아성임을 입증하듯 일단 ...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막연히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하면서, 제목으로 자민련 후보의 ‘승승장구’를 보도한 것은 타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4조(기사제목)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국도일보 2000년 3월 3일 3면

JP 아성 업고 ‘승승장구’

부여는 자민련의 실질적인 진앙지로서 김종필 명예총재의 고향으로 JP의 후광을 업고 나온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민주당 및 한나라당 후보간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곳이다.

부여의 초반 판세는 이 지역이 김명예총재의 아성임을 입증하듯 일단 자민련공천자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민련에서 지난해 김명예총재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의원이 김명예총재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재선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관사출신의 김의원은 개인적인 지명도 및 인맥에 JP바람이 보태질 경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15대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40대

의 정용환 변호사가 여당후보로서의 프리미엄과 참신한 이미지에 기대를 걸면서 표발을 열심히 누비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자인 조일호 전 농림부차관도 “충청도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물론을 펼치면서 이제는 부여도 JP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이 적격이라며 JP벽 허물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명예총재가 직접 출마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내각제 개헌 유보 결정 이후 자민련 바람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자민련 아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가 크게 주목된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1
매 체 명	제 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김 대 성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5, 7. 각2면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연동 2324-6
기 사 제 목	4·13 선거 초반판세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공천과동을 계기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우세한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10%이상 차이가 나고, 인천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혼전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는 3당이 각축을 벌이고 강원 역시 접전 지역이라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 제주시 연동 2324의 6
대표이사 김 대 성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제주일보 2000년 3월 5일자, 3월 7일자 각 2면 『4·13 총선 초반 판세』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함.

이 유 : 제주일보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제주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제주일보 2000년 3월 5일 2면

선거 판도 가르는 최대 승부처 무당파 30 - 40% ... 혼전에 혼전

**총유권자 23% 737만명 지역구 45석
대세 좌우**

서울은 4·13총선에서도 역대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승부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의 23%인 737만명이 몰려 있는 서울의 의석은 전체 지역구 의석 227석 중 19.8%인 45석이 걸려 있어 인접 지역인 경기·인천과 함께 이번 총선의 대세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국민회의가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에 당한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은 야권 분열에 힘입어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 27석을 따내 개가를 올린 반면 국민회의는 18석을 건지는 데 그쳤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 1석, 자민련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초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의 판세가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 쪽으로 기울어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공천파동 이후 여론조사서
민주당 우세**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 민주국민당(가칭) 4.8%, 자민련 2.5%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

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 자민련 5.6%, 민국당 3.8%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10% 포인트나 벌어졌다. (후략)

제주일보 2000년 3월 7일 2면

최근 여론조사, 민주-한나라 '혼전'

인천은 11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 경기(41석)와 함께 서울 의석수(45석)보다 7석이나 많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최대 승부처의 하나로 꼽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1%, 한나라당 32.5%, 자민련 7.7%로 나타났고 민국당까지 대입할 경우 민주당 31.2%, 한나라당 31.2%, 자민련 7.3%, 민국당 4.6%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남을(이강희), 서·강화갑(조한천), 부평갑(박상규) 등 3곳, 한나라

당은 남동갑(이윤성), 계양(안상수), 서·강화을(이경재) 등 3곳이 각각 우세하고 중·동·옹진, 연수·남갑, 남동을, 부평을 등 5곳은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수(서한샘 의원), 남갑(유필우), 부평을(최용규), 중·동·옹진(서정화), 남동을(이호웅) 등에서도 백중우세나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다면서 6~7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남동을(이원복), 연수(황우려), 부평갑(조진형) 등 현역 의원 벨트와 남갑(민봉기) 등에서 앞서고 있다며 7~8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2
매 체 명	국 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종 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7. 2면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기 사 제 목	쉽지않은 'DJ저격수' 저격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서울 강서를 공천자인 김성호 후보가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에게 10%이상, 강동갑에 공천된 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이부영 후보에게 10%이상 차이로 뒤지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 신인으로 모두 소위 한나라당의 DJ저격수들과 상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열세라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2
자체심의회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이 종 대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국민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0년 3월 7일자 2면 『쉽지 않은 ‘DJ저격수’ 저격』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국민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국민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국민일보 2000년 3월 7일 2면

쉽지않은 'DJ저격수' 저격

정권에 눈엣가시로 여겨지는 이른바 'DJ저격수'들의 국회입성을 저지하기 위해 포진한 민주당 후보들이 기대만큼 뜨지 않고 있다.

총선을 한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바짝 추격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들의 지지도가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DJ저격수로 꼽히는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김성호(金成鎬) 전 한겨레신문차장을 내세웠으나 2월말 현재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버티고 있는 은평구에 배치된 이석형(李錫炯) 변호사도 15%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총무의 강동갑에 투입된 노관규(盧官圭) 변호사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1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 과천-의왕에 뒤늦게 공천된 민주당 이철(李哲) 변호사가 안상수(安商守) 의원을 뒤쫓고 있으나 8%가량 뒤지고 있다고 한다.

부천 소사는 상황이 심각하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으나 민주당 조영상(曹榮祥) 변호사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의 경기 여주도 민주당 조성우

(趙成禹) 위원장이 뒤늦게 공천돼 뛰고 있으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긴급체포 소동을 벌였던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이 한나라당 텃밭이라 저격수를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후보 가운데 적절한 맞수가 나와주었으면 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희망사항이다.

이같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를 애써 부인한다. 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주장한다. 김한길 선대위 기획단장은 6일 "현재 시점까지는 인지도면에서 현역의원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기대할 만하다"면서 서울 강서울의 경우 당 자체 조사결과 현재 오차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내에서조차 이들 지역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당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방침이었으나 지역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저격수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알 것 같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4
매 체 명	경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신 순 화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7. 2면	소 재 지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기 사 제 목	與・野 이모저모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부천 원미읍 선거구 후보자 대결구도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배기선 후보를 10% 전후로 앞서고 있다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9조(인용보도)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 법규를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도일보사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대표이사 신 순 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경도일보사가 발행하는 경도일보 2000년 3월 7일자 2면 『與·野 이모저모』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경도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경도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도일보 2000년 3월 7일 2면

與·野 이모저모

4·13 총선 격전지 부천 원미읍

0...중동 신도시 지역으로 20~30대와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비판세력과 여권성향이 혼재하는 특성을 지니는 곳.

이런 가운데 조선의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과 민주당 배기선 전 의원의 재대결이 이뤄지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자민련이 김선관 전 부천신문 대표를 후보로 내고 선거전에 가세했다.

부천 토박이인 한나라당 이의원은 조선이면서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다 폭넓은 정보력과 높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배 전의원을 10% 전후로 앞서고 있다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배전 의원은 새정부출범과 함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착실히 지역을 다져왔다.

또 14대 후반 전국구 의원을 역임한 경력도 있는 만큼 인물론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과의 밀착정치를 강조하며 설욕전을 준비중이다.

부천신문 대표를 역임한 자민련 김후보는 뒤늦게 가세했지만 30대의 젊은 후보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한나라당 수도권 집중 공략

0...한나라당은 6일 서울 은평갑(위원장 강인섭), 경기 성남 분당갑(위원장 고흥길), 성남중원(위원장 김일주) 지구당대회를 열고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공천파동으로 흔들리고 있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당초 중앙당에 머물며 선거 전략을 짜는데 전념기로 했던 홍사덕 선대위원장을 수도권 유세에 긴급 투입하는 등 수도권 공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국당 출범으로 야당표가 갈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민련과 민국당을 「여당의 들러리세력」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등 민주·한나라당 간 양당대결 구도를 복원 시키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이 총재는 성남 분당갑·중원 지구당대회에 잇따라 참석, 「1야3여」구도론을 펼치며 「김대중 정권을 중간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일야당인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호소 했다.

홍 위원장도 은평갑 지구당대회에서 총선후 정계개편론을 거론하면서 「자민련과 민국당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민주당과 다시 합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 정권의 특정지역 인사편중사례를 공격하는 등 한나라당의 야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5
매 체 명	대 전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이 지 영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8. 3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2동 40호
기 사 제 목	“싸늘이·경합” 우위경쟁 치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여·야 정당의 자체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충청권 판세에 대해 분석 보도.

• 관련조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9조(인용보도) 제1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 하면서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과 같이 그 정확한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공표시 함께 밝혀야 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크기,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매일신문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2동 40호

대표이사 이 지 영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대전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대전매일 2000년 3월 8일자 3면 『“싸늘이·경합” 우위경쟁 치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대전매일신문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대전매일신문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대전매일 2000년 3월 8일 3면

“쌩쌩이·경합” 우위경쟁 치열

대전·충남북은 자민련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16대 총선에서도 자민련의 「쌩쌩이」현상이 재연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15대 총선에선 자민련이 전체 28개 의석(대전 7, 충북8, 충남13석)가운데 충북 2곳과 충남 1곳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내줬을 뿐 25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내각제 파동 등을 거치면서 자민련의 장악력이 15대 때보다 약화돼 이번 총선에선 자민련의 일방적 독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선거전이 점차 지역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는데다 자민련이 야당선언 이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강도높은 공세를 펼친 결과 지지도가 상당수준 회복되고 있어 자민련의 압승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여야 정당의 자체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전체 24개 선거구 가운데 자민련이 15~16곳에

서, 민주당은 2곳에서, 한나라당은 1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6개 지역이 경합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기사항은 자민련 공천자들이 대전·충남에 비해 충북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전·충남〉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도는 대전에선 자민련 38%, 민주당 27.5%, 한나라당 23.9% 순으로, 충남의 경우 자민련 44.4%, 민주당 27.3%, 한나라당 17.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6곳 가운데 동(이양희·李良熙), 중(강창희·姜昌熙), 서(이재선·李在善) 등 3곳에선 자민련이 우세를, 서갑은 경합지역이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유성(송석찬)과 대덕(김원웅)에서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는 천안을(함석

재·咸錫宰), 공주·연기(정진석·鄭鎭碩), 부여(김학원·金學元), 예산(오장섭·吳長燮), 당진(김현욱·金顯煜) 등 8곳이 자민련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논산·금산의 경우 민주당 이인제 위원장이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을 상당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으며, 천안갑에선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과 한나라당 성무용(成武鏞) 전 의원간에, 서천·보령에선 자민련 이금규(李肯圭)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 중앙집행위 의장간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충북〉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련 36.6%, 한나라당 27.8%, 민주당 22.7%등으로 자민련이 수위를 지키고 있으나, 자민련 우세지역은 청주 상당(구천서·具天書), 제천·단양(송광호·宋光浩), 보은·옥천·영동(박준병·朴俊炳), 진천·음성·괴산(정우택·鄭宇澤)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충주, 청주 흥덕, 청원 등 3곳은 자민련 후보와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간에 예측불허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6
매 체 명	인 천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유 덕 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8. 4면	소 재 지	인천시 중구 항동 4가 18-1
기 사 제 목	386세대 對 3선 중진 한판 대결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동두천·양주지역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판세보도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본격 선거전이 개시되기도 전에 판세를 “민주당 정성호씨와 한나라당 목요상의원으로 압축...” 운운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아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인천일보사
인천시 중구 항동 4가 18-1
대표이사 유 덕택

심의대상기사 : 별첨

주 문 : 인천일보사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0년 3월 8일자 4면 『386세대 對 3선 중진 한판 대결』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인천일보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인천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인천일보 2000년 3월 8일 4면

386세대 對 3선 중진 한판 대결

16대 총선을 앞두고 동두천·양주 지역구는 신진세력을 공천한 새천년민주당 정성호씨(38·변

호사)와 4선 도전의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64)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성수 전 국회의원의 지구당위

원장(46)이 자민련과 민주국민당, 무소속 등을 놓고 행보를 가늠중이어서 3파전이 예상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형태를 띠고 있는 동두천·양주지역은 접경지역이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보수성향이 뚜렷해 그동안 친여성향이 강한 투표 결과가 나타났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도시 인구 유입이 가속화돼 향후 민심향배에 다소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의정부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기반으로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북부지역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해 공동대표로 활약한 뒤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개혁변호사 모임 창립까지 주도해 신진세력으로서의 참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후보는 이와함께 지속적인 개혁과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힘있는 여당론을 앞세워 비교우위에 있는 정당지 지표 흡수에 주력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전국 조직책 1호로 후보에 오른 정후보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세대교체 바람을 이끌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젊은 정치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목요상 의원은 그동안 의회활동 등을 통한 지역지지기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접경지역지원법안 통과와 경원선전철화 사업, 국도3호선의 우회도로 신설 등 각종

지역숙원사업을 성사시킨 활동성과를 토대로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며 4선을 향한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초년병보다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큰 정치를 내세우며 신진바람 차단에 주력하는 목의원은 판사출신으로 폭넓은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구에 정치관록을 앞세운 또하나의 정치 발전분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행보를 결정치 못하고 있는 이성수 전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은 제14·15대 총선 연패에 의한 지역 동정론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가톨릭신자 및 지역인사 등이 주축이 돼 표발같이 나서고 있다.

이위원장은 지금까지 지역을 지켜온 터줏대감론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순께 한 여론조사기관이 동두천·양주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요상 후보가 18.3%의 지지도를 나타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정성호 후보가 10.1%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20.1%, 한나라당이 11.3%, 자민련 3.6% 순으로 나타나 현재까지의 총선정국은 인물론과 정당 선호도가 혼재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7
매 체 명	경 향 신 문	언 론 사 대 표	홍 성 만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8. 4면 3. 9. 4면	소 재 지	서울 중구 정동 22
기 사 제 · 목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한나라 독주... 민국 ‘아직은 미풍’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부산·울산·경남의 초반 판세를 보도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및 여·야 자체 분석한 초반 판세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의 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 성 만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0년 3월 8일자 4면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제목의 기사와 2000년 3월 9일자 4면 『한나라 독주… 민국 ‘아직은 미풍’』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함.

이 유 : 경향신문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경향신문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향신문 2000년 3월 8일 4면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제1당이 되고 싶은 정당은 인천·경기 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경기의 전략적 가치를 압축한 말이다. 원내 1당 확보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셈법을 보더라도 이 점이 명확해진다. 지역구 100석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민주당으로선 호남(29석)과 영남(64석)의 의석 격차(35석)를 만회할 곳은 현실적으로 수도권뿐이다. 97석(서울 45, 인천 11, 경기 41)의 수도권 의석 가운데 최소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1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표밭을 확산시킬 여지가 크다고 여기는 곳이 인천·경기지역이다. 서울보다 의석수가 많으면서도 접전지역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인천·경기에서 30석 정도는 확보해야 목표인 수도권 60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거꾸로 인천·경기에서 30석을 돌파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유리한 입장에 선다.

하지만 여야의 자체분석 결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초반전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살얼음판에서 대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백중우세 지역을 포함, 23곳 정도를 앞서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경합지역으로 꼽고 있는 16곳에서 10곳 정도 승리, 30~33곳 정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19곳 정도를 우세 내지 백중우세 지역으로 분류한다. 경합지역에서 10곳 이상 승리, 30석을 채운다는 것이 목표다.

결국 접전지역 성적표에 따라 인천·경기 선거의 균형추가 기울어질 전망이다. 대표적 혼전지역은 인천의 경우 중·동·옹진, 연수, 남동을 등이 꼽힌다. 중·동·옹진은 민주당 서정화(徐廷華)의원에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후보가, 연수는 민주당 서한샘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려(黃祐畝)의원, 남동은 한나라당 이원복(李原馥)의원과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전 구청장의 각축이 치열하다. 대개 한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거나 5%이상 뒤처졌더라도 2위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다. (후략)

경향신문 2000년 3월 9일 4면

한나라 독주...민국 아직은 ‘미풍’

한나라당의 싱거운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이던 부산과 경남·울산지역 선거는 한나라당 공천과

동과 민국당 창당으로 인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다. 막판에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강삼재(姜三載)의원의 극적인 탈당이 이뤄진다면 이곳 선거판도는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PK지역, 특히 부산 선거는 투표일 5일전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속설처럼 승부를 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자체 분석 결과와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초반 판세는 여전히 한나라당의 절대적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는 부산 5곳, 경남 9곳, 울산 1곳 등 모두 15곳에서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17곳이 백중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합지역 4군데 중 2군데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38개 의석 중 최소 32~34석은 무난히 건질 것으로 한나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국당은 부산 3곳, 경남 1곳에서 백중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합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11군데 중 절반 정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직까지 민국당 바람이 기대만큼 세게 불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민국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산 3곳에서 백중우세 또는 경합을, 자민련은 경남·울산 4곳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지만 민국당과는 반대로 막판 바람 여하에 따라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혼전지역은 부산의 경우 북·강서을, 해운대 기장 갑·을, 서, 중동, 사하갑 등이 꼽힌다.

특히 북·강서을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가 다소 앞서나가고 있지만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민국당 문정수(文正秀)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 기장 을과 서, 중동지역은 한나라당과 민국당간에, 해운대·기장갑은 한나라당(孫泰仁 후보)과 민주당간에 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사하갑은 한나라당과 민국당, 무소속간에 엇치락 뒤치락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거제, 진해, 진주, 통영·고성이 변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거제에서는 YS경호단장 출신의 민국당 김한표(金漢杓)후보가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을 압박하고 있으며 진해의 김우석(金佑錫)후보도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후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8
매 체 명	전 남 매 일	언 론 사 대 표	전 진 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9. 4면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6-6
기 사 제 목	‘6선고지’ 무소속 거센도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해남·진도 지역 총선 출마자들을 소개하고 판세를 분석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해남·진도 지역 출마자들을 소개하면서 여론조사기관, 조사방법,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이 제시되지 않은 무소속 이정일 후보측의 자체여론조사 결과(무소속인 이정일 후보가 7 : 3으로 앞서고 있다)를 여과없이 공표, 유권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남매일신문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6-6

대표이사 전 진 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전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전남매일 2000년 3월 9일자 4면 『‘6선고지’ 무소속 거센도 전(16대총선 격전지를 가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전남매일신문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전남매일신문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전남매일 2000년 3월 9일 4면

‘6선 고지’ 무소속 거센 도전

5선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임에도 무소속의 도전이 그 어느지역보다 거세다. 후보들은 해남·진도의 이번 선거를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규정하고 표발을 준비하고 있다.

더구나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봉호의원이 올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이 거셀것으로 전망된다.

해남·진도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었던 지역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무소속의 돌풍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정당 후보로는 민주당의 김봉호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최응국 위원장, 자민련 정동조 위원장, 민국당 광복근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은 이정일 전전남일보회장과 이석재 전전남도의원, 민경완 한중문화협회 이사 등이 출마를 공식화한채 이미 표발을 누비고 있다.

해남·진도의 초반 판세는 최근 지역신문을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3중 4약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무소속 후보간의 연대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진도는 10대 이후 11대 민병초 제철화화 대표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김봉호 의원이 차지했다. 정당을 넘나들며 5선의 화려한 정치 경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의원은 민주당의 물갈이 여론과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4관왕이라는 불명예로 인

해 낙천이 확정적이었으나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민주당 후원회장과 김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원은 지난달 26일 지구당 개편대회에 약 4,000여 명의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면서 견재함을 과시했으며 최근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표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의원의 6선 고지에 제동을 걸고 나선 후보는 무소속의 이정일 전전남일보회장과 이석재 전남의원이다. 이전회장은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야심을 안고 지역구를 다져왔다. 이번 총선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회장은 “민주당의 공천은 지역민심을 무시한 전형적인 하향식 공천이요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의 이미지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반개혁적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회장측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 7:3의 비율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인지도의 상승이 곧 지지도로 이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의 주역이었던 이석재 전전남도의원도 오랫동안 다져온 지역기반을 무기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의원은 민주당의 공천도 신청하지 않은 채 무소속을 견지해 왔으며 전남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이들과 함께 무소속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민경완 한중문화협회 이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정

치에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선배 정치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등한시해 온 ‘눈물 닦아주기’만큼은 목숨을 걸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이사는 3류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골깊은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무소속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정당후보들은 밑바닥층을 중심으로 틈새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 최응국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적 여론은 거품으로 판단된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의 정서는 바뀔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젊음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최위원장은 지인들의 자원봉사 문의가 잇따르는데 고무된 분위기다.

자민련 정동조 위원장은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내세워 농민바닥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농어민 후계자를 포함한 경주 정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탈당 제4당인 민국당 해남진도 지구당 조직책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광복군 위원장은 오랜 선거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29
매 체 명	뉴 스 피 플	언 론 사 대 표	차 일 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6. 18~20면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기 사 제 목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공천과동을 계기로 서울 지역의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상승하고, 한나라당은 주춤하고 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2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뉴스피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차 일 석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대한매일신보사(뉴스피플)가 발행하는 뉴스피플 2000년 3월 16일자 18~20면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대한매일신보사(뉴스피플)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대한매일신보사(뉴스피플)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0.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뉴스피플 2000년 3월 16일 18~20면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서울 표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서울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올 4·13총선에서도 여야의 선거 승패를 좌우할 요충지다. 특히 서울 선

거 분위기는 인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선거가 1개월 이상 남은 현 시점의 서울표심은 각 정당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상승기류, 한나라당 주춤'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최근 일부 정당 지도부가 자극하고 있는 지역감정도 팔도사람들이 모여사는 서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도 중요한 변수다. 서울표심은 그만큼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 10% 포인트 앞서-지역문제 큰 영향 줄 듯

실제로 지난 96년 15대 총선 때도 각종 여론조사나 정당들의 분석은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여당인 신한국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렇지만 정작 결과는 신한국당의 완승에 가까웠다. 신한국당은 야권분열과 막판 몰아친 북풍에 힘입어 전체 47개 의석의 절반이 넘는 27석을 따내 개가를 올린 반면 국민회의는 18석을 건지는데 그쳤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 자민련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15대 서울선거서는 '중진 몰락, 신인 약진'이라는 추세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5대 총선 뒤 4년만에 치러지는 16대 총선은 서울 선거구의 성격이 상당히 변했다. 그만큼 선거결과에 예측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된다. 수많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소위 달동네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또 사라진 달동네에는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들이 밀집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대신 들어서고 있다. 의석도 2개 줄어 45개다. 227개 전체 지역구 의석의 19.8%로 경기 인천과 함께 여야의 선거 승패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우선 핵심 관전포인트는 새천년민주당이 15대 총선 때 국민회의의 간판으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에 당한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지 여부다. 물론 상황은 아직도 유동적.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판세는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 쪽으로 기울는

듯한 기류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중이고 한나라당은 비상체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포인트 내외의 혼전을 계속하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10%포인트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민당이 출현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강(強)구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민국당은 종로 조순 대표 등 18명의 서울 공천자를 3일 확정, 본격적으로 서울 정탈전에 뛰어들었다.

이같은 기류는 민심의 척도라는 택시운전자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부산출신의 한 개인 택시 운전자는 "분명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천을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자신을 밀어주었던 중진들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민국당을 지지하자니 야권이 분열돼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다. 일단 민주당만 어부지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출신 택시운전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손님들 중에는 이도저도 생각말고 영남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바로 민국당 변수가 이번 서울 선거에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386세대 경쟁력은?

서울에서 공천을 받은 여야 386세대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선거전 초반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런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지구당 위원장이나 함께 공천경쟁을 벌였던 인사들의 업무인계 비협조, 활개치는 선거브로커 등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의 민주당 임종석 씨는 20~30대를 집중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위치난 모교 한양대 후배들의 도움마저 신통치 않아 고전중이다. 그러나 조직정비가 진행되면서 지지도가 상승국면이란 평가다. 동대문구에 나선 민주

당 허인회씨도 6선고지를 노리는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과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성북갑에서 민주당 중진 유재건 의원에 도전한 한나라당 정태근 씨도 접전중이라며 기업을 토하고 있다. 서대문갑의 민주당 우상호씨는 연세대 동문인 한나라당 이성현 씨와 경합중.

구로갑의 민주당 이인영 씨는 선후배들로부터 십시일반해 선거자금을 마련, 한나라당 중진 김기배 전의원과 일진일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또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강서을에 도전, 밀려나 뒤늦게 금천구에 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은 기존 조직 인수가 여의치 않아 고전했으나 최근 지지도가 급상승,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양천갑 한나라당 원희룡 변호사, 양천을 한나라당 오경훈씨, 동작갑의 민주당 이승엽씨 등도 상대 후보들을 긴장시키며 선전중이라는 것이 이들이 속한 정당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강남을 오세훈씨는 현재까지는 상대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중략)

한나라당은 최소한 20석이상은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국당 변수의 돌출로 한나라당 공천자들이 고전하는 지역이 늘어났지만 갈수록 민국당 변수는 약해질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대 총선때처럼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선대위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최근 민국당의 출현과 함께 한나라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을 이탈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무응답층으로 합류하는 것을 예로 든다. 일단은 무응답으로 숨어들어갔다가 투표장에서야 본심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국당은 막판 지역바람이 일 경우 의외의 선전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민련은 보수표가 결집할 경우 이번 만큼은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당의 자체 판세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종로(이종찬), 용산(설송웅), 광진(추미애), 중랑갑(이상수), 강북갑·을(김원길 조순형), 도봉갑·을(김근태 설훈), 노원을(임채

정), 서대문(장재식), 구로(장영신), 영등포갑·을(김명섭 김민식), 관악(이해찬), 송파(김성순) 등 25곳 내외를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구, 성동, 동대문갑, 중랑을, 은평갑, 동작을, 관악갑 등을 경합지역으로 꼽고 집중 지원키로 했다.

민주 25-30석, 한나라 최소한 20석 목표

한나라당은 서초갑·을(박원홍 김덕룡), 강남갑·을(최병열 오세훈), 송파갑(맹형규), 강동갑·을(이부영 김중위) 동작갑(서청원), 강서(이신범), 마포갑·을(박명환 박주천), 은평(이재오) 등 15곳 정도를 우세지역으로 보고 있다.

양당이 주장하는 경합 내지 접전지역은 서대문갑(우상호-이성현), 구로갑(이인영-김기배), 성북을(신계륜-강성재), 중구(정대철-박성범), 광진갑(김상우-김영춘), 은평갑(손세일-강인섭), 양천갑(박범진-원희룡), 동작을(유용태-김왕석), 동대문을(허인화-김영구)등이다. 자민련은 현역의원 지역인 노원갑(백남치), 관악갑(이상현), 동대문갑(노승우) 등 3곳을 우세 내지 백중지역으로 꼽고 있다. 민국당은 일단 조순 대표가 출마키로 한 종로를 우세지역으로 본다.

이로 미루어 16대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서울지역 선거전은 민국당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3~4파전 양상을 띠 경합지역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여야 모두 대폭 물갈이를 통해 정치신인들을 대거 내세운 만큼 이들 신인의 선전여부도 전체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대 때 북풍처럼 막판 돌발변수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30
매 체 명	경 향 신 문	언 론 사 대 표	홍 성 만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0, 11, 13. 각4면	소 재 지	서울 중구 정동 22
기 사 제 목	자민련 '우세' 민주·한나라 '추격'(10일자), 민국 도전에 '한나라 아성' 균열(11일자), 변화 바람 업고 親與 무소속 약진(13일자)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13총선 초반 판세 시리즈 ③대전·충남북 편 ④대구·경북 편 ⑤광주·전남북 및 강원·제주 편
각 기사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등의 우세지역 및 열세지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지역별,
후보간 우열 도표를 게재하여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 법규를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3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 성 만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0년 3월 10일, 11일, 13일 자 각 4면 『4·13 총

선 초반 판세』 시리즈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함.

이 유 : 경향신문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경향신문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향신문 2000년 3월 10일 4면

자민련‘우세’ 민주·한나라 ‘추격’

총청권은 역시 자민련의 아성이라는 점이 선거 초반인데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현재 판세를 요약하면 ‘자민련 우세 속 민주당 거점 구축, 한나라당 분투’다.

당초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내각제 유보파동 등을 거치면서 자민련의 장악력이 15대 때 보다 약화돼 이번에는 자민련의 일방적 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세를 펼치면서 총청권 잠식을 노려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최근 판세가 자민련에 유리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련의 야당선언 및 대여공세강화를 통한 ‘지

역감정 부추기기’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점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8일 현재 총청권 24개 지역구에서 특정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우세+경합우세)은 모두 19곳으로 분류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 5개 지역이다.

특정후보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당별로 보면 자민련이 15곳, 민주당 3곳, 한나라당 1곳이다. 분명한 우세를 보이는 곳(우세지역)은 모두 8군데로 자민련 6곳과 민주당 2곳이다. 또

경합은 하되 특정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곳(경합 우세 지역)은 자민련이 9군데이고, 민주와 한나라가 각각 1곳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 없이 경합지역에 대부분 끼여있는 게 특징이다.

자민련은 24석 모두를 석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섬'처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인제(李仁濟·충남 논산·금산)선대위원장과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전구청장을 당선 안정권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충북 충주의 이원성(李源性) 전 대검 차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전 대덕의 김원웅(金元雄)전위원이 앞서가고 있을 뿐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경합지역 5곳일 수밖에

에 없다. 충북의 청주 흥덕과 청원 등 2곳과 충남 천안갑과 보령·서천, 아산 등 3군데의 싸움은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련의 '녹색 바람'과 민주당의 '개혁바람', 한나라당의 '견제 바람' 중 어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판이다.

보령·서천에서의 싸움은 'JP의 대리인'으로 나선 자민련의 이궁규(李肯珪)총무와 '반JP'의 깃발을 들어올린 한국신당의 김용환(金龍煥)의장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총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민련 바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밖에 자민련 공천에서 탈락한 이인구(李麟求), 이상만(李相晩), 김고성(金高盛), 어준선(魚遵善)의원 등이 자민련 표를 얼마나 잠식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00년 3월 11일 4면

민국 도전에 '한나라 아성' 균열

한나라당 아성으로 간주됐던 대구·경북의 선거판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싹쓸이를 할 것이란 전망은 사라졌다. 한나라당의 공천 후유증이 표발기류에 틈새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고 민국당과 자민련,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

향후 판세의 관전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지고 있는 반여(反與)정서의 향배에 달려있다. 한나라당을 유일 야당으로 선택, 표가 쏠리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다. 반면 민국당과 자민련도 선택 가능한 야당의 일부로 판단할 경우 판도가 돌변할 수 있다.

균열징후는 경북보다 대구가 더 심하다. 전체 11개 선거구 중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서, 달성, 북을 등 3곳 정도다. 남에서는 한나라당이 공천한 현승일(玄勝一) 전

국민대 총장이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의원에게 처지고 있다. 수성갑에서도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과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전 포철회장이 경합중이다. 달서갑은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이 무소속 김한규(金漢圭)전위원의 탄탄한 조직에 흔들리고 있다.

달서을에서는 이해봉(李海鳳)의원이 우세한 상태였으나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동생 전경환(全敬煥)씨가 무소속 출마를 굳히면서 혼미해지고 있다.

민국당은 김석순(金石淳)치과 원장이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의원에게 도전한 북갑, 서훈(徐勳)의원이 한나라당 강신성일(姜申星一)위원장과 맞붙은 동에서 승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2곳 모두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 이적한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구는 민주당

이치호(李致浩)전의원과 무소속 임철(林哲)변호사가 뒤쫓고 있다.

16개 의석이 걸린 경북은 구미와 울진·봉화를 제외하곤 한나라당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구미에서는 민국당 창당 주역인 김윤환(金潤煥)의원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전도의원을 압도하고 있다. 울진·봉화에서는 김종권(金重權)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을 앞질러 민주당의 영남 교두보 1순위로 꼽힌다.

향후 선거판세가 변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포항북과 의성·군위, 문경·예천, 칠곡 등이다. 포항북은 민국당 간판으로 갈아탄 허화평(許和平)전의원이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위원장을 맹추격중이다. 민국당은 김동권(金東權)전의원이

나선 의성·군위도 승산이 있는 곳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은 낙승을 자신한다. 역대로 소지역대결이 치열한 문경·예천은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이 앞서가고 있으나 자민련 신국환(辛國煥)전 공업진흥청장이 만만치 않은 저력으로 달려들고 있다.

칠곡은 민주당 장영철(張永喆)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변호사의 맞대결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상황에서 민국당 이수성(李壽成)상임고문이 지도부의 권유로 출마를 굳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고문이 나설 경우 민국당은 구미와 칠곡, 포항북을 연결하는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경향신문 2000년 3월 13일 4면

변화바람 업고 親與무소속 약진

호남의 '표심(票心)'은 과연 변할까. 무소속 돌풍의 기운이 거세지면서 '이번엔 다르다'와 '막판엔 결국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기류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강하다. 민주당 김한길 총선거획단장은 12일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호남의 경합지역은 3곳"이라고 밝힐 정도다. 자연히 무소속 당선자의 출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가능성은 시민들의 기대와 '어긋난' 공천에서 싹트고 있다. 28명의 현역의원 중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자연 감소를 제외하면 광주 3명을 비롯, 전북 1명과 전남 5명이 바뀌었다. 32%의 교체율이다. 당초 절반 가까이 물갈이될 것이라던 예상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도 일부 '대타'들은 낙하산 공천 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호남의 '자존심'을 한껏 자극했다. 이러한 정서가 실질적인 표로 표출된다면 가히 위협적인 요소다.

지난 98년의 6·4지방선거 결과도 예사롭지 않다. 96년 15대 총선때만 해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군산의 강현욱(姜賢旭·당시 한나라당)의원에게 단 한석을 내줬을 뿐 36개 의석을 휩쓸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전북 5곳과 전남 7곳에서 무려 12명의 무소속 시장·군수가 쏟아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의원이 2~3명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소속의 선봉대는 화순·보성의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광주 남구의 강운태(姜雲太) 전 내부장관, 해남·진도의 이정일(李正一)전전남일보 회장이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공천자들을 앞지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 뒤를 쫓고 있는 광주 동구의 이영일(李榮一)의원과 남원·순창의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도 위협적인 도전자다.

그동안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안주해 온 민주당 공천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순·보성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배신자’론을 설파하고 해남·진도의 김봉호(金琤鎬)의원은 지구당 개편대회에 7,000여 명을 동원할 정도로 비상상황이다.

광주 동구의 김경천(金敬天) 전 광주 YMCA

사무총장과 남원·순창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힘있는 여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광주 남구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무소속 바람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31
매 체 명	국 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종 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1. 1면, 3면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2
기 사 제 목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2위는 없다' 숨가쁜 '총선 경주'		
기 사 내 용	별 점		

• 기사내용요지

전국 혼전지역 10곳에 대한 국민일보와 여의도 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파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6곳 중 5곳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음.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최소한 조사주체(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 함께 보도하여야 하나 조사방법을 보도하지 않아 위 관련법규를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3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론사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이종대

심의대상기사 : 별첨

주 문 : (주)국민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0년 3월 11일자 1면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3면 『2위는 없다』 숨기쁜 ‘총선 경주’』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국민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국민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국민일보 2000년 3월 11일 1면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서울 용산과 경기 분당을 등 수도권 혼전지역 6곳의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평균 10%이상 앞서 있으며 이에 힘입은 이 지역 민주당 공천자들이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민련과 신생 민국당은 정당과 후보 지지도 모두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어 수도권 선거전은 점차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일보가 지난 9일 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용산, 성동, 동대문구와 경기 분당을, 부천 원미읍, 안양 동안 등 6곳의 정당 및 후보 지지를 조사한 결과 용산과

성동은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은 민주당 설송웅(楔松雄)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영(陳永)변호사를, 성동은 민주당 임종석(任鍾皙)위원장이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을 큰 차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 동안에선 민주당 이석현(李錫玄)의원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위원장을 배 이상 앞서 있다. 또 성남 분당울과 부천 원미울은 민주당 이상철(李相哲)전한통프리텔사장과 배기선(裴基善)전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위원장, 이사철(李思哲)의원을 각각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대문울은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이 민주당 허인회(許仁會)위원장을 2%정도 앞

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조사한 지방 4곳 가운데 대전 대덕은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전의원이 민주당 김창수(金昌洙)위원장과 자민련 최환(崔桓)변호사를 큰 차로 리드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진도는 무소속 이정일(李正一)전전남일보회장이 민주당 김봉호(金琤鎬)국회부의장을 0.8%차로 앞서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북 울진·봉화는 김중권(金重權)전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을 7.8% 앞서 있으며, 부산 북·강서울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의원이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위원장을 9%차로 리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국민일보 2000년 3월 11일 3면

‘2위는 없다’ - D-33

서울 용산

민주당 설송웅(楔松雄)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영(陳永)위원장을 크게 앞서면서 기선을 제압한 양상이다. 설위원장이 39.9%로 진위원장(19.7%)을 무려 20.2%차로 따돌리고 있으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을 선언한 오유방(吳有邦)전 의원은 9.3%로 3위를 달리고 있다.

무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차 지지 후보를 물어본 결과 설위원장은 43.4%의 지지를 얻은 반면 진위원장은 21.4%에 그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오전 의원도 11.0%로 올라서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6%, 한나라당 18.6%, 민국당 5.2%, 자민련 3.7%순으로 나타났는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지지율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구청장을 역임한 설위원장은 개인지명도와 당지지도를 등에 업고 순

숨가쁜 ‘총선 경주’

항하고 있지만, 이회창(李會昌)총재특보 출신인 진위원장은 개인지명도와 당지지도가 모두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성동

전대협 의장으로 80년대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당 임종석(任鍾皙)위원장이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을 비교적 큰 차로 따돌리고 있다. 임위원장은 37.5%의 높은 지지율로 4선 관록의 의의원(28.2%)을 앞서가고 있다.

자민련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코미디언 김형곤(金亨坤)씨는 6.4%를 얻었다. 임위원장은 20·30대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의원은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9%로 한나라당(19.8%)보다 배 가까이 높게 나왔으며 자민련과

민국당은 각 2.9%, 1.7%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20%대 이하로 떨어진데는 김도현(金道鉉)전문체육차관이 공천을 받았다가 불과 몇시간 만에 이의원으로 뒤바뀌었던 공천 후유증이 일조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31.3%에 달해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을

중진과 신예의 기세싸움이 후끈 달아올랐다. 5선의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이 32.6%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정치 신인 민주당 허인회(許仁會)위원장이 오차범위내인 2.3%차로 김의원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 386세대의 중심에 서 있는 허위원장은 30.3%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사람은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재지지도 조사에서도 36.3%, 34.0%를 얻어 혼전을 거듭했다. 이 지역의 마지막 변수는 '색깔변수'로 허위원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자민련 권승욱, 민국당 최종근 위원장은 각 5.2%, 4.3%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29.1%) 한나라당(22.3%) 자민련(6.4%) 민국당(3.9%)순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나라당 김의원이 관록과 개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당 열세를 만회하고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해남-진도

민주당 안방적인 전남 해남-진도에선 무소속 이정일(李正一)전 전남일보회장이 5선 관록의 김봉호(金琤鎬)국회부의장을 박빙이지만 앞선 것으로 나타나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응답자 5백16명 가운데 이전회장은 29.0%의 지지를 받아 28.2%를 얻은 김부의장을 0.8% 앞서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백 33명의 지지성향을 분석해 이를 함께 계산한 통합지지도는 각각 33.8%와 31.9%로 더 벌어졌다. 지역바람이 불더라도 이전회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전회장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표발같이를 해 왔으며 민주당 공천때 김부의장과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나 김부의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근 보성-화순에서도 무소속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선전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선 전북보다 전남에서 무소속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 성남 분당을

재정경제부 공무원과 전문경영인이 맞붙은 성남 분당을에서는 일단 유권자들이 실물경제에 밝은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상철(李相哲)전 한통프리텔 사장이 30.8%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전재경부 과장(27.6%)을 오차범위내에서 앞서 있다. 무응답자를 판별조사한 통합지지도는 이전사장이 34.9%로 30.4%를 얻은 임전과장과 격차를 더 벌렸다. 이 지역 현역으로 최근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말을 바꾼 오세응(吳世應)의원은 5.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오의원은 민국당 공천을 받은 이영해(李永海)한양대교수가 얻은 6.1%에도 못 미치는 설움을 겪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1%로 한나라당(24.3%), 자민련(3.9%), 민국당(3.7%)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한나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결과는 이와 다른 셈이다. 한나라당 공천 후유증과 민국당 출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읍

수도권 열전지역 중 하나인 부천 원미읍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지낸 민주당 배기선(裴基善)전의원과 한나라당 대변인 이사철(李思哲)의원이 오차 범위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배전위원이 33.4%로 이의원(31.5%)을 1.9% 앞서 있다. 자민련 김선관 위원장은 2.9%를 얻는데 그쳤다. 배전위원과 이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도 막상막하의 승부를 벌였다.

당시 의원은 전체 유효표의 37.9%를 얻어 배전의원(33.8%)을 4.1%차로 따돌리고 금배지를 품었다. 이번 총선은 배전위원의 설욕적인 셈이다. 정당 지지도는 출마예상자 지지도보다 더 차이가 났다. 민주당이 31.6%를 얻은 반면 한나라당은 21.5%로 민주당이 10%포인트이상 앞서고 있다. 의원은 개인지명도로 당지지도 열세를 만회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당지지도에서 자민련과 민국당은 각각 3.9%, 2.5%를 얻고 있어 아직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

경기 안양 동안지역은 최희준(崔喜準)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이석현(李錫玄)의원이 42.9%의 지지율을 얻어 24.6%에 그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위원장을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련 유충진 위원장과 민국당 신하철 위원장은 각각 7.0%와 4.4%에 머물렀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1.7%, 한나라당 21.1%, 자민련 5.2%, 민국당 3.7%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개인지지율이 정당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정당별 표 결집도(정당지지자의 정당후보 지지율)에서 의원은 88.4%를 기록해 심위원장(80.7%)을 앞섰고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10.1%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의원이 고루 우세를 보였다.

경북 울진-봉화

민주당 영남지역 교두보 확보에 나선 울진-봉화의 김종권(金重權)전청와대 비서실장은 31.4%의 지지율을 기록해 23.6%에 그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보다 7.8%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응답층이 27.7%에 달해 아직은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련 이학원(李學源)위원장과 민국당 박영무 위원장의 지지

율은 각각 1.8%, 10.0%에 머물렀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개인지지도뿐만 아니라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23.2%)이 한나라당(20.9%)을 앞서 있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0.0%에 이르고 있다. 통합지지도를 보면 야권성향 유권자 중 상당수가 무응답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김전실장을 지지하는 비율도 14.0%에 이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김전실장이 김의원을 리드하고 있으며 60대이상 노년층의 지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부산 북-강서울

부산 북-강서울에서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의원이 33.9%의 지지율을 얻어 24.9%에 그친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공천탈락에 반발해 민국당 후보로 나선 문정수(文正秀)전부산시장은 10.9%에 머물렀고 무소속 안병해씨는 4.6%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29.1%, 민주당 16.3%, 민국당 8.0%, 자민련 2.5%순이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6.4%에 달하고 한나라당 지지자의 12.5%가 노의원을 지지하는 등 한나라당 지지자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또 한나라당과 세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국당에 대한 지지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의원이 20대와 30대 등 젊은층에서 허후보를 크게 앞서는 반면 40대, 60대이상 장·노년층에서는 허후보가 노의원을 리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대덕

대전 대덕은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전위원이 35.2%의 높은 지지율로 타 후보들을 일단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창수(金昌洙)위원장과 자민련 최환(崔桓)위원장은 각각 15.0%와 11.1%에 머물렀다. 또 자민련 공천탈락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선 이인구(李麟求)의원

은 11.4%를 기록해 현재 1강 3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민국당 허윤범 후보는 3.8%에 그쳤다.

대전권에서 자민련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 18.0%, 민주당 17.5%, 자민련 15.4%, 민국당 4.8%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도자의 경우 각 당이 큰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지도나 무응답자에게 다시 물어 산출한 통

합지지도에서 김원웅 후보가 타 후보를 배이상 앞서고 있는 것도 타 지역과 다른 특징이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35.9%에 달하고 있어 선거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따라 현재의 판세가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32
매 체 명	연 합 뉴 스	언 론 사 대 표	김 종 철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4~8, 3. 10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기 사 제 목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제목의 기사로 전국 각 지역(서울, 인천·경기, 강원·제주,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부산·경남)을 시리즈로 각 정당의 지지율을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게재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하나 이를 어겨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3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종 철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연합뉴스가 전송하는 연합뉴스 2000년 3월 4일~8일자 및 3월 10일자 『4·13총선 초반판세 점검』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함.

이 유 : 연합뉴스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 기사를 전송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계약사의 지면에 반영됨으로써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신속한 보도 등 뉴스제공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전송한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연합뉴스 2000년 3월 4일~8일, 3월 10일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① 서울

〈편집자주=김대중(金大中) 정권의 후반기 정

국 기상도를 좌우할 4·13 총선이 4일로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여 30여'의 4당 대결구도로 짜여진 이번 선거는 아직 부동층이 많아 대세를 정

확히 가능키 어렵지만 점차 권역별로 우열의 가락이 잡혀가고 있다. 여야 4당이 지도부 순회유세 등을 통해 승기(勝機)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 선거의 초반 판세를 7개 권역별로 나누어 점검해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서울은 4·13 총선에서도 역대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승부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의 23%인 737만명이 몰려있는 서울의 의석은 전체 지역구 의석 227석중 19.8%인 45석이 걸려있어 인접지역인 경기·인천과 함께 이번 총선의 대세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국민회의가 15대 총선때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에 당한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은 야권 분열에 힘입어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 27석을 따내 개가를 올린 반면 국민회의는 18석을 건지는데 그쳤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 1석, 자민련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초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의 판세가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계기로 민주당 우세 쪽으로 기울어 가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 민국당 4.8% 자민련 2.5%로 나타났고 또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 자민련 5.6%, 민국당 3.8%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10% 포인트나 벌어졌다.

한나라당 공천파동으로 민국당이 출연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강(強)구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북은 민주당, 강남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 판세가 이처럼 기본 경쟁구도가 흔들리는 혼전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여야는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한 총선전략의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서로 놓칠 수 없는 '서울 대회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목표 의석으로 절반인 22-23석을 잡고 있고 한나라당은 최소한 20석 이상은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과 민국당도 3-4석 내지 2-3석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과 계층이 여전히 30-40%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그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혼전의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분열로 선거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생산적 복지, 경제안정론'을 내세워 확고한 우세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민국당을 '여당 둘러리'인 '제2중대'로 몰아붙이면서 이번 총선이 'DJ정권 2년의 중간평가'라는 논리를 부각시켜 야권표를 결집, 민주·한나라의 양당 대결구도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선거를 4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종로, 광진갑을, 중랑갑, 성북갑을, 강북갑을, 도봉갑을, 노원을, 서대문을, 마포을, 강서갑, 구로을, 영등포갑을, 관악을, 송파을, 등을 우세지역으로, 중구, 성동, 동대문갑, 중랑을, 은평갑, 동작을, 관악갑 등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각각 꼽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초을, 강남갑, 강동갑을 우세지역으로, 성동, 동대문을, 은평을, 서대문갑, 마포갑을, 강서을, 금천, 동작갑, 서초갑, 강남을, 송파갑 등을 백중우세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양당이 주장하는 경합 내지 접전지역은 서대문갑(이상호-이성현), 구로갑(이인영-김기배), 성북을(신계륜-강성재), 강동을(심재권-김중위), 중구(정대철-박성범), 용산(설송웅-진영), 광진갑(김상우-김영춘), 은평갑(손세일-강인섭), 양천갑(박법진-원희룡), 양천을(김영배-오경훈), 동작을(유용태-김왕석), 마포갑(김윤태-박명환), 동대문을(허인화-김영구) 등이다.

자민련은 현역의원 지역인 노원갑(백남치), 관악갑(이상현), 동대문갑(노승우) 등 3곳을 우세 내지 백중지역으로 꼽고 있으며 신은숙(申銀淑) 부총재와 김태우(金泰宇) 핵물리학 박사가 출전하는 서초갑과 강남을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국당은 조순(趙淳)대표가 출마를 결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종로와 장기표(張琪杓)최고위원이 나설 예정인 동대문갑을 비롯해 군부재자투표비리를 폭로한 이지문(李智文) 전 서울시의원과 김동수(金東洙) 전 펄시콜라사장이 나서는 관악을과 양천갑도 해볼만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16대 총선판세의 분수령이 될 서울지역 선거전은 민국당 주자들의 운곽이 드러나면서 3-4파전 양상을 띠 경합지역에서 야당 분열에 따른 서울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회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계기로 여야 모두 대쪽 물갈이를 통해 정치신인들을 대거 내세운 만큼 이들 신인의 선전여부도 전체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② 인천, 경기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인천과 경기는 각각 11석과 41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 서울 의석수(45석)보다 7석이나 많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도 철저한 지역분할구도 속에서 처리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색이 짙은 이 지역의 승패에 따라 여야의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데 중론이다.

여기에 서울과 같은 생활권인 신도시와 위성도시의 경우 유권자들이 고학력에 20-30대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젊은 후보를 대거 내세워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며 인천 9석, 경기 18석을 얻어 수도권 지역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반면 국민회의(현 민주당)는 인천 2석, 경기 10석에 그쳤고, 자민련은 경기에서 5석을 얻었다.

일단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인천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혼전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결 구도속에 자민련 현역의원 지역의 경우 3파전 양상이 나타

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 최근 공개된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2.1%, 한나라당 32.5%, 자민련 7.7%으로 나타났고 민국당까지 대입할 경우 민주당 31.2%, 한나라당 31.2%, 자민련 7.3%, 민국당 4.6%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남을(이강희·李康熙), 서·강화갑(조한천·趙漢天), 부평갑(박상규·朴尙奎) 등 3곳, 한나라당은 남동갑(이운성·李允盛), 계양(안상수·安相洙), 서·강화을(이경재·李敬在) 등 3곳이 각각 우세하고 중·동·옹진, 연수, 남갑, 남동을, 부평을 등 5곳을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수(서한샘 의원), 남갑(유필우·柳弼祐), 부평을(최용규·崔龍奎), 중·동·옹진(서정화·徐廷華), 남동을(이호웅·李浩雄) 등에서도 백중우세나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다면서 6-7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남동을(이원복·李源馥), 연수(황우려·黃祐呂), 부평갑(조진형·趙鎭衡) 등 현역의원 벨트와 남갑(민봉기·閔鳳基) 등에서 앞서고 있다며 7-8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중·동·옹진(이세영·李世英), 남동을(박태권·朴泰權), 연수(정한용·鄭漢溶) 등에서 30%대에 이르는 충청권 유권자표를 집중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국당은 서·강화갑의 이영우(李榮雨) 전 청와대 비서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각당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1.8%, 한나라당 23.6%, 자민련 7.3%, 민국당 5.1% 순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경우 한강 이북과 이남 및 신도시권 등 권역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각 선거구 평가의 잣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 선거구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안산갑(김영환·金榮煥) 등 12곳이 우세하고 한나라당은 부천원미울(이사철·李思哲) 등 9곳, 그리고 자민련은 연천·포천(이한동·李漢東) 등 2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당의 주장은 이같은 조사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일단 수원권선, 하남, 군포, 성남중원, 성남수정, 안양동안, 안산갑·을, 부천원미갑, 일산갑·을, 시흥, 용인갑, 의정부, 남양주, 가평·양평, 평택갑, 분당갑 등 18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고양덕양갑, 분당을, 이천 등 10여 곳에서 선전하고 있어 25석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도 수원팔달, 부천원미을, 부천소사, 과천·의왕, 광주, 안성, 여주, 동두천·양주, 고양덕양갑·을, 구리, 파주, 평택을, 이천, 시흥 등 15곳을 우세 또는 백중우세로 분류하고 광명, 일산갑, 군포, 가평·양평, 용인을 등 경합지역에서 선전하면 20석 이상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자민련은 연천·포천과 오산·화성, 평택을, 수원장안, 구리, 안양만안, 시흥 등 현역의원 지역을 우세지역으로 보면서 오세응(吳世應) 의원이 합류한 분당갑과 김윤수(金允洙) 부대변인의 파주, 이대엽(李大燁) 전 의원의 성남수정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국당도 4일 신하철(申河澈, 안양동안) 전 의원, 손민(孫敏·수원팔달) 경기대교수, 김종국(金鍾國·용인갑) 변호사 등 14명을 공천했고 이 중에는 나름대로 득표력을 갖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선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③ 강원, 제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9석과 3석으로 의석수에 있어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며 적극적인 공략을 펴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도 예년처럼 철저한 지역구도로 흐름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짙은 이 지역에 대한 각당의 공세가 갈수록 적극화하고 있어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96년 4.11 총선에서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강원 13개 선거구 가운데 9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으며, 제주에서는 3개 선거구를 싹쓸이 하는

등 두 지역 모두 한나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었다.

반면 국민회의는 한석도 차지하지 못했으며, 자민련과 민주당이 강원에서만 각각 2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바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강원과 제주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다소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후보들이 맹추격을 펴고 있어 선거전 막판에 가서는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25.4%, 한나라당 30.9%, 자민련 9.2%, 민국당 9.2%로 나타나 한나라당의 우세속에 민주당이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민련과 민국당도 각각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 앞으로 민국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철원·화천·양구에서 이용삼(李龍三) 후보가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고, 한나라당은 원주(함종한·咸鍾漢), 동해·삼척(최연희·崔鉛熙), 홍천·횡성(황영철·黃永哲) 등 3곳에서 우세하며, 춘천·강릉, 태백·정선, 영월·평창,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5곳은 경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철원·화천·양구는 물론 춘천(이상용·李相龍), 강릉(최각규·崔珪圭), 태백·정선(김택기·金宅起), 속초·고성·인제·양양(송훈석·宋勳錫) 등에서도 우세 또는 백중우세한 상태라며 3-5석 확보를 장담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원주, 동해·삼척, 홍천·횡성 외에 춘천(유종수·柳鍾洙), 강릉(최돈웅·崔燾雄), 태백·정선(박우병·朴佑炳) 등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만큼 5석은 무난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도 춘천(이민섭·李敏燮)과 원주(박우순·朴宇淳), 태백·정선(유승규·柳昇珪), 홍천·횡성(조일현·曹駟鉉), 영월·평창(김기수·金基洙) 등 5곳에서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민국당은 춘천의 한승수(韓昇洙)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선거구가 3곳인 제주는 한나라당 현역 중진의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들이 강력히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 후보들의 추격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주(현경대·玄敬大), 북제주(양정규·梁正圭), 서귀포·남제주(변정일·邊精一) 세 선거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3개 선거구의 석권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제주(장정언·張正彦)와 서귀포·남제주(고진부·高珍富)에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면 막판 뒤집기를 다짐하고 있고, 자민련도 제주에서 고한준(高漢俊) 전 의원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④ 대전·충남북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대전·충남북은 자민련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16대 총선에서도 자민련의 '싸꿀이' 현상이 재연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15대 총선에선 자민련이 전체 28개 의석(대전 7, 충북 8, 충남 13석) 가운데 충북 2곳과 충남 1곳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내줬을 뿐 25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내각제 파동 등을 거치면서 자민련의 장악력이 15대 때부터 약화돼 이번 총선에선 자민련의 일방적 독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련의 지지도 하락을 틈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이들 3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점차 지역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는데다 자민련이 야당선언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강도높은 공세를 펼친 결과 지지도가 상당수준 회복되고 있어 자민련의 압승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자민련은 전체 24개 지역구의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이 출마하는 충남 논산·금산과 대전 유성(송석찬·宋錫贊)을 당선 안정권으로 꼽으면서 대전 서갑(박병석·朴炳錫), 동(송천영·宋千永), 충북 충주(이원성·李源性), 청원(정종택·鄭宗澤) 등 경합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녹색바람'이 15대에 비해 현저히 강도가 약해졌다고 판단, 충북 청원(신경식·辛卿植), 청주 흥덕(윤경식·尹景湜), 대전 대덕(김원웅·金元雄) 등 3곳을 우세지역으로, 청주(한창희·韓昌熙), 천안갑(성무용·成武鏞) 등 2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희망의 한국신당은 김용환(金龍煥) 중앙집행위 의장의 충남 서천·보령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민주국민당(가칭)은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천자를 내지 않아 정당 지지도가 미미한 상태다.

여야 정당의 자체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전체 24개 선거구 가운데 자민련이 15~16곳에서, 민주당은 2곳에서, 한나라당은 1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6개 지역이 경합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기사항은 자민련 공천자들이 대전·충남에 비해 충북지역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전·충남〉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도는 대전에선 자민련 38%, 민주당 27.5%, 한나라당 23.9% 순으로, 충남의 경우 자민련 44.4%, 민주당 27.3%, 한나라당 17.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6곳 가운데 동(이양희·李良熙) 중(강창희·姜昌熙) 서울(이재선·李在善) 등 3곳에선 자민련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서갑은 경합지역이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유성(송석찬)과 대덕(김원웅)에서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는 천안을(함석재·咸錫宰), 공주·연기(정진석·鄭鎭碩), 아산(원철희·元喆喜), 서산·태안(한영수·韓英洙), 부여(김학원·金學元), 청양·홍성(이완구·李完

九), 예산(오장섭·吳長燮), 당진(김현욱·金顯煜) 등 8곳이 자민련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논산·금산의 경우 민주당 이위원장이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의원을 상당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으며, 천안갑에선 자민련 정일영(鄭一永) 의원과 한나라당 성무용(成武鏞) 전 의원 간에, 서천·보령에선 자민련 이금규(李肯珪) 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 중앙집행위 의장간에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자민련 공천에서 탈락한 이인구(李麟求·대덕), 이상만(李相晩·아산), 김고성(金高盛·공주·연기) 의원이 자민련 표를 얼마나 잠식할지도 이 지역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련 36.6%, 한나라당 27.8%, 민주당 22.7% 등으로 자민련이 수위를 지키고 있으나, 자민련 우세지역은 청주 상당(구천서·具天書), 제천·단양(송광호·宋光浩), 보은·옥천·영동(박준병·朴俊炳), 진천·음성·괴산(정우택·鄭宇澤)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충주, 청주 흥덕, 청원 등 3곳은 자민련 후보와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간에 예측불허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주에선 자민련 김선길(金善吉) 의원과 민주당 이원성 전 대검차장, 한나라당 한창희 위원장이, 청주 흥덕에선 한나라당 윤경식, 자민련 조성훈(趙誠勳) 전 충북 정무부지사, 민주당 노영민(盧英敏)위원장이 각각 팽팽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과 민주당 정종택 전 의원, 자민련 오효진(吳效鎭) 위원장이 나서는 청원도 현재로서는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평이다.

이 지역 선거의 변수는 'JP 바람'의 강도와 함께 충북은행 퇴출, LG반도체 합병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들이다.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⑤ 광주·전남북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텃밭인 호남지역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무소속 강자들이 얼마나 선전할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격인 국민회의는 호남 37개 의석 가운데 전북 군산을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한 강현욱(姜賢旭) 의원에게 1석을 내줬을뿐 나머지 36석을 싹쓸이했다.

그나마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강의원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음으로써 호남권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강자들의 바람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일간지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호남 지역구 29곳 가운데 최소한 1-2곳은 여권 성향의 무소속 출마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초반 판세분석에서도 호남 지역구 가운데 1-3곳을 '이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광주 남구의 경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강운태(姜雲太) 전 내무장관이 광주시장 재직 시절 광주비엔날레를 유치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민주당 임복진(林福鎭) 의원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는 국회의원 대변인을 지낸 이영일(李榮一) 의원이 공천탈락의 충격을 딛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여성후보 전진배치 차원에서 공천을 따낸 김경천(金敬天) 광주YWCA 사무총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남 해남·진도에서는 일찌감치 표발을 다져온 이정일(李正一) 전 전남일보 회장이 5선 관북에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인 김봉호(金奉鎬) 국회 부의장을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전남 보성·화순,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명예회복을 내걸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민주당 한영애(韓英愛)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다.

박 전 법무비서관은 사법고시 수석합격의 화려한 경력에 '차기 검찰총장감'이라는 평을 들어오

다 옷로비 사건의 유탄에 맞아 낙마하자, 고향인 보성 주민 중심의 동정여론을 업고 출마준비에 나섰다.

전남 순천에서는 조충훈(趙忠勳) 전 JC중앙회장과 박상철(朴相哲) 경기대 교수 등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경재(金景宰) 의원에 맞서 선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 여수에서 신순범(愼順範) 전 의원이 민주당의 김충조(金忠兆) 의원을 상대로 '권토중래'를 선언했고, 영광·함평의 장현(張顯) 호남대 교수와 광주 광산의 나병식(羅炳湜) 풀빛출판사 대표 등도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광주 북울의 강기정(姜琪正)씨, 전남 나주의 이재근(李載根) 나창주(羅昌柱) 전 의원 등도 주목받는 무소속 후보군에 속한다.

전북 남원·순창에서도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조찬형(趙贊衡) 의원에 맞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나라당 전국구 이형배(李炯培) 의원까지 '실지(失地)' 회복에 나서 표밭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전북 완주·임실은 이돈승(李敦承) 전자상거래농장 대표가 민주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고, 김제는 최락도(崔洛道) 전 의원이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과의 일전을 버르고 나섰다.

전북 군산에서는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출신의 함운경(咸雲旻) 한국정치발전포럼 대표가 끈질긴 면모를 보이며 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현욱 의원에 게 도전,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무소속 강자들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지역과 달리 전국 최고 득표율을 노리는 '터줏대감'들도 적지 않다.

최근 일간지들의 여론조사에서 전남 고흥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원내총무는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선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15대 총선에서 최고 득표율로 화려하게 원내에 진출한 전주덕진의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대변인도 연속 최고득표율 왕좌를 노린다.

또 전남 강진·완도의 천용택(千容宅) 전 국정원장, 전남 장흥·영암의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 무안·신안의 한화갑(韓和甲) 전 사무총장도 마땅한 상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후보들이다.

무소속 강자들의 출현을 놓고 민주당내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지역 1-2곳을 무소속에게 내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확고한 수성(守城)의 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고문을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자들을 주저앉히기 위한 설득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두 사무총장은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 달라질 것"이라며 호남권에서의 무소속 바람이 곧 잦아들 것으로 예측했다.

〈4.13 총선 초반판세 점검〉 ⑦ 부산·경남(끝)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한나라당의 '절대우세'로 점쳐졌던 부산·경남·울산지역은 한나라당 공천후유증과 민국당 창당으로 총선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44개 선거구 중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38곳에서 승리, 신한국당의 텃밭임을 입증했다. 특히 현 집권당인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는 의석을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고, 구 민주당 2곳, 무소속이 4곳에서 당선됐을 뿐이다.

여론조사 결과나 현지 분위기로 볼 때 아직까지는 '민국당 바람'이 '미풍'에 그치고 있어 한나라당의 우세가 지켜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그동안 창당작업에 힘을 쏟아온 민국당의 지역기반 다지기가 본격화되면 '돌풍'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이 지역에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김심(金心)의 항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산 4곳, 경남 9곳, 울산 1곳 등 모두 14개 지역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12개 지역을 백중우세로 분류, 현재로서는 전체 38개 의석 중 30개 이상은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국당은 부산 3곳, 경남 1곳에서 백중우세, 10개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호언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부산 3곳에서 백중우세 또는 경합중이라고 자체분석하고 있다. 또 자민련은 1석 이상은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한나라당의 상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당의 명운을 걸고 몰아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17개 지역구 중에서 남(김무성), 북·강서갑(정형근), 사하을(박종웅), 금정(김진재) 4곳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안정권에 들어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민국당 빅4'가 출마한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 중·동에서는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이 아직까지는 약간 앞선 가운데 오차범위내에서 민주당 박찬종(朴燦鍾) 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YS의 과거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선됐다가 뒤집어진 정문화(鄭文和)의원이 YS의 핵심측근인 민주당의 김광일(金光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부산 연제의 경우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전 시의원이 한나라당 공천경쟁에서는 이기택(李基澤) 전 의원을 제쳤으나 이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바람에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 사상의 경우 낙전에 반발, 신상우(辛相佑)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에 맞섰으나 아직 '민국당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사하갑에서는 사직동팀장(경찰청 조사과장) 출신인 한나라당 엄호성(嚴號聲)변호사와 민주당 최광(崔洸) 전 보건복지장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서석재(徐錫宰)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 해운대·기장을도 한나라당 안경률(安景律)위원장과 자민련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동주(金東周)의원이 혼전중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盧武鉉)의원이 북·강서을에서 약간 앞선 가운데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위원장, 민주당 문정수(文正秀) 전 부산시장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또 영도구의 김정길(金正吉)전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昨)의원과, 해운대·기장갑의 김운환(金運桓) 의원은 한나라당 손태인(孫泰仁) 위원장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 한나라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과 무소속의 약진이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여전히 발붙이기 힘든 형국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선거구가 통합된 진주로, 공천심사권자였던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에게 공천에서 탈락한 김재천(金在千) 의원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고 '동정표'에 호소하고 있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에서도 '민국당 바람'의 변수는 남아있다.

통영·고성에서는 3선인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이 약간 앞서고 있는 가운데 관료출신인 민주당 이근식(李根植) 전 내무차관, 자민련 정해주(鄭海州)전 국무조정실장과 민주당 이청수(李清洙) 전 KBS해설위원이 추격하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경찰서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YS의 고향 거제에서는 한나라당 김기춘(金基春) 의원이 앞서가는 가운데 YS 가족 경호를 맡았던 김한표(金漢杓) 전 거제경찰서장이 민주당 간판으로 추격을 벌이고 있다.

또 진해에서는 현역인 허대범(許大堯) 의원을 제치고 한나라당 공천권을 거머쥔 김학송(金鶴松)씨가 민주당행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다 무소속을 택한 김우석(金佑錫) 전 내무장관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5대 대선에도 나섰던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가 공단지역인 창원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변호사를 상대로 분투하고 있다.

〈울산〉 영남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의석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국당 바람'은 미미하다.

남구의 경우 민주당 이규정(李圭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의원,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전 대검 중수부장, 민국당 한만우(韓萬愚) 변호사 등 4명이 맞붙어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에서는 현대그룹 오너인 3선의 무소속 정

몽준(鄭夢準) 의원이 절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갑용(李甲用) 전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어 노사대결이 관심을 모은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36
매 체 명	일 요 시 사	언 론 사 대 표	이 용 범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2. 27. 11면 3. 19. 4면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1-2
기 사 제 목	박주선 '덧발'에 무소속 깃발(?),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성·화순 지역 주민의 압도적 요청으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범시민추대위가 결성되었으며 옷로비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후보의 인물론과 동정론을 2번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여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 위 관련 법규를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3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일요시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1-2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일요시사가 발행하는 일요시사 2000. 2. 27.자(제215호) 『박주선 ‘텃밭’에 무소속 깃발(?)』, 2000. 3. 7자(제218호)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일요시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지역민들이 인물론을 앞세워 총선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보기관의 여론조사를 인용, “박전비서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타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등의 기사를 1개면 거의 전면에 게재한 바 있음. 이 기사는 또 지령을 달리하여 박씨가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인터뷰 기사로 재차 보도한 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박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일요시사 2000년 2월 27일 11면

박주선 ‘텃밭’에 무소속 깃발(?)

보성·화순의 ‘이상 열기’

지난해 중순이후 4·13총선을 향한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면서 지역구 예상출마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돼 왔다. 전남 보성·화순의 경우는 현역인 박찬주, 한영애(전국구) 의원외에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동수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장준영 국민정치연구회실장 등 10여 명이 출마예정자로 꼽혔었다.

특이한 점은 박비서관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 보성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비서관이 지난 1년여 간 전국을 돌궂게 했던 ‘웃로비 사건’의 유탄을 맞고 억울하게 낙마를 하면서 보성·화순 지역은 박찬주·한영애의 공천 성(性)대결이 계속되다 지난 17일 한영애 의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천=당선’이라는 호남지역의 과거 특수성에

비취본다면 한 의원은 이미 금배지를 단 셈. 그러나 현재 보성·화순 지역에선 호남의 '특수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선이라는 다크호스 때문이다. 청와대와 일부 정보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전비서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인물’ 각계 여론확산

박주선 전 비서관에 대한 보성·화순 지역민들의 지지는 지난해 말 그가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과동으로 구속된 뒤 1만5000여 명 지역민들이 구명탄원서를 낸 데서도 나타났다. 지역민들은 고향을 대표해 온 박전비서관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게 한결 같은 반응.

사실 박 전 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고향 최초의 검찰총장감으로 인식돼 왔다. 보성에서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박주선은 보성 남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보성중학교(차석), 광주고등학교(수석)를 거쳐 70년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16회)에 수석으로 합격,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다.

79년 서울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 1년 3개월 만에 초임검사로는 파격적으로 검찰의 꽃인 특수부에 배치를 받아 특수수사팀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5공과 6공, 문민정부시대를 거치면서 호남 출신임에도 청렴과 강직, 탁월한 능력으로 동기들 중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다.

서울지검 특수부 이후 대검검찰연구관, 대검 초대 환경과장, 대검 중수부 3과장·2과장·1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특수1부장, 춘천지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가 다룬 사건 중에는 유난히 대형사건들이 많다. 이철희·장영자 구속사건(82년), 김승현 한화그룹 외화밀반출사건(93년), 대전EXPO 조직위 비리사건(95년), 덕산개발 부도사건(95년),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부인이 연루된 안경사형회로 비사건(96년), DJ비자금사건(97년) 등.

그는 특수부에 있으면서 탁월한 수사능력으로 95년에는 '올해의 공무원상'에 뽑혔고, 공무원으

로는 최고 영예인 황조근정장도 받았다. 검사로서의 외길을 걸을 경우 이번이 없는한 검찰총장은 따논 당상이었다.

2만여명 ‘범시민추대위’ 무소속 출마 강력 요청

박주선은 98년 12월 18일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된 뒤 2년 여만에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낙마하고 말았다. 더욱이 사직동팀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같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등 재기 불능의 상태로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부문은 그의 구속을 놓고 검찰수뇌부간에 치열한 논란이 있었듯이 최근에는 박 전 비서관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법사상 초유의 96명의 초호화 무료변호인단이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옷사건 이후 그토록 원했던 '검찰의 길'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러하자 박 전 비서관을 잘 아는 각계 인사들과 지역민들은 명예회복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성·화순 지역주민 2만여 명이 '박주선 후보 범시민추대위'를 결성하고 박주선 전비서관에게 출마 압박을 가하고 있어, 사법사상 초유의 96명 초호화 무료변호인단에 이어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마는 곧 '金심' (?)

그러나 이에 대한 박전비서관의 태도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처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출마요청이 워낙 강하게, 무소속 출마든 아니든 이에 대한 박전비서관의 결정은 곧 김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의 출마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요시사 2000년 3월 19일 4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총선출마는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지로 나서는데 반해 박 전비서관의 경우는 본인의 거둬들인 고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점이다. 또 DJ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 ‘옷로비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이 돼 개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전비서관은 지난 7일 화순·보성군 국회의원 대다수와 각계인사 등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통령께서 출마를 말리지 않으셨다”는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 옷로비 사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말도 있는데.

▲명예는 재판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출마는 김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는데 내가 더 도움이 일이 남아 있다는 믿음에서 결심하게 됐다. 대통령 주변엔 충성해온 분들이 많지만 몸과 마음에 머리까지 보태 일할 일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옷사건’은 이형자의 자작극으로 판명됐고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만류한적 있는가.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 가장 고민한 것은 ‘내 출마가 행여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께서 말리셨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소했을 때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의미있는 위로 전화를 주시는 등 대통령

의 의중이 출마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다.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 분의 이념을 현실화하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민주당에서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출마를 원치 않는 분위기이다.

▲이미 공천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그럴거라고 본다. 내 출마는 나로서도 어쩔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에 입당해 내 능력이 다하는 한 대통령을 창조적으로 도와 개혁을 완성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다.

-출마결정까지 꽤 고뇌가 있었을텐데.

▲출마는 내 의지보다 화순·보성 주민들의 열의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내게 찾아와 국민의 정부를 위해 일하다 음흉한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공세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일꾼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며 총선출마 추대위까지 만들었다. (지난해 말 그가 옷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고향주민 1만5천여 명은 그의 억울한 옥살이를 풀어 달라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화순·보성 군의원 중 대다수가 나를 돕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찾아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꾼이 되어 달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정말 저버리기 어려웠다. “가슴 깊이 응어리진 한과 눈물을 닦아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는 나도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대통령이 역사의 위인으로 남는데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출마쪽이라고 생각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39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0. 3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기 사 제 목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확보 전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임실 완주지역구 후보인 김태식 의원이 전주-남원간 국도의 교통안전 발전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지역구 현안 해결노력을 3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함으로써 형평성을 결여하였고, 다른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위 각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3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3. 10.자 3면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확보 전력』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임실 완주 지역구 후보인 김태식의원 지역구 현안 해결노력을 3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단 출마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

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3월 10일 3면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확보 전력”

김태식 의원(민주당, 임실, 완주)이 전주~남원간 국도의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의원은 최근 전주~남원간 국도가 ‘마의 도로’로 전락,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급선무라고 보고 9일 이원화 전북경찰청장을 만나 논의했다.

김의원은 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세워 인명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청, 이 경찰청장으로부터 금년도에 72억원을 투자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

김의원은 또한 이 경찰청장과 이 문제를 상의 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200억여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남원간 국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2.2배나 높고 사고율도 평균보다 3.2배나 높아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

김의원은 임실군민의 민원사업의 하나로 이 구간에 내년까지 교차로 신호기, 속도감시기,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추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0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0. 1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기 사 제 목	민주 장성원의원 의정보고회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김제지역구 민주당 장성원 후보의 의정보고회 진행과 예정소식을 1면에 게재하면서 장후보의 치적과 활동상을 부각시킴.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의정보고회, 특히 예정된 의정보고회를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후보의 치적과 활동상을 부각보도함으로써 타 정당 후보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위 각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3. 10.자 1면 『민주 장성원의원의 정보고회』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전북 김제 지역구후보인 장성원의원의 의정보고회 소식을 1면에 사진과 함께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타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3월 10일 1면

민주 장성원의원 의정보고회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지난달 2월 21일부터 김

제시 만경읍을 시작으로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갖고 9일부터는 시내 7개동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에서 장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갈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나열하며 의정보고회를 주도했다.

장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역설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3
매 체 명	경 향 신 문	언 론 사 대 표	홍 성 만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4. 4면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정동 22
기 사 제 목	'南野北與' 구도...민주 "2배 우위"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13총선 초반 관세 시리즈 ⑥ 서울편으로서 최대승부처인 서울에서 13일 현재 민주당이 2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김대통령의 유럽방문성파로 민주당 지지율이 7~8% 급상승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각종여론조사에 기초한 우열도표 게재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각종여론조사에 기초한 각당의 자체분석이라는 관세분석도표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표본 수, 일시, 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각당 후보별 우열표시를 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우려가 있어 위 각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3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 성 만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0년 3월 14일 4면 『南野北與’ 구도…민주 “2배 우위”』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함.

이 유 : 경향신문사는 각종 여론조사에 기초한 각당의 자체분석을 종합, 서울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경향신문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향신문 2000년 3월 14일 4면

‘南野北與’ 구도…민주 “2배 우위”

4·13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13일 현재 민주당이 2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지역구의석 227석 중 45석이 걸려있는 서울에서 민주당은 25~30곳을, 한나

라당은 15~16석을 경합우세 또는 우세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강북, 한나라당은 강남에서 강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자민련은 1곳에서 우세하나 민국당은 역부족이다.

한나라당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자민련의 야당선언과 민국당 창당에 따른 다야구도 형성 등 유일야당으로서의 독점적 위상을 살리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유럽방문 성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7~8% 급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선거기간이 아직까지 한달 정도 남은데다 정치적 돌출변수와 절반 가량의 부동산을 고려할 때 서울관세는 안개국면 속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혼전양상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13일 각 당별 관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중랑갑 도봉갑 등 14곳이 우세지역으로 종로 중구 등 14곳은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은 은평을 강서을 등 10곳이 우세지역으로, 성동 동대문을 등 4곳은 경합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자민련은 관악갑 1곳이 경합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자민련은 관악갑 1곳이 경합우세 지역으로, 동대문갑 노원갑 강남을 등 4곳은 경합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조순(趙淳) 민국당 대표가 빠진 이후, 민주당 이종찬 고문이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위원장을 8~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정대철 위원장이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으나 경합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며, 용산에서는 민주당 설송웅(楔松雄) 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영(陳永)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렸다. ‘보수와 진보’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동은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과 전대협 의장 출신 민주당 임종석(任鍾皙)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며 격전지

로 부상했다. 동대문을 역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의 민주당 허인회(許仁會) 후보보다 앞서고 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동작갑은 민주당 이승엽(李承燁) 후보가 추격중이나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게 역부족이며 양천갑도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후보가 민주당 박범진(朴範珍) 의원에게 고전하고 있다.

같은 ‘386세대’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대문갑은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후보의 경합우세 속에 민주당 우상호(禹相虎) 후보의 추격이 만만찮으며,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저격수로 파견된 강서을의 민주당 김성호(金性鎬) 후보는 더딘 지지율 상승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자민련의 집중지원을 받고 있는 관악갑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과 격전중이나 3과전의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6선 고지에 도전하는 양천을의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은 한나라당 오경훈(吳慶勳) 후보의 맹추격과 무소속 양재호(梁在鎬) 후보의 도전이 힘겹다. 동대문갑은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후보의 우세속에 한나라당 한승민(韓承珉), 자민련 노승우(盧承禹), 민국당 심양섭(沈良燮) 후보의 반격이 드세다.

하지만 민주당의 광진을 추미애(秋美愛) 의원을 비롯해, 중랑갑, 중랑을, 성북갑, 강북갑, 강북을, 도봉을, 서대문을, 영등포을, 관악을 등은 한나라당 후보를 큰 차로 따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은평을의 이재오 의원, 마포갑의 박명환(朴明煥) 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넓히고 있다.

구 여권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강남벨트에서는 송파을의 민주당 김성순 후보가 한나라당 최한수(崔漢秀) 후보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강동을의 심재권 후보가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의원과 접전을 벌일 뿐 나머지는 열세로 분류된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4
매 체 명	매 일 경 제	언 론 사 대 표	장 대 환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4. 6면	소 재 지	서울 중구 필동 1가 51
기 사 제 목	간판인물 부재... “뚜껑 열어봐야”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대구·경북지역 총선 민심을 현지취재 형식으로 스케치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 일부의 인터뷰 내용과 선거 판세를 분석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3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인터뷰기사) 제1항

• 위반내용

대구·경북지역의 총선민심에 대해 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은 정당한 근거의 제시없이 판세를 예측 보도함. 한편 근거가 박약한 판세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에 부합하는 유권자의 인터뷰만을 게재, 해당 지역구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도외시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필동 1가 51

대표이사 장 대 환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매일경제 2000년 3월 14일 6면 『간판인물 부재...“뚜껑 열어봐야”』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매일경제신문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정당한 근거없이 특정후보로 치우치는 대구·경북지역의 판세를 보도하였는 바, 이는 총선에 임하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6조(사실 보도) 제3항 각 위반】

또한, 이 기사는 민심향방의 근거로서 위 판세분석에 부합하는 유권자의 인터뷰만을 게재, 해당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도외시 하고 있는 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인터뷰 기사) 제1항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매일경제 2000년 3월 14일 6면

간판인물不在...“뚜껑 열어봐야”

대구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라고는 할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인 김 모씨(47)는 “대구에 인물 부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의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자민련과 민국당의 반격도 예상되지만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인물이 없으니 우야겠노.”

동구에 산다는 개인택시기사 최주환씨(37)의 말이다.

■ “민국당, 힘들끼라예”

민국당 바람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약하다.

경제단체 간부 I씨(47)는 “유력주자로 꼽히던 수성구의 이진무씨가 당적을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돌아선 것을 보더라도 민국당은 많이 힘들끼라예. 동구의 서훈 의원 정도가 동정표로 한나라당에 도전해볼 만할 겁니다”고 말했다.

자민련 사정도 크게 나은 편이 아니다. 대구의

자민련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철언 의원 지역구인 수성갑 주민 이승국 씨(수성구 범어동·67)는 “우리는 박철언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부인까지 당선시켜 줬는데 우리에게 해준 게 뭐꼬. JP도 쫓대가 없는기라”며 박철언 의원과 자민련을 함께 비난했다.

대구·경북(TK) 간판인물의 부재는 선거 무관심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성구에 산다는 전 모씨(40)는 “이번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관심도 없습더.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눈길을 줄 것 아닙니까”라고 성가신 듯 சொ아붙였다.

■ “씩어도 준치 아닌교”

경북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영남 대표당을 자처하고 나선 민국당 김운환 최고위원(구미)과 민주당 장영철 의원(칠곡)은 당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선대위원장인 울진의 김종권 씨(민주당)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의외로 고전하고 있다.

김운환 최고위원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부분 구

미시민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할 인물이 없다는게 이 지역 민심이다.

“밧지만 우야겠노. 4공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래도 김윤환 최고위원을 밀어야제.” 구미시 원남동에 사는 김낙선 씨(72)의 말이다.

구미의 경제단체 간부인 K씨도 “세대교체를 내세운 경북도의원 출신 김성조도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기는 하지예. 그러나 ‘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면 김윤환일깁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철 의원과 이수성 민국당 상임고문이 맞붙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칠곡은 장영철 의원이 독주하는 양상이다. 반면 이수성 고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칠곡군 왜관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세희 씨(60)는 “지역발전을 위해 한 기 뭐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또한 “한나라당 이인기 변호사는 똑똑하제, 참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는 장영철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야당성향의 울진. “김중권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울진은 이미 집권당 간판을 내건 군수를 배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초 김중권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당 간판에 관계없이 김광원 한나라당 현 의원에 맞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민심에 이상징후가 목격되고 있다.

울진군 울진읍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민 모씨는 “울진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야당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여당소속의 현 군수는 박정희 이미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당적과 관계없이 선출됐다고 봐야지예. 김중권 위원장은 이전 정권에서도 여당으로 출마했다가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라며 김광원 의원을 찍겠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5
매 체 명	문 화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김 진 현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4. 1, 2, 4면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기 사 제 목	3당 지역바람 여전...민국저조, '텃밭 대결' ...이변은 "아직 없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3당 지역바람 여전한데 민국당은 저조하다는 기사 요지. 민국당 유력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게재.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최소한 조사기관, 표본 크기, 조사 방법, 조사일시를 밝혀야 하나 단지 조사기관만 밝히고 표본 크기나 조사 방법, 조사일시 등은 밝히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5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김 진 현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현대문화신문사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0년 3월 14일 1, 2면 『3黨 지역바람 여전 ... 민국 저조』, 4면 『' 텃밭 대결' ... 이번은“아직 없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함.

이 유 : 문화일보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

이에 당 위원회는 문화일보사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7.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3黨지역바람 여전... 민국 저조

16대 총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이 기존 지지기반에서 높은 지지세를 확보, 여전히 3각 지역분할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 민국당은 고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 전국적 관심지역인 부산 서, 대구 수성갑, 경북 칠곡, 충남 보령·서천, 강원 춘천, 전남 보성·화순 등 수도권 이외의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13일 오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국당의 유력후보들은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설문에 대해 부산 서구의 경우,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후보가 지지율 25.7%로 1위를 달리고, 민국당 김광일(金光一)최고위원은 3위로 6.4%에 그쳤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최근 투입된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후보(35.9%)가 현역의원인 자민련 박철언(朴哲彦)후보(25.1%)에 앞섰다.

경북 칠곡에서도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후보(42.9%)가 민국당 이수성(李壽成)전총리(24.1%)를 큰 차이로 따돌리는 등 아직 영남권에서 한나라당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자민련 이금규(李肯圭)후보(28.6%)가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후보(18.9%)에 10%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보성·화순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한영애(韓英愛)씨(47.8%)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주선(朴株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23.6%)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 호남지역에서 무소속 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신뢰구간에서 $\pm 4.4\%$ 이다.

‘텃밭 대결’... 이번은 “아직 없다”

부산 서구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과거 야당시절 선거구였던 부산서구는 정당과 후보지지도 모두 한나라당이 민주국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응답층이 유난히 높은 50.5%(후보지지도)-60.3%(정당지지도)에 달해 선택을 망설이는 부산 표심(票心)의 단면을 보여줬다.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 의원은 블루칼라층(33.0%)을 중심으로 25.7%의 지지를 얻어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국당의 김광일(金光一)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그간 극단적인 지역감정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오규 위원장(10.6%)에게도 뒤진 6.4%에 머물렀다.

한나라당 공천자로 발표됐다가 전격 경질된 무소속 이상렬(李相烈)씨는 4.2%를 얻었다.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21.8%) 민주당(9.7%)에 이은 5.2%에 그쳤다.

그러나 김광일 씨의 경우 자영업자(12.1%)화이트칼라(13.0%) 등 여론주도층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막판 추격세가 주목된다.

높은 유동층 비율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4.9%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남 보성·화순

전남 보성·화순의 민주당 전국구 한영애(韓英愛)의원과 무소속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간의 경쟁은 한의원의 압도적인 우세로 진행중이다. 지난해 옷로비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한 박 전 비서관은 응답자의 23.6% 지지를 얻어 한의원이 얻은 47.8%에 크게 못미쳤다. 한나라당 정인환(鄭仁煥) 지구당위원장은 4.0%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투표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1.2%가 '투표한다'고 응답, 높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특징적인 것은 한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49.7%)수준을 반영한데 비해 박 전 비서관은 무소속 지지도(6.0%)를 훨씬 초과, 인물 본위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박 전 비서관은 당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0일동안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지지도를 2배 이상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의원은 출신지인 화순군(56.7%)과 여성층(52.2%)을 지지기반으로, 직업별로는 전 직종에서 고른 지지율을 보였고 특히 블루칼라의 경우 75.2%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박 전 비서관은 고향인 보성군(29.1%)과 남자(30.8%), 자영업자(33.7%)중심으로 지지도를 형성한 가운데 학생들(59.3%)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대구 수성(갑)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김만제(金滿堤) 전 포철회장이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응답자 35.9%의 지지를 얻어 25.1%에 그친 박의원을 10.8%포인트 리드하고 있다. 민주당 강기룡씨는 6.4%를 얻었다.

정당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37.7%로 민주당(6.1%)과 자민련(4.9%)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김 전회장이 정당지지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의원은 낮은 정당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인물력을 기반으로 만만찮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박의원은 특히 블루칼라층에서 38.3%를 얻어 김 전 회장(30.8%)을 앞섰다.

김 전 회장은 50대이상 고령층(42.3%)에서 지지도가 특히 높았다.

동별로는 김 전 회장은 범어동(44.7%)과 만촌·황금동(37.2%)에서, 박의원은 고산동(33.8%)에서 각각 상대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7.6%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지지도를 분석한 투표성향층 조사에선 김 전 회장이 37.2%, 박의원이 25.3%를 각각 차지해 격차가 11.9%포인트로 다소 확대됐다.

충남 보령·서천

충남지역 최대 격전지인 보령·서천에서 자민련 원내총무인 이금규(李肯珪·28.6%) 의원이 자민련을 탈당한 뒤 한국신당을 창당한 김용환(金龍煥·18.9%) 의원을 10%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평통사무국장을 지낸 민주당 김명수(金明洙·11.0%)씨와 한나라당 안홍렬(9.0%) 변호사가 이었다.

특히 이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자민련의 충청표 결집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당별 지지도는 자민련(22.4%) 민주당(9.3%) 한나라당(7.0%) 순이었으며 한국신당은 3.0%에 그쳤다.

그러나 무응답층이 32.5%에 달해 정당지지도 유동층이 매우 높았다.

보령과 서천간 소지역감정도 일부 작용, 서천에선 서천출신인 이의원이 보령출신인 김의원을 36.4% 대 15.4%으로 크게 앞선 반면 보령에선 이의원과 김의원이 23.9% 대 21.1%로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농업종사자(36.0%)와 학생(37.5%)들로부터, 김의원은 사무직(38.0%)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경북 칠곡

칠곡은 장고 끝에 출마를 선언한 민국당 이수성(李壽成)상임고문의 가세로 일단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짜이고 있다.

현재로는 응답자 42.9%의 지지를 얻은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변호사가 이수성((24.1%) 고문과 민주당 장영철(張永喆·21.2%)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42.2%로 단연우세를 보였다. 민주당(19.5%)은 열세지역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나 민국당(4.5%) 자민련(2.7%)의 세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호사는 남성(45.3%)이 여성(40.5%)보다, 연령별로는 30대(48.7%)에서, 직업별로는 학생층(66.1%)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고문도 여성보다 남성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장의원은 여성의 지지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응답층이 타 지역보다 훨씬 적은 11.8%에 불과해 현재의 3파전 구도가 유지될 경우 이번호사가 안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평소 가까운 사이인 이고문과 장의원이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의 현재 지지도를 단순 합산하면 45.3%에 달해 이번호사를 추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춘천

춘천은 강원도 '정치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야 4당이 지명도와 경쟁력을 겸비한 막강한 후보들을 출전시켜 전국 최대의 혼전지역중 하나다.

한나라당 유종수(柳鍾洙)후보가 응답자의 23.8% 지지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민주국민당 한승수(韓昇洙)후보(18.6%), 민주당 이상룡(李相龍)후보(17.6%)가 추격전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지지도가 5.9%에 불과한 민국당 간판으로 18.6%의 지지를 얻은 한승수 후보가 '신당바람'을 탈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5대 총선에서 400여 표차로 낙선한 자민련 이민섭(李敏燮)후보도 11.6%의 지지로 일단 선두 추격권의 교두보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연령별 지지도에선 강원도에서 대학까지 마친 유종수 후보가 농·수·축산업 종사자들(36.4%)을 축으로 전반적인 우세를 보인 가운데 부총리를 지낸 한승 후보는 화이트칼라층(39.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상룡후보는 자영업자(23.7%)와 블루칼라층(43.6%)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했다.

12대부터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이민섭 후보는 40대(16.5%)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7
매 체 명	중 부 매 일	언 론 사 대 표	박 성 규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6. 2면	소 재 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기 사 제 목	4·13 총선 이모저모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충북도내 지역구의 총선 후보자들의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잘못했거나 타 당후보가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스케치 기사 7건 가운데 민주당을 비난하는 기사가 4건(사진포함)이며 한나라당 후보의 움직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것은 3건을 차지해 보도의 형평성을 잃어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줄 가능성이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대표이사 박 성 규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중부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0년 3월 16일자 2면 『4·13 총선 이모저모』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중부매일신문사는 총선 스케치기사 7건을 묶어 보도한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3건은 민주당이나 그 후보들에게 불리한 측면을 부각한 반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

약, 지역민 애로청취, 선거전 준비상황, 과문서를 돌린 타 당후보 비판기자회견 내용 등 비교적 유리한 측면을 다룬 기사 3건을 게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총선에 임하는 특정정당과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1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부매일 2000년 3월 16일 2면

민주당 홈페이지 ‘충청 誤記’ 지역민 비난

“지명도 제대로 모르나”

○...오는 총선과 관련, 15일 민주당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4.13클릭」 지구당 및 후보게재란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지명이 「충천북도와 충천남도」로 돼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이를 비난.

일부 유권자들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처관계자들이 아무리 선거 업무로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 해도 이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전국 8도 지명 중 실수라지만 유독 충청도 지명만 이렇게 틀려도 모르고 게재된 것은 그만큼 「무관심과 무대접」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힐난.

농업경영인 모임서 세몰이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이날 오후 청주을량동에 있는 청원군 농업경영인 사무실에서 열린 농업경영인 모임에 참석, 『비료·농약의 저가 공급과 면세유류의 지속적인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그는 또 농업경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수·산업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대 등을 포함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

여론조사 변형된 불법선거

○...청주흥덕구에서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최현호 충청대검입교수측은 이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를 빙자,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 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

최입후보예정자측은 특히 『이는 변형된 불법선거』라고 규정한 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후보측은 조속히 이 같은 행태를 자제를 해야 한다』고 한마디.

“낮은 정치 답습 실망” 공방

○...한나라당 윤경식 위원장측은 『15일 오후 개최된 민주당 노영민 위원장의 개편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친 것을 축하한다』며 『그러나 관광버스를 이용,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은 집권당위원장으로서 낮은 정치를 답습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박.

윤위원장측은 특히 『세과시 형태의 이같은 정치행사는 새 정치문화 창출에 역행되는 처사』라며 『앞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끝나는 기간까지 여당후보답게 공명선거 실천을 기대한다』고 은근히 겨냥.

경제총수 발언 자가당착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15일 청주흥덕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지난 제15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가 환란책임자로 비난했던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를 이제는 같은 당이라며 「경제총수」라고 추켜세우는 등 자가당착의 모습.

이날 이선대위원장은 『청주상당의 홍 전 부총리는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제각료로 청주흥덕의 젊은 정치기수 노영민 위원장과 함께 충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쌍두마차」라며 지지를 호소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고개를 가우뚱.

조직책 강화 선거전 돌입

○…한나라당 보육영 출마 후보자인 심규철 위원장(42)이 지구당 조직을 강화하면서 각 읍면의 이동 단위별까지 조직책을 강화시켜 본격 선거전에 돌입.

에 돌입.

이에 한나라당 보육영 지구당은 지난 14일 당직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천안 중앙연수원에서 당원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구인 6백14개 마을 이동 단위 조직책 인선을 완료한채 심후보 알리기에 총력전.

상대방 비난 과문서 비판

○…한창희 한나라당충주지구당위원장은 15일 오전 충주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청주방송에서 방영된 후보자 대담방송과 관련, 모정당측이 자신을 비방하는 과문서를 팩스를 통해 돌렸다』며 『공정선거를 제안하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정당이 스스로 상대출마자를 비방하는 과문서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

한위원장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48
매 체 명	문 화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김 진 현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7. 1. 2. 5면	소 재 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기 사 제 목	서울 총선판세 급변(1,2면), 요동치는 선거판 '수도권혈투' (5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서울지역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상승해 대다수 선거구에서 민주당과의 양자대결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 위반내용

2월 16일과 3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소한 조사주체와 일시를 밝혀 비교할 수 있고 근거를 제시했으나(5면) 이 여론조사보도는 구체적인 지지율을 예시하고도 조사주체,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을 밝히지 않아 위 관련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4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김 진 현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현대문화신문사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0. 3. 17.자 1, 2면 『서울 총선판세 급변』, 5면 『요동치는 선거판 ‘수도권혈투’』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함.

이 유 :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는 각종 여론조사를 기초로 서울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게재한 바 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률,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국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한정된 지면, 신속한 보도 등 신문제작상의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함께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당위원회는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가 게재한 위 심의대상기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문화일보 2000년 3월 17일 1,2면

서울 총선판세 급변

서울지역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상승해 대다수 선거구에서 민주당과의 양자대결구도가 정착되고, 충청북도에서는 민주당후보들이 약진하는 등 16대총선 초반 선거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여야 정당의 자체분석 및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17~18% 수준이었던 서울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최근 7~8%포인트가 올라 평균 25% 안팎을 기록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30% 정도로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판세변화는 한나라당이 국가부채 규모 및 '국부유출' 문제 등 현정권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정책이슈로 제기하는 데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민국당이 1~2%의 저조한 지지율을 면치못한게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여야 선대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인천 경기지역은 기존판세에 변화조짐이 거의 없어 아직 양당간 정책공방 등의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의 경우 홍재형(洪在馨) 전 경제부총리의 청주 상당 공천 및 '이인제(李仁濟) 바람' 등에 힘입어 7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민주당이 자민련 후보를 누르거나 박빙의 차이로 경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일 선대위확대간부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경제정책공방과 새로 불거진 병역공방에 적극 대응 전략을 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국민 지명도가 높은 이인제 선대위원장 등의 정책공방전 적극 투입, 총선거획단내 이슈개발을 위한 전략기획국 강화 등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17일 서울 등의 지지율 상승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97개 의석중 60석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병역비리 수사 등을 포함한 여당의 '신관권선거' 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화일보 2000년 3월 17일 5면

요동치는 선거판 '수도권혈투'

선거일을 20여 일 앞두고 서울과 충북권의 판세가 급변, 이번 총선의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각 당의 자체분석과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정책공방과 신관권시비 등 여야간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서울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7~8% 상승, 다시 민주당과의 치열한 양당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가 지난 2월 16일 한나라당 공천과문이 일어나기 직전 조사한 지지율은 민주당이 27.0%, 한나라당이 26.2%로 완전 백중세였다. 그러나 공천과문과 민국당 창당 직후인 3월 2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30.4%, 한나라당은 20.3%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 정책 정치 공방에서 야당이 기선을

선점하면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공천
파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의 민국당 영향력 상
실 ▲정책공방으로 양당구도 정립▲자민련의 야
당화 실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나라당은 17일 선대위
원장실에 걸쳐 있는 전국 관세지도 중 수도권 부
분을 수정, 그동안 열세나 경합열세 지역으로 분
류됐던 일부 지역을 한등급씩 올렸다. 한나라당
은 종로(정인봉·鄭寅鳳)와 중구(박성범·朴成
範) 등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경합 및 경
합열세지역으로 분류했던 성동(이세기·李世基),
양천갑(원희룡·元喜龍) 등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김한길 기획단장도 서울지역의 이같은
변화를 시인하고 있다.

김단장은 “상승세에 있던 386후보들의 기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은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던 종로(이종찬·李鍾贊)
와 경합우세 지역을 분류했던 양천갑(박범진·朴
範珍) 등을 한등급씩 내리고 386후보들이 출마한

구로갑(이인영·李仁榮), 마포갑(김윤태·金倫
兌), 서대문갑(우상호·禹相虎), 성동(임종석·任
鍾哲) 등의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지역의 승기를 이어나가기 위
해 관권 선거 공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입장이
고 민주당도 쟁점주도를 위해 당내에 기획전략국
을 신설하는 등 비상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지역은 민주당이 홍재형(洪在馨) 전
경제부총리를 청주 상당에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청주 흥덕, 충주, 청원지역에서 민주당과 자민련,
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3당간의 경쟁이 치열하
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지역은 인제 바람이 불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JP바람이 북상하
면 이인제(李仁濟) 바람은 없어질 것”이라는 주
장이다. 민주당은 한화갑(韓和甲)지도위원을 유
세전에 투입키로 했다. 한지도위원은 “우리가 먼
저 내각제를 파기했으면 김용환(金龍煥)의원이
왜 자민련을 뛰쳐나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를
비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6
매 체 명	한 라 일 보	언 론 사 대 표	강 영 석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2. 29. 9면 3. 16. 2면 3. 22. 2면	소 재 지	제주시 삼도1동 568-1
기 사 제 목	제주출신 원희룡변호사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원희룡변호사 위원장 선출 / '닭은꼴 이력' 화제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한나라당 서울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원희룡 후보와 관련 선거준비상황, 지구당 위원장 선출, 대만의
천수이벤 당선자와의 닭은점 등을 3차례에 걸쳐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원희룡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출마하는 유일한 본도출신 후보』라 하더라도 특정후보를 세차레나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6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제주시 삼도1동 568-1

대표이사 강 영 석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한라일보사가 발행하는 한라일보 2000. 2. 29.자 9면 『제주출신 원희룡변호사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3. 16.자 2면 『원희룡변호사 위원장 선출』, 3. 22.자 2면 『‘짧은꼴 이력’ 화제』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한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서울 양천갑 선거구 원희룡후보 관련 소식을 세차레나 보도한 것은 원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출마하는 본도출신 후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한라일보 2000년 2월 29일 9면

제주출신 원희룡변호사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채비

이번 16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원희룡 변호사가 28일 지역구에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원씨는 서귀포 태생으로 지난 82년 대입학력고

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출마하는 본도 출신 후보다.

한편 원씨의 지역구는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로 여기에는 목1~6동 및 신정 1·2·6·7동 등 총 10개동이 포함된다.

한라일보 2000년 3월 16일 2면

서울 양천갑지구당 임시대회 원희룡변호사 위원장 선출

한나라당은 15일 서울 양천구 다목적회관에서 지구당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제주출신 원희룡 변호사(38·서귀포시)를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 홍사덕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박명환 서울시선대위원장, 본도출신 변정일(서귀포시)·현경대 의원(제주시), 이신범·김홍신·김정숙·김영선 의원, 오세훈 변호사, 서울제주도민회 고안호 회장, 고남화 고문, 김행의·고문학 부회장, 강원호 재경성산읍민회장, 고동완 재경남원읍민회장, 김두영 재경우도면회장, 부청하 감사 등 중앙당직자와 당원 등 2천여 명의 지지자가 대거 참석했다.

원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감정을 불모로 하는 보스정치, 패거리 정치의 정치풍토를 바

꾸기 위해서는 구시대 인물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개혁이 필요하며 4·13총선은 낡고 병들어 물러갈 세력과 소신과 정의의 젊은 힘이 국가 발전의 운명을 걸고 대결하는 한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고향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 급거 상경한 변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순수한 청년 원위원장의 선택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준 것이며 당선되면 분명 새로운 정치변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의원은 원위원장이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선거는 법학도로서 정도를 걸으면서 전문성을 키워 온 차세대 신진인사를 배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구당 임시대회를 정당 정치사상 최초로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젊은 후보 이미지’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한라일보 2000년 3월 22일 2면

대만 총통 당선자 천수이볜·제주출신 원희룡

‘젊은 꼴 이력’ 화제

50년만에 대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천수이볜

(49) 당선자와 제주출신으로 4·13총선에서 서울 양천갑구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자(36)의 이력이 너무도 닮아 화제가 되고 있다.

천당선자가 지난 51년 2월 대만의 남단 타이난

에서 빈농의 아들로, 원후보는 64년 2월 한반도 남단 서귀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것.

이들 두 사람은 출생지와 어릴적 환경이 유사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수석을 차지해 '신동'이라고 불린 것도 공통점이다.

천당선자가 법률고시 최우수 성적으로 법률가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입문한 것처럼 원후보 역시 서울대 수석입학, 사법시험 수석합격 등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또 일단 목표를 정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천당선자와 집중력이 강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야 마는 원후보의 업무스타일이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

또한 대만독립 운동에 투신한 천당선자와 80년대 노동야학과 노동운동에 앞장선 원후보 모두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역경을 이겨낸 외유내강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원후보는 오는 27일 저녁 7시 서울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 인명진 후원회장 등 당원 및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후원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59
매 체 명	경 남 신 문	언 론 사 대 표	이 문 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0. 4면	소 재 지	창원시 신월동 100-5
기 사 제 목	총선 D-24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창원갑·진해지구당 기사와 관련사진, 한나라당 부산북·강서을지구당 정기대회 기사, 민국당 부산영도, 남해·하동지구당 창당대회 기사와 관련사진을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같은 날에 열린 3개당의 지구당 창당대회 및 정기대회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의 행사사진만을 보도하지 않아 특정당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5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이 문 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0. 3. 20.자 4면 민주당, 한나라당, 민국당 지구당 대회 관련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경남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3개정당 부산·경남지역 지구당대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정기대회 관련 기사에만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15조(사진게재)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경남신문 2000년 3월 20일 4면

민주당 창원갑·진해지구당 개편대회
위원장에 이상익-윤철재씨 선출

새천년민주당은 주말인 지난 18·19일 이틀간 창원과 진해에서 잇따라 지구당 개편대회를 열어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창원시 반송동 경남도 운수종사자연수원에서 창원갑지구당 개편대회를 열어 이상익 前국민회의지구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선출하고 총선필승결의를 다졌다.

또 19일 오후 진해시민회관에서 열린 진해지구
당 개편대회에서 윤철재 前국회의원 보좌관을 위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상익 위원장(창원갑)은 인사말에서 『현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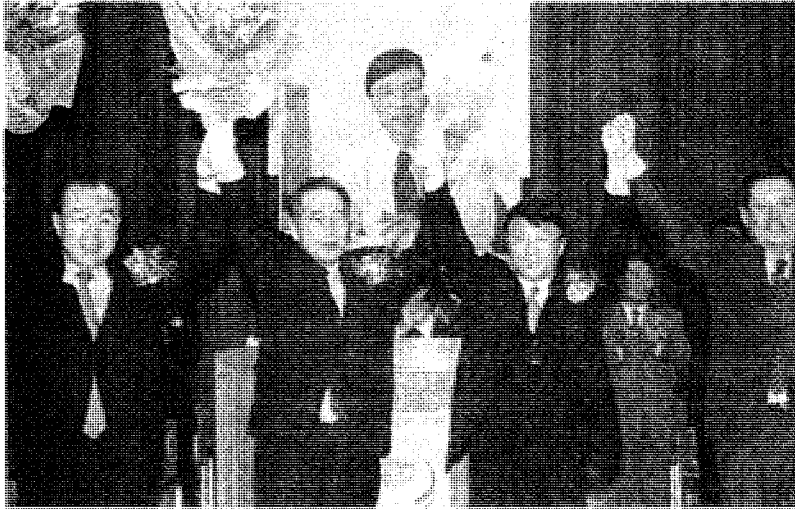
각종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있는 여
당위원장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창원·마산 YMCA 사무총장 등 시민사
회운동가로 야당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정치역
정을 소개하면서 가장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윤철재 위원장(진해)은 인사말
을 통해 『시세(市勢)에서 진해는
창원과 마산에서 밀리고 이번 한
나라당 공전에서도 많은 문제점
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국
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행정과 의
정경험이 풍부한 새인물로 인적
교체를 실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재 영남남부 선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총선은 인
물교체를 통한 세대교체로 정치
개혁과 경제안정을 꾀하는데 목
적이 있다』면서 『창원과 마산, 진
해 등은 유권자들의 정치변혁에
대한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
원에서 30~40대의 참신한 인물
을 전진 배치한 만큼 「누가 진정
한 일꾼인지」를 꼼꼼히 살펴 개
끗하고 유능한 민주당 후보를 적
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창원갑개편대회에는 김기
재 영남남부 선대위원장과 유삼
남 연수원장, 최일홍 경남 선대
공동본부장, 장영달 의원, 차정



한나라당 의원은 공전철회 명단에 포함된 인사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창원의 현
실』이라고 꼬집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계~북면 지방도의 국가지원 지방도」건의 등

인·박재혁 위원장 등이, 진해개편대회에는 유
연수원장과 도내 지구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
다.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정기대회 위원장에 허태열씨 선출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지구당 정기대회가 19일 오후 부산시 북구 덕천 2동 낙동고교 강당에서 홍사덕 선대위원장과 당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허태열 씨를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서 홍선대위원장은 『지난 97년말 국제투기자본에 의해 불과 4개월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7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만났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대한민국만이 나라 망친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몰매를 던졌는데 이는 이 정권이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은 삼성전자와 포항제철 등 모든 우량기업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지적

한 뒤 『지난 1년 동안 47조7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증권시장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고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

람은 외국투자가들뿐』이라고 강조하는 등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형근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외국 순방을 마치고 온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10석 정도 앞선다는 보고를 받고 갑자기 병역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이성을 잃은 증거』라며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대통령과 청와대가 총감독과 연출을 맡아 금권·관권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관광을 위해 북한에 6년간 1조2천억원을 주고 100만달러를 줄테니 음악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김대통령이 김정일과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몰아붙였다.

민국당 부산영도, 남해·하동 지구당 창당 위원장에 김용원-남명우씨 선출

민주국민당이 주말인 18,19일 이틀간 남해·하동과 부산 영도에서 지구당 창당대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경남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민국당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영도초등학교 강당에서 신상우 이기택 박찬종 김광일 최고위원, 문정수(북·강서을) 前부산시장 등을 비롯한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국민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를 열어 김용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급한 일만 있으면 부산에 내려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작 부산이 힘들때는 외면하는 등 부산을 이용만 했다』고 밝히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김대중 정권과 당당히 맞싸울 수 있는 진짜 야당인 민국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도 『이회창 씨가 이끄는 한나라당

은 더 이상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외받는 부산을 누가 대변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前부산시장은 『이 정권은 멸절한 삼성자동차를 부도위기에 처한 대우자동차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4조원짜리 공장을 8분1에 불과한 5천억원을 받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국당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하동을 읍내리 하동초등학교 갈마관에서 김상현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하동지구당 개편대회를 갖고 남명우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남위원장은 이날 『총선에서 기필코 압승해 썩은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서겠다』며 『과연 총선후보 중 농촌에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겠느냐. 농촌을 잘 아는 이 사람만이 적격자로 남해·하동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새천년 민주

당은 정당중에 가장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김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면 총재직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 아직도 총재직을 맡고 있는데 총재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한 정당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신하고 현명한 남명우 위원장을 적극 밀어 낙후된 하동·남해발전을 획기적으로 이

끌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상현 대표최고위원, 강갑중 진주지구당 위원장, 유홍재 사천지구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국당·남해·하동지구당 창당대회에서 남명우 위원장 등 참석 인사들이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0
매 체 명	국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재 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1. 1면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5
기 사 제 목	JP충청권 수성 전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김종필 명예총재가 20일 대전대덕과 논산·금산 지구당대회에 참석해 충청권 텃밭지키기에 전력을 다했다는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 위반내용

국도일보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자민련 텃밭인 충청권의 세력을 유지하기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자민련에 유리하도록 기사제목을 크게 보도하고 있음. 또 이 기사에는 민주당의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활동이 함께 취급되고 있음에도 제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정보도의무와 정치적 중립조항을 위반했음.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5
대표이사 이 재 준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국도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도일보 2000. 3. 21.자 1면 『JP총청권 수성 전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국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자민련 명예총재와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총청권 지원활동을 함께 전하면서 자민련의 정치 활동내용만을 제목으로 달아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국도일보 2000년 3월 21일 1면

JP 총청권 수성 전력

이한동총재 등 수뇌부 총동원... 지역 민심잡기 박차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20일 오전 대전 대덕(위원장 최환), 유성(위원장 이창섭), 논산·금산(위원장 김범명) 지구당 개편대회 및 정기대회에 잇따라 참석, 총청권 텃밭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논산·금산 행사가 끝난 뒤 김명예총재는 공주를 찾아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총재는 JP의 고향인 부여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이들 대전, 충남 5개 지역은 부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과 한나라당 한국신당 등 다른 정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경합내지 열세 지역이며, 수뇌부의 이날 방문도 열세 반전을 위한 세몰이의 성격이 짙었다. 공주·연기의 경우 자민련 공천에서 탈락한 김고성 의원에 대한 호응도와 지지도가 지역에서 이의로 호전되고 있어 자민련의 상징지역인 이곳에 당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명예총재와 이총재는 내각제 문제와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으며,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경제과탄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두 사람은 민주당 이인제 선거대위원장의 고향인 논산에서는 이위원장을 겨냥, “총선인데도 마치 대통령 유세인양 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다”, “고향선배를 몰라보는 몰도덕한 사람”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명예총재는 대전과 논산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5년간 정권을 맡으면서 나라경제를 절단내고도 사과한번 하지 않은 사람들 모인정당”이라며 “더이상 후안무치한 정당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내각제 약속을 짓밟아버린 신의없는 정당과는 더이상 공조가 없다”며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면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게된다”고 주장 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충북 지역을 돌며 충청권 바람몰이를 계속하는 등 경

합지역에 대한 측면지원활동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지구당개편대회가 이날로 총 226개 대상 지구당 가운데 200개 이상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주 후보등록 전까지 지구당 개편대회를 끝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이날 지구당 개편대회 행사 참석없이 충북 충주(위원장 이원성) 진천·음성·괴산지구당(김진선)을 방문,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총선필승 결의를 다잡했다.

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도 약과 중산층, 서민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요한 고비”라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험난한 파도를 넘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갖도록 하자”고 강조 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1
매 체 명	주간 내일신문 (울산)	언 론 사 대 표	최 영 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1 13면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4-9
기 사 제 목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진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대전·충남지역에 아직 어떤 ‘바람’도 없으나 선거 막판에 가서는 다시 ‘JP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전망.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6조(사실보도)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선거기사심의위기준 제10조(인터뷰 기사)

• 위반내용

대전·충남지역 표발 분위기를 전하면서 조사주체·표본의 크기·조사일시·조사방법 등 여론조사의 최소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판세분석을 하고 있으며,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진다”는 제목에서처럼 ‘JP바람’을 단정적으로 거론하거나 전체 논지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 흔적이 많아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1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 내일신문(주간 울산내일신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4-9
대표이사 최 영 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주간 내일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울산내일신문 2000. 3. 21. 자13면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진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주간 내일신문(주간 울산내일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몇사람만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JP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역감정표’의 동향을 예측보도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3조(객관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제 3항 각 위반】

이에 당 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주간내일신문 2000년 3월 21일 13면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진다

“아직 이인제 바람은 없다. 그러나 JP바람도 없다.”

지난 2월 말 한길리서치연구소 홍형식 소장이 충청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한 말이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지역감정 조장’과 ‘색깔시비’라는 쌍갈춤에도 아직 충청권이 결집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자민련 후보들이 밀리는 양상이다.

논산·금산에 출사표를 낸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자민련 김범명 의원에게 3배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 텃밭인 대전에서조차 송석찬(유성·민주당), 김원웅(대덕·한나라당) 후보가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 이인제 대통령 분위기”

이런 양상을 놓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이인제 선대위원장 특사로 충청권을 다녀온 김화중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인제 씨가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듯한 분위기”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 추세면 충북 4석, 충남·대전 3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인제 벨트’의 위력이 본격화되면 백중지역도 우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충청 현지에서는 ‘이인제 바람’에 대해 반산반의하는 표정이다.

대전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인제 바람은 논산·금산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찬(대전 유성), 이원성(충북 충주), 노영민(청주 흥덕)후보 등의 높은 지지도도 이인제 바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지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3월1일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천안북 지구당을 지원 방문한 자리. 전용학 위원장의 천안고 동문을 포함한 100여 명의 당원들이 “이인제” “전용학”을 연호하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자민련에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 후 바로 민주당으로 말을 바꾼 탄 전위원장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지만, 이인제 선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시큰둥한 감

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바람은 닷새 전에 분다

자민련도 ‘이인제 바람’에 대해 일단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련 후보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자, 대전 선거대책본부장을 이원범 의원에서 강창희 의원으로 바꾸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민련 대전시지부 이정익 조직부장은 “충청도 사람들은 속내를 잘 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이인제 선대위원장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보이지 않지만, 결국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부장은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이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97년 대선 후보 경선 불복을 지적한 것이다.

자민련 관계자들의 기대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처럼 ‘지역감정표(票)’는 선거 닷새 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씨는 “3김이나 지역감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심중팔구 실제 득표력과는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고도 실제 투표에서는 지역정서대로 찍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2
매 체 명	정 읍 신 문	언 론 사 대 표	김 태 룡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1. 2면	소 재 지	전북 정읍시 수성동 666-1
기 사 제 목	4·13총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정읍선거구 후보자들의 입자·출마의지와 활동상황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함.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 위반내용

후보자들의 활동상황을 보도하면서 특정후보들의 이름만을 부제목에 언급했고, 그 후보들의 인물사진만을 게재하여 언급되지 않거나, 사진이 실리지 않은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소속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2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정읍신문사
전북 정읍시 수성동 666-1
대표(발행인) 김 태 룡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정읍신문 2000. 3. 1.자 2면『4·13총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정읍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전북 정읍 지역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을 사

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특정당 소속 후보들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해당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읍신문 2000년 3월 1일 2면

4·13총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김원기고문, 각종 행사 참석, 시의원들과 오찬도
무소속 후보 김세웅총장·이장형교수·황승택소장 자신감 피력

16대 총선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원기 고문과 이에 도전하는 김세웅 사무총장과 이장형 교수, 황승택 소장 등 무소속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전통 야당의 지역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도시로 변모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던지는 표심 향방이 모두의 관심거리다. 특히나 4선의원 출신으로 이번에 5선이라는 정치 거목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표를 던진 김원기 고문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의 면면 역시 대부분이 친 여권 성향을 보이고 있어 서로간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김원기 고문은 정읍 공천자로 확정된 이후 지역내 각종 행사와 모임이 열리는 현장을 돌며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정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자신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25일에는 정읍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시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고문은 이어 1일 오찬을 시의원들과 함께 하

여 시의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의 정부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 무소속 출마를 확정지은 아태회의 김세웅 사무총장은 오는 3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발전 새천년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무소속 출마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여론을 주도해 간다는 전략이다.

김세웅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자신이 친여 무소속으로 분류될 수 있어 민주당 공천결정이 무의미해지는 선거전략을 펼칠 경우 이번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체 여론조사 결과 김원기 공천자와 지지도 면에서 근접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유권자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지고 있다.

정읍포럼 이장형 교수 역시 무소속 돌풍의 주역은 바로 자신이라고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장형 교수는 고부초등학교와 정읍중, 호남고, 원광대 총동문을 비롯한 지역내 학연과 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해볼만한 선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과 정읍에서 동문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결의한 점에도 강한 자신

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4선거에서
시장을 당선시킨 선거전략도 이번 총선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장형 교수는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 지역내
토박이라는 장점을 고루 갖춘 후보라는 강점을 유
권자들이 높이 평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승택 국정개혁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공천 반
대를 주장하는 당원들이 자신을 제3의 후보로 추
대한 것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참신성과 개혁성, 강력한 의지 등을 높이 평가
하고 자신을 제 3의 후보로 추대한 만큼 시민이
내세운 후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황승택 소장
은 김원기 고문의 경륜에 참신성과 개혁성 등의
강점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소장이 이같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 것은
공천과 상관없이 출마를 결심한 뒤 지역민들 속
에 파고 든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의관 위원장은 지역감정으로 인해
무의미한 선거를 치루지만 소수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의 의미있는 한표를 호소하여 최선을 다하
고 있다.

자민련 정태진 위원장도 농민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라종일 교수는
최근 정읍사무소 철수를 지시한 뒤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뒤 출마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67
매 체 명	영 남 투 데 이	언 론 사 대 표	양 정 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5. 3면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78
기 사 제 목	4.13향해 똬다 (상주)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4.13총선 경북 상주지역구 관세를 분석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부각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경북 상주지역의 관세와 관련, 한나라당 후보인 이상배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현직의원으로서

의 치적을 부각시켜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자민련 이재훈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5대 총선 때의 사후조직관리 허점이 이번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도하여 선거에 출마한 이재훈후보와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6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투데이
대구시 동구 신천동 478
대표이사 양 정 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영남투데이가 발행하는 영남투데이 2000. 3. 25.자 3면 『4·13향해 뚝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영남투데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경북 상주지역의 판세를 기사화하면서 이상배 후보에 대해 그의 경력과 현직의원으로서의 업적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객관적인 자료없이 이상배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3조(객관성), 동기준 제6조(사실 보도) 제3항 각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28.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영남투데이 2000년 3월 25일 3면

이상배 · 이재훈씨 재 대결 30년 관료 경력과 참신성의 싸움

상주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지난 4년 동안 재기를 노리며 지역구를 관리 해온 자민련 이재훈 위원장간의 재대결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김 탁 위원장, 민국당 김남경 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이의원은 지난 15대 때 자민련 '녹색

바람'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무난히 당선된 이후 경북도지사, 총무처장관 등 30년 경력을 가진 행정관련 출신으로서 지난 4년간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수해복구비 및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지방양여금) 1천57억원 확보, 국도확장, 구미-상주-여주간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착공,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시범사업 지구 선정 등을 비롯한 농가부채경감 특별법안 국회제출 등 의정활동 성과, 철저한 조직관리, 지역정서 등을 앞세워 총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15대 마지막 후원회를 갖고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한나라당 당무위원과 농수산위원을 맡아 의정활동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처럼 돌봐준 상주시민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이위원장은 "상대후보가 화려한 경력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지역활동을 소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떨어

지고 있다."며 수해복구비 등 각종 예산은 정부 절차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공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도덕성, 참신성이 앞서있는 사람이 반드시 지역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마지막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당락을 떠나 금권선거가 사라지는 선거풍토를 반드시 바꿔놓아야 말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지난 15대 선거당시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핵심당원 30여 명이 불만을 품고 탈당하는등 사후조직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이번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주는 지난 15대 때 자민련 이위원장을 4천200표차로 당선된 한나라당 이의원이 우세한 가운데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재미 사업가인 김탁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사표를 던졌고 민국당 김남경 위원장이 함께 도전장을 내고 총선고지를 향해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74
매 체 명	영 남 투 데 이	언 론 사 대 표	양 정 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1면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78
기 사 제 목	총선 "부동표를 잡아라"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공식선거전이 시작된 3월28일 현재 전국 및 경북지역 총선판세를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 위반내용

현행 선거법상 공식선거전이 시작되는 3월28일 이후에는 총선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일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28일 현재 전국 및 경북지역 총선판세를 출처가 불명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7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투데이사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478
대표이사 양 정 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영남투데이가 발행하는 영남투데이 2000. 3. 29.자 1면 『총선 “부동표를 잡아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영남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지역구 227곳의 정당별 판세를 보도한 것은『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영남투데이 2000년 3월 29일 1면

총선 “부동표를 잡아라”

4·13 총선이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나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지후보를 선택치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부동표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구 227곳의 출마 예상자들

을 대상으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근소한 차이의 접전구도를 보이고 있고 자민련과 민국당은 3위권 선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16개 선거구 중 상당수의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5~6개 지역은 비(非)한나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구·부산·경남·울산지역 역시 특정 정당의 단연 우세지역은 별로 없고 각축전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유권자들이 지역과 정당 중심의

예년의 선거풍토에서 크게 탈피, 인물과 정책 등을 투표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되면 선거판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영남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선인 만큼 지역과 정당에 연연치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뽑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주의적 과거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각 후보들의 자질 등 인물론과 정책 등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 짓는 잣대로 평가될 전망이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80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3. 29. 2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207-10
기 사 제 목	고산중 강당 완공 (김태식 의원 예산확보 결실)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북 완산 고산중학교 강당 완공이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태식의원원의 예산확보 추진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전북 완산 고산중학교 강당 완공과 관련, 이를 ‘김태식의원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제목아래 김의원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강당 건립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리드부분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이 지역구 출마 여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위 관련조항 위반).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8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연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3. 29.자 2면 『고산中 강당 완공』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당 완주·임실)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지역민의 숙원이 해결됐다는 내용을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3. 3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3월 29일 2면

고산中 강당 완공 김태식의원 예산확보 결실

김태식 의원(민주당·완주·임실)은 '99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완주 고산중학교 강당 건립을 추진해온 결과 231평 규모

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이달 말 완공을 보게 된다.

완주군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이 큰 만큼 김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완주 공공도서관 신축과 완주중학교 강당 건립에 이어 고산중학교의 강당을 완공하게 되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0
매 체 명	호 남 신 문	언 론 사 대 표	윤 선 호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4. 3면	소 재 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948-7
기 사 제 목	'낙선명단' 곳곳서 가슴쓸고 ... 죄고 ...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광주 북갑 민주당 후보의 득표운동사진

해남·진도 민주당 정당연설회 사진

여수 민주당 정당연설회 사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사진 게재)

• 위반내용

총선현장 사진을 보도하면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사진과 민주당 후보의 정당연설회 사진만 보도하고 타 정당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편향된 편집 태도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위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신문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8-7
대표이사 윤 선 호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호남신문사가 발행하는 호남신문 2000. 4. 4.자 3면 『'낙선명단' 곳곳서 가슴쓸고

… 죄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호남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유세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후보의 정당연설회와 선거운동 사진만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단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호남신문 2000년 4월 4일 3면

‘낙선명단’ 곳곳서 가슴썰고… 죄고…

“당연한 결과” 안도

○…광주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일 후보가 낙선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3일 오전 전해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의 한숨.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민주당의 김경천 후보와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 후보는 『상대 후보들로부터 사사건건 시비의 대상이 됐던 낙선 인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됐다』며 『한 표가 아쉬울 만큼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낙선명단 제외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고 서울 총선시 민연대의 낙선대상 명단 발표를 환영.

군복 입고 선거운동

○…광주 남에 출마한 민주당 임복진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무소속 강운태후보가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을 겨냥해 3일부터 각 선거유세장마다 군복을 입고 나가 군가 「진짜사나이」에 맞춰 선거운동.

이에 맞서 강운태 후보측은 앞으로 선거유세장

에서 임후보가 80년 5. 18 당시 현역군인 이었던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 시키기 위해 5.18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기로 맞대응.

‘나사모’ 결성 공식지지

○…80년대 사회과학 전문출판사인 「풀빛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 온 광주 광산구의 무소속 나병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전국 100여 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이 발족한데 이어 3일에는 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문화예술인들이 「나병식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나사모)」을 결성, 나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

나사모는 광재구·황석영·황지우·천승세·이문구·김준래 씨 등 문학계는 물론 강요배·임옥삼·유흥준·홍성담씨 등 미술계, 장선우·임진택·문성근 씨 등 영화 연극계, 박재동·이두호·백성민 씨 등 만화계에 이르기까지 90명으로 구성.

민주당 핵심부 출동

0...3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문공원에
서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정당연설회에는 5백여
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

이날 이만섭 당 고문과 김동신 전 육참총장,
최영희 당무위원 등은 찬조 연설에서 『그간 한나라
당이 경제발전과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아 왔다』며
『대통령이 3년 남은 임기동안 소신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를 밀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고문은 『3선으로 성실하고 정의롭고 머
리도 좋은 김충조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다시
선출될 경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다』며 『김후보와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요구.

김후보는 이와 관련 『평소 내가 「장관이나 국
무총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것을 이 고문
이 확인해 줬다』며 『국회활동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힘써온 나를 다시 지지해 달라』고 호소.

‘목민협’ 공개질의서

0...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목민협)는 목포지
역 4·13 총선 출마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등
10개항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6일까
지 답변해 줄 것을 부탁. 목민협은 3일 목포지역
출마자인 새천년민주당 김홍일 후보와 한나라당
배종덕 후보에게 보낸 공개 질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비롯, 불평등한 한미행정협
정(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철수, 현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과 대책을 질의.

또 목포지역 최대 현안인 목포대학교 의대 유
치와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목포시민의 날(10월1일) 변경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등 모두 10개항에 대한 답변
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19
매 체 명	영남투데이	언 론 사 대 표	양 정 봉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1. 14면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78
기 사 제 목	'야후보 낙선평작' 의혹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울산 중구지역구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아들 병역비리혐의와 관련한 김후보측의 대응분위기를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검찰이 한나라당 울산중구 김태호후보 아들병역 비리혐의를 선거운동기간중 발표한데 대한 김후보측의 반발분위기와 관련, 이를 ‘야후보 낙선공작 의혹’, ‘김태호 죽이기’, ‘정부의 공작정치’ 운운의 표현과 함께 김후보와 김후보측 선거운동관계자의 사발광경 사진을 크게 게재·보도한 것은 선거직전이라는 상황과 지역정서를 고려해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19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투데이신문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78

대표이사 양 정 봉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영남투데이신문사가 발행하는 영남투데이 2000. 4. 11.자 14면 『“야후보 낙선공작” 의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영남투데이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검찰의 울산 김태호후보 아들 병력수사발표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면서, 김후보의 반박내용과 함께 김후보 지지자들이 ‘정부의 공작정치’를 비난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태호후보에 대한 편향적 보도라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영남투데이 2000년 4월 11일 14면

“野후보 낙선공작” 의혹

검찰의 이례적인 야당 후보 아들 병력수사 발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투표일을 6일 앞두고 한나라당 울산 중구 김태호 후보가 아들의 신검일정을

조정해 달라면서 병부청장에게 2백만원을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발표는 선거직전이라는 시기문제와 함께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관행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돈을 줬다는 김후보를 조사도 하기 전에 받았다는 사람을 기소했다.

이는 평소 검찰의 수사진행절차를 감안하면 전 광석화와 같은 기소 속도 자체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내무부장관에다 당 집권당 사무총장, 여당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지낸 정치중진이 병무청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데다가 선거를 한달 앞두고 울산에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던 김후보가 인근 음식점이나 다방도 아니고 병무청까지 갔다는 검찰 발표내용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또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2백만원을 줬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발표했던 병역비리와의 차별화 되는 부분으로 법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인들조차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선거직전에 터져 나온 검찰의 병역비리 발표에 김후보는 즉각 야당중진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친여성향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정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후보는 “지난 2년 동안 거듭된 병역수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직전에 수사도 하지 않고 발표부터 하는 것은 야당중진을 떨어트리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후보는 검찰발표 다음날인 지난 8일 중구 성남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삭발을 하고 『김태호 죽이기 규탄대회』를 벌였다.

중구의회 의원 전원과 시의원까지 삭발에 참여한 이 대회에는 3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와 지지자들이 앞다투어 삭발에 동참하려고 나서 이를 만류하는 김후보 주최측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3시간 가량 동안 가두 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공작정치를 비난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0
매 체 명	울 산 매 일	언 론 사 대 표	구 영 만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0. 1, 2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11-3
기 사 제 목	김태호 후보 삭발투쟁 아들 병역비리 '음모' 주장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16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울산 중구의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현정권의 김태호 죽이기”라며 강력반발,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 위반내용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삭발투쟁'을 동정적인 논조로 1면 중간 톱과 2면에 걸쳐 대서특필, 지역정서를 부추겨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 주는 보도를 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0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울산매일신문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11-3

대표이사 구 영 만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울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울산매일 2000. 4. 10.자 1면, 2면『김태호 후보 삭발투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울산매일신문사가 김태호 후보 검찰 소환통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후보측에 편향되게 기사제목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울산매일 2000년 4월 10일 1,2면

김태호후보 삭발투쟁

16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8일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울산중구)가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자 이는 현정권의 '김태

호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시·구의원들과 함께 삭발을 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상대후보들은 이와 관련, "국가기관에

서 공식 발표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불응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소환에 즉각 응하고 병무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선언하라"고 맞불 공세를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원·지지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김대중 정권의 표적사정 및 야당파괴 중

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후보는 삭발을 한 뒤 연단에 올라 "정권을 빼앗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 정권은 한나라당의 중심인물인 김태호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이용하여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병역비리 음모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김대중 정권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정치음모"라고 반발했다. (후략)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4
매 체 명	국 도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이 재 준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8. 3면	소 재 지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0-5
기 사 제 목	"DJ정권 축산정책 더는 못밀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충남 홍성·청양 합동연설회에서의 각당 후보들의 정견과 이 지역에 출마한 자민련 후보(이완구)의 구제역 관련 성명서 내용을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 위반내용

홍성·청양지구 합동연설회내용을 소개하면서 각 후보의 정견 내용중 자민련 이완구 후보가 'DJ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해 내놓은 성명서 내용만을 별도 상자기사로 보도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4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5
대표이사 이 재 준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국도일보사가 발행하는 국도일보 2000. 4. 8.자 3면 『“DJ정권 축산정책 더는 못 믿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국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충남 홍성·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의 합동연설회 소식을 게재하면서 자민련 이완구 후보의 성명서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국도일보 2000년 4월 8일 3면

“DJ정권 축산정책 더는 못믿어”

발생원인을 조속히 밝혀내 더 이상의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축산농가지원대책과 구제역방지를 위해 ▲축산지원금 모금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육부의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해 축산발전기금을 확대해 구제역 대책기금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의원은 또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사료업체, 식육점 업체, 축산기자재 업체, 요식업 업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보상하는 동시에 국가준비상태로 간주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정부 예비비를 즉각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민련 홍성-청양지구당위원장인 이완구 의원은 7일 홍성지역 구제역발생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뜻하지 않게 발생한 우리 지역의 사태에 대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의원은 “피해를 입은 우리 홍성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수매정책은 뼈와 부산물을 제외한 것으로 이 정부에 더이상 김대중정권의 축산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특히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28
매 체 명	전북도민일보	언 론 사 대 표	임 병 찬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8. 1, 5면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의 10
기 사 제 목	투표율 높이기 '사활' (1면) '한표행사가 애국' 투표율제고 안간힘(5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민주당 전북선거대책위 수뇌부의 투표율제고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 내용을 스트레이트(1면)와 해설박스(5면)로 보도.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 위반내용

특정정당이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마련한 투표율제고 호소 기자회견내용을 1면과 5면에 각각 스트레이트와 해설박스기사로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등의 차원에서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28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 2000. 4. 8자 1면 『투표율 높이기 '사활』, 5면 『'한표행사가 애국' 투표율제고 안간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선대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2개면에 걸쳐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전북도민일보 2000년 4월 8일 1면

투표율 높이기 ‘사활’

‘도민들의 투표참여로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선거일 5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새천년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등 총선 투표율 제고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터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는 만큼 투표율에 따라 정당간 희비가 엇갈릴수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의 기권 및 사표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균환 민주당 전북선대위원장과 장성원 선대본부장, 장영달·정동영 선대위원장 등 4명은 7일 오전 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총선에서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안정속에 개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혼란속에 위기를 맞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도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 해

야만 정국안정은 물론 제2의 IMF도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투표가 비례대표의원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그만큼 중요하며 확실한 주권행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투표참여를 독려해 달라며 신바람 나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민들의 투표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치혼란은 물론 경제는 환란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민주당후보들은 남은기간 동안 더욱 충실한 선거운동을 통해 전지역 석권 및 전국최고의 득표율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일보 2000년 4월 8일 5면

“한표행사가 애국” 투표율 제고 인간힘

민주당이 16대 총선에서의 투표율 제고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당후보들의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이

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원내 '제1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전북에서의 득표율

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1~2석이 왔다갔다하는 처지여서 전북선대위 차원에서도 당후보들의 득표율을 높여야만 한다는 원칙아래 최근 거리유세나 합동연설회를 통해 도민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선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후보들이 유권자들과 만날 때마다 내뱉는 첫마디가 '오는 13일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고 놀러 가자' 라는 말이다.

심지어는 '투표참여가 애국이다'는 선거캠페인 구호까지 만들어 유세차량에 내걸고 다니는 후보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7일 정균환 전북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장성원 선대본부장, 장영달·정동영 선대위부위원장 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시종일관 도민들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도민들이 기권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

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어야만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후반기동안 안정속에서 각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한표는 그냥 한표가 아니라 두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전에서 무소속후보들이 당선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유권자들이 절대 속지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정국안정은 물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재도약을 이룰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투표참여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권고해 달라며 신바람 나고 시원 시원한 정치를 해 볼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결정사항 / 주 의

		안 건 번 호	2000 - 자심 - 137
매 체 명	전 북 일 보	언 론 사 대 표	서 창 훈
게재일자 및 지면	2000. 4. 12. 5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기 사 제 목	도내 최다득표 대결 '치열'		
기 사 내 용	별 첨		

• 기사내용요지

전주 완산, 전주 덕진, 익산, 군산 등 4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도내에서 최다득표를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

• 관련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4조(기사제목)

• 위반내용

지역특성상 특정정당의 후보가 우세하다하나 특정후보의 이름을 제목으로 활자화시켜 투표도 하기 전에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태도는 형평성을 잃은 편집이며 동일지역에 출마하는 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 조항을 위반함.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자심137

자체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 별 첨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0. 4. 12자 5면 『"도내최다득표 대결 '치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전북도내 최다득표 대결이 치열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후보들을 구체적으로 거론, 이들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선거보도 시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00. 4. 1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전북일보 2000년 4월 12일 5면

“도민들이 밀어줘야 개혁완수”

16대 총선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3시(市) 4개 선거구의 최다득표와 최고득표를 싸움이 불만이다.

남원·순창과 완주·임실, 진무장 등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과 야당후보가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함께 전주, 익

산, 군산 등 대표적인 3시의 민주당 후보들이 벌이는 최다득표싸움이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

3시의 후보들이 최다득표 경쟁에 신경쓰는 것은 우선 전북 출마가운데 1등이라는 명예가 붙고, 잘하면 전국 최다득표도 가능하기 때문.

또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무대에서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전국구가 득표수로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당의 총선 승리에도 일등공신이 될 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최다득표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권자면에서는 익산이 가장 유리하다. 익산은 유권자수가 23만2천51명으로 3시 4개 선거구 가운데 최다. 익산에 이어 전주 완산이 22만6백77명, 군산이 19만6천3백39명, 전주 덕진이 19만5천7백85명순이다.

최다득표싸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후보의 상품성면에서는 전주 덕진의 정동영 의원이 앞서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89.9%(9만8천7백57표)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던 정의원측은 또 한번의 기록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익산 이협 의원, 군산 강현욱 의원, 전주 완산 장영달 의원 등은 '반드시 최다득표 1위를 차지하겠다'며 강한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주 완산의 장영달 의원측은 유권자수가 전북에서 2번째로 많고 어느때보다 여건이 좋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장의원측은 일단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장의원측은 "시도위원과 당직자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전북최고로 평가받고 있다"며 조직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 덕진의 정동영 의원측은 "이번에는 15대를 뛰어넘는 90%이상의 득표율 기록을 세우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정의원 진영은 유권자수의 열세를 후보의 상품성과 높은 투표율로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후보의 상품성면에서 선거구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 투표율제고 캠페인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의 이협 의원측은 선거구통합효과를 최다득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열의가 대단하다.

이의원진영은 도내에서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점과 선거구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의원의 지명도가 월등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과거 최의원의 지역구였던 감지역의 인지도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인물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군산의 강현욱 의원은 민주당에는 뒤늦게 입당했지만 누구보다 화려한 데뷔를 하겠다고 베풀고 있다. 유권자수에 있어서는 3위지만 인기는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하는 강의원측은 민주당 입당으로 밑바닥 정서가 자신에게 물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의원 진영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호남에서도 유일하게 야당바람을 뚫고 당선됐던 저력을 살려서, 최다득표 기록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제2장 시정요구

정정및사과문보도청구

16대 총선 출마자 명단을 공표하면서 전북 정읍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청구인을 빠뜨려 피해를 입었다

안건번호 : 2000시심1

청 구 명 : 시정요구(정정보도 청구)

청 구 인 : 황승택

피청구인 : 동아일보

접 수 일 : 2000. 3. 29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6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9일자 A8면)

내 용 : <28일 등록후보재산-납세-병역현황>
(중략)

전 북

정 읍

정 당	이름(나이)	경 력	재 산	소득세	재산세	병 역
한	이 의 관(56)	인삼연구소감사	1억1,100	472	0	면 제
민	김 원 기(63)	전노사정위원장	7억9,200	104	146	의가사
무	정 태 진(71)	농촌문제연구소장	8억7,128	0	0	면 제

청구인 주장

청구이유 : 청구인은 16대 총선에 정읍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황승택으로 2000년 3월 29일자 A8면 『16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다.

동아일보는 보도에서 출마자 명단을 이의관, 김원기, 정태진 씨 등 3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총 6명이 등록 접수되었으며 청구인은 두 번째로 접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보도로 지지자들로부터 후보등록여부를 묻는 등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16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명단(본지 29자 A8면 보도)에서 누락된 전북 정읍선거구의 무소속 황승택 후보는 28일 이미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청구후 보도문

동아일보 : 『16대 총선 후보 등록자』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30일자 A7면)

내 용 : 전북정읍

정 당	이름(나이)	경 력	재 산	소득세	재산세	병 역
무	황 승 택(41)	기획예산처기획위원	28억9318	154	0	현 역

청구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당의 공천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및 사과문)

안건번호 : 2000시십2

청 구 명 : 시정요구(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청구)

청 구 인 : 조찬형

피청구인 : 남원시민신문

접 수 일 : 2000. 4. 6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남원시민신문 : (1) 『참신이나, 삼선이나 ‘인물론’
대혈전』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7일자 1면)

내 용 : 남원시내 조찬형 열세, 이강래지지
상승

남원지역은 여당투표성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도 지난 14대 총선에서 조찬형-이형배-양창식 3
파전의 치열한 양상에 이어 지난 6·4 지방선거

에서는 현 최진영 시장이 인물론을 내세운 최동
섭 후보에게 불과 10%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거
둔데다가 이번 선거는 이형배·강동원의 불출마
로 여권성향의 양자대결 구도라는 점에서 예측불
허의 게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순창은 이 지역출신의 야당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역대선거에서 현집권여당의 물표가 나오
는 전통적인 지역이라는 점과 새로운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내권은 역대선거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조찬형 의원이 매년 고전한 지역으로 이강래 전 정무수석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동반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찬형 의원은 일부지역에서 고정 지지층이 뚜렷하나, 역대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각축전을 펼쳐야 했다. 한마디로 조의원 입장에선 전통적인 고전지역인 셈이다.

동충동은 역대선거에서 각 후보별 고정표 양상을 띠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나타냈던 지역이다. 죽향동, 향교동, 도통도도 과거 이형배 최동섭 강세지역으로 이강래 전수석의 선전이 예상된다. 쌍교동은 여당지지 성향이 뚜렷하지만 특이하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최동섭 우세지역이었다.

노암동, 왕정동, 용정동은 여권지지가 안정적인 데다가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간 각축전 양상을 펼쳐 최대 접전지로 예상된다.

금동은 남원시내권에서는 유일하게 조찬형 의원이 강세를 보인 곳이다.

남원 외곽지역도 역대 선거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엇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곳으로 조찬형 의원이 안간힘을 쓰며 수성의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이강래 전 수석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봉읍은 14대때는 이형배 의원이 조찬형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15대때는 조찬형 의원이 재기하여 양창식 의원을 누른곳, 하지만 98년 시장선거때는 최동섭 후보가 34% 득표력을 과시하며 선전했던 곳이다.

주천면은 조찬형 의원이 고전지역으로 14대 10%, 황색바람을 업은 15대때도 절반의 득표도 못 올리곳, 반 조찬형 기류를 보이는 대표지역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이형배, 최동섭 후보가 1위를 했다.

수지면은 14대는 양창식 우세, 15대는 상황이 반전됐다.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성향 후보에게 안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민심의 향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대강면은 조찬형 의원의 우세지역,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은 조찬형 의원이 항상 고전한 곳으로 역대 선거결과에서 양창식, 최동섭 후보의 강세가 돋보인다.

보절면은 매년 선거마다 압도적 지지를 후보가 없는 각축전 양상을 보여왔다.

산동면은 양창식 강세지역이면서 지방선거 때는 여당 후보의 지지기반이 강했다. 이백면도 조찬형 의원으로서는 열세지역, 이형배 최동섭 후보의 선전지역이었다.

동면, 인월면은 선거때마다,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여당공천 후보가 고전한 곳이다.

아영면은 총선때는 각축전, 지방선거 당시 최동섭 강세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내면도 특정인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예측불허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순창은 한나라당 양대원 위원장이 유일한 지역 후보로 소지역주의 투표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중론이다.

특히 역대 선거결과에서 친여성향의 물표가 쏟아져 나왔고, 이번 선거 역시 조찬형-이강래 둘다 여권후보로 분류하며 인물론이 강조되는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그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찬형 의원측은 우여곡절 끝에 조직책을 임명하며 순창흡수에 발벗고 나섰다. 홍영기 전의원 조직과 구태서 전 도의원이 이강래 전정무수석을 지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 군수 조직도 내심 이전수석을 지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는 여론이다.

현재 순창은 여당성향 후보들간의 안정적 지지층이 확보되었지만 아직까지 수면위로 드러난 절대 강자가 없는 가운데 혼전양상이 거듭되고 있어 총선 입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대 총선 당시 남원지역에서는 민자당 양창식 후보와 민주당 조찬형 후보, 무소속 이형배 후보의 3자 구도속에 불과 4백여 표 차라는 빅뱅의 접전을 펼치면서 양창식 후보가 어부지리를 차지했었다.

당초 이번 16대 총선구도도 숙명의 라이벌인 조찬형 의원과 이형배 의원이 각각 여당인 민주

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로, 또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무소속으로 나서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되었었다.

14대때에는 야권분열로 인해 여당이 득세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여권성향의 표분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형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조찬형-이강래의 2강구도로 단순화되면서 현역의원들에 대한 복잡미묘한 반감기류와 선거구 통합에 따른 소지역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3선 고지를 바라보는 조찬형 의원은 그동안 탄탄한 지역구활동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철저한 지역구 관리를 통해 중앙당 조직감사에서 우수지구당으로 선정되는 등 여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당공천을 받게 된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가진 중진인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일부 반 조찬형 정서와 정치루머에 대해선 「선거때마다 돌출되는 문제」라며 지난 98년 시장 선거때도 거론됐고 이번 역시 지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역여론을 토대로 출마의지를 강력하게 불태우고 있다. 이 전수석은 여론조사 결과 여타 입지자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낙천된 것은 민심을 등한시한 밀실, 정실 공천이라며 직접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이다.

지난해 12월 남원시 왕정동 서문빌딩내 3층에 새천년 남원, 발전연구소를 개소하고 남원시내를 비롯 관내 23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얼굴알리기에 주력하는 등 표심잡기에 안감함을 쓰고 있는 이전수석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의원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고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무려 22.6%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이전수석은 또한 지역에서 6개월간 활동해온 결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서울출마나 입각 등 재의가 있었지만 고향발전을 위해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수석은 「이번 총선의 쟁점은 도덕성과 개

혁성에 있다」면서 참신성과 DJ정부에서의 역할 등을 내세워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 조찬형기류 장악에 성공하며 양창식 전의원 이종률 전의원 등이 이전수석을 위해 직간접 지원에 나선게 큰힘이 되고 있고, 특히 남원지역 현역시의원 8명의 지지입장 표명과 순창지역에서도 홍영기 전의원 조직과 구태서 전도의원 등이 정치동반자로 나서고 있다며 과죽지세로 정치행보를 단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양대원 위원장은 적어도 순창지역만큼은 압도적 지지를 자신하며 출사표를 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최적임자라며 순창지역 여론에 적극 호소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야당이라는 한계극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구 관리를 해온데다 순창농고 동문조직과 육천향토 문화연구소, 미래농촌사회 문화연구소 회원조직 등을 기반으로 지지세 확산에 적극적이다.

한편 현재 남원, 순창 지역 분위기는 친여성향의 후보중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누가 DJ에게 진정 필요한 인물이나」를 놓고 「중진론 인물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입지자들은 저마다 「정국안정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은 바로 내가 적임자」라며 지지세 확산에 한창인 가운데 후보군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도 한창이다.

“진짜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물이 누군지 잘 판단해야겠지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당만 보고는 안찍을 걸요.”

“김대중 대통령으로 호남 한풀이는 했으니 국회의원만큼은 제대로 뽑아야지요.”

“물같이 물같이 그렇게 외치더니 바뀐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맘만 있었지 뜻대로 못한 호남 물갈이는 이제 우리 손으로 해야죠.”

남원순창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치분열 풍토를 쇄신하고, 지역적 정치적 대통합을 기대하는 남원·순창 유권자들 사이에서 4월 총선 열기는 차츰 무르익고 있다.

남원시민신문 : (2) 『강동원 불출마 선언…조찬형 대 이강래 양자대결 켜기』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7일자 3면)

내 용 : 反조 인사 깜짝 입당에 ‘어떤 거래 있었나’ 지역 정가 수군수군

최진영 이정규 이윤기 이어 또하나의 시장 후보 영입 구설

민주당의 조찬형 의원 제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지역활동을 펼쳐온 강동원 전 도의원이 지난 17일 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강동원 씨의 이번 입당은 새천년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당일 오전에 이뤄진 점과, 이날 개편대회 행사장에서 이강래 후보를 비토하며 전날까지 반대하던 조찬형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급조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정가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통해 차기 단체장 출마를 도모하려고 ‘입당’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포석을 한 것이라는 지역여론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강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씨는 입당 전날까지만 해도 ‘조찬형이 이 지역 남원을 위해 한일이 무엇이나?’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반 조찬형을 외치다가 갑작스런 입장번복으로 정작 강씨의 지지자들조차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동원 씨는 지난 3월 14일 ‘3·15 및 4·19 정신계승을 위한 故 김주열 열사 40주기 추모제’에 참가해 조찬형 의원을 겨냥한 듯한 인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부패한 정치인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진보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발표한 2월 8일자 논평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여론이 비등한 것을 정치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내 공천심사에서 시민여론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당내 공천심사에서 시민여론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26일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개혁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일궈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정치개혁 없이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없는 만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타파를 위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원 씨는 당시 전국적 추세였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남원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당시 경실련의 낙천대상에 오른 조찬형 의원 비토에 앞장서 왔다. 또 80년대부터 다져온 사조직과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인맥을 기반삼아 무소속 출마의지를 불태운 강동원 씨의 일관된 주장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민주당 입당과 조찬형 지지를 호소하며 ‘특정후보 저격수’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강씨의 이같은 심경변화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특정 정치인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얼마전 비슷한 상황에서 입당해 조찬형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정규 전 남원시장에 이어 이윤기 전 남원시총무국장 그리고 강동원 전 도의원의 조찬형 지지로 2년 후 남원시장 선거 예선전 자리싸움이 벌써부터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개편대회에서 이들이 보여준 강한 총성경쟁과 조찬형 의원의 교통정리는 지역정가 호사가들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최진영 현 시장은 ‘차기 시장을 전제로 사람 끌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나름대로 전선공공하는 가운데 공중에 붕 뜬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에 이어 강씨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정가는 다시 한번 ‘해체모여’를 시도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의 도종하 차로 조찬형 대 이강래의 양자 대결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득이 될지’를 따지는 정치계산이 한창 진행중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이유 : 청구인은 4·13총선에서 남원·순창 선거구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위원장인 조찬형으로 시민신문(주간신문) 3월 27일자(실제 발행 및 배포일은 3월 20일임) 1면 『참신이나, 삼선이나 ‘인물론’ 대혈전』 제목의 기사와 3면 『강동원 불출마 선언… 조찬형 대 이강래 양자대결 썰기』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및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다.

시민신문은 1면 위 보도에서 「남원시내 조찬형 열세, 이강래 지지상승」 부제와 「…이 전 수석은 여론조사결과 여타 입지자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낙천된 것은 민심을 등한시한 밀실, 정실공천이라며 직접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이다」, 「…이전수석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의원 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고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무려 22.6%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의 근거제시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였다.

시민신문 발행 전후 언론매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발행일 또는 발표일	언론매체	여론조사결과	
		조찬형	이강래
3월 8일	중앙일보	61.8%	33.0%
3월 19일	KBS 저녁 9시 뉴스	43.4%	18.1%
3월 20일	SBS 저녁 8시 뉴스	38.1%	18.8%
3월 21일	동아일보	48.6%	24.7%

즉, 사실은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심사과정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공천심사를 위해 여러차례 여론조사와 지역실사 등을 통해 공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천되었다. 그런데 공천과정에서 민심을 등한시한 밀실, 정실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부도덕한 인물로 비하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아래의 도표와 같이 시민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된 3월 20일 전후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지

지율이 이강래 씨에 비해 압도적임에도 사실과 정반대로 왜곡하였다.

또한 시민신문은 3면 위 보도에서 「反조 인사 깜짝 입당에 ‘어떤 거래 있었나’ 지역정가 수군 수군」 부제와 「최진영 현시장은 ‘차기 시장을 전제로 사람 끌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나름대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공중에 붕 뜬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강동원 씨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복귀하고 청구인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전북제일신문과 전주일보 3월 18일자 강동원 씨 인터뷰 기사 참조)으로 청구인과 강동원 씨 사이에 어떠한 거래도 없었음에도 부도덕한 거래가 있었던 양 보도하고, 또 최진영 현시장은 강동원씨의 불출마와 당 복귀에 대해 위 보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보도가 실린 신문이 선거구인 남원과 순창에 4000부 이상 무가지 배포(인력과 우편형태)됨으로 인해 지역유권자에게 인간적으로는 부도덕한 인물,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이며, 반개혁적 인물로 의심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지역유권자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왜곡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와 지역내 2만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의식을 해치는 등 큰 피해를 입혔기에 정정보도문과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

본지는 지난 3월 27일자 1면 『참신이나, 삼선이나 ‘인물론’ 대혈전』 제목의 기사에서 「남원시내 조찬형 열세, 이강래 지지상승」 부제와 「…이 전 수석은 여론조사결과 여타 입지자 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낙천된 것은 민심을 등한시한 밀실, 정실공천이라며 직접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이다」, 「…이 전 수석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의원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고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무려 22.6% 이상의 차이가 난다

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민주당 공천과정은 공정하고 과학적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본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되기 전인 지난 3월 19일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찬형 씨 지지율이 43.4%이고 이강래 씨 지지율이 18.1%로 조찬형 씨가 선거를 앞두고 이강래 씨보다 지지율이 두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조찬형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동일자 3면 『강동원 불출마 선언… 조찬형 대 이강래 양자대결 췌기』 제하의 기사에서 부제인 「反조 인사 깜짝 입당에 ‘어떤 거래 있었나’ 지역정가 수군수군」와 「최진영 현 시장은 ‘차기 시장을 전제로 사람 끌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나름대로 전전공공하는 가운데 공중에 봉 뜬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강동원 씨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조찬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부도덕한 거래가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진영 현 시장도 강동원 씨의 민주당 복귀와 민주당 조찬형 후보에 대한 지지결정을 환영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찬형 씨(또한 강동원 씨와 최진영 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취하후 보도문

남원시민신문 : 『사과문』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0일자 1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7일자 1면 「참신이나, 삼선이나 ‘인물론’ 대혈전」 제하의 기사

에서 「남원시내 조찬형 열세, 이강래 지지상승」 부제와 「…이 전수석은 여론조사결과 여타 입자 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낙천된 것은 민심을 등한시한 밀실, 정실공천이라며 직접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다」, 「…이 전 수석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조의원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고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무려 22.6%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민주당 공천과정은 공정하고 과학적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본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되기 전인 지난 3월 19일자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찬형 씨 지지율이 43.4%이고 이강래 씨 지지율이 18.1%로 조찬형 씨가 선거를 앞두고 이강래 씨보다 지지율이 두배이상이 높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조찬형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동일자 3면 『강동원 불출마 선언… 조찬형 대 이강래 양자대결 췌기』 제하의 기사에서 부제인 「反조 인사 깜짝 입당에 ‘어떤 거래 있었나’ 지역정가 수군수군」와 「최진영 현 시장은 ‘차기 시장을 전제로 사람 끌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나름대로 전전공공하는 가운데 공중에 봉 뜬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강동원 씨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조찬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부도덕한 거래가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진영 현 시장도 강동원 씨의 민주당 복귀와 민주당 조찬형 후보에 대한 지지결정을 환영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찬형 씨(또한 강동원 씨와 최진영 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병적기록 내용이 일부 변조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안건번호 : 2000시심3

청 구 명 : 시정요구(정정보도청구)

청 구 인 : 김만제

피청구인 : 매일신문

접 수 일 : 2000. 4. 11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매일신문 : 『김만제씨 병역기록 일부내용 변조 의혹』 제하의 기사

내 용 : 한나라당 수성갑구에 출마한 김만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병적증명서가 병무청이 보관하고 있는 병적기록 원부와 차이가 있어 김 후보의 병역관련 기록이 일부 변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후보등록시 김후보의 병역관련사항을 인터넷상에 「병적기록무·종단」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대구병무청이 발급한 김후보의 병적 증명서에는 「54년 갑종」「제1보충역 편입」「75년 1월 1일 병역의무종료」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대구병무청이 중앙병무청에 보고한 김후보 관련 병적기록 원적부의 요약내용은 「연도미상 갑종」「연도미상 제1보충역 편입」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기에는 「56년 8월 11일 (징집영장 내지 징병검사 통지서로 추정) 전달 불능」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관련, 김후보측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55년 1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주장함으로써 병무청에서 55년 1월 김후보의 출국사실을 모른채 56년 8월 영장 내지 통지서의 전달을 시도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병적증명서 발급을 담당한 대구병무청의 한 실무관계자는 「병적증명서 상의 54년은 김후보가 만 20세가 되는 해여서 갑종판정을 받았다면 이

때쯤 될 것 같아 원적부에 연도미상으로 돼 있음에도 유추해서 적어 넣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김후보측에서 3월 6일 보내온 병적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신체검사 연도와 유학·귀국시점을 참조해 병적증명서상의 주요시점을 유추해 넣었다」고만 말하고 중앙병무청 보고 원적부와 증명서 간의 상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병무전문가들은 「신체검사 시기와 제1보충역 편입시기 등 전후가 명확하지 않은 김후보의 병적기록을 출마에 하자가 없는 내용으로 손질을 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적부에 나와 있지 않은 연도를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정도의 변조가 이뤄진 것에 미뤄볼 때 병무청 관계자의 개입 의혹마저 낳고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이유 : 청구인은 2000. 4. 8자 매일신문에 게재된 『김만제 씨 병역기록 일부내용 변조의혹』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청구한다.

매일신문은 제16대 총선 대구시 수성구(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한 김만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병적기록 내용이 일부 변조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병적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관계처에 정밀·확인·조사 절차도 없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를 토대로 하여 사실을 왜곡한 편파보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4·13총선을 2, 3일 남겨둔 중요한

시점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윤리를 망각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첨부한 것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요구한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4월 8일자 19면에 『김만제 씨 병역기록 일부 내용 변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선관위 제출증명서 병적 원부와 달라, 병무청 연도 유추 기재…하자없게 손질”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만제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적증명서」가 발급된 것이 진실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청구후 보도문

매일신문 : 『“병적원부 차이는 실무자 실수”』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1일자 30면)

내 용 : 대구병무청장 해명

본지 8일자 19면에 보도한 「한나라당 대구수성갑 김만제 후보의 병적증명서와 관련한 병부청 기록 변조 의혹」에 대해 10일 중앙병무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제3자가 병적증명서와 병적원부 요약문만 놓고 비교할 때(매일신문 보도처럼)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병적증명서 발급예규」에 의거 김후보의 병적증명서는 병적원부 요약분과 비교할 때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낙운 대구병무청장도 이날 『원부상 「갑종」만 기록돼 있으나 여기에 「54년」을 추가한 것은 단지 병적원부 요약과정에서 실무자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다』며 「당시 제도가 만 20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고 당해 연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도 기재를 하지 않아 김후보의 원적에도 연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청장은 이어 실무자가 원부에 연도가 없는 것을 「연도미상」으로 원부 요약과정에서 첨가 기재, 결국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후보측도 이날 「병적증명서는 하자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이 부산영도구 하리항 매립허가와 관련, 뇌물수수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안건번호 : 2000시심4

청 구 명 : 시정요구(정정보도청구)

청 구 인 : 김형오

피청구인 : 부산일보

접 수 일 : 2000. 4. 12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부산일보 : (1) 『휴일 유세 총력전』 제하의 기사
(2000년 4월 9일자 1면)

내 용 : ‘하리항 수뢰’ 등 여야 비방전 치열

PK(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야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9일 영도 등 부산 13곳, 울산, 중구 등 울산 5곳, 창원 등 경남 11곳에서 열린 4·13총선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통해 막판 대세 장악과 부동표 흡수를 위한 대회전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연설회에서는 부산 영도 등 막판 접전이 형성된 일부 선거구를 중심으로 상대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막판 폭로·비방전을 전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초등학교에서 열린 영도구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김정길 후보는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는 지난 92년 부산 영도구 하리항 매립과 관련하여 공사를 맡게 해주는 조건으로 고교 동기동창인 전 태평양개발 대표 이모 씨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는 이에 대해 “이씨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랬겠느냐”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험담을 한다면 명예훼손과 무고 등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후돈 후보는 “후보들 신상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면서 “투명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명덕초등학교에서 열린 북·강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압승해야 부산을 확대해온 DJ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더 나아가 2년반 뒤 대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발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충청도의 지배 정당은 자민련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을 떠나 이인제, 김용환 씨가 앞서고 호남에서 조차 무소속이 선전하듯이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인물을 키우고 있다”며 “부산에서도 노무현에게 확실히 투자해 표를 몰아 달라”고 역설했다.

민국당 문정수 후보는 “김대중 정권이 부산을 축발으로 만들고, 부산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회창 씨와 부산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한나라당 후보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자민련 김문자 후보는 “10여년 전 부터 여성인 권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을 열심히 해온 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부산 동구 수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중·동구 합동연설회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후보와 민국당 박찬종 후보는 유일 야당론과 총선이 후 야권재편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민주당 정종엽후보는 지역발전론을 무소속 한석봉 후보는 정치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부산일보 : (2) 『하리항 매립공사 뇌물수수 논쟁』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0일자 4면)

내 용 :

부산영도

9일 영도 합동연설회에서는 하리항 매립공사 뇌물수수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연설회 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매립공사 허가를 조건으로 친구 이모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않으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김후보의 정치적 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보는 이어 “대통령을 모실때도 이런식으로 했느냐”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하리주민들이 다 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등단한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한나라당 김후보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않은 소문이 많다”면서 “하리항 매립과 관련, 이모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김후보가 부인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한편 본부취재결과 민주당 김후보측이 거론한 이씨는 한나라당 김후보의 고교동기인 이전철 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2년 3월초순부터 하리항 매립허가를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원을 당시 민자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이던 김의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후보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후략)

청구인 주장

청구이유 : 청구인 김형오는 16대 총선 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부산일보 4월 9일자 1면 머릿기사『휴일 유세 총력전』과『‘하리항 수뢰’ 등 여야 비방전 치열』제하의 기사와 4월 10일자 4면『하리항 매립공사 뇌물수수 논쟁』의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1. 피청구인 부산일보는 위 보도(4월 9일자)에서 “하리항 수뢰 등 여야 비방전 치열”이라는 제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하리항 수뢰’를 작은 따옴표까지 붙여 강조하는 등 확정 보도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마치 수뢰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판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막판에 특정인의 당선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특히 ‘하리항 수뢰’ 기사는 선거기간 중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없이 머릿기사로 취급하고 작은 제목을 붙여 기사를 둔 보이도록 한 것은 선거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청구인의 명예와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3. 더구나 부산일보는 석간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인데 이같은 9일자 보도에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인 합동연설회에 앞서서 어떻게 ‘여야 비방전 치열’로 보도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석간의 특성상 예고기사를 쓴다고 해도 이같이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보도하는 것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이 틀림없다. 또 이날 PK지역 29곳에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통상 신문사로 보내진 수많은 보도자료와 합동연설회 원고 중에서 특별하게 ‘하리항’ 사건이 ‘선정’된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돕기 위한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

4. 이어서 부산일보는 다음날인 4월 10일자 4면에 ‘유세쟁점 2제’의 하나로 ‘하리항 매립공사 뇌물수수 논쟁’으로 다시한번 ‘하리항’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 전날 ‘전주곡’에 이어 밀착취재로 이전철 씨를 만나 후속기사를 박스로 취급하는 등 마치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보도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날 기사는 전날 기사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2년 3월초순부터 하리항 매립허가를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원을 당시 민자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이던 김의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고 기사화시켜 결정적으로 청구인이 돈을 받은 것처럼 믿도록 했다. 물론 청구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그쪽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싣고 형식상 청구인의 코멘트도 일부 실어 주어 일견 형평성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받았다는 기사의 특성이 특정후보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쟁점화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특정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도록 한 고의적 의도성이 짙다고 하겠다.

5. 특히 선거 4일전부터 연속 3일간 ‘하리항’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특정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였고 또 이를 수십만장 인쇄하여 집집마다 불법살포함으로써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한 부산일보의 보도자세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러한 점을 우려 보도를 선거이후로 해달라는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악용될 수 있는 보도를 강행함으로써 비록 본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관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4월 11일자에도『‘하리항 뇌물’ 파문 확산』이라는 제하의 속보기사로 취급하여 부산일보가 의도적으로 쟁점부각을 기획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하리항 뇌물’이라는 단정적 표현은 청구인의 명예와 정치생명에 예측할 수 없는 결정적 피해를 주었다.

6. 부산일보에서 표현한 ‘하리항 뇌물’에서 뇌물이라 함은 대가성이 요구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전철 씨로부터 하리항 매립공사 허가를 ‘조건’으로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하리항 매립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만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허가와 관련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 아니었음은 이전철 씨가 더 잘

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뇌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산일보의 이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9일자 1면에 『'하리항 수뢰' 등 여야 비방전 치열』 제목과 4월 10일자 4면에 『하리항 매립공사 뇌물수수 논쟁』 제하의 "92년 3월초순부터 하리항 매립 허가를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원을 당시 민자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이던 김의원에게 건넸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김형오 후보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인해 선거운동기간중 특정후보가 부산일보를 인용하여 불법유인물을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악용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선거 관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김형오 후보의 명예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취하후 보도문

부산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8일자 6면

내 용 : 반론=김형오의원은 지난 4월 9일 1면과 10일 4면, 11일 2면에 실린 하리항 수뢰 여야 비방논쟁 관련기사에 대해 반론을 신청해왔습니다.

김의원은 선거당시 상대 후보가 주장한 하리항 매립관련 수뢰건은 첫째 매립공사가 추진된 적이 없고, 둘째 수표를 줬다는 이모 씨가 수표번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이씨가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으며, 넷째 이씨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수배범이란 점에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보도되는데 대해 본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김의원은 더구나 특정후보가 선거 3일을 앞두고 나온 이 기사를 선거전에 이용키 위해 유인물을 대량 제작, 연 3일간 무차별 살포함으로써 엄청난 고통과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반론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장 반론보도청구

청구인을 제외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안전번호 : 2000반심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청 구 인 : 박석동
피청구인 : 중앙일보
접 수 일 : 2000. 3. 27
처리결과 : 기각

보도내용

중앙일보 : 『민국바람 부산 ‘미풍’ 경남 ‘잡잡’』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4일자 5면)

내 용 : 누구를 찍겠는가

부산·경남권은 한나라당이 우세한 가운데 몇몇 지역구에서 민주당·자민련·민국당·무소속 후보의 추격세가 상당해 대구·경북권에 비해 이번 지역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특기할 것은 부산과 경남의 정서가 무척 다르다는 점. 부산쪽은 한나라당 후보 당락의 변수가 민국당 후보라면, 경남쪽은 민주당·자민련·무소속 후보들이다.

부산의 경우 막판에 한나라당의 전열이 흔들린다면 5곳 정도는 민국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국당 바람이 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부산=12일 현재 17곳 중 15곳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변화 가능성이 접혀지는 곳이 6곳이다.

그중 5곳에서 민국당 후보와 경합중. 중·동에서는 정의화(47.2%) 후보에게 도전하는 박찬종(29.2%) 후보의 기세가 만만찮다.

비록 정후보의 지지율이 40%대를 넘어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긴 했으나 두 후보간 지지율차는 18.0% 포인트로, 바람불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판세다.

해운대 기장율은 한나라당 안경률(43.2%) 후보와 민국당 김동주(27.3%) 후보간 지지율차가 15.9% 포인트로 양측의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이다.

연제(권태망 41.2%, 이기택 19.8%)·수영(유흥수 48.6%, 신종관 17.4%)·사상(권철현 49.1%, 신상우 17.7%)도 두고볼 지역이다. 이들 지역구는 한나라당과 민국당간의 기세싸움의 영향권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1곳은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간 구도인 동래인데, 현재 한나라당 박관용(53.4%) 후보들 두배 이상 리드하고 있으나 강후보가 무소속이라는 핸디캡에도 초반 판세에서 20%를 넘는 지

지지를 보이고 있어 눈여겨볼 곳이다.

한나라당 우세지역 중 흥미있는 곳은 부산 남이다. 한나라당 김무성(46.1%) 후보에게 민주당 송정섭(12.5%)·민국당 김용철(12.1%) 후보가 도전하는 상황인데, 설문지에 없었던 한나라당 이사회 의원의 지지율도 12.3%나 나와 이의원 지지표의 향배가 궁금한 곳.

한나라당 우세경합시는 사하갑이다. 한나라당 엄호성(26.9%) 후보를 앞서고 있다.

북-강서울은 부산·경남권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노무현(36.0%)후보가 선두인 지역인데 안심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노후보는 한나라당 허태열(29.8%) 후보뿐 아니라 민국당 문정수(11.9%) 후보에게도 도전받고 있는데 문후보의 지지율이 20% 내외에서 멈춘다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허나 한나라당·민국당이 이슈화 할 '유일야당론'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민주당' 구도가 '한나라당-민국당' 구도로 바뀌면 위험해질 수 있다.

▷ 경남=한나라당이 대체로 강세인 가운데 민국당 바람은 부산과 비교해 훨씬 약하다. 오히려 무소속 후보가 강한 변수다. 16곳 중 한나라당 우세가 13곳

우세지역 중 9곳에서는 지켜봐야 할 후보들이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사천의 황장수(14.2%)·창녕-밀양의 김태량(24.6%)·의령-함안의 정동호(13.7%)·거창-함양의 임채홍(15.5%) 후보가 자민련 후보로는 고성-통영의 정해주(14.6%)·합천-산청의 권해옥(15.2%)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민국당 후보로는 YS경호단장 출신인 김한표(17.7%) 후보가 유일하게 눈에 띄며, 무소속 후보로는 마산 합포의 한석태(17.1%)·진해의 김우석(22.2%)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우세경합은 창원갑과 창원을이다.

창원갑에서는 중앙정치권에서는 생소한 전 광역의회 의원출신인 무소속 정세영(21.6%) 후보가 한나라당의 김종하(39.0%)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 창원을에서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권영길(20.4%) 후보가 한나라당 이주영(39.2%) 후보를 뒤쫓고 있다.

경남 최대의 혼전지역은 진주로, 한나라당 하순봉(40.8%) 후보와 무소속 김새천(37.4%) 후보가 엇치락뒤자락하는 판세인데 김후보의 한나라당 낙선에 대한 동정표가 변수다.

청구인 주장

청구이유 : 청구인은 마산 합포 지역구에 출마예정인 박석동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중앙일보 2000년 3월 14일자 제5면 『민국바람 부산 '미풍' 경남 '잠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반론을 청구한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대상기사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채 마산합포 지역구에 출마하는 타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지역의 신뢰받는 여론조사기관인 경남데이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위 보도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첨부한 것과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한다.

청구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마산합포 무소속 총선 출마예정자 박석동은 20년의 정치 역경속에서 고향 마산을 위해 10여년간 고군 분투하면서 제16대 총선을 대비하여 어느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준비하여 왔다. 그 결과 지역의 신뢰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타후보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박석동 출마예정자에게 중앙 언론을 주도하는 중앙일보의 3월 14일자 총선여론조사 권역별 판세의 기사 '누굴 찍겠는가'의 5면 상단기사는 의도적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중앙일보가 몰라서 인가는 모르겠으나 박석동 출마예정자를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박석동 출마예정자의 정치 생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중앙일보는 여론조사를 잘못하였다.

마산합포 선거구 무소속 총선 출마예정자 박석동의 지역의 신뢰받는 여론조사기관인 경남데이터의 2000년 3월 10일 현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소속 박석동 28.5%, 한나라당 17%, 민주당 박재혁 5%, 민국당 이재희 2%, 기타 무소속 합계 5%, 그리고 부동표가 42.5%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지지도로 조사되었지만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는 “박석동 후보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사된 여론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엉뚱하게 왜곡된 여론조사가 되었던 점을 상기시켜 드리며, 잘못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착실하게 유권자의 지지기반을 높여가는 참신한 한 후보의 지지도를 한순간에 떨어트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박석동 출마예정자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음해로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사료된다.

둘째로 잘못된 여론조사를 사실인양 보도한 잘못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은 마치 신문독자인 유권자에게 박석동 출마예정자가 출마 안하는 인상을 주어 사실을 오인하게 하였다.

마산시 합포 선거구
무소속 총선 출마예정자 박석동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 정

안 건 번 호 : 2000반심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청 구 인 : 박석동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5-34
용인빌딩 4층

피 청 구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순화동 7번지
대표이사 금창태
대 리 인 김 행

회 부 인 : 박 석 동

청구대상기사 : 별지2

주 문 :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피청구인은 바른선택2000, 총선여론조사 권역별판세 씨리즈 7번째 기사로 부산·경남일대의 후보 예상자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마산 합포 민주당 박재혁 8.0, 한나라당 김호일 45.9, 민국당 이재희 8.3, 무소속 한석태 17.1”, “우세지역중 지켜봐야 할 후보로 마산합포의 한태석(17.1%)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위 지역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14 피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청구인의 청구원인사실은, 피청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 보도내용은 청구인이 위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의로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 잘못된 여론조사이며, 신뢰성있는 여론기관인 경남데이터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답변은 피청구인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현지에 주재 기자가 없어 연합뉴스 발표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예상한 것이고, 당시에 후보자로 예상된 각 정당의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에 기타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를 설문에 넣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불과 7.3%에 그쳤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지지율이 미미하여 이들을 후보자에서 거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은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주장사실들과 청구대상기사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보도가 청구인의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기사라고 할 수 없고, 그 기사는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시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정당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반론보도로 보도하기를 바라는 경남데이터의 여론조사는 당시의 다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보도(3% 정도임)와 크게 어긋나는 점들에 비추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나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와 같이 미미한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정도라면, 이는 여론조사에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중, 경남데이터의 여론 조사결과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보도내용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8.

심의위원 이창구
 심의위원 윤석홍
 심의위원 송효빈
 심의위원 남시욱
 심의위원 이시현
 심의위원 김영호
 심의위원 안영도
 심의위원 고해련
 심의위원 유선영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선거기사심의기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

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

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

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부 칙 < 2000. 2. >

제2조(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 2000. 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과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 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회의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 3제4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하 “회부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⑤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

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체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독자투고) 언론사는 독자투고란에 선거에 관련된 독자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 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시 가능한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

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문건

- 시정요구서
- 반론보도청구회부서
- 문서접수부
- 문서발송대장
- 위원장인사용부
- 심의위원장인사용부
-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자체심의에 관한 건)
-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시정요구에 관한 건)
-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건)
- 선거기사심의안전기록
(시정요구)
- 선거기사심의안전기록
(반론보도청구)
- 사건기록보존부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732-6078)	시 정 요 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정요구대상	정기간행물명		대표자 성명	
	보도일자 및 지면		소 재 지	
	보 도 내 용		전 화 번 호	
시정요구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732-6078)	반론보도청구회부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파 청 구 인	⑦ 성명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⑨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전 화 번 호	
반론보도 청구대상	⑬ 정기간행물명			
	⑭ 보도일자및지면			
	⑮ 보 도 내 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

문 서 접 수 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접수번호	수발월일	문서번호	수 신 처	발 신 처	건 명	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문 서 발 송 대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문서번호 (안건번호)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제 목	관 인 날인견수	발송시각	발송담당자	사용인	비고

위원장인 사용부

언론중재위원회

문서번호 (안전번호)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제 목	관 인 날인건수	발신시각	발신담당자	사용인	비고

심의위원장인 사용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안전번호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제 목	관 인 날인건수	발신시각	발신담당자	사용인	비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귀하

안전번호

위원회 자체 심의에 관한 건

언 론 사

귀사의 별첨 보도내용에 대해 귀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 시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18층 1803호
Tel : 732-6078~9)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1. 출석한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십시오.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휴대하십시오.
4.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출석시 답변서·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귀하

안 건 번 호
시 정 요 구 인
피 시정요구인

시정요구에 관한 건

귀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의 별첨 '시정요구'가 있어,
년 월 일 시로 심의기일이 지정되었으니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18층 1803호
Tel : 732-6078~9)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1. 출석한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십시오.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휴대하십시오.
4.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출석시 답변서·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 출석요구서

귀하

안건번호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건

청 구 인

피 청 구 인

귀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의 별첨 ‘반론보도청구’가 있어,

년 월 일 시로 심의기일이 지정되었으니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18층 1803호
Tel : 732-6078~9)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1. 출석할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십시오.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휴대하십시오.
4.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출석시 답변서·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제	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안전기록				심의위원장	
	제	호					총 장	
안전 번호	시 심	담 임				실 장		
		심의 위원장		입 회 직 원				
안 건 명	시 정 요 구					팀 장		
시정요구인						완결공람 위 원 장		
대 리 인						심의위원장		
피시정요구인						총 장		
						실 장		
대 리 인						팀 장		
						전문위원		
						입회직원		
년 월 일 확정								
보존종기								

년	제 질							심의위원장
	제 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안전기록								총 장
안전 번호	반 심	담 임						실 장
		심의 위원장		입 회 직 원				
안 건 명	반 론 보 도 청 구						팀 장	
청 구 인							완결공람 위 원 장	
대 리 인							심의위원장	
대 리 인							총 장	
대 리 인							실 장	
대 리 인							팀 장	
회 부 인							전문위원	
								입회직원
년 월 일 확정								
보존종기								

사건기록보존부

선거기사업의위원회

[illegible]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사무소

■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732-6031 ~ 5, 732-6011 ~ 3, 725-0050
FAX: 730-9420, 730-5487, 732-7585

■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백산빌딩 8층)
051)759-7083 / FAX: 051)759-7084

■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제일빌딩 5층)
053)763-0020 / FAX: 053)763-0021

■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 / FAX: 062)676-0361

■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 / FAX: 042)525-0779

■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2층 204호)
031)211-9027 / FAX: 031)212-0223

■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화남빌딩 2층)
033)255-2878 / FAX: 033)255-2879

■ **충북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세전빌딩 302호)
043)276-8083 / FAX: 043)276-8084

■ **전북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 FAX: 063)288-0980

■ **경남사무소**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2호)
055)263-1787 / FAX: 055)263-1769

■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한국빌딩 4층)
064)722-3328 / FAX: 064)726-320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2000년 6월 28일 인쇄

2000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영 식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의실 심의2팀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 732-6031 ~ 5, 732-6011 ~ 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 : 730-9420, 730-5487, 732-7585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